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2021 ~ 2025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2021. 2. 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기본계획 개요	1
II. 제4차 기본계획 평가	5
III. 제5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전략	10
IV. 제5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21
1. (위해 예방)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21
2. (생산·제조)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31
3. (유통·수입)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	41
4. (소비·생활)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48
V. 향후 추진계획	55
(붙임 1) 세부과제별 추진부처 및 소요예산 현황	56
(붙임 2) 제5차 기본계획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73
(붙임 3) 법령·규정 등 제·개정 계획	368

I . 기본계획 개요

1 추진 배경

- 「식품안전기본법*」 규정에 따라, 수립·추진한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8~'20) 완료 → 제5차('21~'25)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국무총리는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식품안전기본법 제6조)

- '09년부터 '제1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년까지 3년 주기로 총 4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수립 연혁 : 제1차('09~'11) → 제2차('12~'14) → 제3차('15~'17) → 제4차('18~'20)

- 4차례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충, 불량식품 유통차단, 소비자 알권리 강화, 국민의 위생·영양관리 강화 등에 기여

* 제4차 기본계획('18~'20)은 생산·제조, 유통·수입, 소비·생활 및 기준 관리를 연계하는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을 반영하여 수립·시행

- 제5차 기본계획부터는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주기 계획수립으로 변경(식품안전기본법 개정, '18.6)

▣ 제5차 기본계획은 그간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성과는 지속 확대 추진하고, 미흡한 분야의 개선 보완에 집중 필요

- 국정과제 충실 이행, 기후·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 등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속발전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 기후변화 등에 따른 신종 위해물질 출현과 1인 가구 및 노인 인구 증가, 비대면 생활·소비·판매 형태 변화 등으로 다양한 정책 수요 발생

▣ 인구·사회·환경·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해 요소가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비 필요

1] 계획의 범위

- (적용 기간) 2021 ~ 2025년(5년간)
- (해당 기관) 식품안전 업무를 추진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 * 교육부, 법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농진청, 질병청 등 10개 중앙 부·처·청 참여

2] 계획의 성격

-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를 둔 5년 단위의 법정계획
- 식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들의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 해당 부처들이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의 성격
 - *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은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식품안전기본법」 제6조)

3] 주요 내용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

-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
- **식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식품안전법령 등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지원 등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08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4차례 기본계획 수립·추진

- ① 1차('09~'11) 멜라민('08) 사건 등 계기로 높아진 국민의 식품안전 요구수준 반영
- ② 2차('12~'14) 일본 방사능('11)등 새로운 유형 식품안전사고 대비 정책 강화
- ③ 3차('15~'17) 불량식품 근절 등 건강 보호 및 식품안전 신뢰성 제고 도모
- ④ 4차('18~'20) 생산환경 개선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

그간의 기본계획 개요

구분	비전	목표	추진전략
제1차 기본 계획 (09~11)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사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일류국가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4개 분야 54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32개)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5개) ▪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8개) ▪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9개)
제2차 기본 계획 (12~14)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사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일류국가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4개 분야 49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제적 위해관리(24개) ▪ 과학적 위해성 평가(6개) ▪ 참여와 소통(10개) ▪ 웰빙 식품문화 조성(9개)
제3차 기본 계획 (15~17)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제고	[4개 분야 60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요소 사전예방(15개) ▪ 환경변화 선제 대응·소통 확대(12개) ▪ 상시 안전관리 강화(20개) ▪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13개)
제4차 기본 계획 (18~20)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	[5개 분야 55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10개) ▪ 안전한 식품생산기반 확립(13개) ▪ 과학적 유통관리·정보 제공(13개) ▪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10개) ▪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9개)

- ❖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10개 부처에서 제출한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등을 종합 검토·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운영협의회 검토 등을 완료함

① 부처별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

- 국무조정실의 기본계획 수립지침(20.5)을 토대로 각 부처가 여건을 고려, 부처별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20.7)
 - *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20.3~12)
- 관계부처 실무담당자 검토·회의(20.6~8) 등을 통해 부처별 계획의 기본개념 및 주요 내용 등 조정 및 협의

② 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 관계부처별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 검토·반영하여 국무조정실에서 기본계획(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조정(20.9~10)
 - * 10개부처 4대전략 15대과제 38개 중과제 144개 세부과제 (식약처 66, 농식품부 22, 해수부 21, 농진청 11, 환경부 6, 질병청 5, 관세청 5, 교육부 4, 복지부 2, 법무부 2)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및 제4차 기본계획 미완료 과제*로 연내에 달성 어려울 시 정책환경변화 등을 감안, 제5차에 반영하여 지속 추진
 - * 축수산물 PLS 도입, 수의사처방 의무항생제 확대, 동물복지직불금 도입, GAP 인증 확대, 축산농장 HACCP 의무화,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개선, 급식관리 확충, 농식품 바우처 도입, 식재료검수시스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보환연법 개정 등 15개 과제

③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 (전문위원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60명) 의견수렴(20.11~12, 2회)
 - * 전문위원 제출의견(20명, 137건) 총 95건 수용, 14건 중장기 검토 등
- (운영협의회)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20명) 개최,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안) 최종 조정(21.1)

Ⅱ. 제4차 기본계획 평가

1 주요 성과

①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全)단계 안전관리 강화 기반 구축

- (생산단계) 안전한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관리체계 구축으로 농·축·수산물 위해요인 사전예방 기반 마련
 - * 가정용계란 선별포장 의무화('18.4), 농약 PLS 도입('19.1), 가금이력관리 시스템 구축('20.1), 원유·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제(NRP) 도입('20.7),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확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확대 등
- (제조단계) HACCP 확대로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 조성
 - 어린이 기호식품, 식육 가공품 등 HACCP 의무화, 기술지원 확대
 - *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사전 인증 의무화('20.10)
- (유통·소비단계) 관리 인프라 확대로 안전한 식품 유통·소비 실현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유통·소비 관리 인프라 확대 및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환자수** 최저 기록
 -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업소(개소) : ('16) 78,000 → ('20) 171,000
 - **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명) : ('15) 116 → ('17) 109 → ('19) 79

▶ 농가농장·해역·양식장 등 생산단계 위해요인 관리 기반 강화 및 제조·가공, 유통·소비 단계 인프라 확대로 전(全)주기 식품안전 관리기반 마련

② 수입식품 전(全)주기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우려 수입식품 국내유입 차단

- 수출국 현지부터 통관·유통까지 촘촘한 안전관리 실현 기반 구축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확대와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구축
 - * 현지실사 실적(개소) : ('17) 406 → ('20) 460

▶ 수입 전(前) 단계, 통관 단계, 국내유통 단계를 연계하는 선순환 관리 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③ 취약계층 위생·영양 관리 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소규모 급식 시설 위생·영양 관리를 확대하고, 나트륨·당류 저감 정책으로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량 감소
 - *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mg) : ('11) 4,831 → ('14) 3,890 → ('18) 3,274
 - * 당류 1일 평균 섭취량(g) : ('11) 68.1 → ('14) 74.7 → ('18) 58.9
 - *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학교수 비율(%) : ('19) 98.8 → ('20) 99.1
- 노후 학교급식 시설(건축·개보수 10년 경과) 현대화 및 방학 기간 급식 시설·기구 집중 점검과 개·보수 등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기반 마련
 - *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학교수(예산) : ('19) 739 → ('20) 774개교(2,761억원)
 - * 급식시설 점검학교수(개소) : ('17) 10,358 → ('18) 10,755 → ('19) 10,743
- 식품의 표시·광고 실증제, 계란 산란일 표시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제품선택 기회 부여
 - * 표시·광고 실증제 등 도입('19.7), 계란 산란일 표시제 도입 ('19.2)

▶ 취약계층 급식 지원 확대와 위생·영양 관리 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지원

④ 과학적 위해평가 확대 및 기술발전·기후변화 선제 대응

- 환경오염, 식습관 변화 등에 따라 오염물질 등의 기준·규격에 대한 과학적인 재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합리적으로 재정비
 - * 오염물질(중금속 등), 잔류물질(농약,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등 오염도 조사 및 기준·규격 재평가

▶ 식습관 변화 등에 대비, 선제적으로 오염도와 노출량 등 과학적인 재평가를 통해 식품 기준·규격에 반영하여 국민 안전 보장

< 제4차 기본계획('18~'20) 주요과제별 성과지표 실적 >

추진전략	성과지표	목표/실적	'18	'19	'20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기준·규격 재평가 (식품원료·잔류물질 등)	목표	319종	582종	558종
		실적	328종	625종	744종
	농장단위 계란·산란노계 잔류물질 검사율(%)	목표	100	100	100
		실적	100	100	100
	농약판매기록 관리대상 확대	목표	9종	모든 농약	-
		실적	모든 농약	달성	-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GAP 인증 농가 수(%)	목표	9.1	12.6	15.6
		실적	8.3	9.7	11.3
	HACCP 제품 생산비율(%)	목표	85.1	86.2	86.7
		실적	85.2	86.5	87.5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화 적용비율(%)	목표	65	100	100
		실적	65	100	91.5
과학적 유통관리· 정보제공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 수 (개소)	목표	6,900	7,800	8,300
		실적	7,341	7,966	8,769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 검사소 설치율(%)	목표	53	75	100
		실적	53	75	81.3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	목표	3.22	3.65	5.30
		실적	3.31	5.05	5.35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급식 관리 지원율(%)	목표	60	71	100
		실적	64	75	90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mg)	목표	3,500	3,500	3,500
		실적	3,274	-	-
	식중독 환자수(명/백만명)	목표	100명 이하	100명 이하	100명 이하
		실적	222	79	39.6

① 단계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강화 필요

- 그간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全)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나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전반에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적용·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노력과 투자 필요
- 특히,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식품안전 우려요소가 잔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생산환경 안전관리 체계 보완 필요
- 4차 산업혁명, 환경변화,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새로운 위해요인 출현 등에 대비하여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 생산·제조, 유통·수입, 소비 등 식품 단계(Food Chain)별 안전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

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과학적 안전·위생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 환경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신종 위해요소 증가 등에 따라 식재료 위생관리 및 식중독 사고 예방과 확산방지 등에 어려움 증가
- 특히 식중독 환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 식중독 발생도 반복되고 있으나, 식중독 원인 규명에 한계점 노출

* '19년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률은 29.7%로 일본(47.4%), 미국(42.8%)보다 낮은 수준

▶ 식중독 원인 규명률 제고를 위한 역학조사·검사기법 개선을 통해 사전에 오염원을 제거하는 선제적 식중독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③ 이력추적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 필요

- 이력추적관리체계가 확대되고 있으나 품목 중심으로 한정되고 품목별·부처별로 분산 구축되어 있어 제도 활성화에 장애

▶ 어떠한 품목을 누가 사서 누구에게 얼마나 판매했는지에 대한 거래 내역 등을 필요 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체계 고도화 전략 수립 필요

④ 비대면 '뉴 노멀' 시대에 소비패턴 변화 등에 대비한 식품안전관리 영역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 필요

- 기업과 기업 간(B2B) 비대면(Untact) 원료·식재료 구매·운송, 온라인 서비스 등 새로운 변화가 표준이 되는 '뉴 노멀' 시대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배달 음식 증가 등 비대면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어린이·성인 비만 증가와 노인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영유에 필요한 환경 조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 필요

▶ 기술발전, 사회변화, 식생활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올바른 식품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로 지속 개선 보완 필요

Ⅲ. 제5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전략

1 여건 및 환경 분석

가. 대내 여건 및 환경

① **(사회여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동물복지 및 지구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새로운 식품 수요 및 시장 창출**

○ 가정간편식(HMR) 시장* 및 Ready meal 시장 성장

* 시장 규모 : ('15) 1.8조 → ('17) 2.6조 → ('19) 3.5조(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채식주의 등을 위한 대체소재를 활용한 대체식품 등장

* 세계 육류대체재 시장은 '25년 7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Variant Market Research)

즉석밥류	즉석국탕찌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백미즉석밥 2. 장국즉석밥 3. 볶음밥/필라프 4. 컵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곰탕류 2. 국탕류 3. 피개/잔골/뽕 4. 기타
즉석밥소스류	즉석죽/수프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카레류 2. 짜장류 3. 기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장형 2. 액상형 (쌀) 3. 액상형 (죽)
즉석면류	육류즉석가공식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스타 2. 우동 3. 냉면 4. 짜장/짬뽕 5. 쌀면 6. 기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두 2. 돼지/소가공 3. 닭가공 4. 안주류

< 식품산업통계정보, 가정간편식의 분류, 2018 >



< 햄철로 맛을 낸 식물성버거(임파서를 와퍼) >



< 식물성단백질로 만든 소세지 >

② **(생산환경)**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쉐 주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

○ 살충제 계란사건('17.8)을 계기로 가축사육환경 개선, 농산물 농약 PLS 시행('19.1), 원유 NRP 도입('20.7), 축산이력제 대상 확대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 체계의 전반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 비의도적 신종 유해물질 오염, 단순처리 농산물 위해요소 증대 등* 여전히 식품안전 우려 요소가 잔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생산 환경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

*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PCBs), 방사능물질, 식중독균 등

- 지속적인 양식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등에 의한 신규 위해요소 발생으로 식품 안전사고 노출 우려

* 양식수산물 생산량(천톤) : ('18) 2,249 → ('19) 2,372

③ **(산업환경) IT, 모바일** 기술발달은 식품산업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고,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

- (온라인거래) 음식서비스, 음·식료품 군에서 온라인 거래액의 급격한 증가

* '19년 음식료품의 온라인 거래액은 2,678억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29.5% 증가

- (음식배달) '코로나19', 모바일 기술발달 등으로 인하여 음식배달 서비스의 폭발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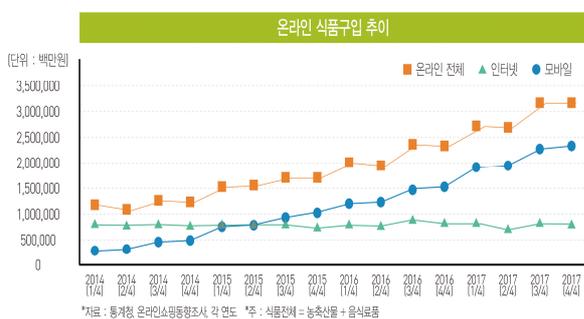
* '19년 음식배달시장 규모는 약 9.7조로 전년 대비 84.6% 증가(통계청, '19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 (신선식품) '새벽배송'* 등 배송시스템의 진화로 신선식품 시장의 성장 및 식탁의 변화

* 신선한 식재료를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달

* '18년 중국의 신선식품 온라인시장규모는 약 2,045억위안(약 35조원)이며, '13~'18년간 평균증가율은 74%(인터비즈, '20.4)

- (SNS, 인플루언서) SNS를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인플루언서 과대광고로 인한 부정·불량식품 사고 등 부작용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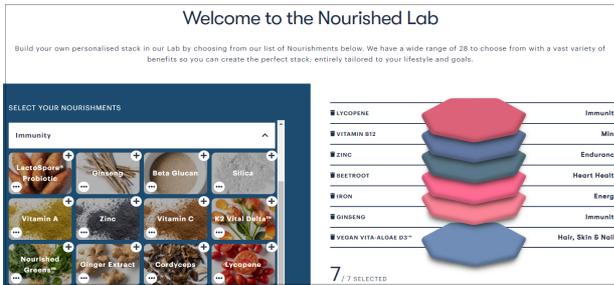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구 내 식품소비 및 식생활 행태분석 결과, 2018)>



<통계청, '19.10월 온라인 쇼핑 구매액 현황, 2019>

4 (기술변화) 식품산업에 ICT, 공유경제 등을 접목하여 신(新)산업을 창출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푸드테크(Foodtech)' 스타트업 등장

- 3D 프린팅기술 이용, 개인 맞춤형 식품, 나노·유전자가위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 활용식품의 상용화로 식품안전관리 영역 확대
- 외식 운영시스템에 '빌려 주고 나눠 쓰는' 공유경제 원리를 적용한 '공유주방' 등장



<3D 프린팅 기반 개인맞춤형 영양제 주문, Nourish 3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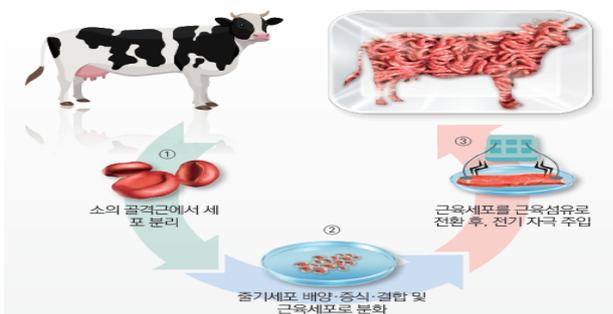
< 공유주방 서비스 제공, 위국 >

5 (소비 트렌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 및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대

- 지속 가능한 식품 개념의 등장으로 채식시장, 대체 육류의 하나인 배양육에 대한 관심 증가
- 나트륨, 당 섭취를 줄이고 자극적인 맛과 불규칙적인 식사습관을 피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 영양보충제, 기능성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 성장

* 건강기능식품 국내 총 매출액 2조 9,508억원('19년), 전년대비 16.9% 성장

* 제조업체수(개소) : ('17) 496 → ('18) 500 → ('19) 508 → ('20) 490



< 배양육의 생산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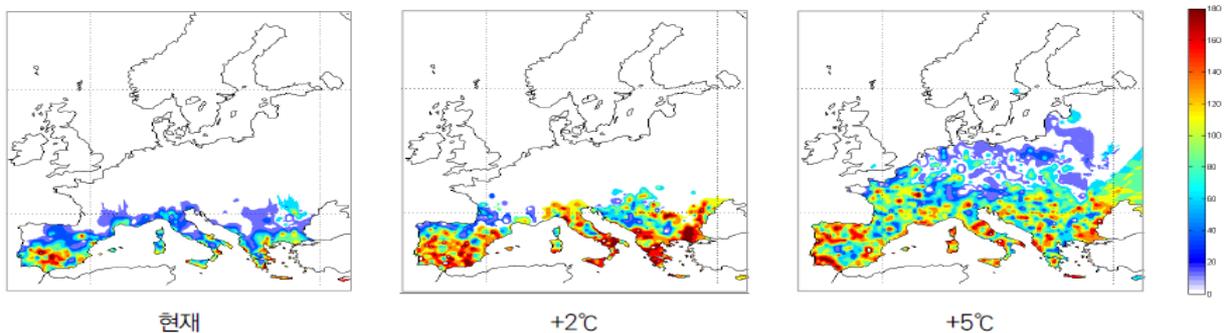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도권 내 샐러드 전문점 현황, 2018 >

나. 대외 여건 및 환경

① (환경변화)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신종 위해요소 증가 및 새로운 식품 관리영역 확대

-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신·변종 세균·바이러스, 내성균, 곰팡이독소 등 식품 중 위해요소 증가
 - * 원충 식중독수, 환자수 : (‘15) 15건 114명 → (‘17) 39건 177명 → (‘19) 48건 308명
-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 자연생물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따라 관리 필요성 대두



< EFSA, 온도 증가에 따른 유럽의 곡류 중 아플라톡신B1의 위험도 변화 시나리오 >

-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등에 따른 항생제 내성 증가로 사망률 증가, 치료비 상승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예측
 - * 2050년 전세계 연 천만명 사망, 100조 달러 경제손실 예측(‘16, 영국 보고서)

② (전략계획) 세계적으로 미래의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여 식품안전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전략계획 수립 중

- (미국) ‘스마트 식품안전 새 시대’(New Era of Smarter Food Safety)를 위한 전략계획 수립(‘19.4)
 - * 식품 이력추적, 디지털 기술, 진화하는 식품 비즈니스모델, 협업 및 소통체계 등 4가지 주제 전략
- (유럽) 미래의 식량 및 영양 안보,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의 지속가능성 등을 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A Farm to Fork Strategy’) 수립(‘20.5)
 -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제공,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 식품분야의 공정한 경제에 대한 보상 및 유기농업 증진 등

- (중국)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13차 5개년 국가식품 안전계획(‘16~’20)」 수립(‘17.2)

* 예방 중심, 위해 관리, 전 과정 관리, 사회 공동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 확보 등

- (일본) 식품 환경 변화와 국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 위생법 개정·공포(‘18.6)

* 광역적인 식중독에 대한 대책 강화, HACCP에 따른 위생관리 제도화, 영업자 자진 회수 보고제도 신설 등

③ **(평가체계 및 조직역량 강화)** 신뢰성 있는 과학적 평가체계 마련 및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근거 기반 식품안전관리 강화 추세

- (미국) FDA-FVM(Foods and Veterinary medicine) 프로그램의 전략 계획(‘16~’25) 수립을 통한 사전 예방적 위해평가 기능 및 조직 역량 강화

- (EU) 식품안전청 전략(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Strategy) 2020을 통한 과학적 평가 역량 강화 및 대중과의 소통 강조

- (일본) 위해성 분석 체제 도입을 통한 각 기관별 위해성 평가와 관리기능 분리 및 식품안전 부처 연계 활성화

④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불안 해소에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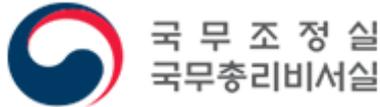
- (미국, 독일) 식품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거나 관련 증거가 없다는 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국민 불안 해소에 노력

- (일본, 중국) 식품사업장에서의 감염자 발생 시 대응(식품취급자 관리, 식자재 처리 등)에 대한 지침 제공

다. 국가간 식품안전관리 수준 비교

지 표 명	우리나라	EU	미국	일본
HACCP 적용업소 비율	25.2%('19)	모든 제조업소에 적용토록 권고('06)	모든 식육가공품 포함, 수산식품, 주스에 의무	유가공품 등 532개소(768건) 승인('13)
GAP 적용 농가수	114천호	119천호	7,823호	6,746호
식품·영양 안전관리 기술수준 (식약처, '19)	83.5%	92.3%	100%	92.8%
축산물 위생 안전 기술수준(IPET, '17)	80.1%	91.2%	100%	91.4%
동물복지 인증기준 운영 유무	○	○	○	산란계만 적용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79명('19)	94명('18)	44명('17)	137명('18)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률(%)	29.7('19)	13.8('18)	42.8('17)	47.4('18) *공식통계 84.1
농산물 농약 PLS 시행	2016년 일부* 시행 *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2019년 전면 시행	2008년 시행	1960년 시행	2006년 시행

라. SWOT 분석



사 실 요 인

강 점 Strength

- 식품안전관리 위해평가체계 및 인프라 구축
- 식품안전 정책 합리적 개선 및 관리 일원화
- 빅데이터, 블록체인 활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식품안전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지지

약 점 Weakness

- 생산환경에 대한 여건 개선 부족
- 영세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 부족 및 사각지대 존재
-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부족
- 정부 중심의 정책 소통으로 인한 양방향 소통 미흡

기 회 Opportunity

- 첨단 융복합 안전관리 기술 개발·발전 속도 가속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요구 증대
- 국제 교류 활성화로 식품안전 관리 수준 국제적 조화 강조
-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국민적 관심 증가
- 식품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따른 기술 속도 가속화

S O 전략 강점기반-기회활용

- 첨단 융복합 기술 적용 안전성 평가 기술 고도화
- 생애 전주기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규제조화를 선도하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적 근거 제공

W O 전략 약점보완-기회활용

-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 관리 강화
-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자체 시험·역량 강화
- 취약계층 대상 위생·영양 관리 지원 강화
- 소비자 중심의 소통 및 정보 제공 확대로 국민 신뢰 제고
- 안전관리 사각지대 식품안전 관리 정책 강화

환 경 요 인

위 험 Threat

-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위해 요인 및 안전관리 대상 증가
- 코로나 19, 항생제 내성균 등 신규 위해요소 등장
-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트렌드 등장
- 수입식품 의존도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확대

S T 전략 강점기반-위험대처

- 세균, 바이러스 등 체계적 관리 강화
-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미래·환경변화 사전대응 강화
- 소비트렌드 반영 가공식품 안전관리 기반 확대
- 수입 전(全)단계 안전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강화

W T 전략 약점보완-위험회피

-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 위해식품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로 체계적 안전관리
-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체계 구축
- 소비단계 위생 관리 강화로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
-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교육·훈련 확대 및 홍보 강화

추 진 전 략

- ❖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 ❖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 ❖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
- ❖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 제4차 계획과 제5차 계획 비교 >

4차 계획('18 ~ '20)

- (성과) 생애 전주기 식생활 안전 관리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공급사슬별 안전관리 추진
- (한계)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 반영 필요

- (구성) 5대 전략, 15대 과제
- 전략 및 주요과제
- ①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 ▶ 식품 위해요소 기준·규격 재평가
 - ▶ 농약 등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
 - ▶ 기술발전·기후변화 대비 사전대응
- ②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 ▶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개선
 - ▶ 가공식품 제조 관리
 - ▶ 인증제도 개선
- ③ 과학적 안전관리·정보 제공
 - ▶ 유통 관리체계 개선
 - ▶ 위해 수입식품의 국내유입 차단
 - ▶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 ④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 ▶ 균형잡힌 영양 섭취 지원
 - ▶ 철저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활동
 - ▶ 생활 속 식생활 교육·홍보 강화
- ⑤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 ▶ 대내외 소통·협력 강화
 - ▶ 위해식품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



5차 계획('21 ~ '25)

- (추진방향) 생산부터 소비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실현하고,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국가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 (구성) 4대 전략, 15대 과제
- 전략 및 주요과제
- ①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 ▶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 ▶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 ▶ 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 ▶ 위기대응시스템 정비 및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
- ②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 ▶ 농산물 생산환경 개선
 - ▶ 축산물 생산환경 개선
 - ▶ 수산물 생산환경 개선
 - ▶ 제조·가공 생산환경 개선
- ③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
 - ▶ 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 추적체계 선진화
 - ▶ 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 관리 강화
 - ▶ 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
- ④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 ▶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지원
 - ▶ 식품정보 제공 확대
 - ▶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제공
 - ▶ 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

❖ **추진 방향** : 그 간의 성과를 확대 추진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실현하고,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국가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 기후변화나 환경변화로 인한 화학적, 생물학적 위해요인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신(新)식품 등 기술 변화에 대응
- 그 간의 성과를 확대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안전관리 기반을 확대하여 영업자 위생관리 지원과 함께 소비자 신뢰 확보
 -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를 내실화하여 효율적 관리체계로 전환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 유통·수입 안전관리 추진
 - 식품유통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를 실현하여 위해우려 수입식품 유입 차단
-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한 환경 개선 및 지원
 - 대국민 식품정보 제공을 지속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건강한 식생활 개선 지원
 -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식품 소비단계(간편식, 외식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사전예방 강화

❖ 추진 전략 : 4대 전략과 15대 과제에 대한 지속적 추진·점검으로
 '신뢰받는 국가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비전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목표

신뢰받는 국가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추진 전략 및 과제

① [위해 예방]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 ①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 ②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 ③ 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 ④ 위기대응시스템 정비 및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② [생산·제조]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 ① 농산물 생산환경 개선
- ② 축산물 생산환경 개선
- ③ 수산물 생산환경 개선
- ④ 제조·가공 생산환경 개선

③ [유통·수입]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

- ① 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 ② 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 ③ 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

④ [소비·생활]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 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지원
- ② 식품정보 제공 확대
- ③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제공
- ④ 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

< 제5차 기본계획('21~'25) 주요 목표지표 >

추진전략	과제 성과지표	'20	'21	'22	'23	'24	'25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율(누적, %)	15	42	63	84	100	-
	식품·기능성 원료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누적, 건)	541	1,078	1,616	2,153	2,690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가입률(%)	95	98	100	100	100	100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대상성분, 건)	50	53	55	65	79 (全성분)	79 (全성분)
	기구 및 용기·포장 위해우려 이행물질 모니터링(누적, 건)	450	950	1,450	1,950	2,450	2,950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률(%)	28	29	30	31	33	35
	식중독 환자 수(명/백만명)	133 (15~19 평균)	115	110	105	100	95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GAP인증 내부감독자 지정비율(%)	30	40	50	60	70	80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율(돼지, %)	80	85	90	95	95	95
	유기축산물 인증농가수(호)	110	120	130	140	150	160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율(%)	86(지정) 47(일반)	89 64	94 73	100 82	- 91	- 100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도입률(%)	0	20	25	50	90	100
	스마트 HACCP 적용업체 수(개소)	3	100	200	300	400	500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체수(누계)	8,300	8,800	9,300	9,800	10,300	10,800
	유통수입식품 수거·검사 건수	6,000	6,400	6,800	7,200	7,600	8,000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건수	9	9	11	11	13	15
	수입식품 HACCP 적용 업소수(누계)	-	-	9	20	40	60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	5.30	5.56	5.83	6.11	6.40	6.72
건강한 식생활 환경개선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급식관리 지원율(%)	90	91	93	95	97	100
	나트륨 1일 섭취량(mg)	3,274	3,219	3,164	3,109	3,054	3,000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수(누계)	12,000	22,000	27,000	31,000	34,000	37,000
	영양표시 활용도(%)	73.5	73.7	73.9	74.1	74.3	74.5
	범부처 통합 영양정보 DB 구축건수	30,000	50,000	60,000	70,000	80,000	100,000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수(천명)	509	545	550	550	550	550

IV. 제5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전략 1

[위해 예방]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 개 요 >

■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안전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식품 안전 체감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상시적인 위해평가와 식중독 등 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 역량 강화와 위기대응 및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추진 과제

-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 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 위기대응시스템 정비 및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주요 성과지표

- ◆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율(누적, %) : ('20) 15 → ('24) 100
- ◆ 식품기능성 원료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누적, 건) : ('20) 541 → ('24) 2,690
-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가입률(%) : ('20) 95 → ('22) 100
- ◆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대상성분, 건) : ('20) 50 → ('25) 79(췌 성분)
- ◆ 기구 및 용기포장 위해우려 이행물질 모니터링(누적, 건) : ('20) 450 → ('25) 2,950
- ◆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률(%) : ('20) 28 → ('25) 35
- ◆ 식중독 환자수(명/백만명) : ('15~'19년 평균) 133명 → ('25년) 95명 이하

① 선제적 위해평가체계 구축

- 환경오염, 식습관 변화를 반영하는 주기적인 위해평가 실시
 - 식품의 유해오염물질 오염도 자료와 최근 섭취량 변화 기반 위해도 평가
 - * 중금속 7종('21) → 다이옥신, PCBs('23) →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 6종('25)
- 다소비 식품의 오염물질(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19종* 오염도와 노출량 평가 등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규격을 재평가
 - * 아플라톡신(3종, '20) → 곰팡이독소(5종, '21) → 중금속(4종, '22) → 중금속(3종), 벤조피렌('23) → 다이옥신·PCBs, 3-MCPD('24)
- 기준 미설정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시험법 확립 등 과학적 근거 마련
 - * 중금속(7종), 곰팡이독소(12종) 등 유해오염물질 총 63종 시험법 확립 및 최적화('21~'25)
- 새로운 위험성 정보가 발표된 물질 등의 인체노출안전기준 평가
 - * 과불화화합물(4종), 안티몬, 다환방향족탄화수소(8종), 벤조피렌, 크롬6가 등
- 식습관 변화나 과학 발전으로 안전성·기능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원료·첨가물·기구·용기·포장 등을 재평가하여 기준·규격 개정
 - * 오재분류된 식품원료들의 학명명칭 현대화 및 안전성 재평가(2,500건), 허가후 10년 경과된 기능성원료(45품목), 유화제 등 식품첨가물(83품목), 기구용기포장(30종 재질)
-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노출량 평가를 실시하고, 음료류 등 기타 식품에서의 인체 노출 평가기술 개발('22~'24) 추진
 - * 수산물, 천일염 주원료 사용 식품 40종(연10종) 대상 모니터링 및 노출량 평가
- 해수부유·지표생물·해저퇴적물·해변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현황을 조사하여 해양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 진단·평가('20~계속)
 - * 조사분석방법 표준화를 위한 매질별 표준작업절차서 개발 및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마련

② 기후변화 등 대비 위해요인 안전관리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유해 미생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해정보와 시장 동향 등을 반영한 미생물 규격 평가·설정
 - * 해외 발생정보 등을 반영, 국내 출현 가능 유해미생물 조사 및 권고기준 마련
 - * 저위해성 식중독균(캠필로박터 등) 재평가 건수 및 기준·규격 개정건수 : 5건/년
- 기후변화로 출현하는 시구아테라 어독 유발 열대성 적조생물의 모니터링 및 배양체 확보를 통한 어류체내 독화 기작 연구
 - * 시구아테라 어독 원인 적조 모니터링(20건/년) 및 배양체 확보(2종/년)
- 패류독소 조기예보 체계 구축을 위한 패독플랑크톤 출현양상 및 플랑크톤의 패독 유발 기작 연구
 - * 패독플랑크톤 출현 정보제공(5건/년) 및 빅데이터AI 활용 이동확산 예측모델 구축('24)
-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이력 및 해양환경인자(수온, 염분, 유속 등) 변화를 반영하여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률 향상 추진
 - *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정확도 향상(해수부·기상청·질병청 연계)
- 다소비 해조류의 요오드 분석법 개발·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를 통한 요오드 관리 기반 마련
 - * ('21) 분석법 개발 → ('22) 해조류 요오드함량 모니터링(50건) → ('23) 인체 위해성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곰팡이독소 오염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저감화 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 * 장류 독성곰팡이·독소 모니터링(누적, 건) : ('22) 50 → ('23) 100 → ('24) 150
 - ** 주요 곡류(보리, 밀, 벼 등) 붉은곰팡이 및 장류 곰팡이독소 저감기술 개발

③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

- 농약안전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농약 추천·처방 기능을 개발하고 현장에 필요한 농약 등록 확대*와 유통 이력관리 강화**
 - * 소면적 작물 중심, 잠정 등록 농약(약 5천여개) '21년까지 정식등록으로 전환 등
 - ** (유통관리) 등록취소, 판매금지 농약 등 부정·불량 농약 정보공개, 신속한 재고 파악 및 회수·폐기, (정보서비스) 농약 등록정보 실시간 농업인·판매업체에 제공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을 위해 위해평가를 지속 수행하고, 미등록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발
 - * 기준 신설 및 개정을 위한 위해평가 800건/년,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잔류평가 자료 마련 20건/년, 시험법 개발 20건/년
- 농산물 농약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확대*하고, 생산단계 현장 교육·홍보 강화**
 - * (잔류허용기준) 800건/년(정식기준 전환 : 500건, 현장필요 : 국내 200건, 수입 100건)
 - ** 현장방문 및 설명회 4회/년, PLS 전문가 양성과정 2회/년, 전광판 및 SNS 광고(지속)
-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농약성분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단계적 도입 추진
 - 동물용의약품(소, 돼지, 닭, 우유, 달걀, 어류) PLS 우선 도입('24.1.1.시행)
 - * (1단계) 동물용의약품(주요축종, 어류) PLS 도입('24.1) → (2단계) 동물용 의약품(주요축종 및 어류 외), 농약성분 PLS 도입('24 이후)
 - 제도 도입에 따라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지속 확대* 및 교육·홍보 추진**
 - * 23년까지 45건/년, ** 설명회 및 간담회 2회/년
- 축산물 PLS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품목 확대 및 안전사용기준 정비(~'23), 적용대상* 및 물질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24~)
 - * ('24) 한육우·돼지·육계·젓소·산란계 등 적용 → ('24~) 양, 오리 등 적용
- 수산물 PLS의 원활한 시행('24~)을 위해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잔류조사를 실시하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 개최
 - * 어류, 갑각류 등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 30종, 600건 잔류조사

4 항생제 내성균 통합관리체계 구축

- 축산용 항생제 총량 관리를 위해 생산·유통 등 쏘 단계 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축산업 종사자 교육·홍보를 통해 항생제 사용 인식 개선
 - * (생산) 기허가 항생제(1,058품목) 재평가(~'22) 및 용법·용량 등 안전사용기준 최신화
 - * (유통) 수의사 처방전 전자발급, 도매상 항생제 판매기록 의무화 등 제도 정비
 - * (사용) 항생제 사용 감축을 위해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 쏘 성분으로 확대(~'25)
- 농업환경 항생제 노출경로 구명 및 통합위해성평가(~'23)를 통해 One-health 개념의 포괄적인 항생제 통합안전관리체계 마련
 - * 농업환경 중 환경유해영향 평가기법 연구 및 통합위해성평가시스템 구축
- 농산물·농업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한 농용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 * 농업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누적, 건) : ('21) 200 → ('25) 1,000
 - ** 박테리옌, 파지 이용 항생제 대체제 개발 및 실용화기술 개발(~'25, 7건)
- 수산물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대상 항생제 확대(16종), 모니터링 확대* 및 표준검사법 마련** 등 항생제 내성균 관리 강화
 - * 수산물 생산단계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건) : ('21) 300 → ('25) 350
 - ** 항생제 내성균 유전자 분석, 내성 판정기준 설정 등 검사법 표준화(2건/년)
- 유통식품의 항생제내성 실태조사*를 통해 내성균을 감시하고 항생제 내성관리 강화를 위한 내성균 저감화 기술 개발**
 - * 내성 실태조사(건) / 대상세균 : ('21) 1,900 → ('23) 2,000 → ('25) 2,200 / 대상세균 : 대장균, 장구균,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황색포도상구균
 - ** 식품 생산·유통단계에서 내성 유발 최소화를 위한 위해세균 제어기술 개발('22)

① 식중독 원인조사체계 고도화

-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률 향상*을 위해 보존식 보관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식중독균 추적관리 기반을 확대***

*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률(%) : ('21) 29 → ('22) 30 → ('23) 31 → ('24) 33 → ('25) 35

** 보존식 미보관폐기횡손 과태료(300만원 ↑), 조사방해 처벌 신설 조사항목 확대(10→18개)

*** 식중독균 탐색조사(12,000건) 및 유전적 상동성 등 특성분석(연 1,500건 ↑, '25년까지 21,000건)

-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을 위해 집단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역량강화를 통해 감염경로 및 감염원 규명을 향상**

* 집단발생 인지(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원·경로 규명(PlusNet), 급성설사질환 실험실감시망(Enternet), 해수비브리오팀 발생신고시스템 등 통해 모니터링된 정보 활용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원인 병원체 규명률(%) : ('21) 60 → ('25) 67

- 국가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망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유전체 분석 기술 기반의 식중독균 검출법 개발**을 통해 원인규명 및 추적조사 강화

* 유전체정보 DB화(누적, 건) : ('21) 8,550 → ('23) 13,000 → ('25) 15,000

* 분석프로그램 개선(유전체 비교, 균특성, 상동성), 혈청형분석 프로그램 개발

** NGS 기반 식중독균 동시검출 키트, 분석프로그램, 동시검출법 마련(~'22)

- 차세대 감염병 유전체 정보체계 고도화* 및 국제 감염병 원인규명 분자 역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원인규명을 향상 추진

* 인체유래 병원체 유전정보 생산건수(누적) : ('20) 20,357 → ('25) 29,000/원인병원체 유전체 상시감시망 운영('21~), 펄스넷 운영협력기관 대상 전문인력 양성('22~)

** 국제 펄스넷 공조를 통한 표준시험법 개발(~'23), 유전자 빅데이터기반 유행예측시스템 구축('22~), 진단키법 미확보 감염병 진단대응기술 개발('22~), 유행예측 진단마커 개발('23~)

②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

-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확대*, 부처간 유기적 정보공유체계 구축, 모의훈련(연 2회) 등 실시
 - * 유치원·어린이집, 병원 기업체 등 시설별 식중독 주의 정보 제공(연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사용 중인 식재료 조달시스템과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 * 식중독 환자수(명/백만명) : ('21) 115 → ('23) 105 → ('25) 95명 이하
- 지하수 사용업체 노로 등 바이러스 감시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단체생활시설 구토물 처리키트 배포로 바이러스 확산 조기 차단
 - * 지하수 사용 제조·급식시설 모니터링(연 1,000건), A형, E형 바이러스 검사 추가
- 전국 권역별 식중독 검사차량 운영을 통해 식중독 확산 차단, 국제행사장 등의 식중독균 사전검사 지원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 * 차량 운영계획 : 본부, 서울청, 부산청, 광주청, 대구청('20.12 배치), 경인청('22)
- 학교·유치원 급식 관계자 연수를 추진하고 학교·유치원 단위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체계 강화
 - * 발생 신고 단계부터 감시·역학조사 등 관계기관 공동의 대응체계 구축
- 식중독 발생 시 기관간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통합행정지침*을 마련하고 원헬스 개념 식중독 공동대응협의체** 정례 운영
 - * 질병청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관리지침」과 식약처 「식중독표준업무지침」 연계
 - ** 질병청(주관)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교육부 등 현황공유 및 합동대응전략 등 논의
- 원헬스 감염병 위해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 체계 마련 및 원헬스 관점의 위험요인 평가 및 통합관리수칙 마련
 - * 범정부 차원의 감염병 공동 대응 플랫폼으로 감염병 조기감지 및 상황 전파, 원헬스 공동대응 지원, 유관기관 협력 업무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① 미래 사회변화 대비 제도 개선

- 식생활 패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식품유형*,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기준·규격 현대화 추진
 - * 식품유형 정의 개정, 제품 특성에 맞는 제조·가공기준, 규격 등 마련('20~'24)
 -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분류 신설('22) 및 질환별 제조기준, 가이드라인 마련('24)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용*, 환자용**식품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식품개발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성장 기반 마련
 - * 고령자 대상 기능성 소재 및 대량생산, 고령친화식품 가공기술 개발 등 추진(~'25)
 - ** 질환별 기능성 소재, 메디푸드 가공기술 개발, 질환별 식이 조성 연구 등 추진(~'25)

② 신기술, 신소재 적용 식품안전관리 기반 구축

- 대체단백식품 등 바이오기술 기반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에서 제품화까지 안전관리 기틀 마련
 - * 배양육 등 대체단백질식품 전문가 협의체 운영('21~),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21~), 식물성단백질식품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마련('21)
-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성 심사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간 업무 협력** 및 민원 소통 확대
 -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15건 이상/년) 및 재심사(51건, '21 ~ '25)
 -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부처(산업부, 과기부 등) 회의를 통한 심사 현황 및 현안 논의
- 신기술 적용 기구·용기·포장 및 위해우려 이행물질 등에 대한 시험법 개발*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 *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톨루엔 등 시험법 개발·개선(연 4건)
 - ** 테레프탈산 등 이행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연 500건) 및 안전성평가('21~)
- 미래 환경변화, 위해요인 사전대응 및 기준·규격 관리 강화를 위한 시험법 개발·개선 추진
 - * 식품첨가물 9종('21~'22),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2종('21), 위생용품 7종('21~)

① 위기대응 체계 정비 및 효율화

-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식품사고 위기대응체계 운영 및 훈련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체계 분석 및 정비** 추진
 -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실습참여형 위기대응 훈련 강화(연4회)
 - ** 위기대응 규정 정비를 위해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개정 추진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고, 통합식품안전 정보망 보유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잠재이슈 관리 강화
 - * 소비자자원, 해외전문가 등 적극 활용하여 정보 수집체계 확대
 -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다빈도 주제어 추출, 지도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20~)

② 지자체 역량 강화 및 협력 활성화

- 농·축·수산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 협의·조정·정보공유 등을 위해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와 지자체간 협업 채널 정례화*
 - * 식품안전 관련 분야 국장급 또는 과장급 협의체(연2회) 운영
 - * 농·축·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연1회)
- 지자체 시험·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분석장비 도입을 지원* 하고,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을 통한 검사범위 명확화**
 - * 중앙-지자체간 시험·검사 품질향상을 위한 소통(정책설명회, 회의 등), 시험·검사 전문평가관 교육(연2회),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국비 교부
 -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업무 범위: (현행) 식육 → (개정) 유통단계 축산물 포함

③ 국제적 식품안전 기준 조화 및 수출식품 안전성 확보

- 국제식품규격(CODEX) 설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대응을 통해 국제기준 조화를 선도하고, 국가 간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
 - * CODEX 식품첨가물분과 공동개최('21) 및 총회, 분과회의(11회) 참석('21~'25)
 - * 한-호·뉴, 한-중 등 식품안전협력위원회 개최 및 양해각서 개정
 - * 인적자원 교류프로그램 운영 : ('21) 중국 ('22) 일본 ('23) 베트남 ('24) 태국 ('25) 미국
-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농축산업 보호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국제 기준·규격 마련
 - * 국내 식품(연잎밥, 즉석만두, 청국장, 즉석밥)의 아시아규격 설정 대응('21~'25)
- 국제 통용이 가능한 한국형 식품안전인증제(K-NFSC) 개발 및 국제인증규격과 동등성을 확보*하여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 강화
 - * 수출국 관련 규제(표시·식품기준, 통관절차 등) 맞춤형 상담, 사전 안전성검사 및 영문 증명 추진('21~)

< 한국형 식품안전인증제 (K-NFSC, Korea National Food Safety Certificate)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식품안전경영***을 보강한 식품안전 인증규격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마련 중인 제도
- *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 경영, 감사, 식품방어, 식품사기 등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시스템

- 안전한 수산식품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인증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인증취득 시 소요비용 사후지원 등으로 국제인증업체 확대 추진
 - * 수출전략인증 취득 지원(건수) : ('20) 6 → ('25) 11
- 유기수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인증을 통해 안전한 유기수산물의 수출 활성화
 - * 우리나라와 수출국간 유사한 인증제도조사 및 국가간 동등성협정 체결을 위한 체계 구축('22) → 한-EU 동등성 협정 체결(~'23) → 미국, 동남아까지 확대('24~)

< 개 요 >

■ 배경 및 필요성

- 생산단계부터 다양한 위해요인에 대해 사전예방적 관리를 통해 부적합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생산·가공·유통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기후변화 등 환경요인으로 수산물과 해역에서도 신종 병원체 등 위해요소가 발생함에 따라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선진국형 저온유통 인프라 구축과 물류시스템 개선 등 유통혁신 필요
-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를 내실화하면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배달음식, 무인카페 등 비대면 식품판매 증가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로 전환 필요

■ 추진 과제

- 농산물 생산환경 개선
- 축산물 생산환경 개선
- 수산물 생산환경 개선
- 제조·가공 생산환경 개선

주요 성과지표

- ◆ GAP인증 내부감독자 지정비율(%) : ('20) 30 → ('25) 80
-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율(돼지, %) : ('20) 80 → ('25) 95
- ◆ 유기축산물 인증농가수(호) : ('20) 110 → ('25) 160
- ◆ 패류 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율(지정/일반, %) : ('20) 86/47 → ('25) 100
- ◆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도입율(%) : ('20) 0 → ('25) 100
- ◆ 스마트 HACCP 적용업체 수(개소) : ('20) 3 → ('25) 500

1 재배환경 개선

- 품목별 중점관리*로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사전차단하고 주요 농식품 정책사업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추진을 통해 안전 생산 유도
 - * 최근 3년간 부적합 다빈도 품목 및 특정시기별 취약품목 등
 - ** 친환경, GAP, 수출, 로컬푸드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20~'25)
- 농경지 토양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및 작물 흡수·이행계수 기반 안전관리 기술 개발을 통한 중금속 관리기준 도출**
 - * 일반농경지(논·밭·시설재배·과수원 등) 및 공단인근 농경지 대상(총 600점/년)
 - ** 토양 중금속 유효태 기준 도출 : ('20) Cd, Pb → ('22) As → ('25) Zn, Cu
- 농경지 중금속 실태조사* 및 농업용수의 식중독균·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으로 농산물 오염 우려 재배환경 관리 강화
 - * 중금속 오염 우려시설(제련소·공단·매립지 등) 주변 농경지 우선 조사(~'23)
 - ** 농업용수 식중독균(4종) 및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확대(260건/년)

2 농산물 위해요인 안전관리 강화

- 농산물 중 유해화학물질 오염 사전 차단 및 원인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 * 농업환경 잔류농약 모니터링(150건/년), 중금속 오염도 조사 및 위해평가(1건/년)
 - ** 농산물·농자재 중 농약분석기술 개발('25) 20건, 드론 살포농약 비산특성 조사
-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유해미생물·독소 모니터링* 및 진단·제어 기술 개발**
 - * 농산물 중 유해 미생물·독소 모니터링(누적, 건) : ('20) 2,800 → ('25) 6,300
 - ** 유해미생물 신속 진단·제어기술 개발(누적, 건) : ('20) 23 → ('25) 28

③ 농산물 취약요인 개선

- GAP 인증의 사각지대(단체 인증 시 검사 누락) 관리 및 질적 확대를 위한 내부감독제* 시행
 - * 단체인증 집단의 내부감독자가 해당 집단의 GAP 기준준수와 품질 제고를 위해 구성원을 지도·관리하는 제도(내부감독자 지정비율, %) : ('20) 30 → ('25) 80
- 바로 섭취 가능한 단순처리 농산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체계 개선**
 - * 단순처리 농산물 미생물(식중독균) 모니터링 확대·운영(425건/년)
 - ** 생산·유통단계별/검사기관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체계(시험법, 검사항목 등) 개선
-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시설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위해요소 저감 기술, GAP 통합모델** 등 개발·보급
 - * 대상시설 : ('21) 세척 → ('22) 건조 → ('23) 박파절단 → ('24) 절임 → ('25) 냉동
 - ** 농산물 생산부터 수확후 처리까지 GAP기준에 따라 통합관리 가능한 모델 개발

2-2 축산물 생산환경 개선

① 사육환경 개선

- 축산농가 허가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사육환경 개선 도모
 - * 통합점검표 마련, 관련기관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21~)
-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통해 사육시설 및 가축관리 개선 추진
 - * 동물복지 축산농장 운영을 위한 양돈(임신돈, 분만돈), 양계(산란계, 육계) 사육 시설 및 운송/도축에 대한 매뉴얼 개발(누적, 건) : ('23) 3 → ('25) 6
- 동물복지축산 인증체계 개선, 관로지원 등을 통한 인증 확대 및 불시점검·인증 갱신제 도입('23)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 동물복지축산인증 산란계 농가수(개소) : ('20) 163 → ('23) 220 → ('25) 258
 - ** 정기점검 외 불시점검을 매년 실시 하고 인증 갱신 의무(매 3년) 부과

② 축산물 위해요인 안전관리 강화

- 생산단계 축산물(식육, 식용란, 원유)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 및 검사체계 개선을 통한 축산물 안전관리 제고
 - * 축산물 잔류물질, 미생물, 계란 살충제 검사 등 매년 7만건 이상(~25)
- 원헬스 개념의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 환경과 가축,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쉰 주기 안전관리기술 개발
 - * 축산물 위해요소 검출추적 및 제어저감 기술 개발(누적, 건) : ('20) 10 → ('25) 18
- 항생제 사용 저감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도를 위해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추진
 - * 유기축산 지속 직불금 도입 : 직불금 지급(5년) 종료 후 인증 유지기간 동안 직불금 50% 계속 지급(안)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개정 및 예산협의 추진('22)
 - * 교육·홍보사업 : 무항생제 농가의 유기축산전환 컨설팅, 온라인 매체 홍보 등
- 식용란 선별포장제도 안정적 정착* 및 음식점·집단급식소 등의 의무대상 확대**를 통한 달걀 유통의 안전성 확보
 - * 업체별 선별포장처리 이행 특별점검, 영업자인증 교육컨설팅, 협회 소통 활성화 등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1)

③ 축산물 취약요인 개선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인증 농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흡농가 대상 기술지원
 - * 소규모 도축장(이동식 등) 대상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 보완('21~)
- 축산물 HACCP을 식육포장처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 마련
 - *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공포('21) 및 HACCP 의무화 시행('23)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의무화 계획

구 분	'23	'25	'27	'29
의무화 대상 업체 (연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전면시행)

2-3 | 수산물 생산환경 개선

1] 해역·양식환경 개선

-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해역 노로바이러스·병원성세균* 및 연안 양식장 패류독소** 발생시기 별 모니터링 강화

* 굴 노로바이러스(26개 해역 총 35개소, 25회/년), 살모넬라, 이질균 등 병원성 세균(67개 해역, 9월~익년 2월 6회/년) → 지자체·수협 등에 분석결과 정보제공

** 패류독소 모니터링(연 1,850건) : 7~2월 월1회 → 기준 초과 시 3~6월 주 1회

- 강우 시 오염물질 유입이 패류 생산해역별(내수용 67개소)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통한 패류 채취제한 기준 설정(~'24)

* 강우 영향조사·연구(해역수) : ('20) 11 → ('22) 15 → ('24) 15

- 패류 생산해역 중 하수처리장 확충이 필요지역에 '25년까지 71개(지정 37, 일반 34) 하수처리장 설치로 안전한 패류 생산환경 조성

* 지정해역(설치율, %) : ('21) 89 → ('22) 94 → ('23) 100

* 일반해역(설치율, %) : ('21) 64 → ('22) 73 → ('23) 82 → ('24) 91 → ('25) 100

< 패류 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 확충 개요(해수부·환경부 협업) >

- A형간염·노로바이러스 등 패류 기인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하수(분변) 유입 차단을 위해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조기 확충 추진

- 그간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지정) 위주로 시설 확충이 추진*되었으나, 내수용 패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해역(일반) 주변으로 시설 확충범위 확대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하수처리장 확충(총 37개소) 추진 중(설치완료 1, 공사중 13, 설계중 16, 계획수립·변경취소 7)

- 양식 수산물 질병 예방을 위한 양식수 정화시설 보급 확대*, 사료 유해물질 검증** 및 종자개발*** 등 안전성 확보

* 용수정화, 바이오플락순환여과 등 정화시설(개소) : ('20) 86 → ('21) 93 → ('22) 100

** 수산동물용 사료 중 유해물질 검정(점) : ('20) 200 → ('21) 200 → ('22) 200

*** 수산질병내성·우량종자 연구개발(개) : ('20) 3 → ('21) 3

② 수산물 위해요인 안전관리 강화

- 농약, 항생제 등 유해물질에 대한 양식장 안전성 조사* 확대 및 부적합 양식장 사후관리 강화

* 안전성조사(건) : ('15~'17) 13,500 → ('18~'20) 14,500 → ('21~'25) 15,000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재평가* 및 유효성분 함량 분석** 등 동물용 의약품 공급·관리 및 불법 사용 근절 지속 추진

* 재평가 대상(제품 건수) : ('21) 55 → ('22) 29 → ('23~'25) 458

** 수거·검정(건) : ('21) 111 → ('23) 113 → ('25) 115

- 패류의 비의도적 오염 감시와 예방을 위해 생산해역 주변 농약 및 항생물질 등 지속적 모니터링과 조사항목 확대

* 농약 분석항목(건) : ('20) 14 → ('20~'22) 30 → ('23~) 50

* 항생물질 분석항목(건) : ('20) 2 → ('20~'22) 10 → ('23~) 20

-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체계 마련* 및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록·관리 의무화**

* 「생산단계 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고시 제정('23)

** 양식업자에게 동물용의약품 사용기록 등 서류 작성·관리 의무 부과

- 도매시장에서 유통 전 수산물을 신속하게 검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신속검사 체계 구축

* 수산물 신속검사항목어종 선정 및 신속검사 키트 개발(~'21) 및 도매시장 내 24시간 신속 검사체계를 갖춘 수산물 현장검사소 구축·운영(~'24, 7개소)

- 패류 위생검사 실험실의 분석결과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장비 성능 시험, 분석인력, 숙련도, 표준문서 등 국제인증(ISO 17025) 확대 추진

* ('22) 패류독소(2종) → ('23) 병원성세균(살모넬라) → ('24) 중금속(카드뮴 등 8종) → ('25) PAHs(4종) → ('26) 유기염소계 농약(14종) → ('27) 다이옥신류(17종)

③ 수산물 취약요인 개선

- 양륙, 선별, 경매, 배송 등 위판장 전과정 저온시설 인프라 구축* 및 저온 보관·수송을 위한 물류시스템 지원**

* 거점형 청정위판장 구축 및 저온경매장 설치 등(개소) : ('20) 4 → ('25) 12

** 물류개선 : ('20) 자동선별기 6대 저온차량 20대 → ('25) 자동선별기 26대 저온차량 50대

- 수산물 생산단계 위해물질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HACCP 등록 양식장* 및 적용대상 확대** 추진

- HACCP 등록 대상 확대를 위한 면허양식장 실태조사 및 기준(안) 마련

* 양식장 HACCP 등록(%, 총 1,000개소) : ('20) 26 → ('21) 29 → ('22) 32 → ('23~'25) 35 → ('26년 이후) 50% 이상

** 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등의 HACCP 적용 대상 확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양식장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21~'25)

- 친환경 인증(육상양식장은 HACCP 인증조건 추가) 어가에 경영비 일부를 직불제*로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 및 HACCP 인증 확대 추진

* 공익직불제 운영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법」 하위법령 마련('21)

** 친환경인증 확대(개소) : ('20) 103 → ('21) 119 → ('23) 152 → ('25) 185

① 수질 안전관리 강화

- 상수관망 진단·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법제화* 및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

* 관망 전문 기술진단 의무화 대상 확대,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도입 등

** 지자체 시범사업(12개소, '20~'21)을 통해 관리기법을 표준화하고 지침·매뉴얼 개발 후 전국 지자체 확대 보급 예정

- 수돗물 공급全过程을 감시하는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 및 위생관리 기준 구체화**를 통한 정수장 운영 관리 강화

* 스마트상수도 도입률(%) : ('21) 20 → ('22) 25 → ('23) 50 → ('24) 90 → ('25) 100

** 수도사업자 「위생관리 기준」 구체화(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21)

- 수돗물 내 미세플라스틱 표준시험법 마련* 및 정수장 유입·처리 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수돗물 안전성 확보

* 수돗물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21)

** 정수장 모니터링(개소) : ('22) 50 → ('23) 70 → ('24) 100 → ('25) 120

- 농축산지역 지하수조사*, 안심지하수사업** 다중이용시설 관리***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 관리 강화

* 질산성질소 관리시범사업(5개소)을 통한 저감목표 설정 및 방안 마련('22)

**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 대상 2,000개소 지하수 수질검사(47개 항목) 등

*** 지하수 음용하는 학교·복지시설 등 우선 선정 후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수행(~'25)

- 나눔 지하수사업 등 가뭄 대비 지하수 공급체계 구축*하고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를 통한 지하수 관리 강화

* 전국 152개 시군대상 공급체계 구축 목표율(%) : ('20) 35.0 → ('25) 55.2

** 가축매몰지 침출수의 외부 유출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전국 관리대상 가축매몰지 실태점검 및 정화 추진('17~, 계속)

② 소비트렌드 변화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코로나19, 1인가구 및 온라인식품 유통 증가 등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배달·무인카페 등 비대면 식품판매 안전관리 강화
 -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유통체계 및 영업시설 관리 강화
 - * 온라인 판매식품 제조업체, 무인 시설 내 자동판매기 등 주기적 위생점검 강화
 -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 등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
 - *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온라인 인기제품 집중 수거·검사(분기별)
 - 일상적 사항* 비대면 점검을 위한 '원격 위생점검 시스템' 도입
 - * 건강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수질검사성적서 등 기본안전수칙 점검항목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허용조건 이행여부 중점관리('21~'23)를 통한 안전관리제도 마련
 - * 규제샌드박스 운영 결과 기반 관리방안 법제화 추진('21) 및 법률 개정('22)
-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협력과 기술지원 등으로 민·관 소통 확대**
 - *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DB 구축 및 예측모델 개발 등('22)
 - ** 원료 제품화, 수출 지원('20) 및 건강기능식품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21)
- 위생취약 업체 중심으로 효율적 주류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업체별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지하수 집중 관리
 - * 위생취약업체 위생관리 준수율(%) : ('21) 92.9 → ('23) 93.1 → ('25) 93.4
 - **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 지정·운영하여 약 160개 주류업체 지원 ('21~'25)
- 어린이, 어르신 등 건강 민감계층 이용시설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 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 * 위생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소비 식품 제조업소 점검 및 수거·검사(4회/년)
-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집중점검 및 소비패턴을 반영한 선제적 유통축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 안심 확보
 - * 우유, 달걀 등 다소비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집중점검 및 수거·검사(5회/년)

③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내실화

- 불시평가 도입 등을 통하여 HACCP 제도 운영을 효율화하고, 업계에 스마트 HACCP 시스템 확산 추진
 - HACCP 전면 불시평가 및 업체 자체평가(Self audit)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확립
 -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19)
 - HACCP 기준 이행점검 기록을 상시 자동 입력·관리하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 및 확산
 - * 스마트 HACCP 별도 인정절차 및 관리방법 등 근거 명확화('21)
 - * 업종별 스마트 HACCP '공통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보급(~'25)

< 스마트 HACCP '공통 표준 소프트웨어' >

- ① HACCP 기준서 입력: 주요공정(CCP), 한계기준, 데이터 수집주기 등 입력 관리
- ② 모니터링 기록: 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기록·저장 관리
- ③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통계 추출하여 분석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시설기준 등 법적 근거 명확화* 및 품질관리인 교육·기술 지원 확대**를 통한 운영 내실화('21~'23)
 - * 고시로 일괄위임하던 사항을 총리령으로 상향·정비 및 하위 법령 개정(~'22)
 - ** 교육프로그램 개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23)

< 개 요 >

■ 배경 및 필요성

- 기술변화, 소비트렌드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식품유통관리체계 확대·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
- 수입 전(前) 단계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수입검사체계 효율화, 위해우려 수입식품 유통 차단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입식품 전(全) 주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

■ 추진 과제

- 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 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 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

주요 성과지표

- ◆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체수(누계, 개소) : ('20) 8,300 → ('25) 10,800
- ◆ 유통수입식품 수거·검사 건수 : ('20) 6,000 → ('25) 8,000
-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건수 : ('20) 9 → ('25) 15
- ◆ 수입식품 HACCP 적용 업소(개소수) : ('22) 9 → ('25) 60
- ◆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 : ('20) 5.30 → ('25) 6.72

① 유통·수입 정보활용 관리 강화

- 관계부처 연계 정보 활용,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확대로 과학적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실현
 - 농축수산물 안전 연관 변수요인(환경변수 등)을 도출하고, 농축수산물 안전자료 데이터화 및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연계('21)
 - * 관련부처의 식품안전정보를 부처 칸막이 없이 공동 활용하고 개방하는 정보서비스
 - 농축수산물 안전정보 기반 부적합 예측모델을 개발하고('21), 데이터 기반 '지능형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23)
 - *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축수산물 안전정보 약 70종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 예측 또는 검사·점검대상 선정 가능
-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통합 관리 실현
 - 시스템을 통해 위해도 기반 검사체계*를 완성하고, 전 세계 해외 생산·제조업소 위치 관리체계 구축**('20~'23)
 - * 품목별 고유특성을 통계적 변수(생산국가·품목 부적합율 등)로 발굴하여 부적합 예측모형을 최적화함으로써 과학적 선별 검사체계 완성
 - ** 180여개국 76천개소 수입식품 생산·제조시설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GPS상 위경도) 관리기반을 구축해 세계적 재난·질병·사고 시 신속한 현황파악 및 대응기반 마련
 - 수입식품 빅데이터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해 인공지능 기반 식품 수입동향 자동 관리체계 구축('21~'25)
 - * 연도 및 계절별 증감, 유입지역 변화, 단기 공급중단(급감) 등 조기 탐지체계
- 민간 플랫폼(배달앱 등)을 활용한 식품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22) 추진
 - * 음식점 위생상황 등 안전정보 확인 플랫폼 연계(건) : ('21) 19 → ('23) 25 → ('25) 31

② 식품 공급망 이력관리 강화

- 식품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 식품 이력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확대* 및 부처별 산재된 이력정보를 연계** 하여 원재료부터 제조·판매단계까지 전주기 이력추적관리 실시
 - * 어린이 기호식품 의무화 추진 후 HACCP 의무적용 식품으로 단계적 확대(~'25)
 - ** (농산물) 수입유통이력 관리품목에 대해 이력정보 연계
(축산물) 쇠고기 → 돼지고기·수입쇠고기·수입돼지고기·가금·계란 추가 연계
(수산물) 해수부 시범사업 품목인 조기, 생굴 및 수입유통 이력정보 등 연계
 -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방안 연구결과('20)를 토대로 고도화 사업 추진(~'24)
- 수입 농축수산물 유통이력관리*는 원산지관리, 수급조절 등 업무 연계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 부처**에서 전담 관리
 - * 소관 부처별로 제도이관 및 시스템 구축 후 품목선정 교육홍보, 사후관리까지 전담
 - ** (현행) 관세청 → (이관) 해수부('21), 농식품부('22), 관세청(공산품)
- 축산물 이력제 확대(소·돼지→닭·오리·계란)에 따른 제도 운영 지원*과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축산물 유통조사 대상 품목 확대**
 - * 모바일·SNS 신고방식 도입('21~), 이력정보 검증 등을 통한 품질 제고(~'25)
 - ** 축종 확대 추진 : (기존)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 (확대) 벌꿀 추가
-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생굴·굴비, '18~'21) 종료에 따라 성과를 평가('22)하고 수산물 유통구조에 부합하는 이력제 개선방안 마련*
 - * 품목별 유통구조,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22~'26)

- 첨단 분석법 활용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및 디지털 포렌식 센터 확대** 등 원산지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강화

* 기술 개발(누계, 품종수) : 47 → ('22) 52 → ('25) 60

** 디지털 포렌식센터(개소) : ('20) 1 → ('21) 2 → ('24) 3

- 취약시기*별 유통이력신고 실태 집중점검 및 수입·유통업체 이력 신고위반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 등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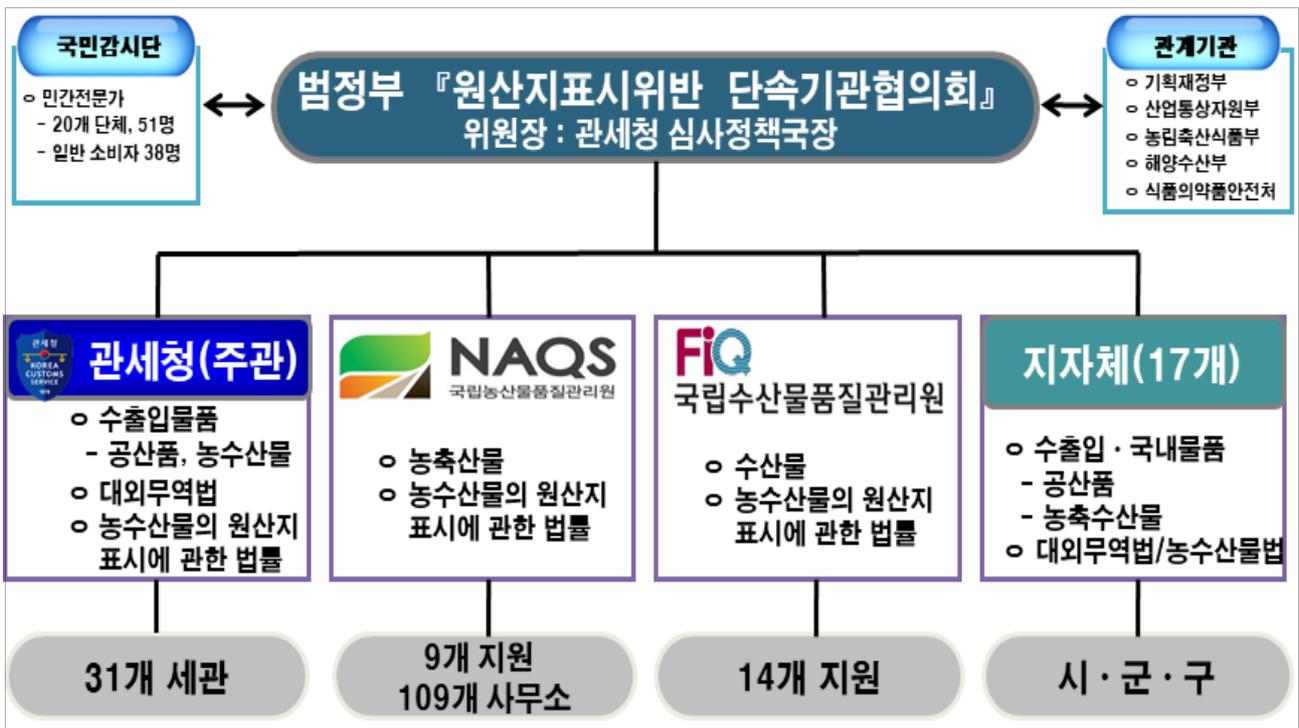
* 설명절, 가정의 달, 여름철, 추석절, 김장철 등

- 국민감시단을 활용한 정보수집 등 민간의 감시 역할 강화로 원산지 표시위반 고위험 식품류에 대한 집중단속 추진

- 관세청 주관 유관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과 위험품목·단속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 실시

* 수입 식품류(농수산물) 검사비율 확대(%) : ('20) 6.8 → ('25) 12.5

*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출범('14.4. 관세청 주관 총 20개 기관)



3-2 | 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① 현지실사 및 위생평가 강화

- 국내 식품 HACCP 의무 적용과 동일하게 다소비 수입식품(김치 등)에 대하여 HACCP 의무 적용 추진

* 수입식품 HACCP 인증 세부사항을 규정한「수입식품법」하위법령 개정('21)

* 수입김치 HACCP 의무적용 관련 한·중 실무회의 및 대상업소 기술지원('21~'24)

구 분	적용 기준
1단계('22년)	'19년 수입량 10,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2단계('23년)	'19년 수입량 5,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3단계('24년)	'19년 수입량 1,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4단계('25년)	'19년 수입량 1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5단계('26년)	모든 해외제조업소

-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강화*, 수입위생평가** 등을 통해 국내에 안전한 식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유도

* 비대면 심사체계 마련을 위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 및 시스템 구축('21)

** 평가기준 개발('22) 및 수입위생평가·수입위험분석 시스템 구축('23)

- 위생·안전 문제가 지적된 사례가 있거나 사전 차단조치가 필요한 해외 수출작업장을 선정·관리(매년 10개국, 60개소 점검)

* 연도별 계획대비 현지점검 추진실적 비율(%) : ('20) 80 → ('25) 85

* 국가별 3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수출작업장은 승인 취소 등

② 빈틈없는 통관·유통 관리 강화

- 효율적인 수입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검사명령제 확대 등을 통하여 수입식품 영업자의 책임 및 위생의식 향상을 도모

- 안전성 확보 식품은 검사를 완화하고, 위해 우려 식품은 검사를 강화
 - * 안전성 확보된 수입식품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면제
 - * 위해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무작위검사 비율 상향 조치 등
- 부적합 또는 위해 우려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입증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확대하여 수입식품 영업자 책임 강화
 - * 검사명령 대상 운영품목(누계, 품목수) : ('20) 18 → ('25) 23
- 해외직구 시장의 성장에 따라 해외직구 구매·검사 확대* 및 위해 식품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예방
 - *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결과 통관 차단 요청 비율(%) : ('20) 7.2 → ('25) 6.7
 - ** 차단목록 홈페이지 공개, 해외직구 사이트 운영 민간업체 민·관 협업(연중) 등
-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유해 식품류 통관관리 정보를 연계*하고, 수하인 관리를 강화**하여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 * 식약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정제·연계
 - ** 해외직구 반입자 실명제 이행률(%) : ('20) 76 → ('23) 88 → ('25) 96
-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 수입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보따리상 등 휴대반입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 *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건) : ('20) 6,000 → ('23) 7,200 → ('25) 8,000
 - ** 휴대반입식품 구매검사(건) : ('20) 35 → ('23) 300 → ('25) 500
- 항공·선박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위해식품 및 가축질병 관련 식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 * 위해식품 반입 고위험지역發(중국 위해, 연태 등) 여행자 휴대품 전량 X-Ray 검사
 - * 물품 반입차단 일제검사(편수) : ('20) 2,500 → ('23) 3,250 → ('25) 3,750
- 보세구역 위험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농산물 등 고위험 화물에 대한 보세구역 內 실물관리 강화
 - * 對중국 LCL화물 등 고위험화물 집중관리 및 보세구역 현장점검 100% 실시('20~'25)

3-3 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

① 위·변조 식품 선제적 차단 강화

- 불량식품 제조·유통 차단을 위하여 유전자 분석 기술 이용 식품 원료 진위 판별법 등 기술 개발 추진
 - * 종특이 판별법 현장신속 검출키트 등 이용한 다소비 농수산물 진위판별법 개발 HMR, 영유아식, 미래식품 등 유전자 바코드 정보 확보 및 유통실태 조사(~'21), 휴대용 센싱 기법 활용 정량리더기 개발('21) 불량고춧가루 진위판별 및 품질평가 기법 개발('21)
 - * 위·변조식품 판별법 개발 건수 : ('20) 70 → ('23) 85 → ('25) 95
-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의 식품 혼입을 차단하기 위한 첨단분석법 개발 추진* 및 부정불법 식·의약성분 표준품 합성('21~'23)
 - * 근육강화 효능광고 식품 중 불법 혼입될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SARMs 및 뇌기능 호흡기질환 개선치료 효능 광고식품 중 불법혼입 의약품 성분 동시분석법 개발(~'23)
 - * 분석가능 부정물질 성분 수(개) : ('20) 530 → ('23) 610 → ('25) 670

② 부정식품 사범 예방 및 식품사고 피해구제 기반 강화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사범 엄단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범죄유인 차단
 - * 유관기관 협업강화 및 전문교육,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등 적극 대응('21~'25)
- 식품 사고에 따른 효율적 피해구제 도모를 위해 식품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 (도입 사유) 집단피해 발생 시 소송비용수행부담 등으로 개별 피해구제 및 피해상응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불법수익 계속 보유로 위법행위가 억제되지 않는 한계 극복 필요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원인규명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리 제고
 -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의무화('20.6)에 따른 보고시스템 개선('22)

< 개 요 >**■ 배경 및 필요성**

-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영양 불균형의 취약계층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한 식품 안전·영양 교육 확대 필요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안전한 급식 제공과 올바른 영양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 필요

■ 추진 과제

-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지원
- 식품정보 제공 확대
-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제공
- 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주요 성과지표

-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급식관리 지원율(%) : ('20) 90 → ('25) 100
- ◆ 나트륨 1일 섭취량(mg) : ('20) 3,274 → ('25) 3,000
- ◆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수(누계) : ('20) 12,000 → ('25) 37,000
- ◆ 영양표시 활용도(%) : ('20) 73.5 → ('25) 74.5
- ◆ 범부처 통합 영양정보 DB 구축건수 : ('20) 30,000 → ('25) 100,000
- ◆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수(천명) : ('20) 509 → ('25) 550

① 식품안전·영양교육 확대

- 식품안전·영양교육의 정규화 및 청소년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영양 식생활 교육 체계 마련
 - * 체험활동 콘텐츠, e-book 보급 등 초·중·고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 및 실천학교 확산('21~), 우수교육사례 선정·우수학교 시상 등 통해 식품안전·영양교육 활성화
- 식품 영업자·종사자 위생교육 강화 및 교육기관 운영규정 개선
 - 신규 영업자 집합교육 실시, 영업자 외에 종사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지정취소 규정 마련 및 갱신제 도입
 - * 식품위생법, 동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 개정(~'23.1월 시행 목표)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학교 내 영양·식생활교육 확대*, 교육자료 보급·홍보('21),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영양교사 배치 확대***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포함
 - ** 학교 영양상담실 설치 및 운영률(%) : ('20) 75 → ('23) 90 → ('25) 95
 - *** 학교급식법 제7조 근거,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정원 단계적 확보
- 현재·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확대**
 - * 영유아, 취약계층(학교밖 청소년, 미혼모, 장애아 등), 전문인력, 고령자 등
 - **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수(천명) : ('20) 509 → ('21) 545 → ('25) 550
-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교육 시스템 운영을 통한 임신부·영유아 등 건강취약계층의 영양관리 강화 및 교육 접근성 증대
 - * 온라인 영양교육 시스템 고도화('21~), 교육과정 신규 개발, 교육매체 제작·배포 등
 - **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활용률(%) : ('20) 78 → ('23) 86 → ('25) 92

2 건강 식생활 실천 확산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식생활 행동변화 및 식습관 개선 유도를 위한 나트륨·당류 줄이기 등 다양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 * 저당·저염 실천본부 중심의 생활속 실천캠페인 확산 : 요리대회, 콘텐츠공모전 등 대상별·테마별 행사 개최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방법 콘텐츠(UCC 등) 제작·보급

-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지정을 확대하여 소비단계 위생관리 강화

-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우선구역' 지정 확대('21~)

- ☞ 지정 목표(누계, 개소) : ('20) 12,000 → ('22) 27,000 → ('25) 37,000

- * 현실적으로 등급 지정이 가능(이용객이 많고 위생수준 유지)한 음식점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능력 등을 고려

- * 사회제도 및 소비트렌드 변화(회식문화 감소, 워라밸 추구, 혼밥 확대)를 반영

-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 및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적정 대처를 위한 교육 확대

- * 식품알레르기 및 응급상황 대처방안 교육 대상(명) : ('21) 1,800 → ('25) 4,000

-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 용변 후 비누로 손씻기 실천율(%) : ('21) 43 → ('23) 49 → ('25) 55

4-2 | 식품정보 제공 확대

① 식품표시제도개선

- 국내 유통환경 개선 및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각계 의견수렴·제도 보완*, 관련 법령 개정**, 소비기한 표시에 따른 안전성 담보, 식품보관방법 등 교육·홍보***
 - * 제도 도입전 업체준비사항 등 논의(~'23) → 제도 시행후 보완사항 등 의견청취('24~)
 - ** 개정 : ('21) 식품표시광고법 → (~'22) 시행령·시행규칙 → ('23) 식품등 표시기준
 - *** (소비자)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변경에 따른 혼동이 없도록 제도 개념 교육홍보 (산업체)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조성 등 산업체 대상 교육홍보('21~'25, 간담회 등)
- 부당한 표시·광고 우려 내용에 대한 영업자 실증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 제고
 - * 표준실증가이드라인 마련('21~'23) 및 실증건수 확대(건) : ('21) 7 → ('25) 20
 - * 부당우려 표시광고 모니터링→영업자 실증자료 요구→미실증시 사용금지 조치(연중)
- 비대면 산업 가속화 및 SNS 플랫폼 발달에 따른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선제적 대응 및 관리 강화
 - * 소비자 관심 증대 제품 및 유튜브 등 SNS 활용 부당 광고행위 모니터링(연중)

② 기능성 표시제도 확대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에 따른 영업자 지원* 및 과학적 근거 사전검토를 위한 '기능성 표시식품 사전신고제' 도입('25)
 - *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가이드라인 마련('21), 시험법 개발 지원(~'25)
 - * 전국순회 영업자 설명회, 식품표시광고실무교육과정(2회/년), 소비자 홍보(~'25)

- 기능성 식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원료 발굴·등록·보급 등 지원을 통한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 국산 기능성 원료를 생산·보관·분양하는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20~'23)

③ 영양표시 및 정보 활용 확대

- 식품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25) 영양성분 표시기준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성분변화가 적은 식품, 영양학적 가치가 낮은 식품 등 일부 품목 제외

* 영양표시 대국민 활용도(%) : ('20) 73.5 → ('23) 74.1 → ('25) 74.5

-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비만 및 영양불균형 등 식생활 문제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기반 통합 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각 부처의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하고 행안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 (교육부·농식품부·해수부·행안부·식약처 부처협업 과제로 확정, '20.9.11)

* 식품영양정보DB 구축(건수) : ('20) 30,000 → ('23) 70,000 → ('25) 100,000

- 상시 영양위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 나트륨 섭취량 심층분석, 비타민·무기질 위해평가 확대** 등 추진

* 식품 1,000품목의 영양성분(108종) 분석 및 DB제공, 위해평가 플랫폼 서비스('21~)

** 위해평가 영양성분(누적건수) : ('21) 6 → ('23) 8 → ('25) 10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고도화, 통합 실용정보 개발을 통한 식품 성분 정보 제공 확대

* 국가표준식품성분 분석 및 빅데이터 구축(매년) : 식품 350점, 영양성분 130종

* 식품 크기 등 시각정보 DB 구축('22) 및 영양-기능 성분 DB 통합('25)

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및 급식 지원 확대

-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수준 개선을 위한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어린이기호식품 영양표시 등 확대**
 - *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학원가 또는 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지정('21~)
 - ** 가맹점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확대 추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시행('21~)
- 어린이* · 노인** 등 대상 위생 · 영양관리, 식습관 개선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설·사업규모 확대로 '25년까지 지원율 100% 달성
 -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정·지원기능 강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운영, 직원 역량강화, 중장기 전략 개발 등
 - ** 시범사업 진행중인 노인급식관리지원사업 확대(지자체 수) : ('21) 7 → ('25) 50
 - ** 전문인력 양성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회복지급식센터업무 통합 운영·관리

②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 학교·유치원 급식소 점검*을 통한 위생적 급식환경 조성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치원 급식 제공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IT 기술을 활용한 학교급식 식재료(축산물) 검수서비스 효율적 운영**
 - * 모든 학교·유치원 대상 연2회 위생·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 ** 거래정보통합증명서 발급서비스 시범사업 확대(업체·지역·학교 등) → 전국 거래정보통합증명서 발급축종 확대 : ('20) 소 → ('21~) 돼지·닭·계란·오리 등
- 학교 등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를 통한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강화
 - * 관계부처(교육부·식약처·지자체) 합동점검 및 연중 상시점검 강화
 - ** 조리식품, 식재료, 학교급식 다빈도 제공 식품(과자류, 빵류 등) 수거검사

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개선 영양관리 지원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트륨·당류 적정 섭취를 유도하고,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확대를 통해 식생활 영양관리 개선
 - * 나트륨 1일 섭취량(mg) : ('20) 3,274 → ('23) 3,109 → ('25) 3,000
 - * 국민 1일 평균 열량대비, 가공식품 중 당류 섭취비율을 10% 이하로 유지
-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아동 비만예방프로그램* 확대 운영
 - * 교육콘텐츠(비대면 영상, 가정학습지 등) 추가개발 및 사업 효율화, 지자체별 성과 환류, 우수사례 공유, 교육부 협의를 통한 프로그램 참여 확대 추진
- 학생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기준 마련·적용* 및 학교 급식에서 나트륨 줄이기** 실천
 -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20.12, 복지부)내용 반영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개정('21)
 - ** 교육자료 개발, 나이스 연계 최신 식품영양정보 제공('21~), 정책모니터단 운영

②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초등돌봄교실 학생대상 과일간식 지원사업 시범운영('18~) 후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21.3) 도출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 수립
-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단계적 확대 추진
 - * 시범사업 및 예비타당성 조사('20~'21) → 본사업 확대 추진('22~)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
 - * 지원대상 학생 수(천명) : ('20) 577 → ('23) 702 → ('25) 704
-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해 농산물 현물 바우처 공급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 * 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 및 효과분석('20) → 본사업 확대 추진('21~)
 - *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 취약계층 식품구입비 정부 지원 조항 신설

V. 향후 추진계획

□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관계기관 시달(21.2월)

* 전달체계 : 국조실 → 관계부처 → 산하기관 등

○ 예산·인력 등 필요 과제는 적정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조

□ 식품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전문위원회별 연2회)

○ 5개 전문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일선 현장에서의 이행 현황 및 추진과정 상 애로사항 등 발굴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수입식품, 소비·영양안전

□ 부처별(10개) 추진실적 평가(매년 3월)

○ 1년 단위로 부처별 과제의 추진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평가

붙임 1

세부과제별 추진부처 및 소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계
			'21	'22	'23	'24	'25	
전략 1. [위해 예방]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48개)								
1-1.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1-1-1. 선제적 위해평가체계 구축								
①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식약처	식품 등 안전관리(R&D)	3,300	3,500	3,500	3,500	3,500	17,300
②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식품등의 기준·규격 설정 평가	2,916	2,916	2,916	2,916	2,916	14,580
③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 시험법 확립	식약처	식품 등 안전관리(R&D)	3,300	3,500	3,500	3,500	3,500	17,300
④ 유해물질 인체노출안전기준 평가	식약처	식품 등 안전관리(R&D)	2,050	1,600	2,000	2,000	2,000	9,650
⑤ 식품기능성 원료 등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식품등의 기준·규격 설정 평가	851	851	851	851	851	4,255
⑥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노출량 평가	식약처	식품 등 안전관리(R&D)	460	400	400	400	-	1,660
⑦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조사	해수부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170	170	170	170	170	850

세부과제명	추진 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21	'22	'23	'24	'25	계
1-1-2. 기후변화 등 대비 위해요인 안전관리 강화								
① 유해미생물 및 식중독균 관리 강화	식약처	해당 없음	-	-	-	-	-	-
② 시구아테라 어독 적조생물 모니터링 및 독성 발생 기작 연구	해수부	시구아테라 어독 원인 적조생물 모니터링 및 독성 발생 기작 연구	100	100	100	100	100	500
③ 패독플랑크톤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 연구	해수부	패독플랑크톤 발생예측 시스템 연구	400	400	400	400	-	1,600
④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고도화	식약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124	124	124	124	124	620
⑤ 해조류 요오드 분석법 개발을 통한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해수부	수산시험연구사업 (수출패류 생산해역 및 수산물 위생조사)	30	30	30	-	-	90
⑥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곰팡이독소 오염실태 모니터링 및 저감화 기술 연구	농진청	농업기초기반연구	-	-	300	300	300	900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생산안정화 기반 기술 개발	-	300	300	300	-	900
1-1-3.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								
① 농약 판매 이력 관리체계 개선	농식품부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	1,800	1,543	1,076	1,076	1,076	6,571
② 농약 등록 확대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농진청	농자재관리 및 평가	21,124	21,124	13,064	13,064	13,064	81,440
③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및 시험법 개발	식약처	농·축·수산 안전관리 (R&D)	5,200	5,200	5,200	5,200	5,200	26,000
④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식약처	식품등의 기준·규격 설정 평가	2,065	2,065	2,065	2,065	2,065	10,325
⑤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추진	농식품부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제도지원	3,411	3,566	3,566	3,566	3,566	17,675
⑥ 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추진	해수부	수산물 위생관리 (잔류조사)	1,668	1,668	1,668	-	-	5,004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21	'22	'23	'24	'25	계	
1-1-4. 항생제 내성균 통합관리체계 구축									
①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관리	농식품부	축산분야(반려동물포함) 항생제내성 모니터링	477	501	526	579	608	2,691	
② 농업환경 항생제 노출경로 구명 및 통합위해성 평가	농진청	항생제 노출경로 구명 및 통합위해성 평가	1,470	1,470	1,470	-	-	5,410	
③ 농업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및 전파경로 추적	농진청	농축산물 생산환경의 안전관리 기술개발	1,800	1,800	1,800	-	-	5,400	
④ 수산분야 항생제 내성균 감시 및 검사역량 강화	해수부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 사업	800	800	800	1,000	1,000	4,400	
		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및 활용	475	200	200	200	200	1,275	
⑤ 유통식품 중 항생제 내성 감시 강화	식약처	식품 등 안전관리	1,300	1,300	800	800	800	5,000	

1-2.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1-2-1. 식중독 원인조사체계 고도화

①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 향상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관리 기반 확대	식약처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국고/직접수행	2,265	965	965	1,065	1,065	6,325
			지방비	932	932	932	932	932	4,660
② 집단식중독 감시 및 역학조사 역량 강화	질병청	해당 없음	-	-	-	-	-	-	
③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망 분석 시스템 고도화 및 검출법 개발	식약처	식품 등 안전관리	2,300	2,700	1,000	1,000	1,000	8,000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449	152	168	168	168	1,105	
④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원인병원체 유전체 정보체계 확대 강화	질병청	국가 감염병 유전체 감시망 운영(펄스넷)	240	500	600	800	800	2,940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21	'22	'23	'24	'25	계	
1-2-2.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									
① 식중독 예방 및 발생 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식약처	식중독 예방 및 관리	50	50	50	50	50	250	
② 노로 등 바이러스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체계 구축	식약처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국고/직접수행	935	1,135	1,235	1,235	1,335	5,875
			지방비	115	115	115	115	115	575
③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권역별 운영 추진	식약처	식중독 예방 및 관리	1,596	1,096	1,096	1,096	1,096	5,980	
④ 학교·유치원 급식 식중독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	교육부	해당없음	-	-	-	-	-	-	
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통합예방관리체계 구축운영	질병청	해당없음	-	-	-	-	-	-	
1-3. 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1-3-1. 미래 사회변화 대비 제도 개선									
① 식품소비 변화 반영 식품분류체계 개선 및 기준규격 개선	식약처	해당없음	-	-	-	-	-	-	
② 고령친화식품 및 메디푸드 연구 지원	농식품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미래대응식품)	3,615	6,564	7,079	8,019	9,532	34,809	
1-3-2. 신기술, 신소재 적용 식품안전관리 기반 구축									
① 바이오 식품소재 안전관리 기반 구축	식약처	바이오 식품소재 국내 제조활성화 기반 조성	300	300	1,000	1,000	1,000	3,600	
②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 및 소통 강화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142	142	142	142	142	710	
③ 신기술 적용 기구 및 용기·포장 안전관리	식약처	신기술 적용 기구·용기·포장 연구	900	900	900	1,000	1,000	4,700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개발·개선 및 안전성평가							
④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시험법 개발·개선	식약처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시험법 개발·개선	1,700	1,550	1,700	1,800	1,900	8,650	

세부과제명	추진 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21	'22	'23	'24	'25	계
1-4. 위기대응시스템 정비 및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1-4-1. 위기대응 체계 정비 및 효율화								
① 위기대응 체계 정비 및 효율화	식약처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166	273	281	290	299	1,309
② 위해정보 수집·분석 체계 강화	식약처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위해정보 수집·분석)	618	618	618	618	618	3,090
1-4-2. 지자체 역량 강화 및 협력 활성화								
① 부처-지자체간 협업 활성화	식약처	해당없음	-	-	-	-	-	-
② 지자체 시험검사 역량 강화	식약처	실험실 검사능력강화	1,360	1,360	1,360	1,360	1,360	6,800
1-4-3. 국제적 식품안전 기준 조화 및 수출식품 안전성 확보								
① 국제 식품 안전 협력 확대	식약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효율적 대응	284	284	284	284	284	1,420
		양자간 협력채널 확대	100	100	100	100	100	500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	90	90	90	90	90	450
② 국제 기준 대응	농식품부	식품표준화	150	150	150	150	150	750
③ 수출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지원	식약처	국가인증제 도입	150	2,000	2,000	2,000	2,000	8,150
		수출식품 안전관리 국제 경쟁력 강화	200	1,500	1,500	1,500	1,500	6,200
④ 수산식품 안전성 강화를 통한 국제인증 취득 지원	해수부	국제인증	1,750	1,750	2,000	2,000	2,000	9,500
⑤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등 수산가공식품 수출안전성 지원 강화	해수부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수산물 국제인증)	-	50	50	100	100	300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21	'22	'23	'24	'25	계
전략 2. [생산·제조]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44개)								
2-1. 농산물 생산환경 개선								
2-1-1. 재배환경 개선								
①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농식품부	농산물 안전성조사	23,534	24,640	25,379	26,140	26,924	126,617
② 농경지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농진청	농업기초기반 연구	113	120	120	120	120	593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700	700	700	700	700	3,500
③ 오염 우려 농지·농업용수 조사관리 강화	농식품부	농산물안전성조사	1,260	1,500	1,500	1,500	1,500	7,260
2-1-2. 농산물 위해요인 안전관리 강화								
① 유해화학물질 오염실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농진청	농업기초기반 연구	2,260	2,020	2,020	1,370	1,370	9,040
		농축산물 생산환경의 안전관리 기술개발	970	1,070	1,070	-	-	3,110
② 유해미생물·독소 오염실태 모니터링 및 진단제어 기술 개발	농진청	농업기초기반 연구	680	680	680	680	680	4,080
		농축산물 생산환경의 안전관리 기술개발	711	711	711	700	700	3,533
2-1-3. 농산물 취약요인 개선								
① GAP 인증 내실화 및 내부감독자 지정률 확대	농식품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5,700	5,700	6,000	6,000	6,300	29,700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② 단순처리 농산물 식중독균 모니터링 강화 및 잔류농약 검사체계 개선	식약처	농산물 식중독균 현황조사	308	308	308	308	308	1,540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체계 개선	300	300	-	-	-	600
③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시설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관리 기술 개발	농진청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생산안정화 기반기술 개발	500	500	800	800	800	3,400

세부과제명	추진 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21	'22	'23	'24	'25	계
2-2. 축산물 생산환경 개선								
2-2-1. 사육환경 개선								
① 축산농가 사육환경 점검·관리 강화	농식품부	축산물품질관리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1,500	500	500	500	500	3,500
② 동물복지 사육시설 및 가축관리 개선기술 개발	농진청	2025 축산현안대응 기술 고도화	1,200	900	900	900	900	4,800
③ 동물복지축산인증 농가 확대	농식품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1,095	1,095	1,095	1,095	1,095	5,475
2-2-2. 축산물 위해요인 안전관리 강화								
①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농식품부	축산물 위생 안전검사 운영	20,313	20,313	20,313	20,313	20,313	101,565
② 생산단계 축산물 위해요소 진단·제어 기술 개발	농진청	축산시험연구	200	200	200	200	200	1,000
		농축산물 생산환경의 안전관리 기술개발	260	260	600	-	-	1,120
③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농식품부	친환경 축산직불	1,585	3,175	3,400	3,625	3,850	15,635
④ 달걀 유통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해당없음	-	-	-	-	-	-
2-2-3. 축산물 취약요인 개선								
①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 활성화	농식품부	축산물HACCP지원	1,567	1,567	1,567	1,567	1,567	7,835
②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의무 적용 확대	식약처	해당없음	-	-	-	-	-	-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21	'22	'23	'24	'25	계
2-3. 수산물 생산환경 개선								
2-3-1. 해역·양식환경 개선								
① 생산해역 병원미생물 및 연안 양식장 패류독소 모니터링 강화	해수부	수산시험연구사업 (수출패류 생산해역 및 수산물 위생조사)	215	215	215	215	215	1,075
		수산물 위생관리 (생산해역 관리 및 수출기반 조성)	290	290	290	290	290	1,450
② 강우량에 따른 패류 생산해역 영향 조사	해수부	수산물 위생관리 (생산해역 관리 및 수출기반 조성)	347	473	473	473	-	1,766
③ 패류생산해역 및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	해수부 환경부	지정해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50,080	38,021	6,000	-	-	94,101
		일반해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16,380	31,643	16,725	9,000	6,000	79,748
④ 양식장 양식수 정화관리 시스템 보급 확대 및 사료 안전성 확보	해수부	친환경양식어업육성	4,671	3,000	-	-	-	7,671
		골든씨드프로젝트	4,460	-	-	-	-	4,460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	500	500	-	-	-	1,000
2-3-2. 수산물 위해요인 안전관리 강화								
①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및 부적합 양식장 사후관리 강화	해수부	해당없음	-	-	-	-	-	-
②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 연구 확대	해수부	수산물 위생관리 (동물약품감시)	150	150	150	150	150	750
③ 패류 생산해역 농약·동물용 의약품 모니터링	해수부	수산물 위생관리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754	754	1,394	1,394	1,394	5,690
④ 생산단계 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관리방안 마련	식약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500	500	500	500	500	2,500
⑤ 도매시장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잔류실태 조사 및 수산물 현장검사소 운영	식약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	600	1,200	2,400	-	4,200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21	'22	'23	'24	'25	계
⑥ 패류 위생검사 실험실 인증 확대	해수부	수산물 위생관리 (생산해역 관리 및 수출기반 조성)	-	100	100	100	100	400
2-3-3. 수산물 취약요인 개선								
① 저온유통 인프라 구축 및 유통시스템 개선	해수부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산지 위생 안전체계 구축)	4,952	2,100	2,100	2,100	2,100	13,352
		산자유통시설 건립 (청정위판장 건립)	120	1,140	1,260	1,140	1,260	4,920
② 양식장 HACCP 적용 확대	해수부	수산물 위생관리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600	600	600	600	600	3,000
③ 수산물 인증제 확대 지원 시스템 구축	해수부	수산공익직불제	9,379	9,700	10,200	10,700	11,235	51,214
2-4. 제조·가공 생산환경 개선								
2-4-1. 수질 안전관리 강화								
① 상수관망 진단관리 강화 및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체계 도입	환경부	노후 상수관로 정밀 조사지원	66	101	51	-	-	218
②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환경부	스마트 지방상수도지원	4,676	2,110	3,586	3,000	3,000	16,372
③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관리 기반 마련	환경부	정수장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공정관리	200	200	200	200	-	800
④ 지하수 오염원 조사 및 수질 관리	환경부	농축산지역 지하수 조사	1,156	-	-	-	-	1,156
		안심지하수 지원사업	2,600	2,600	2,600	2,600	2,600	13,000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	1,600	1,600	1,600	1,600	1,600	8,000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21	'22	'23	'24	'25	계
⑤ 재난·재해 대비 지하수 관리 강화	환경부	가뭄대비 지하수 지원 체계 구축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1,066	1,066	1,066	1,066	1,066	5,330

2-4-2. 소비트렌드 변화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① 배달·무인카페 등 비대면 식품판매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직접수행	1,145	1,509	1,553	1,612	1,674	7,493
			보조(50%)	567	567	567	567	567	2,835
②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건강기능 식품관리	직접수행	715	713	713	713	713	3,567
			보조(50%)	420	420	420	420	420	2,100
③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평가 기반 구축 및 기술지원	식약처	인공지능 기반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500	500	500	-	-	1,500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신속 제품화 기술지원		500	500	500	500	500	2,500
④ 주류 제조·유통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369	369	387	406	426	1,957
⑤ 건강 민감계층 이용 위생 취약시설 점검 강화	식약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직접수행	1,145	1,509	1,552	1,611	1,674	7,491
			보조(50%)	567	567	567	567	567	2,835
⑥ 유통 축산물 선제적 관리 강화	식약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직접수행	-	-	-	-	-	-
			보조(50%)	611	611	611	611	611	3,055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21	'22	'23	'24	'25	계	
2-4-3.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내실화									
①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내실화 및 스마트 HACCP 확산	식약처	HACCP제도 활성화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17,743	17,743	17,743	17,743	17,743	88,715	
② 건강기능식품 GMP 운영 내실화	식약처	해당없음	직접수행	-	-	-	-	-	-
			보조	-	-	-	-	-	-
전략 3. [유통·수입]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24개)									
3-1. 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3-1-1. 유통·수입 정보활용 관리 강화									
① 데이터 기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 확대	식약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	350	2,000	2,000	1,000	5,350	
②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식약처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구축	2,663	1,500	1,500	-	-	5,663	
③ 생활 밀착형 식품안전정보 제공 확대	식약처	해당없음	-	-	-	-	-	-	
3-1-2. 식품 공급망 이력관리 강화									
①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 고도화	식약처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415	1,820	1,820	1,820	820	6,695	
②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강화	농식품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733	1,123	1,174	1,228	1,284	5,542	
③ 축산물 유통이력관리 활성화	농식품부	축산물품질관리 (축산물이력제)	27,357	29,076	29,325	30,082	31,095	178,030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21	'22	'23	'24	'25	계
④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강화	해수부	수산물 이력제	2,220	2,220	2,220	2,220	2,220	11,100
⑤ 원산지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강화	해수부	수산물품질관리 (수산물원산지단속 디지털포렌식 센터)	6,708 (246)	6,313 (-)	6,152 (-)	6,073 (246)	6,073 (-)	31,319 (492)
		차세대 수산물 품질 관리 및 검역 시스템 구축(원산지 추적 및 판별기술 고도화)	3,135	3,120	1,664	-	-	7,919
		수산물품질관리 (수입유통이력제운영)	1,139	779	779	779	779	4,255
⑥ 유통이력신고 관리강화 및 관리품목 조정	관세청	해당없음	-	-	-	-	-	-
⑦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관세청	해당없음	-	-	-	-	-	-

3-2. 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3-2-1. 현지실사 및 위생평가 강화

① 다소비 수입식품 HACCP 의무 적용 추진	식약처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100	105	110	116	122	553
②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식약처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987	1,036	1,088	1,143	1,200	5,454
		수입축산물 검사	2,892	3,037	3,189	3,348	3,515	15,981
		수입수산물 검사	2,711	2,847	2,989	3,138	3,295	14,980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342	342	342	342	342	1,710
③ 수입축산물 검역 관리 강화	농식품부	해외작업장 관리	182	190	190	195	200	957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21	'22	'23	'24	'25	계
3-2-2. 빈틈없는 통관·유통 관리 강화								
① 수입식품 통관 검사관리 효율화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3,794	11,050	11,603	12,183	12,792	51,422
		수입축산물 검사	1,850	1,943	2,040	2,142	2,249	10,224
		수입수산물 검사	2,246	2,358	2,476	2,600	2,730	12,410
②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455	478	502	527	553	2,515
③ 해외직구 유해식품 차단 등 통관관리 강화	관세청	해당없음	-	-	-	-	-	-
④ 유통제품 수거·검사 및 수입업체 지도·점검 확대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500	525	551	579	608	2,763
⑤ 여행자 휴대반입 식품 관리 강화	관세청	해당없음	-	-	-	-	-	-
⑥ 농산물 등 보세구역 실물관리 강화	관세청	해당없음	-	-	-	-	-	-

3-3. 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

3-3-1. 위·변조 식품 선제적 차단 강화

① 위·변조식품 판별 감시 기법 고도화	식약처	식품 등 안전관리(R&D)	2,100	300	300	300	300	3,300
② 혼입예상 부정물질 차단 첨단분석법 개발	식약처	안전성평가기술개발(R&D)	600	600	600	600	600	3,000

세부과제명	추진 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계
			'21	'22	'23	'24	'25	
3-3-2. 부정식품 사범 예방 및 식품사고 피해구제 기반 강화								
① 부정식품 사범 단속 강화	법무부	해당없음	-	-	-	-	-	-
② 식품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법무부	해당없음	-	-	-	-	-	-
③ 식품안전사고 및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원인규명 강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관리	43	43	43	43	43	215

전략 4. [소비·생활]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28개)

4-1.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지원

4-1-1. 식품안전·영양교육 확대

① 식품안전·영양 교육 확대 및 식품위생교육 운영 내실화	식약처	어린이먹을거리 안전 관리강화	205	205	205	205	205	1,025
		국민영양안전관리	60	60	60	60	60	300
② 학생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 강화	교육부	해당없음	-	-	-	-	-	-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확대	농식품부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4,884	5,487	5,597	5,653	6,048	27,669
④ 임산부·영유아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및 영양플러스사업 확대 운영	복지부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및 운영	57	63	69	76	67	265

4-1-2. 건강 식생활 실천 확산

① 나트륨·당류 줄이기 건강 식생활 개선 실천 홍보 확산	식약처	국민영양안전관리	239	239	239	239	239	1,195
---------------------------------	-----	----------	-----	-----	-----	-----	-----	-------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21	'22	'23	'24	'25	계	
②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을 통한 외식 위생관리 강화	식약처	식중독예방 및 관리	1,835	2,450	2,820	3,090	3,360	13,555	
③ 식품알레르기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교육	질병청	만성질환 예방관리	직접수행	-	-	-	-	-	-
			지자체 (50%)	1,770	1,800	1,800	2,000	2,000	9,370
			민간보조 (100%)	50	70	100	100	100	420
④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 교육	질병청	지역사회 예방행태 실태조사	민간보조 (100%)	180	200	200	200	200	980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직접수행	600	600	600	600	600	3,000

4-2. 식품정보 제공 확대

4-2-1. 식품표시제도개선

①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식약처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 강화	484	484	484	484	484	2,420
②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 운영	식약처	실증위원회 자문단 운영	47	50	53	55	60	265
③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관리 강화	식약처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 운영	1,339	2,101	2,335	2,405	2,646	10,826

4-2-2. 기능성 표시제도 확대

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운영	식약처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운영	256	710	720	740	800	3,226
② 기능성 원료 등록 확대 및 기능성 원료 은행 구축	농식품부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6,051	8,400	8,400	3,500	3,500	29,851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21	'22	'23	'24	'25	계	
4-2-3. 영양표시 및 정보 활용 확대									
① 식품의 영양표시 확대 및 기준개선	식약처	영양표시 확대 및 기준개선	787	787	787	787	787	3,935	
② 식품영양정보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식약처	국민영양안전관리	198	198	198	198	198	990	
③ 영양 위해평가 체계 및 플랫폼 구축	식약처	식품 등 안전관리	용역	1,300	1,300	1,300	1,300	1,300	6,500
			직접수행	200	200	200	200	200	1,000
④ 국가표준식품성분 DB 고도화 및 실용성 강화	농진청	농축산물 수확 후 융복합 실용화 기술 개발	2,100	5,400	6,300	6,300	6,300	26,400	
4-3.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제공									
4-3-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및 급식 지원 확대									
① 식품안전보호구역 집중 관리 및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확대	식약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강화	1,040	1,040	1,040	1,040	1,040	5,200	
② 어린이·노인 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식약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강화	54,867	76,598	89,367	94,043	98,744	413,619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738	2,401	6,614	9,237	11,869	30,859	
4-3-2.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① 학교·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강화	교육부	해당없음	-	-	-	-	-	-	
② 학교 등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생 점검 강화	식약처	식중독 예방 및 관리	325	865	865	865	865	3,785	

세부과제명	추진 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계
			'21	'22	'23	'24	'25	
4-4. 건강한 영양 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								
4-4-1.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 개선 영양 관리 지원								
① 나트륨, 당류 섭취 저감화 지속 추진	식약처	국민영양안전관리	871	871	871	871	871	4,355
② 아동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비만 예방 관리 정책기반 구축	195	215	237	261	287	1,195
③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 강화 및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실천 추진	교육부	해당 없음	-	-	-	-	-	-
4-4-2.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초등학교 어린이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농식품부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7,200	24,300	51,300	126,900	126,900	336,600
②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780	57,613	57,608	57,608	57,608	246,217
③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유급식 지원	농식품부	학교 우유 급식	75,238	75,478	75,238	75,238	75,238	376,430
④ 경제적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제도 도입	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지원	8,900	-	-	-	-	8,900

※ 소요예산은 향후 5개년('21 ~ '25) 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예산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실제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물량·사업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

제5차 기본계획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과제번호	1-1-1-①	과제명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이화정 연구관(T. 043-719-4253)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환경오염, **한국인의 식습관변화*** 등에 따라 설정된 유해오염물질 기준에 대해 국민의 위해수준 변화 파악을 위한 주기적인 위해평가 필요

* 다소비·다빈도 식품 및 식품 섭취 트렌드를 반영한 가정간편식식품(HMR) 등

□ 추진 계획

- 환경오염, 식습관변화 등을 반영한 주기적 유해오염물질 위해평가
 - 식품 중 최근 유해오염물질*의 오염도자료 및 한국인의 최근 섭취량 자료에 기반한 위해수준 재평가 등
 - * 중금속 7종 : 납, 카드뮴, 총 수은, 메틸수은, 총비소, 무기비소, 주석('22)
 - * POPs 2종 : 다이옥신, PCBs('23)
 - * 곰팡이독소 6종 : 아플라톡신, 제랄레논,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 파툴린('25)

향후 추진계획

구분	총계획	'21	'22	'23	'24	'25
유해오염물질 위해평가	한국인 식습관 변화를 반영한 주기적 유해오염 물질 위해평가 (15종)	(7종) 중금속 ▪ 납, 카드뮴, 주석, 총수은, 메틸수은, 총 비소, 무기비소		(2종) POPs ▪ 다이옥신, PCBs		(6종) 곰팡이독소 ▪ 아플라톡신, 제랄레논,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데옥시니발 레놀, 파툴린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식품등 안전관리(R&D)	직접수행, 용역·출연	2,363	3,300	3,500	3,500	3,500	3,5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위해평가(건수)	6	-	7	2	-	6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유해오염물질 위해평가 건수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유해오염물질별 지표건수의 총합

과제번호	1-1-1-②	과제명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T. 043-719-3853)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 환경오염 및 식품 섭취·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따라 유해오염물질 노출수준이 변화할 수 있음
- 식품섭취로 인한 유해오염물질 오염수준, 노출량 및 위해도, 제외국 관리기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현행 기준 타당성 검토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정간편식(HMR) 등의 유통·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HMR 등 식품 소비 트렌드에 따른 노출량 관리 필요
 - * 1인가구 증가율(%) : ('10) 23.9 → ('30) 32.7
 - * 가정간편식 시장규모(억원) : ('13) 14,083 → ('16) 20,289(44.1% ▲)

□ 추진 계획

- (노출량 평가) 환경적·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국가 단위의 광범위한 오염도 조사 및 노출량 평가
 - (대상식품)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간편식품* 등 오염우려가 높은 국민 다수가 섭취하는 식품
 - * 구입 후 바로 섭취 식품(RTE), 단순 가열 후 섭취식품(RTH), 간단 조리식품(RTC), 간편 조리세트(meal kit) 등
 - (대상물질) 기준이 설정된 유해오염물질(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19종
 - 오염도 자료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량 자료에 기반한 노출량 평가
- (기준·규격 재평가) 유해오염물질의 오염수준, 노출량, 국외 관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기준·규격에 대한 재평가
 -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노출수준 유지 또는 감소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노출량 평가	유해오염물질 19종	-	중금속('15~'16) 곰팡이독소('17) 다이옥신('17) PCBs('17)	벤조피렌('18) 3-MCPD('19) 멜라민('19) 곰팡이독소('20)	중금속('21) 벤조피렌('22) 다이옥신('23) PCBs('23) 3-MCPD('24)	
유해오염 물질 재평가	유해오염물질 19종	-	중금속('16) 곰팡이독소('17)	다이옥신('18) PCBs('18) 벤조피렌('18) 3-MCPD('19) 멜라민('19) 아플라톡신(3종, '20)	곰팡이독소(5종, '21) 중금속(4종, '22) 중금속(3종, '23) 벤조피렌('23) 다이옥신('24) PCBs('24) 3-MCPD('24)	

* 25년 이후는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직접수행	2,916	2,916	2,916	2,916	2,916	

* 국고지원액만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구분'란에는 직접수행, 보조(보조율 표시), 용자, 출연 등 재원지원 성격을 표시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2차) 재평가율(% , 누적)	15	42	63	84	100	3차 평가 시작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제2차 식품등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유해오염물질 19종 재평가 추진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재평가 유해오염물질 수/총 재평가 대상 유해오염물질 수)×100

과제번호	1-1-1-③	과제명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 시험법 확립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이화정 연구관(T. 043-719-4253)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 환경오염 및 수입식품 다양화 등으로 인한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의 노출 가능성 증가

- 국내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법 개발 및 개선을 통한 오염도 조사 등 과학적 근거 마련 필요

* 중금속, 곰팡이독소, 식물독소, 해양생물독소,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 추진 계획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의 시험법 확립

- 식품 중 기준 미설정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시험법 개발 및 개선

* 곰팡이독소 12종 : 트리코테세류, 알테네리아독소('21), 애니아틴, 보베리신('22), 시트리닌, 에모딘, 모닐리포르민, 루브라톡신('23), 푸사프로리페린, 푸사린산('24), 쿨모린, 부테놀라이드('25)

* 식물독소 17종 : 트로판알칼로이드, 히포글리신A, MCPG, 시안화물, 푸미트레 모르긴, 베루클로겐('21), 차코닌, 솔라닌, 라이시닌, 라이코린, 프타퀼로사이드('22), 식물독소 2종('23~'25)/위해정보 등 시급성을 반영하여 조정가능

* 해양생물독소 7종 : 아자스필산, 예소톡신, 펙테노톡신('21), 브레베톡신, 마이크로시스틴(농·수산물)('22), 마이크로시스틴(가공식품)('23), 시구아톡신('24)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8종 : PBDE('21), PFOA, PFOS('22), HCB('23), PBB, PCN('24), deca-BDE, SCCP('25)

* 방사능물질 6종 : 테크네튬, 코발트, 우라늄, 아메리슘('21), 삼중수소('22), 탄소('24)

- 최신 기술 활용한 기준 설정 유해오염물질*의 시험법 최적화 개선

* 곰팡이독소 6종 :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23), 푸모니신, 파툴린('24),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25)

향후 추진계획

총계획	'21	'22	'23	'24	'25
신규 유해오염 물질 시험법 개발 (5종) 및 기존 설정된 유해오염 물질의 시험법 개선(6종)	(2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발트, 망간, 트리코테센류, 알테나리아독소, 트로판알칼로이드, 히포글리신A, MCPG, 시안화물, 푸미트레모르긴, 베루클로겐, 아자스필산, 예소톡신, 펙테노톡신, PBDE, 우라늄, 테크네튬, 코발트, 아메리슘, 이플라톡신, 오크리톡신, 푸모니신 	(1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레늄, 애니 아틴, 보베리신, 차코닌, 솔라닌, 라이시닌, 라이코린, 프타퀼로사이드, 브레베톡신, 마이크로시스틴, PFOA, PFOS, 삼중수소, 파툴린,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1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금속 4종, 시타닌 에모딘, 모닐리포르민, 루브라톡신, 식물독소 2종, 마이크로시스틴, HCBd, 	(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사프로리 페린, 푸사린산, 식물독소 2종, 시구아톡신, PBB, PCN, 탄소, 	(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쿨모린, 부테놀라이드, 식물독소 2종, deca-BDE, SCCP,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식품등 안전관리(R&D)	직접수행, 용역·출연	2,363	3,300	3,500	3,500	3,500	3,5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시험법 개발(개선)	12	13	9	16	7	3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유해오염물질 시험법 개발(개선)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유해오염물질별 지표건수의 총합

과제번호	1-1-1-④	과제명	유해물질 인체노출안전기준 평가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홍명실 연구관(T. 043-719-4504)		

□ 배경 및 필요성

- 새로운 위험성 정보가 발표되면서 국제적으로 유해물질 및 식품 첨가물 등에 대한 인체노출안전기준 (재)평가 추진
 - 사회적 관심, 식생활 등 국내 실정을 반영한 우선관리 대상물질에 대한 인체노출안전기준 평가 필요

□ 추진 계획

- 새로운 위험성 정보가 발표된 물질 및 유관부서 요청물질 등에 대한 인체노출안전기준 (재)평가 추진('21~'25)
 - 과불화화합물 등 유해물질 인체노출안전기준 평가 완료('21~'22)
 - * 과불화화합물 4종, 안티몬, 포름알데히드, 아플라톡신, 브롬화합물, 노닐페놀, 바륨,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8종 등
 - 유전독성 발암물질로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독성참고값 재검토('23~'25)
 - * 벤조피렌, 크롬6가 등
-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을 반영한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
 - 과불화화합물 등 유해물질의 통합위해성평가('21~'22)
-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에 관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판단 근거 마련('21~'23)
 - * 인체노출안전기준위원회 운영,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공통지침서에 반영
- 식품위해평가시스템에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DB 구축('21~'25)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기준 평가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기준 지속적 평가 및 위해평가 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체노출안전 기준 수치화 (19종) 인체노출안전 기준 최종 독성값 제안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체노출안전 기준 수치화 (8종) 인체노출안전 기준 최종 독성값 제안 (1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체노출안전 기준 수치화 (11종) 인체노출안전 기준 최종 독성값 제안 (7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기준 지속 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기준 지속 재평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식품 등 안전관리(R&D)	국고 (직접수행)	4,329	2,050	1,600	2,000	2,000	2,0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인체노출안전기준 평가 건수(누계)	74	84	94	100	105	11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인체노출안전기준 평가 건수는 재평가 건수 포함하여 매년 평가하는 물질 건수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재평가 건수 포함 누계로 측정

과제번호	1-1-1-⑤	과제명	식품기능성 원료 등 기준규격 재평가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최윤주 연구관(T. 043-719-2415)		

□ 배경 및 필요성

- 식습관변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의 발견 및 제조방법 다양화 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규격의 주기적 재평가 필요

□ 추진 계획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재평가
 - (식품원료) 잘못 분류되었거나 생물학적으로 새롭게 재분류된 식품원료들의 학명·명칭의 현대화 및 안전성 재평가(500건/년)
 - (기능성원료) 인정받은 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
 - * ('20) 홍삼 등 12품목, ('21) 스피루리나 등 9품목, ('22) 헤마토코쿠스추출물 등 9품목, ('23) 포스파티딜세린 등 9품목, ('24) 은행잎 추출물 등 9품목
 - (식품첨가물) 유화제 등 83개 식품첨가물에 대한 성분규격 및 사용 기준 재평가
 - (기구·용기·포장) PP, PE 등 30개 재질별 기준규격에 대한 재평가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식품원료 재평가	-	-	-	'20년 500품목	500품목/년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재평가	기능성원료 91품목	-	기능성원료 9품목('17)	기능성원료 37품목 * '18년(16품목), '19년(9품목), '20년(12품목)	기능성원료 45품목	-
식품첨가물 재평가	-	-	-	'20년 20품목	사용량 기준 미설정 품목 83품목	-
기구·용기·포장 재평가	-	-	-	'20년 9종 재질	30종 재질	-

* 25년 이후는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식품 등의 기준·규격 설정 평가	직접수행	851	851	851	851	851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재평가	직접수행	243	243	250	250	250	-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식품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건수) ¹⁾	529	528	529	528	528	미정
재평가 수행 기능성 원료(건수) ²⁾	12	9	9	9	9	미정

- 1)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제2차('20~'24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제·개정 건수
- 2)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났거나 새로운 안전성·기능성 보고가 있어 재평가 대상인 기능성 원료 품목 수

과제번호	1-1-1-⑥	과제명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노출량 평가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김승환 연구관(T. 043-719-4503)		

□ 배경 및 필요성

- 플라스틱류의 해양생태계 오염에 따른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증가
 - *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거나 인위적으로 미세하게 제조된 5mm이하의 플라스틱 입자
 - 수산물(어류, 조개류 등), 천일염 등을 통해 식품으로 섭취될 수 있음이 지속적으로 보도
 - 현재까지 표준화된 시험법 및 인체유해 영향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출 경로 중 식품 등 섭취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
 - * WHO는 음용수 중 미세플라스틱 위해가능성 낮은 것으로 발표('19.8)

□ 추진 계획

- 수산물 및 천일염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등의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품목별 섭취량에 기반한 노출량 평가('21)
 - 주성분, 섭취량 등을 고려한 모니터링 대상에 대해 분석법 개발, 모니터링 수행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활용 노출량 평가
 - 식품 섭취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노출저감 방법 개발
- 미세플라스틱 섭취에 대한 인체노출 평가기술 개발('22~'24)
 - 음료류 등 가공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개발
 - 노출경로·환경요소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기술 개발
 -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소통 자료 개발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7~'19	'20~'21	'22~'24	'25 이후
식품 중 미세 플라스틱 관련 연구	식품 등 섭취를 통한 인체 미세 플라스틱 노출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14종중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및 분석법 확립 ('17~'19) 미세플라스틱 인체건강영향 사전평가('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주원료 가공식품 등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및 분석법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료류 중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및 분석법 확립 노출경로 및 환경 요소에 따른 식품안전 관리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연구 동향 등을 반영한 미세플라스틱 연구 지속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1	'22	'23	'24	'25
식품 등 안전관리(R&D)	국고 (직접수행)	460	400	400	400	400

□ 성과지표

지표명	'21	'22	'23	'24	'25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대상 건수	10종	5종	5종	5종	5종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대상 품목수

과제번호	1-1-1-⑦	과제명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조사
담당자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신영락 사무관(T. 044-200-5303)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생태계 건강성 관리방안 마련 및 미세플라스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필요
 - 정기조사를 통한 해양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 진단·평가

□ 추진 계획

-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조사
 - 해수 부유·지표생물·해저퇴적물·해변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조사 및 분석법 확립
 - * 조사·분석방법 표준화를 위한 매질별 표준작업절차서 개발 및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마련
- 해양 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평가
 -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및 평가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7~'19	'20~'21	'22~'24	'25 이후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조사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평가	-	·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및 분석법 확립	·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 조사 및 오염도 평가	·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 조사 및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마련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1	'22	'23	'24	'25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국고 (직접수행)	170	170	170	170	170

□ 성과지표

지표명	'21	'22	'23	'24	'25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대상 건수	90	90	90	90	9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해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대상 정점 수

과제번호	1-1-2-①	과제명	유해미생물 및 식중독균 관리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김용무 연구관(T. 043-719-2416)		

□ 배경 및 필요성

-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등으로 신종 식중독 원인체에 의한 식중독 사례가 지속 보고됨에 따라 위해가능 미생물을 파악하여 선제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생산-소비단계 전반에 대한 미생물 위해요소 분석과 현행 규격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 필요
 -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한 식품오염도, 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미생물 위해평가를 통한 정량규격 개선 검토
 - *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건, 통계 자료 등 참고사항을 기재

□ 추진 계획

- 기후변화에 따른 유해 미생물 등의 안전관리 강화
 - 신종 식중독균 원인체의 해외 발생 정보, 안전성 정보, 주요외국 관리 현황 등을 통해 국내 출현 가능 식중독균의 조사 및 기준 필요성 검토
 - 바로 먹는 수산물 중 비브리오 패혈증균 및 콜레라 기준규격(안) 마련
 - 위해정보, 시장동향 등을 반영하여 미생물 규격 평가
 - * 원료성 식품 및 밀키트(meal-kit), 가정간편식(HMR) 등 세트상품의 미생물 규격
-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한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한 식품오염도, 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미생물 위해평가를 통한 정량규격 개선 검토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미생물 위해 요소 선제적 관리 및 규격 재평가	저위해성 식중 독균 정량규격 설정 및 규격 재평가	-	·저위해성 식중 독균 정량규격 설정 재평가 (15건)	·저위해성 식중 독균 정량규격 설정 재평가 (18~19, 33건) ·저위해성 식중 독균 정량규격 설정 재평가 (20, 10건 진행중)	·유가공품, 알 가공품 중 캡 피로박터 등 주요 식중독균 위해 요소 분석(22) ·즉석식품류 중 살모넬라 등 주요 식중독균 위해 요소 분석(23) ·분유류 중 캡 피로박터 등 주요 식중독균 위해 요소 분석(24)	-

* 25년 이후는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

□ 예산 사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저위해성 식중독균 재평가 건수	10	5	5	5	5	미정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미생물 위해도 변화 및 신종 식중독균 출현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한 규격의 주기적 재설정 필요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위해평가에 따른 저위해성 식중독균 재평가 건수 및 위해정보, 시장동향 등을 반영한 미생물 기준·규격 개정 건수

과제번호	1-1-2-②	과제명	시구아테라 어독 적조생물 모니터링 및 독성 발생 기작 연구
담당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후변화연구과 임월애 연구관(T. 051-720-2260)		

□ 배경 및 필요성

-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는 지난 49년간 (1968~2016년) 해양 표층의 평균 수온이 1.23℃ 상승
 - * 동 기간(1968~2016년) 전 세계 표층수온은 0.47℃ 상승(전 지구대비 2.5배 수준)
- 2009년 제주해역에서의 시구아테라 어독* 적조생물 출현 보고 이후 제주 및 남해안으로 확산되고 있음
 - * 시구아테라 어독 :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서 산호초와 해조류 표면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저서성 적조생물을 섭이한 어류가 독화되어 식중독 유발
- 시구아테라 어독 적조생물의 출현 및 확산 양상 파악과 배양체 확보 등의 생리생태학적 연구를 통해 향후 수산물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건강 확보

□ 추진 계획

- 우리나라 해역에 출현하는 시구아테라 어독 원인생물의 종류, 분포, 양적변화 및 계절 변동 등 파악
- 우리나라 해역에서 출현하는 시구아테라 어독 적조생물의 생리·생태 특성 파악을 위한 배양체 확보
- 시구아테라 적조생물이 어류에 섭이 되었을 경우 어류체내 독화 기작 연구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시구아테라 어독 적조생물 분포 파악	제주, 남해, 동해 적조생물 출현종 및 출현량 조사	-	-	-	제주, 남해, 동해 총 10개 정점 봄, 가을 모니터링 수행, 적조생물 배양체 확보	적조생물 출현량과 해양환경과의 상관성 분석
독성 생성기작 연구	적조생물 종별 함유 독성 및 독량 분석, 어류 독전이 현상 연구	-	-	-	종별 성장실험 수행, 성장조건별 독 생성 파악	어류 독전이 기작 구명 순수 독소 확보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시구아테라 어독 원인 적조생물 탐색 연구	직접수행	100	100	100	100	100	100
시구아테라 어독 발생 기작 연구	직접수행	100	200	200	200	200	2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시구아테라 어독 원인 적조 모니터링 건수	20	20	20	20	20	20
시구아테라 어독 원인 배양체 확보	2	2	2	2	2	2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매년 조사위치 10개 정점에 대한 2회 조사(봄, 가을)

과제번호	1-1-2-③	과제명	패독 플랑크톤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연구
담당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후변화연구과 임월애 연구관(T. 051-720-2260)		

□ 배경 및 필요성

- 패류독소 원인 적조생물은 수색이 변화되지 않는 저밀도에서 패류가 독화되므로 그 현상을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워 전세계적으로도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에 큰 우려
- 뉴질랜드 및 EU 등에서는 패독플랑크톤과 패류독소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패독플랑크톤 출현 밀도에 따른 패류독소 조기에보 체계운영 및 정책결정을 조기에 추진
- 우리나라도 매년 마비성 패류독소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패류독소 조기에보 체계 구축을 위한 패독플랑크톤 발생예측시스템 개발 필요

□ 추진 계획

- 마비성패독 원인이 되는 플랑크톤 출현 파악
 - 주요 패독발생 해역 패독플랑크톤 휴면포자 및 seed bed 파악
 - qPCR 등을 이용한 패독플랑크톤 신속 탐색 기법 개발
 - 패독플랑크톤 출현과 해양환경과의 상관성 파악
- 패독플랑크톤의 독성생성 기작 규명
 - 휴면포자 발아, 성장, 소멸에 따른 독소 발현량 파악
 - 패류의 패독플랑크톤 섭이에 따른 패독 발현 규명
 - * 패독플랑크톤의 농도 및 기간에 따른 패류 섭이 후 패류 내 독성 변화 파악
- 패독플랑크톤 발생 예측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이동·확산 예측모델 개발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마비성패독 플랑크톤 출현 파악	패독플랑크톤 출현 발생기작 파악	-	-	휴면포자 분포 파악 및 패독플랑크톤 출 현파악	패독플랑크톤 출현과 패독발생 상관관계 파악	-
패독플랑크톤 독성 생성 기작 규명	패독플랑크톤 독성 및 패류내 독화 규명	-	-	패독플랑크톤 성장단계에 따른 독소 발현량 파악	패독플랑크톤 성장단계에 따른 독소발현량 파악 및 패류섭이에 따른 패독발현 양상 분석	-
패독플랑크톤 발생 예측 모델 개발	패독플랑크톤 조기 예보체계 구축	-	-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와 시를 활용한 이동·확산 예측 모델 구축	패독플랑크톤 발현 예측 시스템 활용하여 패독 피해 예방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패독플랑크톤 발생예측 시스템 연구	직접수행	400	400	400	400	400	-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패독플랑크톤 출현 정보 제공(횟수)*	5	5	5	5	5	-
패독 플랑크톤 이동·확산 예측 모델 구축(건수)**	-	-	-	-	1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패독플랑크톤 모니터링 실시 후 분석결과 정보 제공 건수
(1월부터 3월까지 2주 간격 5회 모니터링)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본 과제의 최종산물인 예측 시스템 구축

과제번호	1-1-2-④	과제명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고도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손외학 사무관(T. 043-719-3205)		

□ 배경 및 필요성

-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 생식 등을 통해 감염되어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어 선제적 안전관리 요구

* 법정 3급 감염병으로, 최근 5년간('15~'19년) 치사율 : 36.4%(환자수 228명, 사망자수 83명)

- 비브리오 패혈증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 시스템을 구축('17~'18, 941백만원)하여 운용 중('18.4~)

- 비브리오패혈증균의 검출이력과 해양환경인자(수온, 유속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당일~3일간의 비브리오패혈증균의 출현율* 제공

*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제공

□ 추진 계획

-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 관측지점 변동사항(위치 및 환경인자)*, 해역별 비브리오균 실제 검출 이력**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예측정확도 향상

* 해수부, 기상청 등에서 제공(Open-API)되는 지점 별 수온자료 등

** 질병관리본부의 '해양환경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사업' 자료

- 시스템 운영 및 사용편의성 개선, 해킹 등 보안이슈 대응을 위한 유지보수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용역	-	124	124	124	124	124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 적중률 향상을 위한 지점별 수식 리모델링 실시 건수	-	1	1	1	1	1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비브리오 예측률 향상을 위해 매년 지점별 비브리오균
실측 자료를 반영, 시스템 알고리즘을 개선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시스템 알고리즘 개선 횟수

과제번호	1-1-2-⑤	과제명	해조류 요오드 분석법 개발을 통한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담당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 조미라 연구관(T. 051-720-2640)		

□ 배경 및 필요성

- 유럽(독일 등) 및 호주에 수출되는 해조류 중 요오드에 의한 통관 거부사례 발생
- 우리나라 해조류의 신뢰성 있는 요오드 분석법 개발 및 요오드 함량 조사의 필요성이 부각
 - * 수출 해조류의 요오드 함량에 의한 통관 거부사례 비율은 독일 2.3% 및 호주 1.5%이었음('16~'19년)

□ 추진 계획

- 다소비 해조류의 요오드 분석법 개발을 통한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 해조류 중 요오드 분석법 개발('21)
 - * 전처리 방법 및 ICP-MS를 이용한 분석법 확립
 - 해조류 중 요오드 함량 모니터링('22)
 - * 다소비 해조류 5종(미역, 김, 다시마, 툫, 파래)에 대한 요오드 함량 조사
 - 요오드의 인체 위해성 평가('23)
 - * 모니터링 결과를 JECFA가 제시한 안전기준과 비교하여 해조류 중 요오드 섭취 가이드라인 제시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수산물 유해 요인 관리 연구 강화	▪ 해조류 요오드 안전관리 방안 마련	-	▪ 국가별 관리 기준 및 통관거부 사례 조사 ▪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 시험법 마련을 위한 국내외 시험법 비교 ▪ 분석법 사전 유효성 검증	▪ 해조류 중 요오드 - 분석법 개발 (1건) - 모니터링 (50건) - 위해평가 (1건)	▪ 해조류 요오드 안전관리 정책자료 제공 ▪ 국제적 기준규격 및 관리 표준화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산시험연구사업 (수출패류 생산해역 및 수산물 위생조사)	직접수행	-	30	30	30	-	-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다소비 해조류 요오드 분석법 개발(건수)	-	1	-	-	-	-
다소비 해조류 요오드 모니터링(건수)	-	-	50	-	-	-
다소비 해조류 요오드 위해평가(건수)	-	-	-	1	-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수산물 요오드 관리에 필요한 각 단계별(분석법 개발
→모니터링→위해평가) 지표 설정이 요구됨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요오드 분석법 개발 건수, 모니터링 실시 건수 및 위해
평가 건수

과제번호	1-1-2-⑥	과제명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곰팡이독소 오염실태 모니터링 및 저감화 기술 연구
담당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팀 김점순 연구관(T. 063-238-3399)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습도, 강수량 증가 등으로 농산물의 독성 곰팡이 오염 기회 확대 및 곰팡이독소 생성 우려 증가
 - 최근 30년 기온은 20세기 초(1912~1941) 보다 1.4℃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124mm 증가하였음
 - 국내 맥류 등의 붉은곰팡이 감염 피해가 잦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작물의 안전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곡류 재배기간 중 붉은곰팡이의 중요관리점 구명과 오염원 차단 관리 및 저감화 매뉴얼의 제작·적용이 필요함
- 온난다습한 환경조건으로 전통 메주 등의 독성곰팡이 오염 빈도 증가
 - 전통 된장에서 아플라톡신 독소 검출로 인한 회수·폐기 발생('20)
 - * 메주, 된장 등 517개 제품 중 된장 33개 제품에서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 메주 건조 및 된장 발효 과정의 원인균(*Aspergillus flavus* 등) 발생 조건 및 저감 방안 구명 필요

□ 추진 계획

- 주요 곡류의 재배기간 중 붉은곰팡이 저감기술 적용 연구
 - 곡류 별 붉은곰팡이 중요관리점에 오염원 저감기술 적용
 - * 대상 작물 : ('23)보리, 밀 → ('24)보리, 밀, 벼 → ('25)벼
 - 곡류의 붉은곰팡이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매뉴얼 작성
 - * 대상 작물 : ('24)보리, 밀 → ('25)벼
- 전통 된장 제조과정의 중요관리점 개선을 통한 곰팡이독소 저감효과 구명
 - 된장 제조 과정의 독성곰팡이 오염 모니터링 및 중요관리점 구명

- 된장 제조 과정의 곰팡이독소 오염 모니터링 및 분석기술 개발
- 중요관리점 개선을 통한 저감효과 구명 및 위생관리 매뉴얼 개발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농산물 생산 단계 안전 관리	곡류의 곰팡이 독소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개발	채소 및 곡류의 곰팡이 독소 오염실태 조사	농산물 독성 곰팡이 발생 실태, 저감화 미생물 자원 발굴	농산물 곰팡이 독소 생성 요인 구명과 저감화 실천 기술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류 붉은 곰팡이 중요 관리점 저감화 기술 개발 된장의 곰팡이 독소 중요 관리점 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류의 곰팡이 독소 저감 기술 현장 적용과 보급 장류 곰팡이 독소 저감 기술 개발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업기초기반연구	직접수행	-	-	-	300	300	300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생산안정화 기반 기술 개발	직접수행			300	300	3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오염원 저감기술 적용 후 밀도 분석(건)	-	-	-	6	6	3
장류 독성곰팡이·독소 모니터링(건)	-	-	50	50	50	-
안전관리 현장 매뉴얼(건)	-	-	-	1	2	1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오염원 저감기술 적용 후 밀도 분석) 곡류 별 중요 관리점에 저감기술 적용 후 오염원 밀도 분석 건수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장류 독성곰팡이·독소 모니터링) 현장에서 수집하여 독성곰팡이, 독소를 분석한 건수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안전관리 현장 매뉴얼) 생산자가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천해야 할 기술을 수록한 책자, 리후렛 등 개발 건수

과제번호	1-1-3-①	과제명	농약 판매 이력 관리체계 개선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김보민 사무관(T. 044-201-1384)		

□ 배경 및 필요성

- PLS 제도 연착륙 등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록관리 체계 개선
 - 모든 농약(가정·원예용 50ml 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기록 의무화(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통해 해당 농작물·병해충에 적합한 등록 농약만 추천·판매하도록 유도

□ 추진 계획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메인시스템(2단계) 구축('21~)
 - 미등록 농약 판매 제한, 부정·불량 농약 회수·폐기 기능 개발
 - 구매 내역, 저항성 등을 고려한 농약 추천 및 처방 기능 개발
 - 부정·불량, 취급제한 및 안전사용기준 정보서비스 기능 개발
 - 농약 등록정보 등 대국민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 농진청·지자체 합동 현장 지도를 통해 판매기록 전산화 및 농진청으로의 농약 판매기록 제출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사항 발굴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농약 판매 이력 관리 제도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 제도 도입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검역용 농약 등 10종에 대한 판매기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검역용 농약 등 10종에 대한 판매기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농약(가정·원예용 50ml 이하 소포장 제외)에 대해 판매 기록을 의무화 하도록 농약의 범위 확대 완료('19.7.1) ▪ 판매 기록 전산화를 위한 농약 안전정보시스템(1단계) 구축 운영중('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의 메인 시스템(2단계) 구축·운영 추진 ▪ 농약안전정보 시스템 활용을 통한 농가별 맞춤형 처방 체계 마련 	-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직접수행	2,926	1,800	1,543	1,076	1,076	1,076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가입률(%)	95	98	100	100	100	1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농약 판매정보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회원가입률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시스템 가입 완료한 판매업체 수/ 전체 판매업체 수 × 100

과제번호	1-1-3-②	과 제 명	농약 등록 확대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담 당 자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이경원 사무관(T. 063-238-0824)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김호경 사무관(T. 063-238-0830)		

□ 배경 및 필요성

- 2019.1.1.부터 전면시행된 PLS제도로 농산물의 잔류농약의 신뢰성 향상을 꾀하였으나, 외래병해충 유입 및 신품종 등 등록농약이 부족한 농업인의 현장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
- 잠정(임시) 등록농약(약 5천여개)을 '21년까지 직권등록으로 전환하고 현장에 필요한 농약의 추가등록 추진
 - 약효·약해, 잔류성 시험을 통한 농약직권등록 및 기준설정
 - * 잠정등록(5,597개) 전환계획: ('19) 1,075개 → ('20) 2,200 → ('21) 2,322
- 농업인이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농약판매단계부터 유통 농약의 이력관리가 필요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농약 유통관리 강화

□ 추진 계획

- 등록농약이 없거나 적은 작물을 중심으로 현장에 필요한 농약등록 확대
 - (직권등록) 잠정등록을 정식등록으로 전환하고, 현장필요 농약 추가등록
 - (약효·약해) 400시험, (잔류성) 1,320시험 → 2,853 농약 등록
 - * 사업일정: ('19.12~'20.2월) 과제선정·협약 → (3~12월) 시험 → (~'21.4월) 등록
 - * 직권등록(누계): ('17) 1,223적용대상 → ('18) 2,893 → ('19) 3,904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첨단화) 농업인·병해충별 처방시스템 및 병해충 등의 영상정보를 활용한 농업현장 병해충 진단시스템 구축
 - (유통관리) 등록취소, 판매금지 농약 등 부정·불량 농약정보 공개 및 시스템을 토하여 신속한 재고 파악 및 회수·폐기
 - (정보서비스) 농약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농업인, 판매업체에 제공
 - (시스템 정착)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현장지원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PLS 대응 농약등록 확대 및 유통 안전 관리 강화	농약 유통관리 강화 및 농약 등록강화로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	▪ 불법 농자재 유통 단속 및 교육 홍보	▪ 농약 안전성 (위해농약재 평가 직면등록 강화 ▪ 위 해 예 방 관 리 계 획 적용 확대	▪ 농약 판매 기록제 시행 (2019.7.1) ▪ PLS제도 시행 (2019.1.1)	▪ 농약 안전 정보시스템 활용 유통 관리 강화	▪ 농약관리의 첨단 디지털화 추진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자재관리 및 평가	직접수행	21,124	21,124	13,064	13,064	13,064	13,064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 농약등록(건수)	2,800 (‘21.4)	2,800 (‘22.4)	1,700 (‘23.4)	1,700 (‘24.4)	1,700 (‘25.4)	1,700 (‘26.4)
○ 농약 안전정보시스템 정보 제공 건수	270만	300만	300만	300만	300만	300만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농약등록 건수) 해당년도 소면적 작물 등 농약등록 건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정보제공 건수) 당해연도 농약
판매업체 등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농약을 구매한 정보를 제공한 건수

과제번호	1-1-3-③	과제명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및 시험법 개발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잔류물질과 최장덕 연구관(T. 043-719-4203)		

□ 배경 및 필요성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독성평가, 섭취량 산출 등 과학적 위해평가 필요
-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운영을 위한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 및 농약에 대한 잔류평가 자료 마련 필요
 - *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약처 고시)
- 미국, 유럽 등에는 허가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미등록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시험법 개발 필요
 - * 농·축·수산물 PLS 도입 추진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확대 등

□ 추진 계획

- 국내식품 신규 등록 및 수입식품 기준신청, 안전사용기준 변경, 축종확대 등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을 위한 위해평가('21~'25)
 -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농약 잠정기준을 정식기준으로 전환 등
 - **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 중 일부 허가된 축종의 기준확대 등
-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잔류평가 자료 마련('21~'25)
 - * 아욱, 참나물 등 농산물 대상 카벤다짐 등 농약 잔류평가 자료 100건
- 국내 신규 등록 및 노후 시험법에 대한 시험법 개발('21~'25)
 - 농·축·수산물 중 미등록, 금지물질 및 면제물질 등 시험법 개발
 - * 국내 농산물 재배 및 식품 수입 시 필요한 신규 등록 시험법 등

향후 추진계획

구 분	총계획	'21	'22	'23	'24	'25
위해평가(건)	(4,000건)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기준 신규 등록 및 개정을 위한 위해평가(건)	(800건) 기준 신규 등록 및 개정을 위한 위해평가				
잔류평가 자료마련	(100건) 생산단계 잔류평가 자료마련	(20건) 잔류평가 자료마련	(20건) 잔류평가 자료마련	(20건) 잔류평가 자료마련	(20건) 잔류평가 자료마련	(20건) 잔류평가 자료마련
시험법 개발	(100 건)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시험법 개발	(20 건) 신규 및 노후 시험법 개발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축·수산 안전관리(R&D)	직접수행	5,200	5,200	5,200	5,200	5,200	5,2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위해평가(건)	800	800	800	800	800	800
잔류평가 자료마련(건)	20	20	20	20	20	20
시험법 개발(건)	20	20	20	20	20	20

과제번호	1-1-3-④	과제명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정지윤 연구관(T. 043-719-3875)		

□ 배경 및 필요성

- 축·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농약 오·남용 방지와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도입 필요
 - *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축·수산물에 대한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필요성 제기('17.12.27)
- 농산물 농약 PLS 전면 시행('19.1)에 따라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 지속 추진

□ 추진 계획

- 축·수산물의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농약성분) PLS의 단계적 도입 추진
 - (기준정비) ① 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적용하는 일률기준 강화(0.03 → 0.01 mg/kg)
② 신규허가 및 재평가에 따른 기준 확대 지속('23년까지 45건/년)
 - (운영체계 도입)
 - ① 1단계 : 동물용의약품(주요축종, 어류) PLS 도입 추진
 - ② 2단계 : 동물용의약품(주요축종 및 어류 외), 농약성분 PLS 도입 방안 마련
 - (부처간 협력) PLS 도입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분기별)
 - *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합동 축·수산물 PLS 추진사항 및 세부계획 마련·공유
 - (제도 홍보)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이해당사자 대상 교육·홍보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해 설명회·간담회 등 개최(2회/년)
- 농산물의 농약 PLS의 안정적 정착
 - 농산물 중 농약 재평가를 통해 잠정 허용기준을 정식기준으로 전환
 - * 잠정기준 설정된 국내 2,721건에 대하여 과학적 실험자료와 섭취량 평가를 통해 정식기준으로 전환하고 정식기준화가 어려운 기준은 삭제 예정
 - ** 정식기준 전환 : 약 500건/년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 * 국내 200건/연 및 수입 100건/연 이상
- 부적합이 높은 지역 부처합동 현장방문, 이해당사자 대상 교육·홍보 강화
 - * 현장방문 및 설명회 4회/연, PLS 전문가 강사 양성과정 개설 2회/연, 전광판 및 SNS 광고(지속)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 기준 설정	·축수산물 잔류 물질 PLS 단계적 도입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기준 확대(지속)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기준 확대(지속)	·기준미설정 항균제 일률기준 강화 고시('20)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기준 확대(지속) ·교육 홍보(지속)	·기준미설정 항균제 일률기준 강화 시행('22) ·주요축종 및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PLS 우선 도입 (1단계 PLS '24)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기준 확대(지속) ·교육 홍보(지속)	·축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및 농약 ,PLS 전면 도입 (2단계)
농산물 PLS	·PLS 전면 도입 및 정착	·농약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11.10) ·식품위생법상 농약 기준설정 근거마련('13.7)	·건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PLS 우선 도입('16.12)	·잠정기준 도입 ('18.11) ·PLS 전면도입 ('19.1) ·교육 홍보(지속)	·잠정 기준의 정식기준화 교육 홍보(지속)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 기준 확대 및 교육 홍보(지속)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 심사 운영	직접수행	724	731	724	724	724	724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PLS) 도입 및 운영	직접수행	2,065	2,063	2,065	2,065	2,065	2,065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 허용기준 제·개정	44	45	45	45	-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800	800	800	800	800	8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PLS의 안정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해 신규 등록·허가/재평가를 통한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단,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의 경우 24년 1단계 PLS 도입에 따라 '24년부터는 지표변경 예정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건수(행정예고)

과제번호	1-1-3-⑤	과제명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추진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남궁종환 사무관(T. 044-201-2978)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화태 사무관(T. 044-201-2561)		

□ 배경 및 필요성

- 살충제 계란사건('07.8월) 등 축산물 안전사고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관리 요구
 - * 1인당 육류 소비량 ('00) 31.9kg → ('10) 32.1 → ('15) 46.8 → ('18) 53.9 → ('19) 54.6
- 동물용의약(외)품, 살충제 등 농약성분 오·남용 방지와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잔류물질 안전관리체계 개선 필요
- 농산물 PLS 도입('19.1월) 경험 고려시 축산물 분야 도입을 위한 동물용의약(외)품 구비·안전사용기준 재설정 등 사전 정비 필요

□ 추진 계획

- 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목록관리제도(PLS)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 동물용의약(외)품 품목 확대 및 기 허가품의 안전사용기준 정비*(~'23)
 - * 민간시험기관 활용, 180개 대표품목에 대한 잔류성 시험분석을 통해 '23년까지 재평가 대상 동물용의약(외)품의 휴약기간 정비 완료
- 주요 축종*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우선 적용*('24년)
 - * 한육우·돼지·육계·젖소(乳)·산란계(鷄卵)등 5개 축종
- 축산물 PLS 적용 대상(양, 오리 등) 및 물질(농약·환경오염물질 등 비의도적 오염물질)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등 기반 마련('24년~)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축산식품 안전관리	축산물 PLS 단계적 도입	-	-	▪ 축산물 PLS 관련 동물약품 사용실태 조사	▪ 축산물 PLS 기반 마련 및 주요 축종 적용('24)	▪ 축산물 PLS 도입 축종 및 품목 확대 추진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축산물허용물질 목록제도지원	보조 (국고 100%)	1,797	3,411	3,566	3,566	3,566	3,566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잔류성 시험분석(건수)	24	52	52	52	-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민간시험기관에 잔류성 시험분석을 위탁하여 시험자료 확보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잔류성 시험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대표품목 기준

과제번호	1-1-3-⑥	과제명	수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추진
담당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안종관 사무관(T. 044-200-5622)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기공과 조미라 연구관(T. 051-720-2620)		

□ 배경 및 필요성

-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필요로 인하여 PLS* 제도 도입이 추진 중
 - 비의도적 농약 등 잔류에 따른 출하 제한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잔류조사 추진
 - 수산물 PLS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어업인, 수산질병관리사, 지자체 등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홍보 등 추진 필요

□ 추진 계획

-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잔류조사('19~'23)
 -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잔류조사 실시
 - * 어류, 갑각류 등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 30종 조사
-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 실시('20~'23)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수산물 PLS 사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잔류 조사 실시 및 설명회 개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대상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잔류 조사 실시 (200건) ▪ 생산자단체 등 설명회 (2건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대상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잔류 조사 실시 (600건) ▪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 실시(15건 이상) ▪ 수산물 PLS 제도 시행 ('24년~) 	-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산물 위생관리(잔류조사)	직접수행	432	432	432	432	-	-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잔류조사(건수)	200	200	200	200	-	-
홍보 추진(누적 건수)	2건 이상	5건 이상	10건 이상	15건 이상	-	-

*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잔류실태 및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홍보 중요

* 수산물에 대한 잔류조사 실시 건수, 설명회 등 홍보실시 건수

과제번호	1-1-4-①	과제명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관리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화태 사무관(T. 044-201-2651)		

□ 배경 및 필요성

- 항생제 내성 관리강화를 위해 ‘정부합동 항생제 내성 종합대책’
추진을 통한 항생제 사용량 절감

* ‘16년부터 글로벌 보건안보 위협으로 부상한 항생제 내성균 관리를 위해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전반의 범부처(농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대책 추진 중

- ‘배합사료 항생제 첨가 금지’(‘11), ‘수의사 처방제’(‘13) 도입으로 항생제
판매량이 ‘07년 대비 19년 판매량이 38.1% 감소하였으나, 최근 증가 중

* 항생제 판매량 : (‘07년) 1,527톤 → (‘14년) 893톤 → (‘18년) 983톤 → (‘19년) 944톤

□ 추진 계획

- 동물용 항생제의 생산·유통·사용 전체 단계에서 절감 대책 추진을
통한 항생제 사용 총량 관리

- (생산) 기허가 항생제 재평가*로 용법·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최신화

* 대상 1,058품목(항생제) 중 재평가 완료 868, 진행중 6, 예정 184(~‘22년)

- (유통) 수의사 처방전 전자 발급, 약사의 투약지도 의무화,
도매상 항생제 판매실적기록 의무화 등 제도정비로 유통·판매 관리

- (사용)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 성분 지정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항생제 사용 감축 유도 추진 [현 32종(‘20.10. 현재) → 전 성분(~25년)]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개정 추진

* 국제기구(WHO, OIE)에서 지정한 중요 항생제 성분을 포함하여 국내 허가된
항생제 성분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속 확대 지정

- (감시체계 강화) 동물 및 축산물 내성균 모니터링 확대(기존 : 소·돼지·닭
→ 오리 추가) 및 반려동물 분야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마련

○ 축산업 종사자(축산농가, 수의사, 판매업소 등) 대상 항생제 사용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축종 및 질병별 항생제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21년)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7까지	'18~'20	'21~'25	'26 이후
생산·유통단계 농산물 안전 관리 강화	동물용 항생제의 생산·유통·사용 전체 단계에서 절감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분야 '정 부합동 항생제 내성 종합대책 수립('16~'20)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 확대(20종 → 3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 전자처 방전 제도 도입 도매상 항생제 판매실적기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분야 '정 부합동 항생제 내성 종합대책 수립('21~'25) 시행 항생제 재평가를 통한 안전사용 기준 최신화 항생제 사용 모니터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생제 내성 분야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담당 전담조직 확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축산분야(반려동물포함) 항생제내성 모니터링	직접수행	454	477	501	526	579	608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대상성분)	50	53	55	65	79 (전성분)	79 (전성분)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 지정시, 처방대상에 대한 처방전 관리 및 판매량 집계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항생제 감축 가능

* 지표 측정 방식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대상성분 확대·시행 수

과제 번호	1-1-4-②	과제 명	농업환경 항생제 노출경로 구명 및 통합위해성 평가
담당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잔류화학평가과 박상원 연구사(T. 063-238-3238)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농업용 항생제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
 -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 목적(수도용·원예용 살균제)으로 연간 300톤* 이상의 생산량과 출하량을 보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병·확산되고 있는 사과·배 화상병(Fire blight) 방제 목적으로 농업용 항생제의 급격한 사용량 증가가 예상됨
 - * 미국에서 화상병 방제용 항생제 사용의 90%를 Streptomycin이 차지
- 식품 생산 및 생산 환경에서 항생제의 사용과 항생제 내성균의 통합감시 필요성 제기
 -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경제·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
 - * 항생제 내성으로 연간 세계 GDP의 3.8% 감소('17~'50) ('17, 세계은행)
 - 인체 항생제 내성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농산물 및 농업환경' 분야가 추가(6차 Codex TFAMR, '18)
-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외에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 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 가능하므로 포괄적 관리가 필요
 - 항생제 대응을 위한 One-health 개념에 있어서 가축분뇨(퇴·액비)와 농업환경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
 - 항생제 사용시 토양·작물에 잔류 및 분해되는 양상, 그에 따른 생태계 위해와 저감을 위한 기술 등 연계 필요
 - * 항생제 분해, 위해성 평가, 저감을 위한 저투입 농법 개발 등

□ 추진 계획

- 농업환경 항생제 노출경로 구명 및 통합위해성평가('21~'23)
 - 농업환경 중 잔류항생제 안전관리방안 연구
 - 농업환경 중 항생제의 분해양상 구명 연구
 - * 항생제의 농업환경 및 작물 중 분해·대사 특성 구명
 - 농업환경 항생제 위해성평가 시스템 구축
 - * 농업환경 중 환경유해영향 평가기법 연구 및 통합위해성평가시스템 구축
 - 농업환경 항생제 사용저감 기술 개발
 - * 농업용 항생제의 저투입 농법 개발 및 농작물의 병저항성 강화 연구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이후
농업환경 항생제 위해성 평가	농업환경 항생제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환경 중 항생제 분석법 확립 ▪ 항생제 작물 흡수이행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생제의 농업환경 및 작물 중 잔류 현황 조사 ▪ 항생제의 작물 잔이 특성 조사 ▪ 퇴·액비 중 항생제 저감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출경로 및 분해양상 연구 ▪ 항생제 사용저감 기술 개발 ▪ 농업용 항생제 판매/사용 실태조사 ▪ 통합위해성 평가 시스템 구축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항생제 노출경로 구명 및 통합위해성평가	직접수행	270	1,470	1,470	1,470	-	-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농업환경 중 항생제 특성 조사 건수(누적)	-	5	10	15	-	-
농업환경 중 항생제 사용 저감 기술개발 건수(누적)	-	1	2	3	-	-
농업용 항생제 사용 실태 조사 건수(누적)	-	20	40	60	-	-

* 지표 측정 방식 : 조사 결과 메모보고, 영농활용, DB화 건수

과제 번호	1-1-4-③	과제 명	농업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및 전파경로 추적
담당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팀 류재기 연구관(T. 063-2380-3403)		

□ 배경 및 필요성

- 항생제의 개발보급은 인류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오남용으로 항생제 내성 위험은 2050년 사망원인 1위로 예측('14,WHO)
- 『항생제내성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라 3개 분야 이행 권고(WHO, '15)
 - 농업 시스템에 항생제 내성이 확산되고 있고 농업용 항생제 사용 및 항생제 내성 추적에 대한 국가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긴급 필요
- 인체 항생제 내성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농산물 및 농업환경” 분야 추가(6차 Codex TFAMR, '17)
 -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전파억제 실행규범, 항생제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 제정 중
- 농산물에 의한 항생제내성균의 인체전달자 역할에 대한 과학적 증거 제시(FAO/WHO, 2018)
 - 과일, 채소 및 기타 식물성 식품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항생제 내성균 및 내성유전자(ARG)에 오염 가능
 - 토양개량제로 사용하는 축산분뇨 및 기타 유기물질은 환경에 내성세균 및 잔류물 전파
- 농업용수는 항생제 잔류물, 내성세균 및 내성유전자의 주요 공급원
- 식물병 치료용 항생제 살포는 농업환경의 내성세균 및 내성유전자 증가
- One Health 개념의 항생제사용 및 항생제내성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필요
 - 농산물을 통한 인체에 항생제 내성균의 노출 가능성을 감안 통합 감시시스템 필요
 - 과일·채소 생산체계에서 항생제 내성균 및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분포 조사와 항생제 사용실태 감시를 위해 관련한 모든 중요한 메타 데이터를 수집 필요

□ 추진 계획

- 농산물·농업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및 통합감시 시스템 개발
 - 인체 중요 항생제 대상 항생제 내성균 경시적 감시모니터링 추진
 - * 농산물(생으로 섭취하는 신선 채소 및 과일류 3종 등), 농업환경(퇴비, 토양, 관개용수 각 3시료 이상)
 - 주요 농용항생제 대상 농업환경 내성균 표적 감시 모니터링
 - * 대상 항생제 : 사과배 화상병 방제약제 대상
 - 농산물 및 농업환경 내 미생물 항생제 감수성 시험관리 시스템 개발
 - * 사람-동식물-환경 공통 검사대상 미생물(병원균 및 지표미생물), 내성유전자 및 시험대상 항생제 목록화
- 항생제 내성 오염원·전파경로 및 위험평가체계 개발
 - 농업활동에 따른 의도적 오염원(토양, 농업용수, 유기질 비료)과 농산물의 항생제 내성 상관관계 구명
 - 메타유전체 기반 농산물 및 농업환경의 항생제 내성 유전체 분석
 - 농용 항생제 사용에 따른 농산물 및 농업환경의 항생제 내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한 농용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22년 이후)
 - 항생제 사용억제를 위한 식물병 방제 예방용 생물적 방제제 개발
 - * 병원균 특이적 활성 박테리오파지 이용 생물적 방제기술 개발
 - 박테리오파지 이용 항생제 대체제 개발 및 실용화기술 개발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농산물 및 농업 환경 내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구축	-	-	-	▪ 농산물 항생제 내성 감시기반 연구('20~)	▪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구축 ▪ 내성 감시 국가DB 구축	▪ 항생제 내성 감시모니터링 (계속) ▪ 항생제 내성 증감요인 분석
항생제내성 오염 경로 구명	-	-	-	-	▪ 특정 지역 농업 환경 항생제 내성 오염원 구명	▪ 농산물 매개 항생제 내성 전파경로 구명
농용항생제 신종 사용 지침 개발	-	-	-	-	▪ 항생제 내성 최소화 지침 개발	▪ 식물/작물 위생전문가 제도 고입
항생제 내성 저감화	-	-	-	-	▪ 농용항생제 대체제 개발	▪ 천연소재 이용 항생제 대체제 개발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업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및 전파경로 추적	직접수행	-	1,800	1,800	1,800	2,100	2,1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 농업환경 내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미생물 건수(누적)	-	200	400	600	800	1,000
○ 항생제 내성 표준검사법 설정 미생물 종수(누적)	-	2	4	6	8	10
○ 농업환경 항생제 내성 오염원 구명 시료건수(누적)	-	30	60	90	120	150
○ 항생제 내성 최소화 지침 및 대체제 개발건수(누적)	-	-	1	3	5	7

* 모니터링 미생물 건수 : 해당년도 균종별 항생감수성 검사 미생물균주수

* 표준검사법 설정 미생물 종수 : 항생제감수성 판정기준 미설정 미생물 종수

* 오염원구명시료건수 : 항생제 내성유전자 분석한 농업환경 및 농산물 시료수

* 지침 및 대체제 개발건수 : 작물별 최소화 지침개발 및 항생제 대체제 특허출원 건수

과제번호	1-1-4-④	과제명	수산분야 항생제 내성균 감시 및 내성균 검사역량 강화
담당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안종관 사무관(T. 044-200-5622)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병리연구과 김명석 연구관(T. 051-720-2490)		

□ 배경 및 필요성

-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양식 수산물의 잔류예방을 위해 수산생물 병원성 세균의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및 확산 감시 필요
 - 어류 등 수산생물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한 수산생물 병원성 세균의 내성 현황 파악
 - 수산분야 항생제 내성 감사를 위한 검사법·검사시약 부족 및 판정 기준 미설정으로 항생제 내성 관련 기초 연구 추진 및 검사역량 강화
- 인체 및 수의분야 중요 항생제에 대해서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처방에 따라 판매·사용토록 확대 강화
 - 수산용 의약품의 처방, 판매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처방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 추진 계획

-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및 표준검사법 마련
 - 수산생물에서 세균을 분리·수집하여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분석
 - * 모니터링 : ('20) 300 → ('21) 310 → ('22) 320 → ('23) 330 →('24) 340 →('25) 350
 - 항생제 내성균 유전적 분석, 검사법 개발, 내성 판정기준 설정 등
-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대상 항생제 확대 지정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관리시스템 개발
 -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존, 18년) 13종 → (개정, ~25년) 16종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관리시스템 개발('21년) 및 시스템 고도화(~'25년)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항생제 내성균 감시	*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	*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 수산분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지속 수행
내성균 검사 역량 강화	*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검사 표준화	-	* 항생제 내성 유전자 신속 판별법 개발 (2종) * 항생제 내성 유전자 분석 (2종)	* 검사 매뉴얼 발간(1건) * 항생제 내성 유전자 분석 (2종)	* 항생제 내성 유전자 분석 및 검사법 개발 * 항생제 내성 판정기준 설정	* 항생제 내성 검사 인프라 구축 및 표준화
처방전 대상 확대	처방전 대상 관련 고시 개정	-	* 처방전 대상 관련 고시 개정 (7종항생제 4종 → 13종, 항생제 10종)	* 처방전 대상 항생제 확대 모니터링	* 처방전 대상 항생제 확대 모니터링 * 처방전 대상 항생제 확대 (16종)	* 처방전 대상 항생제 확대 모니터링 지속 수행 및 고시 개정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	* 전자처방전 구축 예산 확보	* 전자처방전 시스템 활용 및 시스템 고도화	* 전자처방전 시스템 활용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사용 모니터링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 대응 사업	직접수행	594	800	800	800	1,000	1,000
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직접수행	-	475	200	200	200	2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건수)	300	310	320	330	340	350
항생제 내성 검사 표준화 (건수)	2	2	2	2	2	2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수산분야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항생제 내성 검사법·검사기준 건수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세균 항생제 감수성 검사 실시 건수, 항생제 내성 검사법·검사기준 건수

과제번호	1-1-4-⑤	과제명	유통식품 중 항생제 내성 감시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 김미경 연구관(T. 043-719-4304)		

□ 배경 및 필요성

- 사람, 동·식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원헬스 기치 아래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통합감시 필요
 - 사람에게 직접 접촉·섭취되는 식품에서 항생제 내성균 오염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 * 국제기구(WHO)에서 마련된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문서에서 식품 감시 중요성 강조
- 항생제 내성균 확산 감시, 내성 관리정책 수립 등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과학적 근거자료로서 항생제내성 모니터링 자료 필요

□ 추진 계획

- 전국단위 유통 식품의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21~'25)
 -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수입 포함)에서 분리한 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 확대
 - * 조사건수: 1,900건('21)→ 1,900건('22)→ 2,000건('23)→ 2,100건('24)→ 2,200건('25)
 - ** 대상세균: 대장균, 장구균,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황색포도상구균
 - 식품유래 세균의 내성변화 추세 분석 등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실태조사) 공동 연간보고서 발간
 - * 관계부처: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해수부(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농업과학원), 환경부(환경과학원)
 - 내성균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내성유전자 확인 키트개발('22)
- 항생제 내성 관리강화를 위한 내성균 저감화 기술 개발
 - 식품생산·유통단계에서 내성균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제어기술 개발('22)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유통식품 중 항생제 내성 감시 강화	유통식품 중 항생제내성 실태 조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축수산물 중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도입 축산물 생산 단계 및 유통 소비단계의 항생제감수성 검사법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성균 발생 빈도가 높은 축산물 중심의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실시 (연간 40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성균 감시 사각지대인 농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20) 모니터링 건수 확대 (연간 1,80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 농축수산물 중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확대 (연간 2,200건) 사람-동물-식품-환경 통합 감시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생제 내성 균에 대한 사람-동물-식품-환경의 통합감시체계 강화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식품 등 안전관리	직접수행	1,300	1,300	1,300	800	800	8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유통식품 모니터링(건수)	1,800	1,900	1,900	2,000	2,100	2,2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유통 농·축·수산물에서 분리한 세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등 실태조사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모니터링 식품 건수

과제번호	1-2-1-①	과 제 명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 향상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관리 기반 확대
담 당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진숙 연구관(T. 043-719-210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반경녀 연구관(T. 043-719-2107)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생물과 황진희 연구관(T. 043-719-430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최규호 사무관(T. 043-719-2030)		

□ 배경 및 필요성

- 식중독 사전차단을 위해 원인식품 규명 향상 방안 필요
- 식중독 원인 규명 기반 확대를 위한 유전정보 확보 필요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미생물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된 식중독균 유전자형 분석 및 정보관리를 통해 식중독 원인규명 개선
- 집단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수출국 식중독균 유전자 정보 요청
 - 독일 장출혈성대장균('11년), 미국 리스테리아 집단식중독('20년)

□ 추진 계획

① 보존식 대표성 강화, 보관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

- (보존식 대표성 강화) 집단급식소 관계자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보존식 1인분 분량에 대한 중량 기준을 설정
- (과태료 상향) 보존식 미보관 50만 원, 폐기훼손 시 30만원 과태료를 300만 원 이상으로 강화('20.11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공포, '21년 시행)
 - * 과태료(미보관/폐기훼손) : (기존) 1차 50 또는 30, 2차 100 또는 60, 3차 이상 150 또는 90 → (향후) 1차 300, 2차 400, 3차 이상 500
- (고발근거 마련) 식중독 원인조사 고의적 방해 시 처벌 규정 신설
 -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식품위생법 개정)

② 지방식약청 및 시·도 합동 조사 대상 확대

- 학교, 50인 이상 집단 발생 등 기존의 지방식약청 및 시·도 합동 조사 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추가 추진(지자체 요청 시)

③ 실질적인 식중독 원인추적이 가능하도록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 개정 배포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식 중심 검사 · 현장조사 항목 : 10개 * 종사자 현황파악, 장소 현황, 조리장 및 시설 위생 점검 등 · 지방청 : 학교, 50인 이상 환자 발생 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료까지 조사 확대 · 현장조사 항목: 18개로 확대 * 식재료 공급업체 판매기록 확인 및 최초 환자 발생시점 조사 등 추가 · 지방청 : 지자체 요청 시 유치원, 어린이집 조사 참여

④ 국내 분포 식중독균의 정보화를 위한 특성 분석 및 자원 구축

- 생산(토양, 용수, 환경 등)부터 소비까지 전(全)단계에 대한 식중독균 탐색조사(12,000건 검사)
- 사전 탐색조사 등을 통해 확인·배양한 식중독 균주 유전적 상동성 등 특성정보 분석 및 정보화(연중, 1,500건 확보)

⑤ 식중독 조사 자문단 구성 운영하여 전문성 강화

- 의사, 역학전문가, 미생물, 공중보건학 교수 등으로 구성(20인 이내)하여 식중독 원인규명 조사방향 등 자문

⑥ 식중독 원인규명을 향상을 위한 첨단분석장비 확충

- 보존식, 환경검체 등 다수의 검체를 신속하게 분석 가능한 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원인식품 차단 및 식중독 확산 방지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5	'26 이후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역량 강화	식중독 원인 조사 개선을 위한 식중독균 유전정보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 제작 배포('14) ▪ 전국 식중독균 분리 체계 마련 ▪ 유전자지문 분석기술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기원 및 병원성특성, 유전자지문 정보화 ▪ 유전자지문 분석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표준업무지침 개정 배포('18, '20) ▪ 식중독균 등 첨단 분석 장비 확충 ▪ 식중독원인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19) ▪ 분리기원 및 병원성 특성 유전자지문 정보화 ▪ NGS를 활용한 전장유전체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장유전체 정보화를 활용한 동일 식중독균 사고 간 원인 추적 활용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합계	1,597	1,697	1,897	1,897	1,997	1,997
	국고 (직접수행)	719	2,265*	965	965	1,065	1,065
	지방비 (40%보조)	878	932	932	932	932	932

* 식중독균 등 첨단분석장비 예산 : 1,500백만원 포함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식중독균 특성정보 건수(누적)	13,500	15,000	16,500	18,000	19,500	21,000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률(%)	28*	29	30	31	33	35

* '15~'19년 평균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률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식중독균 탐색조사에서 분리한 식중독균 특성(유전적 상동성등) 정보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식중독균주 특성 정보 누적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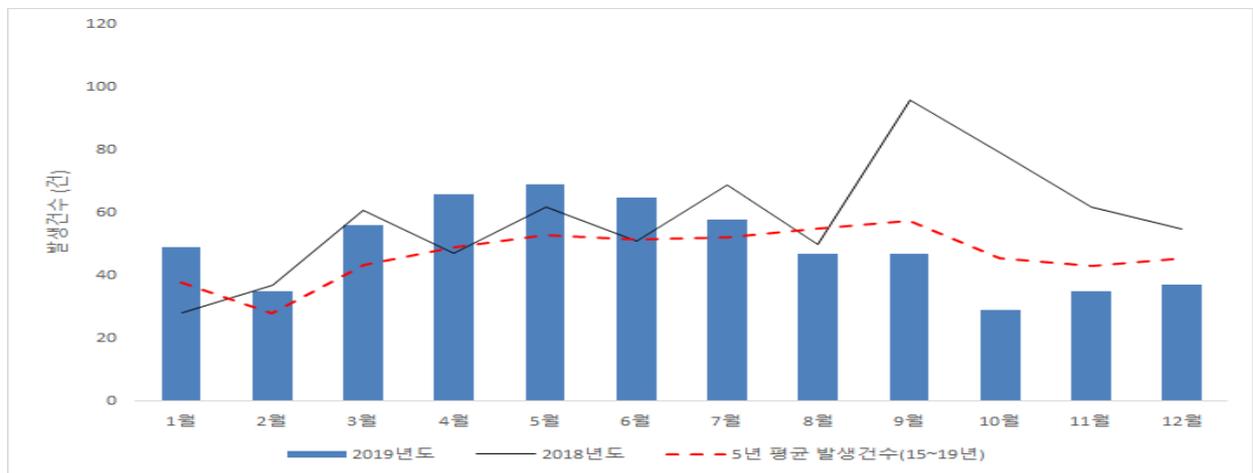
과제번호	1-2-1-②	과제명	집단식중독 감시 및 역학조사 역량 강화
담당자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이아경 역학조사관(T. 043-719-7151)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5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소폭 증가, 감염원 불규명율**은 매년 30%이상으로 원인규명 조사체계 강화 필요

* ('16) 557건, ('17) 539건, ('18) 697건, ('19) 601건

** ('16) 42%, ('17) 44%, ('18) 38%, ('19) 34%



< 월별 집단발생 동향 >

- 감염병으로 인한 집단발생 대응에 대한 지자체 역량 강화 필요
 - 지자체 담당자(감염관리부서, 식품관리부서)의 통합 대응 교육 및 훈련
 - 현장 의견 및 상황을 반영한 현장대응지침 수립

□ 추진 계획

-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을 위한 집단발생 감시 강화
 - (환자) 개별 또는 집단발생* 감시 및 방역조치
 - * 시간, 장소, 증상 등에서 공통요인을 가진 2인 이상의 환자 발생
 - (병원체)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현황 분석* 및 공유(월별)
 - * 집단발생 인지를 위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원·경로 규명을 위한 전자지문 추적감시망(PulseNet), 급성설사질환 실험실감시망(EnterNet) 등 시스템 통해 모니터링 된 정보 활용

- (환경) 해수 병원성 비브리오팀 발생양상 파악 및 대국민 경보체계 운영
 - * 신고시스템 전산화로 노로바이러스 등 장관감염증 병원체별(20종)의 원인·결과 보고 감시체계 도입 통해 지자체 별 발생사례 적시인지 및 예방활동 강화
- (하절기)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운영으로 감시강화
- 역학조사 역량강화를 통한 감염경로 및 감염원 규명율 향상
 - (운영체계 개선) 역학조사 결과 신속 보고 및 환류, 기술 지원
 - *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역학조사 질 향상
 - (역량강화교육)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의 관리역량 향상 위한 지침 개정* 및 관련 교육**
 - *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관리 및 풍수해 대비 감염병 대응 지침 등
 - **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과정(FETP-F) 연계 교육 연 1회(16시간)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20	'21~'26 이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 관리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원인 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협의체' 구성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헬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다부처 공동 대응 방안 연구 용역('18) ▪ 금성설사성 질환 집단발생 분석 기술 구축('20) ▪ 지자체 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발생 감시 및 역학조사 역량 강화 ▪ 지자체 역량강화 교육 평가 환류

예산 사항

- 해당없음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원인 병원체 규명률	64%	60%	62%	64%	65%	67%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규명 건 수/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건 수)*100

과제번호	1-2-1-③	과제명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망 분석 시스템 고도화 및 검출법 개발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 황진희 연구관(T. 043-719-4303)		

□ 배경 및 필요성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를 대량 수집하여 식중독 원인조사에 적극적인 활용으로 원인식품규명률 향상
 - * 미국 FDA 유전체 정보 수집 현황: 462,000건('20. 1분기 기준)
 - * 리스테리아 식중독: 전장유전체분석 도입 (1년차) 250%→ (2년차) 450% 향상
- 국내에서 검출되는 주요 식중독균의 유전체 정보의 수집 확대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개선을 통한 식중독원인규명 및 추적조사 강화 필요
 - * 국내 유전체 정보 수집 현황: 5,550건('20.12. 기준)

□ 추진 계획

- 「국가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망」 분석시스템 고도화
 - 국내·외 주요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 DB화(~'25)
 - * 누적 건수: ('21) 8,550건→('22) 12,000건→('23) 13,000건→('24) 14,000건→('25) 15,000건
 - 식중독원인조사 유전체 비교 분석프로그램(SNPing) 개선('21)
 -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혈청형 분석 프로그램 신규 개발('21)
 - 식중독균 특성분석(병원성, 항생제 내성 등) 유전체 분석프로그램 개선('23)
 - 분석대상 균종확대를 위한 식중독균 유전체 상동성 분석프로그램 개선('25)
- 유전체 분석기술 기반의 식중독균 검출법 개발
 - NGS 기반 식중독균 동시 검출 키트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22)
 - * 대상균종 :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캄필로박터 콜리/제주니,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황색포도상구균 등 17종
 -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식중독균 병원성 인자 동시 검출법 마련('22)
 - * 대상 :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제주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20) → 병원성 대장균 5종 ('21) → 장염비브리오, 바실러스 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균('22)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식 중 독 균 유전체 빅 데이터 정보 활용 식중독 원인 조사 체계 고도화	식중독원인조사 및 추적조사를 위한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 수집 확대 및 분석기술 개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균 유전체 연구 사업단 착수('14) NGS 분석 장비 도입('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평적 유전자 이동 DB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HGTtree, '16) 유전체 분석실 구축 및 NGS 분석장비 등 인프라 확대('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균 염기 서열 비교 분석 프로그램 개발 ('18) 유산균 및 식중독균 메타 게놈 분석 프로그램 개발('19)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망 구축('20) 식중독균 전장 유전체 정보 DB화(5,550건, '1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 원인 조사를 위한 유전체 상동성 분석 프로그램 및 특성 분석 프로그램 개선 ('25) NGS 기반 식중독균 병원성 유전자 동시 검출 키트 개발 및 현장 적용 식중독균 전장 유전체 정보 DB화(12,000건, '2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NGS기반 식중독 발생 예측 등 고도화된 빅 데이터 기반의 예측관리 체계로 전환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식품 등 안전관리	직접수행	1,750	2,300	2,700	1,000	1,000	1,000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직접수행	1,987	449	152	168	168	168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유전체 정보 수집(누적건수)	5,550	8,550	12,000	13,000	14,000	15,0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식중독 발생 및 모니터링에서 분리된 세균 유전체 정보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NGS 기술 적용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 누적 건수

과제번호	1-2-1-④	과제명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원인병원체 유전체 정보체계 확대 강화
담당자	질병관리청 세균분석과 김준영 연구사(T. 043-719-8116)		

□ 배경 및 필요성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집단 식중독환자 발생시 원인병원체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국제 네트워크인 “펄스넷(PulseNet)* 참여로 감염병 원인규명을 향상

* 질병관리청은 2005년 가입완료했고, 현재 국내 “펄스넷” 운영 책임 기관임

- 최근 집단감염환자 규명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제 펄스넷 운영체계인 차세대 감염병 유전체 정보 활용 대응체계 강화 및 확대 필요

* ('19) 펄스넷 DB 누적건수 : 18,356건

□ 추진 계획

- 「차세대 감염병 유전체 정보 분석체계」 고도화

- 전장염기서열 분석 기반 펄스넷 운영 시험법 표준화('21)
- 인체 유래 수인성·식품매개병원체 유전정보 생산 및 분석 DB 확대
 - * 대상병원체 : 장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균, 세균성이질균 등 제2~4급 법정감염병
- 유전체 정보 분석체계 운영 전문인력 양성('22~3)
 - * 전장염기서열분석법, wgMLST, hgSNPs 및 분석용 소프트웨어(BioNumerics) 활용법 등
- 차세대 유전체 정보 활용 실시간 병원체 감시망 확대 운영(~'24)

- 국제 감염병 원인규명 분자역학 협력체계 구축

- 국제 펄스넷과 공조를 통한 국제 표준시험법 개발('21~23)
- 유전자 빅데이터 기반 인체 유래 수인성·식품매개병원체 유행 예측 시스템 구축('22~)
- 진단기법 미 확보 감염병의 진단대응기술 개발('22~)
-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유행예측 진단 마커 개발('23~)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05 ~	'15~'18	'18~'20	'21~	'24 이후
수인성·식품 매개감염병 원인병원체 유전체 정 보체계 확 대 강화	실시간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원인병원체 유 전체 감시망 운영 강화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감염병 원인 병원체 유전자 정보 DB 확대 및 감염원 추적 시스템 운영 ·국제 펄스넷 공동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 분자역학 시스템(분석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확보 ·살모넬라 등 감염병 원인병원체 전장염기서열 기반 차세대 분자역학 시험법 정립 및 표준화('16~'17) ·세균성이질균 차세대분자역학 시험법 개발('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균성이질균 대상 차세대분자역학 시험법 표준화('19) 및 활용('20) ·인체 유래 감염병 원인병원체 전장유전체 정보 DB 확대 및 감염원 추적 활용 ·실시간 국제 펄스넷 정보공유 실시('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감염병 원인병원체 유전체 상시 감시망 운영 ('21~) ·펄스넷 운영 협력기관 대상 전문역양성('22) ·감염병 원인병원체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유행 예측시스템 구축('22) ·산기법 핵심진단기술개발('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조기진단 및 확산차단을 위한 다중진단마커 개발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국가 감염병 유전체 감시망 운영(펄스넷)	직접수행	160	240	500	600	800	800

□ 성과지표

(단위 : 건)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인체 유래 병원체 유전정보 생산 건수(누적건수)	20,357	22,024	24,000	26,000	27,500	29,000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국가 감염병 유전체 감시망 운영을 통한 감염원 규명 사례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펄스넷 운영을 위한 유전체정보 생산 누적 건수

과제번호	1-2-2-①	과제명	식중독 예방 및 발생 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진숙 연구관(T. 043-719-2103)		

□ 배경 및 필요성

- 식중독 발생 신속 조치를 통한 확산 차단
 - 식중독 발생 시 관련·인근 업체 등에 식중독 발생 및 주의를 촉구하는 조기경보시스템 대상 확대 필요
- 식중독 담당 업무는 난이도가 높은 기피업무로 담당 공무원의 교체가 잦고(평균 1.5년 근무) 식중독 대처 경험이 부족하여 보완 방안 필요

□ 추진 계획

-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대상 확대
 - 경보발령 시 현황·조치 사항 등 정보 제공(연중)
 -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사용 중인 식재료 조달시스템과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등 추진
 - *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의 94%가 등록, 학교외 업체 등록은 3.7% 수준
-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체계 구축
 - 식중독 발생 초기에 환자 및 식재료 신속검사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신속한 원인 조사 및 확산 방지에 활용
 - 과거 식중독 환자로부터 분리된 식중독 원인균 및 유전체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원인 추적조사에 활용
- 지방식약청, 시·도 주관 식중독 모의훈련 실시(연 2회)
 - 식중독 발생 시 현장 상황 및 대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교육
 - 식중독 시나리오를 활용한 모의훈련으로 지자체, 지방청 공무원 등 담당자의 실전 경험 체험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식중독 사고 신속 대응 체계 강화	▪식중독 원인 식품 규명률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저감화 달성	▪식중독 신속 대응 모의훈련 (연회)	▪식중독 신속 대응 모의훈련 (연회)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 훈련(연회)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지방 청 주관) 모의 훈련(연회)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시도 주관) 모의훈련 (연회)	▪조기경보시스템 대상 확대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지방 청주관) 모의훈련(연회)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시도 주관) 모의훈련 (연회)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시군 구 주관) 모의 훈련(연회)	▪식중독 조사관 (가칭)등 전담체 운영으로 대응 체계 구축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직접수행	50	50	50	50	50	5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식중독 환자수(명/백만명)	133*	115	110	105	100	95

*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 133명(최근 5년 평균)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국내 식중독 환자수의 절반 수준이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음. 집단급식소를 집중 관리하여 매년 환자수를 저감하되, 25년까지 95명을 목표로 설정함

과제번호	1-2-2-②	과제명	노로 등 바이러스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체계 구축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반경녀 연구관(T. 043-719-2107)		

□ 배경 및 필요성

- 노로 등 바이러스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 및 확산 방지 강화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의 노로바이러스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단체생활에서의 주요 감염확산(사람간 감염) 방지 및 매개체(구토물 등) 소독 필요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건수 : ('17) 46 → ('18) 57 → ('19) 46

□ 추진 계획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집단급식소의 노로 등 바이러스 감시 강화
 - 노로 등 바이러스 감시대상 등 상시계획 수립(연초) 및 연중 검사
 - * 모니터링(검사) : 평가원, 지방식약청 및 시·도
 -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살균소독장치 정상작동 여부 현장 점검(연 2회, 집단급식소 등 점검 시 병행)
 - * 대상 :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취약 계층의 단체생활 시설 구토물 처리 키트 배포(연중)
 - 학교, 유치원, 요양소 등 단체생활에서 구토물 발생 시 긴급소독을 통해 노로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5	'26 이후
생산단계 바이러스 오염감시	제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용수 바이러스 감시강화	·연구사업으로 실태조사 체계 구축	·제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검사	·제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검사 ·일부검체에 대한 A-E형 간염바이러스 검사	·식품 매개 바이러스 총괄 감시 체계 수립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합계	945	1,050	1,250	1,350	1,350	1,450
	국고 (직접수행)	838	935	1,135	1,235	1,235	1,335
	지방비	107	115	115	115	115	115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등* 모니터링(건수)	980	1,000	1,000	1,000	1,000	1,000

* A, E형 바이러스 검사건수 추가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노로바이러스(A,E형 바이러스 포함) 검사 건수

과제번호	1-2-2-③	과제명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권역별 운영 추진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반경녀 연구관(T. 043-719-2107)		

□ 배경 및 필요성

- 식중독 발생 현장에서 신속한 원인규명으로 식중독 확산을 차단
 - * 실시간유전자증폭장치(RT-PCR)를 사용하여 병원성대장균 등 식중독균 17종 35개 유전자를 4시간 내에 동시 검사(버스형 14건/2대 기준, 트럭형 6건/1대 기준)
- 국제행사장 등에서 식재료 식중독균 사전검사로 식음료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식품사고 없는 국제행사 지원 및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 수행
 - *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식약처의 역할을 알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 추진 계획

- 전국단위 식중독 동시 대응을 위한 광역별 신속검사체계 구축 추진

차량 형태	기관	수량
계	'20.12월 기준	7대
버스(45인승)	본부(충북 청주), 서울청, 광주청, 부산청, 대구청	5대
트럭(1톤)	경인청, 부산청	2대

- * 대구청 배치 완료('20.12), '22년 경기권 배치 검사차량(경인청) 예산 확보 추진
- 식중독 사고현장 출동 및 원인규명 등(연중)
 - 50인 이상 식중독 발생 및 학교급식소 식중독 현장 대응 및 식중독 신속검사 실시
 - 여름철 비브리오균 오염 우려 수산물 신속검사 등 식품안전관리 지원 등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 납품 식음료 신속검사(연중)
 - '2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세계산림총회,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 2024 동계 청소년올림픽 등
 - * '18년 평창동계올림픽, '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지원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연중)

- 식품안전의 날, 권역별 식품·급식 관련 국민 참여행사 및 지자체 지역행사(축제) 등 식중독 예방 홍보
- 유동인구 많은 지역의 상시홍보 및 순회홍보를 통한 다가가는 대국민 홍보추진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5	'26 이후
소비단체 식품안전관리	전국 권역별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운영 추진	▪ 이동형 신속검사 차량 구입 등 체계 마련	▪ 신속검사차량 식중독균 신속검사법 마련 ▪ 식중독 사고 현장 출동 및 국제행사 신속검사 지원	▪ 전국 권역별 신속한 검사 및 관리 체계 구축 추진	▪ 식중독 신속 원인규명 및 차단에 활용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국고 (직접수행)	824	1,596	1,096	1,096	1,096	1,096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활용 횟수(건수)	400	500	600	600	600	600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식중독 발생현장 신속한 원인규명 및 사전예방을 신속검사차량 운영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운영 횟수

과제번호	1-2-2-④	과제명	학교·유치원 급식 식중독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
담당자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T. 044-203-6543)		

□ 배경 및 필요성

- 학교 내 식중독 의심사고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청의 신속한 대응과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확산방지 필요

□ 추진 계획

- 학교·유치원 대상 급식관계자 연수 추진 및 감시체계 운영(연중)
 - 급식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식중독 발생 시 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유치원 급식 관계자 대상 연수
 - ※ 방학기간 등을 활용한 교육(지원)청 단위 연수를 추진하며, 식중독 발생학교 등의 대응 사례 및 역학조사결과를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사례중심 내용 구성
 -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유사증세 집단 발생 인지 즉시 관할교육청과 시·군·구(보건소) 보고(신고)를 위한 감시체계 운영
 - ※ 담임교사 및 보건·영양교사 등을 통한 집단환자 발생 여부 모니터링
-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 및 확산방지(연중)
 - 식중독 발생 학교·유치원에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초동단계 신속대응 조치 강구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 ※ 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학교·유치원 단위 대책반 운영 모의훈련을 실시하거나 교육청 또는 관계기관 식중독 대응 모의훈련에 적극 참여
 - 식중독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및 관계기관 대책협의 등에 교육(지원)청 관계자 적극 참여하는 등 관계기관 공동의 대응체계 구축
 - ※ 위생관리에 경각심 제고 및 동일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원인제공자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강구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식중독 발생 시 대응체계	식중독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 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급식 관계자 교육 실시(계속) ▪ 식중독 대책반 운영(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연수 추진(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및 학교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대응 역량 강화 연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저감화 및 신속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

□ 예산 사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안전 교육 참여율(%)	95	95.5	96	96.5	97	97.5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식중독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에 학교급식관계자(학교장, 영양교사 등)가 참여한 학교수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교육 참여 학교수 / 급식실시 전체 학교수 ×100

과제번호	1-2-2-⑤	과 제 명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통합예방관리 체계 구축·운영
담 당 자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서순려 연구관(T.043-719-7150)		

□ 배경 및 필요성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요인이 다양하여 공중보건에서 **원헬스 (사람-동물-환경-식품) 개념의 접근이 필요**
 - 집단식중독의 주요원인인 제2급감염병* 및 장관감염증**은 오염된 식수, 육류, 해산물, 유제품 및 야채 등에 의해 발생하고 생산, 유통, 조리, 섭취 등 다양한 경로에서 위험요인이 존재함
 -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E형간염
 - ** 살모넬라감염증, 장염비브리오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등
- 집단 발생시 신속한 인지 및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합동 대응이 요구됨
 - 질병청과 식약처 등 관련 부처 업무지침의 유기적 연계와 식중독 발생시 기관별 역할을 정립하는 통합행정지침 필요
 - 식중독 대응을 위해 식중독발생 신고체계 연계로 발생 정보 공유 필요

□ 추진 계획

- 원헬스 개념의 식중독 **공동대응협의체** 운영 정례화
 - * 식약처(식중독예방과, 식품정책과), 질병청(감염병관리과) 주관, 유관 부처 (농림부, 교육부, 해수부 등) 가 모여 현황 공유 및 합동대응전략 논의
- 기관 간 공동대응을 위한 지침 발간
 - 다양한 감염경로로 발생하는 집단식중독대응 **통합행정지침** 발간
 -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기존 질병청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관리 지침」 과 식약처 「식중독표준업무지침」 의 연계성 강화
- **원헬스 감염병 위해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 체계 마련
 - * 범정부 차원의 감염병 공동 대응 플랫폼으로, 감염병 조기감지 및 상황 전파, 원헬스 공동대응 지원, 유관기관 협력업무 지원 시스템

- 원헬스 관점에서 위험요인 분석 및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위험요인을 원헬스차원에서 평가하고 관계부처의 통합관리수칙 마련
 - * 「원헬스관점에서의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위험평가 및 관계부처 합동 예방·대응 구축 방안 제시」 연구용역 추진중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20	'21~'25	'26 이후
식중독 통합 대응 및 역량 강화	현장 대응 체계 단일화 및 교육을 통한 식중독 대응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수인성·식품매개바이러스 협의체' 구성('09) ▪ 범정부 식중독 대책 협의기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헬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다부처 공동 대응 방안 연구용역('18) ▪ 원헬스 개념 감염 예방전략 개발(살모넬라,장출혈성대장균)('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식중독에 대한 통합행정지침 발간 ▪ 원헬스관점에서의 다부처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 원헬스전산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5년 평가 및 취약점 보완 ▪ 대응체계 지속

예산 사항

- 해당없음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통합관리체계 구축 활동(건)	-	3	3	3	3	3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 건 수
- 유관기관 공동대응협의체 운영 및 활동 건 수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합동 대응 건 수
 - 관련지침의 발간 및 개정 여부(건)

과제번호	1-3-1-①	과제명	식품소비 변화 반영 식품분류체계 개선 및 기준·규격 개선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윤상현 연구관(T. 043-719-2414)		

□ 배경 및 필요성

- 가정간편식, 홈쇼핑·인터넷쇼핑을 이용한 식품소비량 증가 및 고령 친화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식생활 패턴 변화를 반영한 기준·규격 개선 필요
 - * 외식업 매출액(농수산물유통공사) : ('15) 108조원 → ('17) 128조원
 - * 가정간편식 생산실적(식약처) : ('15) 1.9조원 → ('18) 3조원
 - *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는 약 31조원으로, 총 의료비의 40% 차지('18, 심평원)
 - * 국내 메디푸드 판매액(농식품부) : ('16) 496억원 → ('18) 763억원

□ 추진 계획

- 신기술 및 사회트렌드를 반영한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 식품유형 분류 개선 및 제품 특성에 따른 기준·규격 현대화('20~'24)
 - 사회트렌드 반영 제품조사 및 주요외국 관리동향 비교 평가를 통한 분류 개선
 - 식품유형 정의 개정, 제품 특성에 맞는 제조·가공기준, 규격 등 마련
 -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 조리식품 위생 안전관리 기준 마련('25)
 - 배달음식점, 푸드트럭 등 영업형태에 따른 조리식품 분류 및 기준 설정
 - 계층별·시설별 단체급식 중점관리 필요사항 분석 및 기준 설정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식품분류체계 개편 및 합리적 기준 설정을 통해 질환맞춤형 식품시장 조성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독립된 분류로 상향 후 특성에 맞게 재분류하고 만성질환자의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분류 신설('22)
 - 질환별 표준화된 제조기준 추가 신설 및 제조 가이드라인 마련('24)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식품분류 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신기술 및 사회트렌드를 반영한 식품분류 개편 및 기준·규격 개정	-	·식품공전 및 축산물공전 통합 분류체계 전면 개편('16)	·영유아 및 고령 친화식품 분류 및 규격 신설('18) ·주류 분류 개편 및 규격 개선('19) ·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20)	·특수의료용도 식품 분류 확대 및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22)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기준·규격 개편('25) ·식품유형 정의 및 기준·규격 현대화(지속)	·신기술 및 사회트렌드 반영 식품 분류 개편 및 신설(지속)

* 25년 이후는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

□ 예산 사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건수	20	20	20	20	20	미정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식품 유형분류, 제조·가공기준, 원료기준, 보존 및 유통기준, 식품 규격 등 개정 건수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기준·규격 개정 건수

과제번호	1-3-1-②	과제명	고령친화식품 및 메디푸드 연구 지원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이주영 사무관(T. 044-201-2121)		

□ 배경 및 필요성

-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식습관 등을 통한 질병 예방 및 고령자를 위한 식품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질환자·고령자 대상 재가식 등 맞춤형 식품개발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성장기반 마련
 - * 우리나라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국내 고도 비만율 ('02) 2.5%→('13) 4.2% ('25) 5.9%예상

□ 추진 계획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매년, '25까지)
- (메디푸드) 질환별 기능성 소재 개발, 메디푸드 가공기술 개발, 질환별 식이 조성 연구 등 추진(~'25)
- (고령친화식품) 고령자 대상 기능성 소재 개발 및 대량생산 기술, 고령친화식품 가공기술 개발 등 추진(~'25)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고령친화식품 및 메디푸드 개발	질환자·고령자 대상 재가식 등 맞춤형 식품 개발 지원을 통한 관련산업 성장기반 마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사업의 일몰 연장(~'25)에 따라 메디푸드 및 고령친화식품 등 유망식품분야 연계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식품분야 연구개발 지속 지원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미래대응식품)	출연	-	3,615	6,564	7,079	8,019	9,532

* 미래대응식품 내역사업을 구성하는 3대 세부내역(①고령친화식품 및 메디푸드, ②대체식품, ③포스트바이오틱스) 중 하나임을 감안하여 연차별 투자액 계상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과제지원 건수(누적)	-	5	7	9	11	13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지원한 연구과제 수(누적)

과제번호	1-3-2-①	과제명	바이오 식품소재 안전관리 기반 구축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장미란 연구관(T. 043-719-242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조태용 연구관(T. 043-719-250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한정아 연구관(T. 043-719-2352)		

□ 배경 및 필요성

- 동물복지·환경보호·종교적 신념 등의 관점에서 대체단백질 식품 (식물성 고기, 곤충 쿠키 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 세계시장 규모(Meticulous Research, '19) : ('18) 96억\$ → ('25) 178억\$(연평균 9.5% 성장)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품산업 활력 제고」('19.12) 및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20.9) 과제 추진
- 식물·곤충 등으로 생산한 단백질식품은 안전성 평가가 불필요하나, 배양육은 사용된 줄기세포·첨가물 평가 등 관리체계 마련 필요

- (미국) FDA: 세포 수집·증식·분화 감독 / USDA: 배양육 제품 생산·표시 감독
- (유럽) EFSA에서 Novel Food에 따라 배양육의 안전성 평가 기준 마련 추진
- (일본) 후생노동성 배양육 제품에 대한 식품유형 및 관리기준 마련

□ 추진 계획

- 배양육 등 대체단백질 식품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 산학관으로 구성된 대체단백질식품 전문가 협의체 운영('21~)
 - * 배양육 등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및 상용화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 확보, 안전관리 추진방향 협의·도출
 - 배양육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21~)
 - * 주요 외국 대체단백질식품 현황 및 관리기준 등 조사, 안전성 평가 등
 - 식물성단백질식품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마련('21)
 - * 식물성계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보존료) 사용 확대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대체단백질 식품	동물성 대체 단백질식품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새로운 식품원료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곤충가공식품' 유형 신설 고시	· 새로운 식품원료 안전관리 절차 (안) 정리	· 배양육 등 대체단백 식품 안전관리 기준 마련	-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바이오 식품소재 국내 제조 활성화 기반 조성	직접수행	-	300	300	1000	1,000	1,0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바이오 식품소재 안전관리 기준 마련	-	1	1	1	-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대체단백질식품 등 바이오식품소재 개발부터 최종 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가이드라인, 기준·규격 개정 등 안전관리 기반 구축

과제번호	1-3-2-②	과제명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 및 소통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주인선 연구관(T. 043-719-2359)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강화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 '96년 170만 ha 대비 '19년 29개국, 14품목 19,040만 ha 재배(112배 증가)
 - * 국회,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철저 요구
- 새로운 식품에 대한 연구·개발은 활발하나, 신청자(정부기관, 민원인 등)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어려움 발생
 - 정부 주도적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재 인정 지원 및 민원 편의성 도모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맞춤형 컨설팅 필요
 - * 농진청과 협업을 통해 식용곤충 6건('20.7월 기준)이 인정되었으며 국내 곤충 산업 성장(농가 수: ('15) 724개 → ('16) 1,261개 → ('17) 2,136개 → ('18) 2,318개)

□ 추진 계획

-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 강화('21~'25)
 - 최초 수입·생산되는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및 승인 후 10년 마다 재심사를 통해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확인
 -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15건 이상/년) 및 재심사(51건, '21~'25)
- 유관 부처간 업무 협력 및 민원인 간 소통 강화('20~'25)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관련 부처간 회의를 통한 심사 진행 현황 및 현안 논의(연중)
 - * 산업부(주관), 과기부, 복지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식약처
 - 국내 새로운 소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유관 부처간 협력 지속 추진
 - * 연구·개발 원료 수요조사(2월) → 정부기관, 지자체 대상 컨설팅(수시)

- 사전 컨설팅 「찾아가는 기술상담」 및 「채움토의」 추진을 통한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확대(연중)

* 기술상담: 원료 연구개발 단계부터 원료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 채움토의: 신청 전 제출자료 사전검토 등을 통한 보완·반려 사례 발생 방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입식품 안전관리	직접수행	142	142	142	142	142	142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재심사(건)	7	4 [†]	7	17	14	9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승인 후 10년마다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유전자변형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마다 재심사를 받아야하므로, 예측 가능한 품목 재심사 건수를 지표로 설정함

† '21년 재심사 대상 품목 중 1건(유전자변형 미생물 FIS001)이 상업화중단('21.1.6)함에 따라 지표 조정(5 → 4)

과제번호	1-3-2-③	과제명	신기술 적용 기구 및 용기·포장 안전관리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 최재천 연구관(T. 043-719-4353)		

□ 배경 및 필요성

○ 기능형 및 친환경 표방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

- 편의성·기능성이 향상된 기능형 기구 및 용기·포장의 출현으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 생분해성수지* 등의 바이오플라스틱** 및 친환경 표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성능·안전성 검증 기반 마련 필요

* 생분해성 플라스틱(수지)은 미생물 등에 의한 생물적 작용에 의해서 분해되는 수지 또는 중합체를 말하여 최종적으로 물, 이산화탄소, 메탄 및 분해성 유기물 등으로 분해됨

** 바이오플라스틱 : 생분해성, 산화생분해성 및 고분자결합형 수지가 있음

○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위해우려 이행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 현행 시험법에 대한 개선요구를 반영하고, 기준규격 외 이행물질 시험법 연구와 안전성 평가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지원

□ 추진 계획

○ 기능형 및 친환경 표방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연구(‘21~)

- 이행우려물질에 대한 잔류 및 용출시험법 개발
- 적용성검토를 위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평가

○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이행물질 시험법 개선 및 안전성평가(‘21~)

- 톨루엔 등의 시험법 개선, 테레프탈산 등의 이행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평가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0~'14	'15~'17	'18~'20	'21~'25	'26 이후
신기술 적용 기구·용기·포장 연구 및 실태조사	현행 재질을 대상으로 한 시험법 개발 → 신기술 적용 기구·용기·포장 재질 유래 이행 우려 물질에 대한 시험법 개발	(14항목) ▪ 비닐아세테이트, 안트라퀴논, 과 불 화합물 등	(33항목) ▪ 신약소재 외 선 흡수제, 비스페놀 A 물질 등	(6항목) ▪ 휘발성유기 화합물, 항균 물질 등	▪ 기능성, 바이오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사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이행물질 시험법 개발 및 모니터링 ▪ 톨루엔 등 시험법 개선 및 기구 및 용기·포장 모니터링·안전성 평가	▪ 기구 및 용기 포장 시험법·안전성평가 연구로 안전 관리 정책 지원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신기술 적용 기구·용기·포장 연구	직접수행 및 용역·출연	300	900	900	900	1,000	1,000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개발·개선 및 안전성 평가	직접수행 및 용역·출연	940	960	1,100	1,100	1,200	1,2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시험법 개발·개선 건수	3	4	4	4	4	4
모니터링 건수	450	500	500	500	500	5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기능형 및 바이오플라스틱 등에 대한 시험법 개발·개선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개발된 시험법 건수

과제번호	1-3-2-④	과제명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시험법 개발·개선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 남혜선 연구관(T. 043-719-2107)		

□ 배경 및 필요성

- 기준규격 효율적 관리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시험법 개발·개선 요구
 - 미래 환경변화, 위해요인 등의 대응을 위한 사전 예방적 시험법 개발로 안전관리 및 정책지원 필요
 -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관리에 필요한 시험법 개발·개선 확대 필요

□ 추진 계획

-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관리 강화를 위한 시험법 개발·개선('21~)
 - 효율성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한 시험법(산화방지제 등) 개선
 - 식품 중 천연기원물질 유래 식품첨가물 시험법(헤스페리딘 등) 개발
-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식품첨가물 미립자 검출 방법 개발('21~'22)
 - 식품에 사용되는 산화아연(영양강화제) 및 이산화규소(고결방지제)의 미립자 검출방법 개발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21)
 - 집단급식소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염소계(차아염소산나트륨) 및 4급 암모늄 살균소독제의 현장 적용 가능 검출방법 개발
- 위생용품 중 품질 및 위해요인 분석을 위한 시험법 개선('21~)
 - 세척제, 헹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중 액성(pH), 중금속 등 시험법 개선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0~'14	'15~'17	'18~'20	'21~'25	'26 이후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용품 시험법 개발·개선	기준규격 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 → 미지정 첨가물, 이행 가능 물질, 위해우려물질 등에 대한 시험법 개발	(27종 식품첨가물) ▪ 추출용매 (핵산 등), 식용색소 (황색4호 등)	(16종 식품첨가물) ▪ 감미료(네오탐알리탐 등), 착색료, 유화제 등	(18종 식품첨가물) ▪ 미지정 착색료 (시트러스레드 2 등, 이산화티타늄 미립자 등) (4항목 위생용품) ▪ 메탄올, 납, 포름알데히드 등	(9종 식품첨가물) ▪ 산화방지제, 산화아연, 이산화규소 등 (2종)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차아염소산나트륨, 4급 암모늄 (7항목) 위생용품 ▪ 저중금속 등	▪ 식생활, 친환경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시험법 개발·개선	직접수행 및 용역·출연	1,790	1,700	1,550	1,700	1,800	1,9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시험법 개발·개선	13	6	3	3	3	3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용품 시험법 개발 건수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개발된 시험법 건수 확인

과제번호	1-4-1-①	과제명	위기대응 체계 정비 및 효율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T. 043-719-2107)		

□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
 - 현재의 위기대응 체계는 부처 또는 사업국 주도의 위기대응을 가정하여 마련되어 국가적 위기시 대응에 한계가 있음
-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 체계 정비 필요

□ 추진 계획

- 국지적 상황(부처 단독 대응)과 전면적 상황(국가 전체 대응)에서의 효율적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위기대응 매뉴얼 반영
 - 빠른 의사결정 및 대응 일관성을 위하여 위기대응체계*를 정비
 - * 위기여부에 따라 부처 자체대응 또는 관계부처 합동대응 여부 결정
 - 신속하게 현장 적용이 가능한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연4회)
- 위기대응 체질화를 위한 실습·참여형 교육·훈련 실시강화
 - 실제 발생 가능성 있는 사고 상황에 대해 대본 없이 실제처럼 대응하는 위기대응 훈련* 실시(연4회)
 - * 일상불란한 유기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정례화된 모의훈련 실시
- 효율적인 위기대응체계 운영을 위해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에 분산된 위기대응 규정 일원화 등 정비 추진
 - * 위해식품 등의 대한 긴급대응, 위해평가, 특정 식품 등의 수입·금지 등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위기대응 체계 효율화	국가적 위기대응 체계 구축으로 사고발생 시 조속한 사고 수습 및 국민피해 최소화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제정·운영	교육·훈련 및 매뉴얼 정비를 통한 위기대응 역량강화	사고 발생부터 종결까지 체계적 관리를 통한 위기대응 구축	국가적 위기시 효율적 대응체계 정비 및 현장적용이 용이한 매뉴얼 개정 정비	-
위기대응 규정 정비	여러 법에 분산된 위기대응 규정 일원화 등 규정 정비	-	-	-	· 체계적 위기대응 규정 개정 관련 연구사업 추진(23년) · 법령 개정(25년)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직접수행	265	166	273	281	290	299

□ 성과지표

지표명	'21	'22	'23	'24
위기대응 매뉴얼 제·개정(회)	4	4	4	4
위기대응 모의훈련(회)	4	4	4	4

과제번호	1-4-1-②	과제명	위해정보 수집·분석 체계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조수연 사무관(T.043-719-1775)		

□ 배경 및 필요성

- 해외에서 부적합·회수되는 식품의 국내 수입·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위해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치 필요

□ 추진 계획

-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위해정보 수집 체계 유지
 -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정보부(15명)의 정보수집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 및 수시 화상회의를 통해 상시 소통
 - * 29개국 189개 사이트 정보 수집
- 매일 위해정보를 분석, 위해정보 등급 분류 및 관련부서에 제공
 - 국내 수입여부, 허가사항, 해외직구 사이트 판매여부 등 확인
 - 부적합·회수 현황, 국내외 기준·규격 차이 등 분석 후 정보 제공
- 수입·판매금지, 회수·폐기 등 조치
 - (위해정보과) 조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사업부서 독려
 - (사업부서) 조치결과를 '위해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사전에방적 위해관리 (위해정보 수집·분석)	국고 (직접수행)	618	618	618	618	618	618

□ 성과 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위해 식의약품 수입·판매금지·회수 등(건)	150	150	150	150	150	150
기준규격 개선, 검사강화, 안전정책 반영 등(건)	100	100	100	100	100	100
섭취주의, 안전성서한 등 대국민 홍보(건)	100	100	100	100	100	1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 전파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파급효과를 나타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

과제번호	1-4-2-①	과제명	부처-지자체간 협업 활성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최기환 사무관(T. 043-719-3244)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박진국 사무관(T. 043-719-3211)		

□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운영 필요
 - 중앙행정기관(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간 정책에 대한 상호이해 및 부처·지자체간 소통을 통한 현장의견 반영의 장으로 운영할 필요

□ 추진 계획

- 관계부처 상호 협력을 통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추진
 - 실무협의체에서 발굴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과제의 협의·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정기 협의체 운영(연 2회)
 - 관계부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실무자 간 협의회 운영(연 3회)
 - * 지자체 시·도 안전관리 담당부서 및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참석
 - 농·축·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연 1회)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부처간 지자체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	-	▪ 부처간 정기 협의 및 실무 협의회 운영	▪ (좌동)	▪ (좌동)

□ 예산 사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개최(회)	3	3	3	3	3	3

과제번호	1-4-2-②	과제명	지자체 시험·검사 역량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 박정규 사무관(T. 043-719-1821)		

□ 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 시험·검사기관의 유통단계 식품등 검사를 위한 첨단분석 장비 도입 지원
 - 위해 식품등에 대한 신속검사, 농약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 ('19.1.1.)에 따른 농산물안전관리 등
- 중앙-지자체간 시험·검사 품질향상을 위한 소통 및 교육지원을 통한 현장중심의 업무협력 활성화

□ 추진 계획

- 지자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장비 확충
 - 첨단분석장비 도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1~3월)
 - *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등
 - 기관별 국고보조금 지원장비 운용현황 조사(3~11월)
 - * 전년도 지원장비에 대한 국고보조집행 적정성 및 활용도 등 조사
- 시험·검사 능력 향상을 위한 중앙-지자체간 업무 협력 활성화
 -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설명회(1월)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연1회), 동물위생시험소 회의(연1회)
 - 시험·검사 전문 평가관 교육 지원(연2회)
-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
 -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범위에 유통단계 축산물 포함 등 검사범위 명확화
 - * 검사대상을 식육에서 축산물로 개정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8~'20	'21~'25	'26 이후
지자체 시험·검사 역량 강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업무 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 추진 - 검사대상에 유통축산물 포함·명확화 - 20대 국회종료에 따라 상정법안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 추진 - 21대 국회 재상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보조(30-50%)	1,360	1,360	1,360	1,360	1,360	1,36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국고보조 예산 집행율	95	95	95	95	95	95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도입에 따른 예산 집행율을 통해 장비도입근거 설정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도입장비명 및 사용액) 확인

과제번호	1-4-3-①	과제명	국제 식품 안전 협력 확대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김천수 연구관(T. 043-719-2023)		

□ 배경 및 필요성

- 아·태지역의 경제성장, 한류확산 및 안전 먹거리 선호 등으로 우리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
 - * 한국대표이미지('18, 해외문화홍보원): 한식(40%), K-pop(22.8%), 한국문화(19.1%), K-뷰티(14.2%)
- 무역 자유화로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각 국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추세
 - *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등록 기준 강화, 수출입 사전포장식품 라벨 검사 강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 (베트남) 김치 조미김 미생물 기준 등
- 국제교류협력 강화로 비관세장벽 해소 및 국가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추진 경과

- 주요 교육국가(중국, 베트남 등)와 양자 대면협력 채널 운영
 - *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회의, 한베 식품분야 실무협의회 등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등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연12회)
 - * ('17) 김 규격 설정, ('18) 우유의 첨가물 규격 삭제, ('19) 국제식품 분류에 들기름 등재 등
- 식품분야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16~)

□ 추진 계획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효율적 대응 및 국제기준 조화 추진('21~'25)
 - CODEX 식품첨가물분과 공동개최('21)
 - CODEX 총회, 분과회의(11회) 참석('21~25)

- 양자간 협력채널 확대 추진('20~'25)
 - 한-호·뉴 식품안전협력위원회 양해각서 개정('21)
 -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양해각서 개정('22)
 - 한-호·뉴, 한-중, 한-베 식품안전협력위원회 개최('21~'25)
- 주요 식품 교역국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21~'25)
 - 식품 교역량이 많은 국가의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노하우 전수 및 국가 간 기술협력 교류 증진
 - * ('21) 중국, ('22) 일본, ('23) 베트남, ('24) 태국, ('25) 미국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효율적 대응	직접수행	284	284	284	284	284	284
양자간 협력채널 확대	직접수행	100	100	100	100	100	100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	용역	90	90	90	90	90	90

□ 성과지표

(단위 : 회)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횡수	5	10	10	10	10	10
협력위원회 개최 횡수	0	2	3	3	4	4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 참석자 수	0	10	10	12	12	14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국가간 무역시 작용하는 유일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기구로 우리나라 국민과 생산자를 보호하고 무역장벽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기준 제·개정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대응 필요

2. 식품안전협력위원회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국가와 비관세장벽해소와 식품 안전분야에 협력을 위한 회의로 수입식품안전과 식품산업활성을 위해 현재 중국과 정례적 협의회(1회/년)가 개최중이며, 향후 확대 필요
3. 주요 교역국의 수출입 담당공무원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이해토록 교육하여 국가간 무역시 발생 가능한 비관세장벽 해소 등 국가간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동력 마련 필요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 분과회의시 우리나라 식품의 기준규격이 반영되도록 의견 제출을 위한 회의참석 횟수
2. 식품안전분야 협력을 위한 식품안전협력위원회 개최 건수
3. 인적자원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교역국의 참석자수

과제번호	1-4-3-②	과제명	국제 기준 대응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김승래 사무관(T. 044-201-2080)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이주영 사무관(T. 044-201-2121)		

□ 배경 및 필요성

- 농축산물 및 식품 수입에 따른 국민건강과 농축산업 보호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는 국제 기준·규격* 마련 필요

* 우리나라 보유 국제 기준·규격 : 김치('01, 세계규격), 고추장·된장(콩 발효페이스트)('09, 아시아규격), 인삼제품('15년 세계규격)

- 농축산물 수출·입 시 국제기준과 조화되지 않을 경우 통상 마찰* 및 수출경쟁력 약화 가능성 증가

* 통상분쟁 발생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IPPC(세계식물보호협약), OIE(세계동물보건기구)의 국제기준만 인정

□ 추진 계획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요 농식품 수출·입 품목의 규격설정에 국내 기준을 반영하여 적극 대응(연중)

* ① 기 설정 기준은 국내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 ② 국제기준 미설정시 국내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제정, ③ 아시아규격을 세계규격으로 제정

- OIE*(세계동물보건기구), IPPC**(세계식물보호협약) 및 검역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동축산물 및 식물 위생·검역 기준(SPS) 제·개정 대응(연중)

* 국제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BSE, AI, 구제역 등 중요 전염병에 대한 검역기준 제개정, 동물 위생조치 및 동물 질병 진단방법 등의 국제기준 제개정

** UN/FAO 산하의 국제기구로서 식물보호와 식물위생조치 원칙 등 검역 국제기준 제정, 국내 아시아 최초 의장 선출(제10차 및 제11차), 역대 로마 이외의 장소 최초로 개최('17년 제12회 총회)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국제 기준 대응	국제 식품규격 적극 대응으로 안전식품 수입 및 우리 식품 수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치('01, 세계 규격) 설정 고추장·된장 (공 발효팩스 트 '09 아시아 규격)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삼 제품 ('15년 세계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추장 세계 규격화 및 건조감 (곶감) 규격화 (건조 과일부속서) 작업 추진 승인 IPPC 총화·식품 위생목적의 진단방법으로의 High-throughput sequencing(HTS) 수정안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식품의 아시아규격 설정 대응 연잎밥(식품) 앞으로 감싼 쌀가공품), 즉석 만두, 청 국 장 (Bacillus 종) 으로 발효한 대두제품 즉석밥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식품의 아시아규격을 세계 규격으로 제정 추진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식품표준화	보조 (100%)	150	150	150	150	150	15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국제기준 제·개정 제안 건수	2	2	2	2	2	2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제·개정 시 우리나라 의견 제안 건수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공식적인 회의를 통한 의견제안 및 반영사항

과제번호	1-4-3-③	과제명	수출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지원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김천수 연구관(T. 043-719-182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최충렬 사무관(T. 043-719-2160)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적으로 HACCP을 기본으로 식품안전경영* 등을 포함하는 식품 안전관리 인증규격이 확대되는 추세
 - 우리식품이 글로벌 유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경영이 포함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 시스템**이 필요
 - *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 경영, 감사, 식품방어, 식품사기 등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시스템
 - ** FSSC 22000(네덜란드), BRCG(영국), CGC-HACCP(캐나다) 등
 - 국내 식품의 안전성을 국제범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등 정부 차원의 식품 수출 지원 필요
 - * 축산물 등은 수출국 정부 및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이 수입국과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수입허용절차를 통한 수입허용 후 수출가능

□ 추진 계획

- 수출전 상대국 규제 대한 맞춤형 상담, 사전 안전성 검사 및 영문 증명 추진('21~)
 - 중기부 브랜드K*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지원 요청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 * 중소기업 명품 발굴 및 세계시장 확산을 목표로 한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19)
 - ** (주)바이오믹스테크, 농업회사법인 (주)영풍, 산골알밤, 대계백간당 이상 4개 업체

- 국가간 검사성적서의 동등성 확보 추진('21~)
 - 통관시 적용되는 기준·규격 등의 검사성적서 상호 인정을 위한 MOU 체결/개정 추진
 - * (중국/베트남) 한·중식품안전협력위원회, 한·베식품안전협력위원회
 - * (호주/미국) 식품안전협력회의 구성 후 MOU 체결 논의
-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하도록 HACCP을 고도화한 식품안전인증규격 개발 및 국제인증규격과 동등성 확보 추진('20~)
 - (1단계) 식품안전국가인증 평가기준 개발('21년)
 - (2단계) 제도적 기반 구축 및 표준기준서(매뉴얼)·가이드 개발('22년)
 - (3단계) 국가인증 시험적용 및 국제식품안전협회 기술동등성 신청('23년)
 - (4단계) 인증 활성화 및 상호 동등성 인정 추진('24년)
 - (5단계) 승인 절차 완료 및 국제적 신뢰 제고('25년)
- 수출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21~)
 - 수출식품 시험검사기관(동물위생시험소) 국제공인(ISO 17025) 인정 지원
 - 수출상대국 요구에 부합한 수출작업장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 수출 전략품목 발굴·선정 및 수출상대국 위생평가 대응 등
 - 수출품목 위생약정 체결 및 작업장 등록 확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국가인증제 도입	직접수행	-	150	2,000	2,000	2,000	2,000
수출식품 안전관리 국제 경쟁력 강화	직접수행	-	200	1,500	1,500	1,500	1,500

□ 성과지표

(단위 : 건)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검사 증명서 발급	-	20	100	100	100	100
한국형 인증제 개발 및 국제인증 규격과 동등성 확보	-	-	1	-	1	-
수출작업장 등록건수	300	330	360	390	420	45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1. 식품업계의 해외진출시 상대국의 기준·규격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전 상대국의 기준·규격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선검사 추진 필요
2. 국내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시 애로 사항(국내 HACCP과 국제인증 중복인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제품의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HACCP을 고도화한 인증제 개발 및 국제인증기구와 동등성 확보
3. 수출 상대국에 등록된 작업장 수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1. 상대국 기준·규격에 따라 검사한 영문검사증명서 발급 건수
2. HACCP을 고도화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형 인증제도 개발 및 현재 통용되는 국제인증규격과 동등성 확보
3. 매년 신규등록을 포함한 누계 건수로 측정하되, 수출작업장의 자의적인 등록반납(등록취소)의 경우 지표건수에 포함하지 않음

과제번호	1-4-3-④	과제명	수산식품 안전성 강화를 통한 국제인증 취득 지원
담당자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서밀가 사무관(T. 044-200-5683)		

□ 배경 및 필요성

- 해외 바이어들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식품을 수입하기 위해 국제 식품 관련 인증 등 다양한 안전 관리 기준을 요구하는 추세
 - 현지에서 요구되는 해외 식품 규격 인증을 획득하여 비관세 장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필요
- 대부분 중·소규모인 우리 수산업체의 경우, 국제인증 취득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정부지원을 통한 국제인증 취득 활성화 필요

□ 추진 계획

- (해외 식품규격 인증) 해외 각국의 대형 유통업체 및 바이어가 요구하는 주요 인증을 선정하여 취득을 위한 비용 사후지원
 - 친환경, 품질규격 인증 등 34종의 국제인증 신규취득 및 연장 시 소요된 비용(심사비·컨설팅비·교육비 등)의 80% 지원(20백만원 한도)
- (수출 전략 인증) 높은 심사비용 등으로 취득이 어려운 인증을 수출 전략인증 대상으로 선정*하여 별도 사후지원
 - ASC, MSC 등 6종의 수출전략인증 취득 시 소요된 비용(심사비·컨설팅비 등)의 80% 지원(50백만원 한도)
 - * 주요 국제인증 중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수출전략인증으로 선정
: 국제생산인증 2종(ASC, MSC) 및 가공인증 4종(FSVP, VQIP, BRC, IFS)
- (신규 규격 스탠다드 번역) 국내 신규 도입되는 인증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관련 인증 취득 확대 지원
 - ASC-MSC 통합 해조류(김, 미역 등) 인증 번역 진행('21~)
 - * '19년 ASC(전복, 이매패류), '20년 ASC(넙치) 스탠다드 번역 완료

- (인증 관리 체계화) 컨설팅 업체 관리기반 구축 및 지원업체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수산업계 대상 국제 인증 지원 체계화
 - ①국내 컨설팅기관 정보제공, ②선정업체 인증 착수 관리, ③수출 미흡 업체에 대한 향후 지원 제한 등 관리 강화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6~'18	'19~'20	'21~'25	'25 이후
국제인증 취득지원	신규 지원 인증 발굴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해 비관세 장벽 해소	할랄, 친환경 등 국제 식품규격 인증 지원	수출전략인증 발굴 및 지원	수출전략인증 확대 및 글로벌 스탠다드 번역 제공	취득부터 사후 관리까지 인증 지원 시스템화

□ 예산 사항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국제인증(백만원)	민간보조	1,750	1,750	1,750	2,000	2,000	2,0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수출전략인증 취득 지원(건)	6	7	8	9	10	11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사업 당해연도의 인증 취득(예비심사 포함) 업체 수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20년 목표치(6건) 대비 매년 지원건수 확대

과제번호	1-4-3-⑤	과제명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등 수산 가공식품 수출안전성 지원 강화
담당자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김준태 사무관(T. 044-200-5487)		

□ 배경 및 필요성

- (현황)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 증가 추세 및 국산 유기농수산물식품의 EU 수출 통관불허 상황발생에 대응하여 국내 수산물 유기농업계의 대책마련 요구
- 우리나라와 EU는 유기농식품(카테고리D*)에 대해 동등성인정** 협정을 체결('15.2.1, 한국측 협약주체 : 농식품부 / 수산양식제품 제외)
 - * 유럽연합 위원회 규정(No. 1235/2008: ANNEX 4_ 조항 10)에 따른 카테고리 분류(A~F) : 「Categories D :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for use as food」
 - ** 동등성 인정 : 친환경농어업법 제25조에 따라 유기식품에 대하여 상호국가간 동등,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보증)하는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유기농식품에 한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의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
- (EU 입장) '16년부터 유기농수산물식품을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된 '카테고리D' 제품으로 해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증명서(COI) 요구
 - 국내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가공품의 일정 기준 이상 수산물 함유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소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이 불가하여 수출 애로사항 발생

□ 추진 계획

-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유사한 수산물식품 안전 인증 제도 조사 및 국가간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체계 구축('22)
 - * ('23) 유기농수산물식품 한-EU 동등성 협정 체결 → 미국, 동남아 등 확대('24~)

○ 유기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출 상대국의 생산 및 가공과정별 동등성 입증 확대 등 수입허용 절차 강화에 대응한 적극적 대책 마련

- * 단기 : 한-EU 유기수산물가공품 수출 현안 해소('21), 인증제품 품질관리 강화(계속)
- * 중·장기 : 국가별 시장동향 및 수입규제 현황 분석 등 협정 대상 국가 품목 확대('24)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동등성 협약 체결 추진 확대	유기수산물가공 품의 협약 체 결(5개국)	-	▪ 근거법령 등 제도기반 구축	-	▪ 유기수산 가공품의 동등성 협정 체결(2개국)	▪ 유기수산 가공품의 동등성 협정 체결(3개국)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수산물국제인증)	직접수행	-	-	50	50	100	1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동등성 협정 체결 국가수(개소)	-	-	-	1	-	1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협정 체결 진행 대상 국가수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최종 협정 체결 서명 국가

과제번호	2-1-1-①	과제명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이철호 사무관(T. 054-429-4135)		

□ 배경 및 필요성

-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생물독소 등 등 유해물질 검사를 통하여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 농산물 공급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정착, 공익증진직불제 시행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및 정책지원 등 안전관리 강화

* PLS(Positive List System):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성분의 최대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성분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 적용

□ 추진 계획

-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사전 예방적 안전성 조사를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20~'25)
 - 품목별 중점관리*를 통하여 부적합 농산물 발생 사전예방
 - * 최근 3년간 부적합 다빈도 품목(알타리무, 싹갓 등) 및 특정 시기별 취약품목(참나물) 등
 -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공익직불 적극지원
- 농식품 정책사업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조사 추진('20~'25)
 - 친환경·GAP인증 등 주요 농식품 정책사업에 대한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조사를 통한 정책실행 제고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7까지	'18~'20	'21~'25	'26 이후
생산·유통단계 농산물 안전 관리 강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농산물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물량 확대를 통하여 안전관리 강화 ▪ PLS시행 대비 농약안전사용 지도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물량 체계화를 통한 안전성 조사 물량 조정 ▪ PLS 시행 등에 따른 사전 예방적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연 5만건 수준 유지 ▪ 공익직불제 연계한 농산물 안전성조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지도·교육 기반 농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산물 안전성조사	직접수행	23,302	23,534	24,640	25,379	26,140	28,924

*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물량에 대한 소요예산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안전성조사 적합률(%)	98.5%	98.5%	98.5%	98.5%	98.5%	98.5%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연간 안전성조사 전체 실적대비 적합건의 비율로 산정, 최근 5년간(2015~2019년) 안전성조사 적합률의 평균(98.5) 유지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농식품안심안전정보 시스템(SafeQin)에서 실적 확인

* (참고) 미국, 유럽의 잔류농약 등 안전성조사 적합률 : 97~98% 내외(출처 : 미국 농업부 농업유통국(USDA AMS), EU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

과제번호	2-1-1-②	과제명	농경지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담당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김명숙 연구관(T. 063-238-2440)		

□ 배경 및 필요성

- 농업환경의 건전한 유지·보전을 위한 토양 중 유해물질의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이 필요함
 - *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 다수확 생산량에 초점을 둔 고투입 농법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일부 중금속 함량이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토양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특히, 과수원과 시설재배지 구리·아연 상대적 높은 수준임
 - * 시설재배지 구리/아연(mg/kg) : ('12)32.1/103.5 → ('16) 44.0/117.5
- 농경지 대상 중금속의 안전관리를 위해 토양중 용해도·작물흡수 특성을 고려한 분석법·토양관리기준, 개량방법 마련이 시급함
 - * 토양환경보전법(제3조2항) 오염농경지 「농지법」에 따라 토양개량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농지법에는 구체적 정화 방법, 안전관리 기준이 부재함

□ 추진 계획

- 농경지 토양의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및 평가('21~'25)
 - 일반농경지(논, 밭, 시설재배, 과수원), 공단인근 농경지 조사·평가
 - * 일반농경지 : 밭 1,760점('21), 과수원 1,470('22), 논 2,110('23), 시설 1,374('24)
 - * 공단인근 : 전국 4개 권역(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권역별 150점 총 600점/년
 - 농경지 중금속 오염 판별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적용성 평가
 - * 중금속 유효태 농도 기준(Mehlich3), '10년 이전 관리기준(0.1N HCl) 현장 적용을 통한 비교·검토
 - 중금속 오염농경지 토양 안정화 기술 실용화 연구
 - * 단일/복합 개량제 처리를 통한 안정화 효율 및 지속성 평가
 - * 개량제 소요량 산정, 개량제 지속성(년), 현장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 농경지 토양의 주요 중금속 안전관리 기술 개발('19~'22)

- 토양 내 중금속 화학종 분포 및 유효도에 근거한 개량기술 개발

* 토양 개량제 처리로 중금속 불용화 증가 및 중금속 식물 이행 저감

- 작물 흡수·이행계수를 근거한 농경지 중금속 안전관리 기술개발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토양 중금속 안전성 연구 강화	농경지 토양 중금속 측정망 운영 및 사후 관리 연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경지(일반 취약) 토양 중금속 측정망 운영 오염농경지 안전성조사 사 후 조 치 정책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경지(일반 취약) 토양 중금속 측정망 운영 오염농경지 안전성조사 사 후 조 치 정책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경지(일반 취약) 토양 중금속 측정망 운영 오염농경지 안전성조사 사 후 조 치 정책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양 환경 토양 중금속 측정망 구축 및 변동평가 중금속 오염 농경지 사후 관리를 위한 개량제 제시 및 소요량, 관리방법 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경지(일반 취약) 토양 중금속 측정망 운영 중금속 오염 농경지 사후 관리 방안을 제도화하는데 근 거 자 료 제시 및 정책 지원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업정책기술지원개발	직접수행출연	588	700	700	700	700	700
농업기초기반연구	직접수행	113	113	120	120	120	12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일반·취약농경지 토양의 중금속 DB 구축 건수*	1,974	2,360	2,070	2,710	1,974	2,360
토양 중금속 유효태 기준 도출	2종 (Cd,Pb)	-	1종 (As)	-	-	2종 (Zn,Cu)
오염 농경지 중금속 토양질 판정 지표 개발	-	-	-	-	-	1 (토양질자수)

* 지표 설명

-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 사업을 통해 흙토람에 구축된 일반 및 취약농경지 토양 중금속 DB를 구축
- 농산물 기준 3개 중금속 대상으로 농작물 흡수·이행과 연계한 유효태 기준 설정
- 일반·취약농경지 토양 중금속 변동 모니터링을 결과를 활용한 토양질 판정 지표

* 지표 측정 방식

- DB 구축 건수
- 시험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금속 유효태 기준 건수

과제번호	2-1-1-③	과제명	오염 우려 농지·농업용수 조사·관리 강화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박영석 사무관(T. 054-429-4135)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한국탁 연구관(T. 054-429-4166)		

□ 배경 및 필요성

- 농산물 유해물질 오염 사전차단을 위한 재배환경 조사 및 관리 필요
 -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생산 환경기반 조성을 위한 농경지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주변 실태조사

□ 추진 계획

- (농지) 유해물질 오염 개연성이 높은 우려시설 주변 농경지 중금속 기준초과 파악을 위해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관리지구의 오염도 파악을 위해 대표성 있는 시설 조사(~'23)
 - 사전 개황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도가 높은 지구에 대한 정밀조사 검토·추진('24년 이후)
- (농업용수) 농산물의 식중독균 안전관리 및 실태파악을 위한 농업용수에 대한 식중독균·노로바이러스의 모니터링 실시
 - 주위 환경이 열악하거나 오염우려가 높은 농가(업체)에서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및 하천수 식중독균(4종) 및 노로바이러스 조사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7까지	'18~'20	'21~'25	'26 이후
재배환경 조사 및 관리강화	(농경지)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주변에 대한 토양 중금속 오염조사 실시 (농업용수) 지하수 및 하천수 등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농업용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금속 석탄광산 관리지구 농경지 중금속 오염실태조사 완료 (405지구 20,634필지) ▪ 일반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농업용수 식중독균 및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연 5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 오염우려 시설인근 농지 중금속 오염실태 개황 및 정밀조사 병행(144지구 10,477필지) ▪ 농업용수 식중독균 및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연 12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우려시설 현행화 및 오염 개연성 등 고려한 관리지구 선정 ▪ 관리지구 오염도 확인을 위해 10% 우선조사 ▪ 농업용수 식중독균(4종) 및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확대(연 26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조사 완료 후 시설별 오염도 확인하여 오염이 심각한 지구에 대한 정밀조사 진행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모니터링 유지 여부 결정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산물 안전성조사 (재배환경 조사)	보조(100%)	1,260	1,260	1,500	1,500	1,500	1,5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중금속 오염 관리지구 사후 관리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농어촌공사 조사결과 중금속 오염우려지역으로 통보된 농경지(논·밭)에 대한 농작물 재배현황 개황조사 후 농산물 안전성조사 비율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농식품안전심안정보 시스템(SafeQin)에서 실적 확인
- * (산출방식) : (농산물 안전성조사 건수 / 농산물 재배필지 수)×100

과제 번호	2-1-2-①	과 제 명	유해화학물질 오염실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담 당 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잔류화학평가과 이희동 연구관(T. 043-719-1821)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농산물 중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부터 PLS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수입 농산물 포함 국내 유통 농산물 중 검출될 수 있는 농약의 안전성 평가연구 필요
- PLS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비의도적 농약 오염 사전 차단 및 원인 분석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
- 농경지 토양에 잔류하는 중금속의 효과적인 저감기술 개발 필요
 - 비소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산 수입쌀의 비소 안전성 문제로 통관 보류 사태가 발생('12. 9)
 - 충남북·전남·경북 지역 20개 폐금속 광산 인근의 토양개량·복원 후 6년 이상 경과 농경지 197필지 중 34필지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국립농업과학원, 2019)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단계 과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필요
 - 토양 중 잔류농약은 수직·수평 이동하여 농산물로 이동하는 비의도적 오염피해 우려
 - PLS 제도 시행으로 농업환경 중 잔류오염물질의 농산물 오염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작용

□ 추진 계획

- 농산물 및 재배환경 중 농약 안전관리 기술개발
 - 농산물 및 농자재 중 농약 분석 기술 개발·보급('21-'25)
 - 비의도적 농약오염 최소화를 위한 드론(무인헬기) 살포농약의 비산특성 조사
- 농업환경 중 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21~'25)
 - 농경지 토양 주기적 농약 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 농업용수 시기별 잔류농약 노출량 및 위해성 평가 연구

- 고잔류성 농약 등 유해물질의 대사행적 및 작물흡수이행 연구('21~'25)
 - 라이시메터를 활용한 유해화학물질 수직 이동성 평가 고도화 연구
 - 토양환경 중 고잔류성 농약의 잔류행적 연구
 - 다빈도·고잔류 농약의 토양-작물 간 생물농축계수(BCF) 연구
- 농산물 중 중금속 안전관리
 - 중금속 오염 취약지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도 조사 및 위해평가('22-'23)
 - 토양 중 중금속의 작물흡수 저감 촉진소재 개발('22-'25)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이후
유해화학물질 안전성 관련 과제	85과제	32과제	19과제	17과제	35과제	17과제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약 흡착 신소재 발굴 및 맞춤형 정밀 잔류 농약 분석법 확립	직접수행	-	300	300	300	300	300
농산물 및 농업환경의 중금속 잔류 평가 및 저감화 기술 향상 연구	직접수행	-	200	200	200	150	150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영농기술 현장실증 연구	직접수행	-	300	200	200	-	-
농업환경 중 잔류농약 모니 터링 및 위해성 평가	직접수행	240	750	750	750	750	750
고잔류성 농약 등 유해물질의 대사행적 및 작물흡수이행 연구	직접수행	-	210	170	170	170	170
농약 살포 장비별 비산량 측정 및 농업 현장 비산 모니터링	직접수행	70	70	70	70	-	-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농약 분석법개발(건, 누적)	10	13	15	17	19	20
중금속 오염 취약지 위해평가(건)	-	-	3	3	-	-
중금속의 작물 흡수 저감 촉진 소재 개발(건, 누적)	-	-	-	-	1	2
농경지 토양 모니터링(건, 누적)	100	200	300	400	500	600
농업용수 모니터링(건, 누적)	50	100	150	200	250	300
생물농축계수 산출(건, 누적)	-	2	4	6	8	10
DB 구축(건, 누적)	200	400	600	800	1,000	1,200
비의도적 농약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건, 누적)	-	1	-	2	-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농약 분석법 개발건수(정책제안 및 대내외협력 건수)
- 중금속 오염 취약지 위해평가 건수(지역별 위해평가 결과자료)
- 중금속 흡수 저감 촉진소재 개발 건수(기능성 물질·소재 개발 건수)
- 농경지 토양 모니터링 건수 : 농경지 토양 중 잔류오염물질 모니터링 조사시료 건수
- 농업용수 모니터링 건수 : 농업용수 중 잔류오염물질 모니터링 조사시료 건수
- 생물농축계수 산출 건수 : 잔류오염물질의 작물 흡수이행계수(BCF) 산출
- DB 구축 건수 : 작물, 토양, 농업용수 중 잔류오염물질의 잔류량 등을 농산물위해평가시스템(APRAS) 등 관련 DB에 업로드

* 지표 측정 방식 : 모니터링 조사 결과 메모보고, 영농활용, DB화

- 비의도적 농약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 건수(영농기술·정보 건수)

과제번호	2-1-2-②	과제명	유해미생물·독소 오염실태 모니터링 및 진단·제어기술 개발
담당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팀 김세리 연구관(T. 063-238-3395)		

□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외의 농산물 및 농업환경 관련 안전관리 정책 변화

- 농산물 및 농업환경의 유해미생물 관리강화 소비자 요구 증가
 - * 미국 식품현대화법(FSMA) : 농업용수 관리기준을 설정 시행 중
- EU·중국·할랄시장 등 새로운 수출시장 맞춤형 안전성 확보 대책 시급
 - * 주요 수출 대상국(인니, 태국, 베트남)의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대책 필요
- 국제적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신설 및 국내 위해도 재평가를 통한 기준 강화
 - * 향신료와 쌀의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중(Codex), 총아플라톡신 규격 확대, 수수 푸모니신 규격 신설, 곡류의 제랄레논 규격 강화(식약처)

○ 신선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수출에 있어서 상대국 미생물 기준치 초과 등으로 수출 농산물 미생물 부적합 사례 발생

- 미국은 한국산 팡이버섯을 리스테리아 식품 속 발생의 원인으로 주장(20)
 - * 리스테리아균 관리기준 : 미국 (100 CFU/g), 유럽 (판매 100CFU/g, 생산 음성/25g)

○ 농산물 유래 생물적 위해요소 안전관리기술 현장요구 증가

- 신선 채소류의 시가독소대장균, 항생제내성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추세
 - * 시가독소대장균 오염 우려 농산물 : 싹채소, 엽채류 지정(Codex 식품위생분과)
 - * 재배 및 수확후 관리과정의 관리기준, 오염최소화 지침 설정 합의(CCFH, '19)

□ 추진 계획

○ 농산물과 농업환경 중 유해미생물 오염실태 모니터링

- 전국 농업용수 미생물 안전성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 300지점/년
- 신선채소 및 생산환경(토양, 농자재 등) 중 식중독세균 및 바이러스 모니터링 : 300점/년
- 농산물 중 독성곰팡이 및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 100점/년

○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유해미생물 진단·제어기술 개발

- 시가독소 생산 대장균 분석을 위한 전처리 및 분자진단 기술개발
- 친환경소재를 이용한 농산물 중 식중독균 제어기술 개발
-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생산 및 소비 현장 위생관리 매뉴얼 개발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농산물 생산 단계 안전 관리 강화	농산물 및 농업 환경의 생물학적 위해요소 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 개발	채소 및 곡류의 유해미생물 및 곰팡이독소 오염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중 유해 미생물 진단 및 제어기술 개발 ▪ GAP현장실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농산물 안전 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 ▪ 사물인터넷(IoT) 기술 적용 진단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중 유해미생물 모니터링 전국단위로 확대 ▪ 농산물 중 유해미생물 관리 기술 종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기반 과학적 예방 관리 및 위생관리 기반 확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업기초기반연구	직접수행	680	680	680	680	680	680
농축산물 생산환경의 안전관리기술 개발	직접수행	711	711	711	711	700	7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유해미생물·독소 모니터링(누적건수)	2,800	3,500	4,200	4,900	5,600	6,300
유해미생물 진단·제어기술 개발(누적건수)	23	24	25	26	27	28
유형별 위생관리 매뉴얼 개발(누적건수)	1	2	3	4	5	6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유해미생물·독소 모니터링)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을 일으키는 주요 유해생물과 곰팡이가 분비하는 아플라톡신, 제랄레논, 데옥시리발레논 등의 농산물중 오염정도 조사

(유해미생물 진단·제어 기술 개발) 유해세균, 독성곰팡이 등을 진단하는 기술과 농산물 및 농업용수 등에 물리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세균 및 독성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유형별 위생관리 매뉴얼 개발) 현장에서 생산-소비자가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위생 수칙을 수록한 책자, 리후렛 등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유해미생물·독소 모니터링) 농산물 종류별 식중독균, 곰팡이독소 등 오염정도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한 조사 건수

(유해미생물 진단·제어 기술 개발) 농산물중 유해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별 정밀 또는 현장이용 가능한 신속 진단법 및 제어기술 개발 건수

(유형별 위생관리 매뉴얼 개발) 현장에서 생산-소비자가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위생 수칙을 수록한 책자, 리후렛 등 개발 건수

과제번호	2-1-3-①	과제명	GAP 인증 내실화 및 내부감독자 지정률 확대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김중수 사무관(T. 044-201-2278)		

□ 배경 및 필요성

- GAP는 양적확대에서 제도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질적확대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여 ‘내부감독제’ 도입(‘19.1.30.)
 - 내부감독제는 **단체 인증 집단의 내부감독자가 해당 집단의 GAP 기준 준수와 품질 제고를 위해 구성원을 지도·관리하는 제도**
 - * GAP 단체인증은 표본을 선정하여 심사와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심사 및 사후관리에 누락되는 구성원이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 장기적으로 농산물, 수확 후 관리시설에 대한 GAP 수준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도입, 내부감독자 제도와 연계한 생산-유통 통합 안전관리 방안 검토
 - GAP 인증 중 단체인증이 약 **94%(107,031호, ‘20年) 차지**
 - * 단체인증(건/호) : ‘18)2,613/81,620(94%) → ‘19)2,933/92,881(94%) → ‘20)3,129/107,031(94%)

□ 추진 계획

- 내부감독제 연착륙을 위한 **내부감독자 교육 추진**(年 1천명, 매년)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내부감독자 등록 비율을 가점으로 반영**(‘21~)
 -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는 GAP 인증률 확대이며, 내부감독자 등록 비율에 따라 인증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가점 부여
- **민간 인증기관의 성과지표에 반영하여 내부감독자 지정을 독려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20~)
 - * 내부감독자 지정 비율에 따라 인증기관 운영비 차등 지급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GAP 인증 내실화	단체인증 내부의 감독자를 지정하여 GAP 기준 지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P인증절차 간소화로 GAP인증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 추진 등 생산단체 안전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P 인증 내실화를 위한 내부 감독제도 도입('19) GAP 인증 농가 10만호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P 내실화를 위한 내부감독자 지정 및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P 내부 감독제도 의무화 추진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운영	지자체보조 30~50%	6,000	5,700	5,700	6,000	6,000	6,3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GAP 내부감독자 지정율	30%	40%	50%	60%	70%	80%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전국 내부감독자 지정 수 / 전국 내부감독자 지정 필요 수
 - 10명 이상의 집단인증 단체 중 50명 기준으로 1인의 내부감독자 지정
 - 전체 인증농업인 대비 89.2%(101,959명)의 내부감독 실시를 위해 3,290명 지정('20년)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GAP 정보서비스에 등록된 내부감독자로 지표 측정

과제번호	2-1-3-②	과 제 명	단순처리 농산물 식중독균 모니터링 강화 및 잔류농약 검사체계 개선
담 당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박진국 사무관(T. 043-719-321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잔류물질과 정용현 연구관(T. 043-719-4204)		

□ 배경 및 필요성

- 단순 절단·껍질제거 후 소포장 유통되는 단순처리 농산물*을 바로 섭취 시 식중독 등의 발생 우려가 있어 위해 식중독균 모니터링 필요

* 새싹채소, 절단 과일·채소, 깎밤, 깎마늘 등 소포장된 농산물

- ✓ '16~'19년 동안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팅이버섯을 생식하여 미국에서 4명의 사망자 및 30명의 입원환자 발생

- 생산단계(농관원)와 유통단계(식약처)의 농산물 시험법이 상이하고, 검사기관별(식약처·농관원·지자체)로 검사항목이 달라 개선 필요

- 생산·유통단계에서 서로 다른 시험법*을 적용하여 그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에 따른 퀘처스(QuEChERS)법 적용,
(유통단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 중

- 또한, 전국 단위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안전관리 수준의 불균형이 여전함

* ('18년 이전) 다종다성분농약동시분석 시 최소 공통검사항목이 없었음
('18년 이후) 최소 검사항목을 123종으로 통일하여 운영 중

□ 추진 계획

- 바로 섭취하는 식중독 등 발생 우려가 높은 단순처리 농산물에 대한 위해 식중독균* 모니터링 강화('21~'25)

*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 생산·유통단계별/검사기관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체계(시험법, 검사항목 등) 개선

- 생산단계(농관원)와 유통단계(식약처)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잔류농약 시험법 통일 및 표준품 공유를 통해 검사의 신뢰성 확보('21)

* 시험법 통일을 위한 식약처-농관원 공동연구 실시('20)

- 중앙부처(식약처·농관원)와 지자체 검사기관의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 관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잔류농약 최소검사항목 확대('21~)

* ('20년) 123종 → ('25년) 339종(총 216종 확대)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바로 섭취하는 농산물의 위해 미생물 관리 및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체계 개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로 섭취하는 농산물의 위해 식중독균 모니터링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시험법 통일을 위한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로 섭취하는 농산물의 위해 식중독균 모니터링(계속)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시험법 통일 및 잔류농약 최소검사항목 확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산물 식중독균 현황조사	직접수행	308	308	308	308	308	308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체계 개선	직접수행	-	300	300	-	-	-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바로 섭취 가능 단순처리 농산물 미생물 모니터링 건수	350	425	425	425	425	425

* '21년에 단순처리 농산물 미생물 모니터링 건수 확대 운영을 목표로 성과지표 설정

과제번호	2-1-3-③	과제명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시설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관리 기술 개발
담당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팀 김세리 연구관(T. 063-238-3395)		

□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이후 간편식 소비 증가에 따른 단순처리농산물 시장 확대
 - 깐마늘, 세척양파, 절임배추, 냉동과일 등 조리나 가공식품 제조를 위한 단순처리농산물의 수요 증가
 - * 단순처리농산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산물을 절단, 박피, 절임, 숙성, 가열 등 단순 처리한 농산물
 - * 시장규모: 신선편이(1.13조), 절임배추(3,500억), 건고추(7,425억) 등
 - 식품소비의 다양화, 편리화 추구에 대응 농산물 단순처리업에 대한 농가의 선호도 역시 증가 추세이며, 특히,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전처리·단순처리 농산물 개발 요구 상승
- 단순처리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생산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 및 시스템 개선 필요
 - 절임배추, 깐마늘, 세척 농산물 등 단순처리 농산물 안전 문제 지속 발생
 - 농산물 단순처리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HACCP을 적용하기에는 초기 투자비용 및 유지비용이 높아 큰 부담으로 작용
 - 농가수준 용도별 단순 전처리 농산물의 관리 기술 미흡으로 개별 사업장 위생처리 공정 제고 필요
 - 소규모 작업장별 위해요소 오염실태조사, 위해요소 저감화 기술 개발 등 연구 개발 및 보급 미흡
- 단순처리 농산물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GAP 통합 모델 개발
 - 품목별로 수확 후 처리 공정에 차별성을 두고 있지 않아 농산물의 생산부터 전처리까지 통합 관리 모델 개발 필요

□ 추진 계획

-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 시설 위생관리 실태 확인 및 관리 기술 개발
 - * 대상농산물 : ('21)세척 → ('22~'23) 건조 → ('24)박피·절단 → ('25)절임·냉동
 - * 내용 : 위생관리 현황 및 미생물 샘플링(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 단순처리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 대상농산물 : ('21)세척무·참외 → ('22)새싹보리분말 → ('23)절임배추 → ('24)냉동과일
- 단순처리 농산물의 GAP 통합모델 개발
 - 농산물 생산부터 수확 후 처리까지 GAP 기준에 따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 개발
 - * 대상농산물 : ('21)세척 → ('22) 건조 → ('23)박피·절단 → ('24) 절임 → ('25)냉동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생산자 안전 관리 지원 강화	단순기공농산물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안전관리 사각 지대	안전관리 사각 지대	안전관리 사각 지대	단순처리 농산물 위생관리 기술개발	단순처리 농산물 위생관리 확대 기술보급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생산안정화 기반 기술 개발	직접수행	500	500	800	800	800	-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단순처리 농산물 위해요소 저감기술 개발(건)	-	1	1	1	1	1
단순처리농산물 GAP 통합 모델 개발(건, 누적)	-	0	1	1	1	1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단순처리 농산물 위해요소 저감기술 개발)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 균을 일으키는 주요 유해생물 및 곰팡이독소 저감화 기술

(단순처리 농산물 GAP 통합모델개발) 단순처리농산물의 원료 생산에서 수확 후 처리까지 종합화된 위생관리 기술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단순처리 농산물 위해요소 저감기술 개발)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 균을 일으키는 주요 유해생물 및 곰팡이독소 저감화 기술 개발 건수

(단순처리 농산물 GAP 통합모델개발) 단순처리농산물의 원료 생산에서 가공까지 종합화된 위생관리 기술 개발 건수

과제번호	2-2-1-①	과제명	축산농가 사육환경 점검·관리 강화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문원탁 사무관(T. 044-201-2317)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도재규 사무관(T. 044-201-2346)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축산업 발전과 더불어 산업화 등에 의해 축산업 환경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규모 동물 전염병 빈발하는 추세
- (필요성) 가축질병·분뇨 관리 등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 점검 관리·강화 필요
 - 축산농장 환경·방역 관리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축산농장 전문 관리업체 필요성 대두

□ 추진 계획

- (축산농가 점검·관리 강화) 축산농가 허가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통한 축산 사육환경 개선 도모
 - 통합점검표 마련, 농식품부·환경부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점검체계 구축('21)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축산물품질관리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보조(민간100%)	2,603	1,500	500	500	500	5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축산농가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준수율(돼지)	80	85	90	95	95	95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 농가 중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한 농가 비율을 설정, 사육환경 개선 도모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농가/축산업 점검 농가

과제번호	2-2-1-②	과제명	동물복지 사육시설 및 가축관리 개선기술 개발
담당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전중환 연구사(T. 063-238-7051)		

□ 배경 및 필요성

- 일반 양돈농장 대상 가축사육기준 강화에 따른 임신돈 군사사육 의무화가 추진(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농식품부, '20.1)
 - 임신돈 군사사육 : 신규농가 '20년부터 적용, 기존농가 '30년부터 적용
- 일반 산란계농장 대상 가축사육기준 강화에 따른 산란계 사육밀도가 강화되었으며, 향후 Cage free 추진이 논의(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농식품부, '20.1)
 - 산란계 사육밀도 강화 : 0.05㎡/수 → 0.075㎡/수('18)
- 돼지의 실신조건은 타격법, 전살법, 충격법, 자격법 또는 CO₂ 가스법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다양한 가스의 이용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국내외 동물복지 강화 및 동물보호법, 축산법의 강화에 따른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시설 및 가축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추진 계획

- 농가단위 복지형 임신돈, 분만돈 사육기술 적용, 검증 및 생산성 비교('21~'25)
 - 동물복지 임신돈, 분만돈 사육시설 개선 및 임신돈 경쟁 저감 기술 개발
 - 동물복지 임신돈, 분만돈 사육시설 활용 매뉴얼 작성
- 농가단위 복지형 산란계, 육계 사육기술 적용, 검증 및 생산성 비교('21~'25)
 - 산란계, 육계의 행동패턴 변화 분석 및 사육시설 개선 연구
 - 동물복지 산란계, 육계 사육시설 활용 매뉴얼 작성
-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 운송, 계류 및 인도적 실신 조건 구명('21~'25)
 - 계류장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연구 및 인도적 실신조건 구명
 - 적정 운송밀도/운송방법 및 인도적 실신 방법에 대한 매뉴얼 작성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동물복지 사육시설 및 가축관리 개선	동물복지 인증 농가 증대 및 인증제도 활성화	▪ 산란계, 돼지, 육계 인증 기준 마련	▪ 한육우, 젓소 및 염소 오리 인증기준 마련	▪ 인증기준 적용 (동물보호법) 및 동물복지 관련 축산법 강화	▪ 동물복지 대체 사육 시설 현장 실증을 통한 경제성 분석 및 매뉴얼 작성	▪ 동물복지 인증 농가 증대 및 제도 활성화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2025축산현안대응 기술 고도화	출연	-	1,200	900	900	900	9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동물복지 사육 및 운송/도축 관련 매뉴얼 개발(건, 누적)	-	-	-	3	-	6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동물복지 축산농장 운영을 위한 양돈(임신돈, 분만돈), 양계(산란계, 육계) 사육시설 및 운송/도축에 대한 매뉴얼 개발

과제번호	2-2-1-③	과제명	동물복지축산인증 농가 확대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양성철 사무관(T. 044-201-2382)		

□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인증체계**는 인증의 안정적인 관리 및 활성화가 어려운 체계이므로 보다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해외사례) 해외(대다수 민간인증)의 경우 마요네즈 등 다양한 제품에 축산물 함량에 따라 인증표시 차별화 농장 인증을 단계화

□ 추진 계획

- (인증체계) 공공기관 등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사후 관리를, 검역본부는 인증기관 관리, 심사원 교육체계 운영 등 수행('22년)

- (관리강화) 인증 축산물 원재료 함량 기준에 따라 인증마크·'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불시점검·인증 갱신제 도입('23년)

* (표시안) 원재료의 95% 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인증마크 및 '동물복지' 용어 허용, 70~95%일 경우 주 표시면이 아닌 곳에 '동물복지' 용어 허용

- 정기점검 외 불시점검을 매년 하도록 하고, 인증 갱신 의무(매 3년) 부과

- (판로지원) 동물복지 인증농가 대상 사육방식 개선 및 판로확보를 위한 컨설팅 등을 추진('20년~)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	동물복지 축산농장 활성화 및 인증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도입 ('12년) 신란계, ('13년) 양돈, ('14년) 육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축종 확대 ('15) 한우육우, 젓수염소 ('16) 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등에 활용할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 축산인증 활성화 및 인증고도화로 동물복지 축산전환유도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국비 30~100%	1,095	1,095	1,095	1,095	1,095	1,095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동물복지축산인증 농가수(개소수) 산란계	163	182	201	220	239	258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동물복지축산 인증 계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ASF 등으로 양돈농가 인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5개년 산란계 인증농가 평균 증가량('14~19, 17.2개소)보다 10% 상향된 19개소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한 동물복지축산 산란계 농가수

과제번호	2-2-2-①	과제명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T. 044-201-2975)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남궁중환 사무관(T. 044-201-2978)		

□ 배경 및 필요성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원료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
 - 생산단계 축산물(식육, 식용란, 원유)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로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제고 추진
- 지자체 시험·검사기관의 원활한 생산단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를 위해 장비 및 인력 확충

□ 추진 계획

- 매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 및 추진(1월~12월)
 - 식육, 식용란, 원유 잔류물질 검사 및 미생물 검사 추진
 -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장의 계란 살충제 검사
 - 원유 안전관리를 위해 '20.7월부터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 운영에 따른 지속 관리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 개선을 통한 관리 추진('20~)
 - 검사물량을 주기적으로 산정하고, 검사에 따른 부적합 축산물 안전관리 지속 추진(규제검사, 농장지도 등)
 - 지자체 시험·검사기관(동물위생시험소 등)의 시험·검사장비 및 인력 확충
 - 축산물안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21~)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축산물 안전성 검사실적 관리 및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변화되는 업무 상황을 시스템에 반영
- * '21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추진을 통해 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축산식품 안전관리	축산물 안전성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육, 식용란 안전성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육, 식용란 안전성 검사 계란 살충제 검사 추가('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유 NRP 도입을 위한 시범 조사('18~'20) 원유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19.12) 원유 안전성 검사(300건, '20) 축산물 안전성 검사체계개편('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육, 식용란 (살충제 포함), 원유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리 축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육, 식용란 (살충제 포함), 원유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리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체계 개선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축산물 위생 안전검사운영	보조 (국고 40%~60% 지방비 40~60%)	22,723	20,313	20,313	20,313	20,313	20,313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건수	7만건 이상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 실적 관리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성검사 건수

과제번호	2-2-2-②	과제명	생산단계 축산물 위해요소 진단·제어 기술 개발
담당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오미화 연구관(T. 063-238-7379)		

□ 배경 및 필요성

- 축산물 생산단계 위생 문제 발생으로 안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 지속 증가
 - * 난백 유래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18), 유제품의 식중독균 기준초과('19) 등
 - * 식육 잔류물질 검사 위반 두수: ('13)225→('16)375→('18)511('19, 농식품부)
 - 정부는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농장 및 중소기업체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기술은 부족한 상황
 - * 산란계 농장·종축장 HACCP 적용, HACCP 농장표시제 도입, 가금류 이력 추적제 도입,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 도입, 축산물 PLS 추진('19~'20) 등
 - 또한 화학적 살충제 등 잔류물질과 항생제 내성균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대응기술 부족
- One-Health 개념의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축산 환경과 가축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쉼주기 안전관리기술 필요
 - 비전문가도 손쉽게 사용 가능한 위해요소의 현장 진단과 친환경 제어 기술에 대한 연구 강화 필요

□ 추진 계획

- 축산물 중 화학적·생물학적 위해요소 현장 진단기술 개발
 - 나노입자와 압타머, 펩타이드 활용 고감도 프로브 개발('21)
 - 위해요소(2종) 현장 진단용 페이퍼 센서 개발('22)
- 축산물 생산단계(도축장, 유·육가공장) 위해요소 제어기술 개발
 - 곰팡이, 식중독균 저감을 위한 항균표면 및 물리적 기술 개발('22)
 - 잔류 화학물질, 항생제 내성균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제재 및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기술 개발('25)
- 축산물 유통 중 신선도 모니터링을 위한 지시계 및 포장재 개발
 - 닭고기 저장기간에 따른 부패물질 지표 선발 및 지시계 개발('22)
 - 신선도 지시계 적용 지능형 포장재 개발('25)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축 산 물 생산·유통 단계 안 전 관 리 강화	예방적 안전 관리를 위한 축산물 위해 요소 진단· 제어기술 확립· 개발 [15건 (누적), (~'25)]	▪ 식중독균 동시진단 기술, 박테 리옌신·파 지·저온 플 라즈마 활 용 제어기 술, 유해미 생물 성장 예측 모델 등 기술개발 5건	▪ 자성입자 활용 식품 전처리 기 술, 금나노 입자·PDA 활용 식중 독균 또는 독소 의 비색 검출 센서 등 기술 개발 7건(누적)	▪ 목장형 유가 공장 안전 관리 기술 및 위생관리 지침, 하이 드로겔 항균 포장 패치 등 기술 개발 및 확립 10건(누적)	▪ 위해요소 저감을 위 한 친환경 기술, 잔류 물질 현장 진단 기술, 신선도 모 니터링 용 지시계 등 기술 개발 및 확립 15건(누적)	▪ 기 개발 기술과 4차 산업 기반 기술(블록 체인, IoT 등)을 접목한 위해요소 다중진단· 제어 및 신속 추적 시스템 확립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축산물 생산현장의 안전관리 기술개발	직접수행	260	260	260	600	600	600
축산시험연구	직접수행	107	200	200	200	200	2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축산물 위해요소 진단·제어 기술 확립·개발(건수, 누적)	10	11	15	15	17	18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축산물 중 물리·화학·생물학적 위해인자를 신속하게
검출·추적(진단센서, 지시계 등)하거나, 제어·저감(길항미생물, 물리·생물학적
제어기술, 위생관리지침 등)하는 기술을 확립 또는 개발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확립/개발 기술의 건수(누적)

과제번호	2-2-2-③	과제명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이동연 사무관(T. 043-201-2352)		

□ 배경 및 필요성

- '20.8월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는 “유기”로 단일화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별도 운영
 -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수는 수 년간 100호 내외로 정체되어 있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친환경에서 제외되어 제도 위축 우려
- * 인증농가수 : [유기] ('15)110 → ('16)111 → ('17)105 → ('18)101 → ('19)106
 [무항생제] ('15)8,048 → ('16)8,668 → ('17)7,570 → ('18)6,014 → ('19)6,087
- 친환경 축산 확대 및 항생제 사용 저감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유기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필요

□ 추진 계획

- 유기축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농가의 생산비 보전 및 인증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유기축산 지속 직불금” 지급 검토
 - 직불금 지급(5년) 종료 후 인증을 유지하는 동안 직불금의 50% 계속 지급
 -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개정 및 기재부 예산 협의 추진('22잠정)
-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21~계속)
 - 무항생제 농가의 유기축산 전환 컨설팅, 온라인 마켓에 인증품 홍보, 친환경축산 홍보전문지 발간,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홍보 등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활성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지속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년 유기축산 및 '07년 무항생제인증제 도입 ▪ '09년 직불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유기축산 직불금 지급 기간(3~5년) 및 한도(2→3천만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무항생제 직불금 지급 종료 ▪ '20년 무항생제 인증제 축산법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축산지속 직불 도입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교육·홍보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의 다양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공급 기반 마련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친환경축산직불	보조 (100%)	1,585	1,585	3,175	3,400	3,625	3,85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유기축산물 인증농가수(호)	110	120 (10)	130 (10)	140 (10)	150 (10)	160 (10)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수(호)	6,200	6,300 (100)	6,400 (100)	6,500 (100)	6,600 (100)	6,700 (1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유기·무항생제축산은 어려운 인증기준 및 높은 생산비로 인해 일반 농가의 진입이 어려움에 따라 인증농가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적극 관리할 필요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연도말 기준 인증통계자료 활용

과제번호	2-2-2-④	과제명	달걀 유통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김충현 사무관(T. 043-719-3259)		

□ 배경 및 필요성

- '17.8월 살충제 계란 파동과 부패·변질 계란에 대한 반복적인 언론 보도의 후속조치로, 산란일자 표시제도*(19.2.23)와 선별포장 유통의무제도**(19.4.25) 시행

* 업계 준비사항을 고려하여 계도기간 운영 후 산란일자 표시제('19.8.23~)와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유통제도('20.4.25~) 본격 운영

⇒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어느정도 정착되었으나,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현재 가정용 달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음식점 등 소비자가 직접 먹는 달걀 전반으로 위생관리 확대 필요

□ 추진 계획

- (방안) ①선별포장 제도 안착 ②선별포장 의무 대상 확대

①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안정적 정착

- 위생·안전 취약 분야 지속적인 집중 관리

* 선별포장 처리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

- 선별포장 제도 내실화(HACCP 인증 의무화)

* 위생적 시설 관리 강화 → 달걀 선별·포장 단계의 안전성 확보

** 기존 영업자 인증(~'21.10.7.) 교육 지원 및 컨설팅

- 달걀 관련 협회와 소통 활성화하여 정책 수용도 제고

* 판매·유통업체간 유기적 협력과 자발적인 제도 이행 유도

② 음식점·집단급식소 등으로 유통되는 달걀의 선별포장 의무 시행

* 달걀 유통량의 86%[가정용(65%),음식점·집단급식소(21%)]의 선별포장 처리 의무화

○ (입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1년)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7~'20	'21~'25	'26 이후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제도 정착을 통한 달걀의 안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포장업 신설 및 제도 마련 ('17~'18) ▪ 선별포장 영업기반 마련(~'20) ▪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집단급 식소용 달걀의 선별포장 의무 확대('21~) ▪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 온도 관리 강화 - 온라인 등 취약 부분까지 관리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걀 생산·유통 안정성 확보

예산 사항 : 해당 없음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	-	-	-	-

과제번호	2-2-3-①	과제명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 활성화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T. 044-201-2975)		

□ 배경 및 필요성

- 안전한 축산식품을 통한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신뢰제고를 위하여 축산농장의 HACCP 인증 관리 강화 필요
 - HACCP 인증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인증농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 추진 계획

- 소규모 도축장 등에 대해서는 시설 특성에 맞는 HACCP 조사평가 실시
- 생산단계 축산물 작업장의 효율적 위생관리를 위해 포유류·가금류 중요관리점(CCP) 관리에 관한 영상물 등을 통한 홍보
- HACCP인증 농가 확대 방안 지속 추진(관계기관, 지자체 등 협의)
- 축산물 HACCP 신규 인증 희망농가 대상 컨설팅 사업 지속 추진
 -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집단 컨설팅 매년 진행
- HACCP 인증이후 사후관리 미흡농가 대상 기술지원 사업 지속 추진
 - 각 권역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술지원 수행업체에서 사업추진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축산식품 안전관리	축산물 HACCP 인증 확대 및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 농장 대상 자율적인 HACCP 인증 제도 실시(07) ▪ 도축장(02)·집유장(14) 대상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및 연간 1회 이상 조사·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컨설팅, 현장기술지도, 조사평가교육 세미나 홍보) ▪ 도축장·집유장 대상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실시(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인증 농장에 대한 우대조치 ▪ HACCP 인증 농장에 대한 축종별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 개선(모든 축종에 잔류 예방관리 평가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도축장(이동식 등) 대상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 보완 ▪ 도축장 중요 관리점(CCP) 관리에 관한 영상물 제작 ▪ 농장 HACCP 인증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스마트 HACCP 적용 ▪ 농장 HACCP 인증 관리 강화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축산물 HACCP지원	보조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1,650	1,567	1,567	1,567	1,567	1,567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축산물 HACCP 컨설팅 인증률(%)	95	95	95	95	95	95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당해연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대상 건 중 HACCP 인증 비율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당해연도 축산물 HACCP 인증 건) /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대상 건 -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 건 중 민원 처리중인 건) × 100

과제번호	2-2-3-②	과제명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의무 적용 확대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박재우 사무관(T. 043-719-3220)		

□ 배경 및 필요성

- 화농이 함유된 돼지고기 목살의 유통*, HACCP 업체 금속검출기 관리 부실** 등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위생·안전성 문제 지속 제기
 - *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KBS, '18.6.1), 울산 금식 '고름 돼지고기' 파장(오마이뉴스, '19.4.25)
 - ** 쇧조각도 안거르고 곰팡이 득실... 못믿을 HACCP(KBS, '19.4.25)
- 식육은 고단백·고영양 식품으로 부패·편질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하며 식육 절단·세절 시 교차오염 우려가 큼
 - *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의무화... 진입 문턱 높여야(축산신문, '19.9.26)
- 식육의 90% 이상이 식육포장처리업을 통해 공급*되나, HACCP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HACCP 적용 업체 비율 저조**
 - * 식육포장처리업을 통한 식육 공급 비율 : 소고기 90.8%, 돼지고기 95.4%
 - ** HACCP 인증율 : 35.2%(2,379/6,759개소, '19.6년 기준)

□ 추진 계획

- (방안)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의무 적용 단계적 확대
 - 식육가공업 3단계 의무화가 완료('22.12.1) 되는 2023년 1단계 시행
 - * 영업자의 사전 준비 및 인증원의 인증심사 수요 분산 필요성 고려

단계	범위	적용 시기
1단계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2023년
2단계	연매출액 5억원 이상	2025년
3단계	연매출액 1억원 이상	2027년
4단계	연매출액 1억원 미만	2029년

- (입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21년) 및 시행('23년)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식육포장 처리업 HACCP 적용 의무화	연매출액 5억원 이상 식육포장 처리업체 HACCP 의무 적용	-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공포 (21) HACCP 의무화 시행(23)	HACCP 의무화 완료 (~29)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	-	-	-	-	-	-	-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축산물 HACCP 적용 확대	-	-	-	1단계 시행	-	2단계 시행

과제번호	2-3-1-①	과제명	생산해역 병원미생물 및 연안 양식장 패류독소 모니터링 강화
담당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강문표 서기관(T. 044-200-5618)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유미숙 사무관(T. 044-200-5620)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위생과 유흥식 연구관(T. 051-720-2630)		

□ 배경 및 필요성

- 육·해상오염원으로부터 미처리된 오수의 패류생산해역 유입으로 패류에서 병원미생물 간헐적 검출
-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3~6월)에 부산, 경남 등 남해안 일원에서 발생하여 관광객 등 국민 건강 위협 및 어업인 피해를 발생시킴
 - 패류독소의 정확한 발생시점과 확산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주 발생해역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필요

□ 추진 계획

- 굴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및 분석결과 제공(계속)
 - (모니터링) 안전한 굴 공급 계획에 의거하여 서·남해안 주요 굴 생산해역(26개해역/총 35개소)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파악
 - * (조사빈도) 중점관리해역(19개소)/격주조사, 일반관리해역(16개소)/월 1회
 - (결과제공) 굴 생산해역 오염원관리 및 생산관리를 위해 지자체, 관련 어업인 단체(수협)에 분석결과 정보 제공
-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병원성 세균 모니터링
 - (모니터링) 전국 연안해역의 패류 등에 대해 살모넬라 및 이질균 모니터링 실시
 - * (조사시기/빈도) 9월부터 익년 2월 / 연 6회
 - (결과제공) 오염원 관리 계획 수립 지원 및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분석결과 정보 제공

○ 전국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패류독소 모니터링(계속)

- (모니터링) 동·서·남해안 패류 생산해역의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정기조사 50개소, 확대조사 102개소) 조사

* (정기조사) 월 1회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1~2월, 7~12월)

* (확대조사) 불검출시 매주 또는 격주 조사, 패류독소 발생시 주 2회, 기준 초과시 주 1회 조사(3~6월)

- (결과제공) 식약처, 지자체 및 관련 수협에 제공하고, 발생상황은 홈페이지(수과원) 게재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굴 노로바 이러스 모니터링	▪ 굴 생산해역 오염원 관리	▪ 10개 해역 24개 정점 조사	▪ 10개 해역 24개 정점 조사	▪ 26개 해역 39개 정점 조사	▪ 26개 해역 35개 정점 조사	▪ 26개 해역 35개 정점 조사
병원성 세균 모니터링	▪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	-	-	▪ 67개 해역에 대해 병원성 세균 모니터링 실시	▪ 67개 해역에 대해 병원성 세균 모니터링 실시
패류독소 모니터링	▪ 패류독소 안전 관리 세부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추진	▪ 패류독소 안전 관리 세부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추진	▪ 패류독소 안전 관리 세부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추진	▪ 패류독소 안전 관리 세부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추진	▪ 패류독소 안전 관리 세부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추진	▪ 패류독소 안전 관리 세부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추진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산시험연구사업 (수출패류 생산해역 및 수산물 위생조사)	직접수행	215	215	215	215	215	215
수산물 위생관리 (생산해역 관리 및 수출기반 조성)	직접수행	290	290	290	290	290	29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횟수)	25	25	25	25	25	25
병원성 세균 모니터링(건수)	768	804	804	804	804	804
패류독소 모니터링(건수)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부적합 패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 발생 시기에 위해요인별 집중조사 필요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실시 횟수 / (병원성 세균) 당해연도 총 분석시료 건수 / (패류독소) 당해연도 총 분석시료 건수

과제번호	2-3-1-②	과제명	강우량에 따른 패류 생산해역 영향 조사
담당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강문표 서기관(T. 044-200-5618)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식품위생기공과 유희식 연구관(T. 051-720-2630)		

□ 배경 및 필요성

- 강우 발생 시마다 미처리된 오수 등 육상지역에서 패류 생산해역으로 유입되는 배출수의 영향으로 해수 및 패류의 세균 오염도는 증가
- 오염원의 완벽한 통제가 어려우므로 패류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수출용 패류에만 적용 중인 강우별 채취제한 기준을 내수용 패류 생산해역으로 확대 필요

□ 추진 계획

- 패류 생산해역별 강우량에 따른 영향조사·연구 실시('20~'24)
 - 강우 시 육상의 오염물질이 하천 등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어 패류 및 생산해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회복기간 조사
 - * 연차별 조사해역수(총 67개소) : ('20) 11개소 → ('21) 11개소 → ('22) 15개소 → ('23) 15개소 → ('24년) 15개소(완료)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강우량에 따른 해역별 영향조사·연구	강우등급 별 패류채취 관리 지침 마련·적용	-	-	▪ 11개소 해역 조사	▪ 56개소 해역 조사	▪ 강우등급 별 패류채취 관리 지침 마련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산물 위생관리 (생산해역 관리 및 수출기반 조성)	직접수행	347	347	473	473	473	-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강우 영향조사·연구(해역수)	11개소	11개소	15개소	15개소	15개소	-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강우량에 따른 해역별 채취제한 기준은 강우 영향 조사·연구로 설정이 가능하므로 해역별로 관련 조사가 필요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당해연도 강우 영향조사·연구를 실시한 해역 수

과제번호	2-3-1-③	과제명	패류생산해역 및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
담당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강문표 서기관(T. 044-200-5618) 환경부 생활하수과 김도형 사무관(T. 044-201-7036)		

해양수산부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강문표 서기관, T. 044-200-5618)

□ 배경 및 필요성

- A형간염·노로바이러스 등 패류 기인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하수(분변) 유입 차단을 위해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조기확충* 필요

* 패류 생산해역(71개소) 평균 하수처리율 77.8%*로, 전국평균(93.9%)** 대비 16.1P% 낮아 생활하수 등 유입으로 수산물 안전 위협

- 그간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지정해역) 위주로 시설 확충이 추진*되었으나, 내수용 패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내수용 패류 생산해역(일반해역) 주변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범위 확대 필요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 관계부처 공동)”에 따라 하수처리장 확충(총 37개소) 추진중 (설치완료 1개소, 공사중 13개소, 설계중 16개소, 계획수립·변경·취소 7개소)

- 패류생산해역 위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해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해역을 대상으로 시설 조기확충 추진

* 전체 패류생산해역(일반해역 67개소) 중 25개 해역(86개 마을) 선정(‘19.12)

□ 추진 계획

- (지정해역)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지속적 이행을 통해 '23년 까지 하수처리시설 총 37개소 확충 지속 추진

- 연도별 확충 계획 : (~'21까지) 33개소 → ('22) 35개소 → ('23) 37개소

- (일반해역) 내수용 패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일반해역(25개 해역, 86개 마을) 대상 단계적 하수처리시설 확충 추진

- 단계별 추진계획 : 대상해역 및 마을 선정(~'20, 86개소) → 1차 대상 마을 34개소 하수처리 시설 확충 추진(~'25년) → 2차 대상 52개소 마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및 확충 추진(~'28년)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지정해역 하수처리 시설 확충	37개소 확충	-	-	▪ 대상해역 및 마을 선정	▪ 총 37개소 확충 추진 (37개 마을)	▪ 설치 완료 확인 및 추적평가
일반해역 하수처리 시설 확충	86개 마을 선정 및 시설확충 (1차 34개소)	-	-	▪ 대상해역 및 마을 선정 (86개소) 및 1차 대상 시설(16개소) 확충 추진	▪ 1차 대상 시설(18개소) 확충 추진	▪ 2차 대상 시설확충 추진(52개소) 기본 계획 반영 추진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패류생산해역 주변 오염원 조사	일반	220	220	250	250	250	250

* 소요예산은 조사대상 해역, 조사대상 범위, 조사항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지정해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율(% , 누적)*	86	89	94	100	-	-
일반해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율(% , 누적)**	47	64	73	82	91	100

* 지정해역 지표 측정 방식 : (설치 착수 시설 수) / (설치대상 시설 37개소) × 100

연도별 착수 개소수(누계) : ('20) 32개 → ('21) 33개 → ('22) 35개 → ('23) 37개

** 일반해역 지표 측정 방식 : (설치 착수 시설 수) / (1차 설치대상 시설 34개소) × 100

연도별 착수 개소수(누계) : ('20) 16개 → ('21) 22개 → ('22) 25개 → ('23) 28개 → ('24) 31개 → ('25) 34개(1차 대상 완료)

환경부

(담당자 : 환경부 생활하수과 김도형 사무관, T. 044-201-7036)

□ 배경 및 필요성

- 패류 생산해역(71개소) **평균 하수처리율 77.8%***로, 전국평균(93.9%)** 대비 16.1% 낮아 **생활하수 등 유입으로 수산물 안전 위협**

* 해수부 자체 조사 결과('20.1, 가구수 기준), ** 환경부 하수도 통계('18.12, 인구수 기준)

※ 전국 농어촌지역 평균은 71.8%('18)

< 패류 생산해역 하수처리율 현황 >

구 분	지정해역(7개)	일반해역(64개)	계(71개)
하수처리율 (50% 미만 해역수 / 비율)	77.6 % (없음 / 0%)	77.8 % (31개 / 48%)	77.8 % (31개 / 44%)

- 지정해역 중심으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 관계부처 공동)**”에 따라 **하수처리장 확충(총 37개소) 추진중***

* 설치완료(1개소), 공사중(13개소), 설계중(16개소), 계획수립·변경·취소(7개소)

- 내수용 패류생산해역(64개 일반해역)의 **평균 하수처리율은 77.8%이나, 하수처리율 50% 미만 해역이 전체의 48%인 31개**

* 전국 농어촌지역 평균은 71.8%(환경부 하수도 통계, '18.12, 인구수 기준)

□ 추진 계획

- (지정해역)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지속적 이행을 통해 '23년까지 하수처리시설 총 37개소 확충

- 연도별 확충 계획(누적) : ('21) 33개소 → ('22) 35개소 → ('23) 37개소

- (일반해역) 하수처리장 확충이 필요한 해역의 마을에 '25년까지 34개 하수처리장 확충(예산반영) 추진(1차)

* 투자재원 확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지방비 확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수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패류생산해역 (지정해역) 하수처리시 설 확충	37개소 확충	-	-	▪ 하수처리 시설 확충추진	▪ 하수처리 시설 확충추진	
패류생산해역 주변(일반 해역) 하수 처리 시설 확충	34개소 확충	-	-	▪ 1차 대상 지역 하수 처리시설 확충 추진 (16개소)	▪ 1차 대상 지역 하수 처리시설 확충 추진 (18개소)	▪ 2차 대상 지역 하수 처리시설 확충 추진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지정해역)	지자체 보조	3,364	50,080	38,021	6,000	-	-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일반해역)	지자체 보조	9,220	16,380	31,643	16,725	9,000	6,000

* 소요예산은 지자체 신청소요, 실제 처리시설의 규모와 공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하수처리시설 확충 착수 누적 개소(지정해역)	32	33	35	37	-	-
하수처리시설 확충 착수 누적 개소(일반해역)	16	22	25	28	31	34

과제번호	2-3-1-④	과제명	양식장 양식수 정화·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및 사료 안전성 확보
담당자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박명래 사무관(T. 044-200-5635)		

□ 배경 및 필요성

- 질병치료 및 양식장의 오염된 양식수 정화를 위해 소독약, 항생제 등 약품사용 및 생사료 사용 등으로 식품안전 위해 우려 발생
 - 생사료, 항생제 과용 등에 따른 양식환경 악화로 수인성 질병피해 반복
- 항생제·소독제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질병감염 우려가 적은 배합사료 사용 및 우량종자개발 등으로 사전 예방적 양식시스템으로 전환필요

□ 추진 계획

- (양식수) 용수정화(오존·자외선·전기분해), 바이오플락 및 순환여과 등 양식수 정화·관리시스템 지속 보급 추진(~'22)
 - * 양식수 정화시설 보급(누적) : ('19) 71개소 → ('20) 86 → ('21) 93 → ('22) 100
- (사료) 사료 성분 및 유해물질 검증을 통한 사료안전성 확보 추진(~'22)
 - * 수산동물용 사료 중 유해물질 검정물량(점) : ('20) 200 → ('21) 200 → ('22) 200
- (종자) 질병내성 종자개발 및 우량종자생산 등 연구개발 지속 추진(~'21)
 - * 신품종 종자 개발(개) : ('20) 3 → ('21) 3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 시스템 도입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 시스템 도입 및 적용확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수 정화 관리 시스템 보급 ▪ 생사료 사용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양식산업 발전법」 개정 ▪ 우량종자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수 정화 관리 시스템 지속 보급 ▪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유해 물질 검정 	-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50~70)	8,700	4,671	3,000	-	-	-
골든씨드프로젝트	직접수행	4,460	4,460	-	-	-	-
환경친화형양식배합 사료지원	직접수행	400	500	500	-	-	-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양식수 정화시설 보급누적개수(개소)	86	93	100	-	-	-
신품종 종자 개발(개)	3	3	-	-	-	-
사료유해물질검정물량(점)	200	200	200	-	-	-

- * 지표에 대한 설명 : ① 사전예방적 양식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양식수 정화시설 보급량, ② 질병내성 종자 및 우량종자 등 신품종 개발현황, ③ 사료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간 사료 유해물질 분석 현황
- * 지표 측정 방식 : ① 친환경어업사업(친환경+용수관리) 양식수 정화시설 보급 누적 개소수, ② 골든씨드프로젝트 예산 10억 당 신품종 출원 개수, ③ 연간 사료 유해물질 검정수(점)

과제번호	2-3-2-①	과 제 명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및 부적합 양식장 사후관리 강화
담 당 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남백상 사무관(T. 044-200-5620)		

□ 배경 및 필요성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 유해물질 등에 따른 식품안전 사고 발생으로부터 선제적·예방적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 등에 대한 중금속, 항생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통한 불량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

□ 추진 계획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연중)
 - 다소비 품종 및 부적합 이력 품종 등 관리가 필요한 수산물을 중심으로 조사물량을 확대(15,000건 이상 지속 추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
-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연중)
 - 패류독소 발생우려 해역에서 생산되는 담치류 등 수산물에 대해 주 발생시기 도래시(3월~)부터 소멸 시까지 패류독소 위생·안전관리
-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연 2회)
 - 수산물 거래 전 단계 위·공판장 등에 대해 식중독 및 비브리오균 모니터링을 통한 여름철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실시
-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계기관 업무 협의회(수시)
 - 안전성조사 기관 간 업무 협력 등 소통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안전성조사 건수	-	-	13,500	14,500	15,000	15,000건 이상 지속 추진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건수)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부적합 양식장 사후관리	100% 이상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① 양식장(약 14천개소) 및 다소비 품종 어획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② 부적합 양식장에 대해 연1회 안전성조사 실시로 사후관리 강화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① 안전성조사 실시한 양식장/전체 양식장, ② 부적합 양식장 안전성 조사 개소수 / 부적합 양식장 개소 수

과제번호	2-3-2-②	과 제 명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증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 연구 확대
담 당 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안종관 사무관(T. 044-200-5622)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방역과 이지훈 연구사(T. 051-720-3024)		

□ 배경 및 필요성

- 수의사가 축산용의약품을 수산동물에 대한 사용기준 없이 사용*으로 약품 오·남용 문제 발생 및 식품 안전성 문제 야기
 - * 사용사례: 세프티오퍼(넙치) 및 엔로플록사신(우럭, 뱀장어, 돔류) 등
 - 축산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에 따라 수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어류에 대한 정확한 사용기준 및 근거 없이 임의처방
- 식품위생학적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고효능의 안전한 수산용의약품 공급·관리
 - (약사감시) 수산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사점검 및 유통 수산용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정으로 안전한 약품 공급
 - (재평가) 기허가된 수산용의약품을 최신 과학수준으로 안전성·유효성 재평가하여 부적합 약품 허가 취소 및 보완 등 품목정비
 - (안전사용기준) 수산동물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어종별 안전성·유효성 자료 확보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근절
 - 양식장 대상 의약품 사용 실태 조사를 반영하여 사용량이 증가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점검 실시

□ 추진 계획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재심사 및 재평가
 - 수산용의약품 재심사 실시(수시)
 - 수산용의약품 재평가 실시('21~'25, 매년 1회)
 - * ('21)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린코사마이드계/구충제(Praziquantel) → ('22)구충제(Trichlorform, Fumagillin, Bithionol)/외피작용구충제(Formalin)/신경계작용약/호르몬계작용약 → ('23~'25)수산물백신 / 소화기계작용약 / 대사성약
 - ** '21~'25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은 자진취하, 허가사항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 수산용의약품 전자민원시스템 및 모바일웹 개선(수시)
- 어종별 맞춤형 수산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위한 연구 수행('21~'25)
 - * ('21)신규 2종 → ('22)누적 4종 → ('23)누적 6종 → ('24)누적 8종 → ('25)누적 10종
- 수산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실사 및 수거·검정 실시('21~'25, 매년 약 20개소)
- 양식장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 지도·점검 실시(연 2회)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연간계획 수립 후 시행 (정책연구과제: 동물약품감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수산용 세균 백신에 대한 국검정 기준 및 고시 개정완료 ▪ 수산용의약품 전자민원시스템 DB 구축 및 업그레이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수산용 바이러스백신에 대한 국검정 기준 및 고시 개정완료 ▪ 수산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실사 및 약품 수거분석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수산용 기생충 백신에 대한 국검정 추진 ▪ 미승인 사용 가능 구충제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설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수산용 의약품 인허가 프로세스 구축 및 3자 검증 등 효율적 관리체계로 전환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산물위생관리 (동물약품감시)	직접수행	150	150	150	150	150	15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수산용의약품 수거·검정(건수)	110	111	112	113	114	115
안전사용기준 설정 기초연구(종)	2	2	2	2	2	2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유통·판매 중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 함량 분석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수산용의약품 제품 1건당 수거·검정 건수로 계산

과제번호	2-3-2-③	과제명	패류 생산해역 농약·동물용의약품 모니터링
담당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강문표 서기관(T. 044-200-5618)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식품위생공과 유희식 연구관(T. 051-720-2630)		

□ 배경 및 필요성

- '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농약 및 항생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
- 어류양식장 및 수산물이 생산되는 해역 주변 농경지 등에서는 질병 치료 및 병충해 방제 목적으로 항생물질 및 농약을 지속 사용
 - * 항생물질 판매량(톤) : ('16) 920 → ('17) 1,003
 - ** 농약 사용량(천톤) : ('16) 19.8 → ('17) 20.0 → ('18) 18.7
- 대일 수출 패류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전량 리콜 되는 사태 발생
 - * 엔도설판 검출 : 바지락('07년), 가리맛조개('07년, '09년) 및 재첩('09년, '10년, '11년, '13년)
- 패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농약 및 항생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규 오염우려물질의 조사 확대가 필요

□ 추진 계획

- 패류 생산해역 농약·동물용 의약품 모니터링('23)
 - 패류의 비의도적 오염 감시와 예방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과 조사항목 확대
 - * (농약) ('20) 14 → ('20~'22) 30 → ('23~) 50
 - ** (항생물질) ('20) 2 → ('20~'22) 10 → ('23~) 20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농약	▪ 패류의 안전성 확보	-	-	▪ 생산 단계 패류 대상 농약 모니터링(14종)	▪ 생산 단계 패류 대상 농약 모니터링 항목 확대 (총 50종)	▪ 생산 단계 패류 농약 모니터링 지속 시행
항생물질		-	-	▪ 생산 단계 패류 대상 항생물질 모니터링 (2종)	▪ 생산 단계 패류 대상 항생물질 모니터링 항목 확대 (총 20종)	▪ 생산 단계 패류 항생물질 모니터링 지속 시행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산물 위생관리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직접수행	754	754	754	1,394	1,394	1,394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신규 오염물질 모니터링 확대 (농약 및 항생물질 분석항목수)	16	40	40	70	70	7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날로 증가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 요구에 신규 오염물질 관리가 중요하므로 농약 및 항생물질 분석 항목 확대가 필요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연차별 농약 및 항생물질 분석항목수 측정

과제번호	2-3-2-④	과제명	생산단계 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관리방안 마련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강금자 사무관(T. 043-719-3220)		

□ 배경 및 필요성

- 양식산업의 성장으로 양식 수산물이 전체 생산량 대비 62%를 차지하고 동물용의약품 사용량 및 사용 빈도도 매년 증가
 - * 양식수산물 생산량: ('18) 2,249천톤 → ('19) 2,372천톤 (5.5% 증가)
 - ** 수산동물용 의약품 판매량: ('09) 178 → ('16) 236 → ('18) 242 → ('19) 266톤
- 양식 수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이 지속 검출되어 생산단계에서 잔류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
 - * 부적합 / 전체검사: ('15) 205건/12,759건 → ('17) 192/13,776 → ('19) 111/14,921

□ 추진 계획

- 생산단계 수산물 유해물질 재검사 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22~)
 - 어종별·유해물질별 잔류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출하연기 조치 후 출하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재검사 가능 기간 산정 방법 제시
 - * 적용 대상 어종과 유해물질 선정('20)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21~)
- 「생산단계 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고시 제정('23)
 - 생산단계 수산물 등(양식장의 어장·용수·자재 포함)에 적용할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고시

【 고시 주요내용 】

- ✓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잔류물질, 중금속 등 오염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 준용
- ✓ 양식장에서 이용되는 어장·용수·자재 등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생산단계(양식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사용량 등 기록·관리 의무화('22)
 - 양식업자에게 동물용의약품 사용기록(사용량, 사용 어종, 사용일 등)과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작성·관리 의무 부과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약처) 또는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해수부) 개정
- 동물용의약품 승인·잔류허용기준 현황 알림 시스템 마련('21)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현황을 어업인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웹) 제작·배포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생산단계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계 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고시 제정 ▪ 가이드라인 마련 ▪ 생산단계 동물용의약품 사용량 등 기록·관리 의무화 	-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직접수행	30	500	500	500	500	500

□ 성과지표

지표명	'21	'22	'23	'24	'25
재검사 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제·개정(회)	-	1	1	1	1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생산단계(양식장) 동물용의약품 품목, 항목을 추가하여 가이드라인 매년 개정을 목표로 성과지표 설정

과제번호	2-3-2-⑤	과 제 명	도매시장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 조사 및 수산물 현장검사소 운영
담 당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강금자 사무관(T. 043-719-3220)		

□ 배경 및 필요성

- 수산물은 출하에서 소비까지 소진시간이 짧고, 유통경로도 복잡하여 유통 부적합품의 회수·폐기 등에 애로 → 유통前 길목 관리 필요
- 도매시장에서 유통 전 수산물을 신속하게 검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신속검사 체계(수산물 현장검사소) 구축 필요
 - * 농산물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26개소에 현장검사소를 운영하여 신속 검사 후 부적합품 회수·폐기 조치 중

□ 추진 계획

- 도매시장 유통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 조사('20)
- 수산물 신속검사 항목·어종 선정 및 신속검사 키트 개발
 - 부적합 다빈도 어종, 항목 등을 고려하여 동물용의약품 검사키트가 필요한 우선 적용 항목 및 대상 어종 선정('20, 정책연구)
 -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 신속검사 키트 개발 및 검증('21)
- 도매시장 내 24시간 신속 검사체계를 갖춘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구축 및 운영(~'24, 누계 7개소)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산물 유통 전 신속검사 체계 구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 조사 신속검사 항목·어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키트 개발 공영도매시장 수산물 현장 검사소 시범 운영 및 확대 설치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small>* 기재부 협의 필요</small>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직접수행 국고보조50%	-	-	600	1,200	2,400	-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누계(개소)	-	-	1	2	4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22년 1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3년 공영도매시장 2개소 설치, '24년 유사도매시장 4개소까지 확대하여 설치를 목표로 성과지표 설정

과제번호	2-3-2-⑥	과제명	패류 위생검사 실험실 인증 확대
담당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강문표 서기관(T. 044-200-5618)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 조미라 연구관(T. 051-720-2620)		

□ 배경 및 필요성

- (현황) '05년 EU에서 패류 위생관리 실험실 분석결과에 대한 품질 보증을 요구하여 '09년 패류 위생관리 참여 실험실(6개소)에 대한 국제 규격(ISO 17025)을 획득하여 운영 중

기관(인정번호)	실험실	ISO 17025 인정항목
식품위생가공과 (KT-405)	이화학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노르플록사신, 프로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오픈록사신, 페플록사신, 총수은
	독성평가실	기억상실성, 마비성패류독소
	미생물실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i>E. coli</i> , 일반세균수
남해수산연구소 (KT-407)	식품위생연구실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i>E. coli</i> , 일반세균수
남동해수산연구소 (KT-404)	식품안전연구실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i>E. coli</i> , 일반세균수
서해수산연구소 (KT-521)	위생연구실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i>E. coli</i> , 일반세균수

- (EU 시정요구) '19년 EU의 지정해역 위생관리 점검 결과, ISO 17025 인증 미취득 항목에 대한 인증취득 요구

* EU 요구 조건 미이행시 한국산 패류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수입 중단 조치

□ 추진 계획

- (대상항목) 총 6개 항목에 대해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증 취득
 - 단계별 인증 취득 계획 : ('22) 패류독소(2종) → ('23) 병원성세균(살모넬라) → ('24) 중금속(카드뮴 등 8종) → ('25) PAHs(4종) → ('26) 유기염소계 농약(14종) → ('27) 다이옥신류(17종)

- (인증 내용) ① 시험장비 성능시험, ② 시험법 검·교정, ③ 숙련도 시험 참가, ④ 표준문서(시험 지침서 등) 제·개정 등

* 소요기간: 총 12개월(서류 준비: 3개월 / 신청 → 외부평가 → 인정: 9개월)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실험실 인증 확대	모든 분석항목에 대한 제3자 인정취득	▪대분류 별 중요 항목에 대한 인정 취득	-	▪화학분야 1개 항목 인정 추가	▪화학분야 3개 항목 인정 추가 ▪미생물분야 1개 항목 인정 추가	▪화학분야 2개 항목 인정 추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산물 위생관리 (생산해역 관리 및 수출기반 조성)	직접수행	-	-	100	100	100	1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분석항목 인증율(%)	-	-	17	34	50	67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분석항목 중 6개 항목(46개 세부 품목)에 대한 국제 인증 취득 비율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인증 취득 항목 수) / (인증 취득 대상 6개 항목) × 100

과제번호	2-3-3-①	과제명	저온유통 인프라 구축 및 유통시스템 개선
담당자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김지현 사무관(T. 044-200-5443)		

□ 배경 및 필요성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소비에서 위생·안전성* 중시 경향 강화
 - * 수산물 구입 시 고려사항 : 신선도(32.3%), 원산지(16.2%), 가격(15.2%)
- 산지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저온상태에서 유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급체계 구축 필요

□ 추진 계획

- (선진국형 인프라 구축) 양륙-선별-경매-배송 전과정에 저온관리 및 위생·안전체계를 갖춘 선진국형 저온유통 인프라 구축
 - * 자동선별기→저온경매장→저온시설(냉장·냉동창고, 저빙·제빙시설 등)→저온수송
 - ** 거점형 청정위판장 구축 및 저온경매장 설치 등 ('20) 4개소 → ('25) 12개소
- (유통시스템 개선) 유통시간 단축을 통한 품질관리, 수산물 저온 보관·수송 강화 등을 위하여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지원 추진
 - * ('20) 자동선별기 6대, 저온차량 20대 → ('25) 자동선별기 26대, 저온차량 50대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선진국형 위판장 구축	선진국형 저온유통 인프라 구축 및 유통시스템 개선	· 위판장 현대화 사업 지원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수산물 산지 위판장 위생 관리 기준 제정 · 저온유통을 위한 필요 기반 시설 지원	· 저온유통 기반 스마트 유통물류 기술 개발	· 수산물 어종별 유통단계별 맞춤형 스마트 저온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산지 위생안전 시스템 구축	보조(30~50%)	1,485	4,952	2,100	2,100	2,100	2,100
청정위판장 건립	보조(40%)	1,200	120	1,140	1,260	1,140	1,26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자동선별기 지원대수(대)	6	4	4	4	4	4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수산물의 신속한 유통을 위한 자동선별기 지원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매년 자동선별기 지원대수(대), 사업실적보고서

과제번호	2-3-3-②	과제명	양식장 HACCP 적용 확대
담당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남백상 사무관(T. 044-200-5620)		

□ 배경 및 필요성

- 육상양식 수산물의 잠재적 위해요소에 대해 상시 예방·관리 필요
 - 항생제·용수 등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도록 위생·안전 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해 HACCP 등록 양식장 지속 확대
- * HACCP 등록(% , 총1,000개소) : ('17) 16 → ('18) 19 → ('19) 23

□ 추진 계획

- (HACCP 등록 컨설팅 지원 사업) 양식장의 HACCP 인증 과정 컨설팅 및 등록 대상 양식장 재실태조사 및 현행화, 양식장 HACCP 교육 및 홍보 추진
- (양식장 HACCP 유인체계 강화) 대형마트에 양식장 HACCP 인증 수산물 코너 마련·운영하여, 홍보 및 판매 등 추진
- (HACCP 인증 양식장 사후관리 강화) HACCP 전문성 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 표준화 워크숍 및 양식장 현황 평가 추진
- (HACCP 등록 적용대상 확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장의 HACCP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추진
 - 가두리, 축제식 등 면허양식장 실태조사 및 양식장별 위생관리 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1~'25)
 - 가두리, 축제식 등 면허양식장의 HACCP 등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양식장 HACCP 등록(% 총1,000개소)	50	4	14	20	35	50% 이상
HACCP 등록 대상 확대	양 식 장 HACCP 관련 고시 개정	-	-	▪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 확대 고시 개정 (육상양식장)	▪ HACCP 등록 대상 확대를 위한 면허양식장 실태조사 및 기준안 연구	▪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 확대 고시 개정 (면허양식업)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양식장 HACCP 컨설팅 지원	직접수행	600	600	600	600	600	6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 양식장 HACCP 등록(%)	26	29	32	35	35	35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HACCP 등록 가능 양식장 1천여개소를 대상으로 '23년까지 매년 3% 이상 등록, '24년부터는 등록된 양식장의 질적 향상 추진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전년 대비 3% 이상 등록 달성 여부

과제번호	2-3-3-③	과제명	수산물 인증제 확대 지원시스템 구축
담당자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김도순 사무관(T. 044-200-5631)		

□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 인증 등 철저한 생산관리로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제공
 - 화학물질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인 등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추진 계획

- (친환경인증 직불제) 친환경 인증기준에 따른 어업인의 공익적 의무 이행에 대해 공익형 직불금 지급('21~)
 - 친환경인증(육상양식장의 경우 HACCP 인증 조건 추가)을 받은 어가에 친환경 인증 자재비용 등 인증에 추가 소요되는 경영비*의 일부를 직불제로 지원('21)하여 친환경인증** 및 육상양식장의 HACCP 인증 확대 추진

* ha당 생산단가 × 생산비 증가율(15%) × 생산면적 × 보전비율(80%)
 ** 친환경수산물 인증 확대(개소) : ('20) 103 → ('23) 152 → ('25) 185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친환경인증 및 지원시스템 구축	친환경인증 및 지원시스템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공익 직불제법」 하위법령마련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인증 수산물확대 ▪ 친환경 수산물 생산량확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산공익직불제	보조(100)	-	9,379	9,700	10,200	10,700	11,235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친환경수산물 인증 확대(개소, 누적)	103	119	135	152	168	185

과제번호	2-4-1-①	과 제 명	상수관망 진단·관리 강화 및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체계 도입
담 당 자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이지선 사무관(T. 044-201-7114)		

□ 배경 및 필요성

- (관망 노후화) 예산 제약 등으로 노후관의 22%(3천km)만 정비사업 중
 ※ 노후관 조사결과(1.5만km) → 노후관 정비사업 대상(3천km, ~'28까지)
- (대응 지연) 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 발생사실 인지 곤란, 대응 지연으로 피해 확대

□ 추진 계획

- 상수관망 진단·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법제화
 - 관망 기술진단 현장조사 의무화 대상 확대, 진단결과 사후조치 의무화, 노후지역 중점관리지역 제도 도입 등
- 노후관로 정비사업 실시
 - 국비 조기투입으로 기 추진중인 노후관 정비사업(갱생, 교체)의 목표 달성기간 단축('17~'28년 → '24년)
-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체계」 도입
 - '20년 지자체 시범사업(12개소, '20~'21)을 통해 관리기법을 표준화하고 지침·매뉴얼 개발 후 전국 지자체 확대 보급
- 정수장 시설 개선 추진
 - 정수장 내 생물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수장 시설 개선 및 활성탄지 여과기능 강화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22)
 - 정수장 위생관리를 식품 생산 관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형 수도시설 위생관리 인증제 도입('22~)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8~'20	'21~'25	'26 이후
수돗물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행	스마트한 상수도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관망 관리강화제도 도입(수도법 하위 법령 개정) ('20)	▪ 전국 노후관 추가 정밀조사 ('21) ▪ 상수도시설 설계 기준 개정 ('21) ▪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 ('24)	▪ 한국형 수도시설 위생관리 인증제 도입

□ 예산 사항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보조 (국고50)	66	101	51	-	-	-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추진율	-	70%	73%	75%	78%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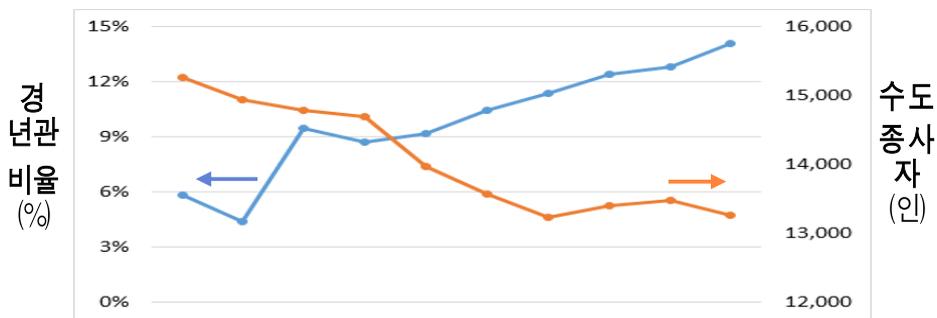
- * 지표 내용 설명 : 노후 상수관로 정밀사업 추진을 통한 상수관로 현황 파악을 통해 노후 관로 정비 계획 수립 등 가능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추진 지자체수 / 전국 161개 지자체수) × 100

과제번호	2-4-1-②	과제명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담당자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이지선 사무관(T. 044-201-7114)		

□ 배경 및 필요성

- (전문 인력 감소) 수도 업무가 많은 민원 등으로 격무로 인식되면서 지자체 상수도 관리·운영 인력 감소*

* 전국 상수도 종사자 : ('08) 1.5만명 → ('12) 1.4만명 → ('17) 1.3만명



- (관리역량 부족)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자격요건 미충족 직원 배치 등으로 전문성·경험 부족

※ 161개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만 시설 책임자가 자격요건 충족('19.10 서면조사)

□ 추진 계획

-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
 - 43개 지자체에 우선 도입('20)하고, 전국 지자체 대상 구축계획 수립 후 전국으로 확대 추진(~'22)
- 상수관망 관리 전문화를 위한 전문 인력제도 도입
 - 전문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관망 관리 전문인력 관련 자격 제도 신설(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21)
-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 수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21~)

-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에 걸친 **점검항목·내용** 등을 스마트폰 앱(App)으로 개발·보급('21~)

☞ 고도정수처리시설 **정밀 운영관리 실태점검, 적정운영** 기술지원 실시('20.8~9월) 및 지원 결과 등을 토대로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자체 등에 배포('20.12)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8~'20	'21~'25	'26 이후
수돗물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행	스마트한 상수도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상수도 선도 지자체 도입('20)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가이드 라인 마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지자체 대상 스마트 상수도 확대 도입(~'22) 상수도관망 전문관리 인력,제도 도입 및 위생관리 기준 구체화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기반 상수도 관리 체계 구축 수돗물 생산 전과정 관리 App 개발, 보급

□ 예산 사항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보조(국고50)	3,816	3,697	3,623	3,586	-	-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도입률(%)	-	20%	25%	50%	90%	1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체계인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의 도입 비율로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지표를 산출함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전체 지자체(161개소) 대비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도입 지자체의 비율

과제번호	2-4-1-③	과제명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관리 기반 마련
담당자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김금임 사무관(T. 044-201-712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최인철 연구관(T. 032-560-8341)		

□ 배경 및 필요성

- 수돗물 내 미세플라스틱 함유량의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 통일성 있고 신뢰성을 갖춘 분석법 필요

* 국제적으로 수돗물 내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부재한 상황임

□ 추진 계획

- FT-IR*을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표준분석법(한국산업표준, KS) 마련('21)
 - *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법
 -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입자크기 20 μ m 이상의 미세플라스틱 대상
- 열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개발('22)
 - 입자크기 20 μ m 미만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측정 가능
- 정수장 유입·처리 실태 및 분포·거동 특성 모니터링('22~)
 - 표준분석법을 활용한 정수장의 미세플라스틱 유입·처리 실태 모니터링
 - 정수처리공정별 미세플라스틱 유입원 및 현황 등 분석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8~'20	'21~'25	'26 이후
수돗물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수돗물내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마련으로 수돗물 안전성 확보	·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 연구	· 미세플라스틱 표준 분석법 마련 · 정수장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실시	

□ 예산 사항(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정수장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공정관리	직접수행	2	2	2	2	2	-

* '22년~'25년 정수장 모니터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향후 확보할 계획임.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수돗물 미세플라스틱 관리	-	분석법 마련	모니터링 50건	모니터링 70건	모니터링 100건	모니터링 120건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 수돗물 내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의 KS규격 제정 여부 및 이를 활용한 정수장 모니터링 현황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 수돗물 대량 공급을 하는 대규모 정수장 위주로 우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5만톤 이상 정수장 120개소)

과제번호	2-4-1-④	과제명	지하수 오염원 조사 및 수질 관리
담당자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홍정호 사무관(T. 044-201-7184)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박민영 사무관(T. 044-201-7184)		

□ 배경 및 필요성

-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은 주로 농촌으로 물복지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사용을 위해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지하수 수량 및 수질 관리 필요

□ 추진 계획

- (농축산지역 지하수 조사) 농축산지역 주요오염원인 질산성질소관리 시범사업(충남 5개소)을 통한 저감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21~)
- (안심 지하수사업)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하수(음용) 수질검사 및 일부 노후관정 개선 사업 추진 ('12~계속)
 - 연간 2,000개소 수질검사(47개 항목), 수질기준초과 관정 주변 소독·청소 등 주변환경 개선, 노후관정 시설 개선 조치
- (다중이용시설 관리) 지하수를 음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학교·복지시설 등을 우선 선정하여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수행('21~'25)

※ 100개/년 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지원 및 일부 시설개선지원

- 기술지원: 현황조사, 수질검사, 노후관정 점검, 수질오염 대응절차 등
- 시설개선: 소독, 여과시설 설치 등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지하수 오염원 및 수질관리	지하수 음용 관정 집중관리	▪ 지하수 음용 관정 수질 관리	▪ 지하수 음용 관정 수질 관리(계속)	▪ 지하수 음용 관정 수질 관리(계속)	▪ 농촌지역 질산성질소 관리방안 마련('22) ▪ 지하수 음용 관정 수질 관리(계속)	▪ 지하수 음용 관정 수질 관리(계속)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축산지역 지하수 관리	직접수행	1,156	1,156	-	-	-	-
안심지하수 지원사업	직접수행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	직접수행	-	1,600	1,600	1,600	1,600	1,6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 수(관정수)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 (관정 수질검사)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를 통한 음용 안전성 확보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 (관정 수질검사)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관정수)

과제번호	2-4-1-⑤	과제명	재난·재해 대비 지하수 관리 강화
담당자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박민영 사무관(T. 044-201-7184)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천병호 사무관(T. 044-201-7183)		

□ 배경 및 필요성

- 가뭄시 임시방편적 지하수 개발과 사후관리 문제가 반복되는 등 재난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 주도의 가뭄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지하수는 가뭄 등 재난·재해 발생시 주요 물 공급원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뭄 등 재난·재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가능
 - ※ (법적근거) 지하수법 제9조의6(지하수자원 확보시설의 설치 등)

□ 추진 계획

- (나눔 지하수사업)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가뭄대비 지하수지원체계 구축사업 추진(~'31)
 - 공공관정 실태조사 및 DB 구축, 공공관정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등
-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전국 관리대상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조사·순찰, 정밀조사 및 정화 추진('17~계속)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재난·재해 대비 지하수 관리강화	인정적인 지하수 공급	▪ 재난·재해 대비 지원 체계 구축	▪ 재난·재해 대비 지원 체계 구축 (계속)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가뭄대비 지하수 지원 체계 구축	직접수행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직접수행	1,066	1,066	1,066	1,066	1,066	1,066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가뭄 대비 지하수 지원체계 구축(누적 %)	35.0	39.4	43.4	47.3	51.3	55.2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 (가뭄대비 지원체계 구축) 가뭄발생 지역 내 지하수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비상용수 공급체계 확립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 (가뭄대비 지원체계 구축) 지하수지원체계 구축 완료 시·군 수 / 전국 시·군(152개)

과제번호	2-4-2-①	과제명	배달·무인카페 등 비대면 식품판매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심연 사무관 (T. 043-719-2054)		

□ 배경 및 필요성

- 1인가구 증가, 코로나 19 지속 유행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마켓,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등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집중 안전관리 필요
 - * 시장규모: ('15) 1.7조 → ('18) 3.2조, 88% 성장 → ('22) 약 5조 전망(aT식품산업통계)
 - ** 주요 배달앱 월 결제금액(월간중앙): ('18년) 2,960억 → ('19.7.) 6,320억, 114% 증가
- 최근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IT기술을 접목한 무인 카페·편의점, 로봇 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등장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 필요
 - * 로봇이 커피 제조부터 서빙까지...대덕특구기업 '로봇 카페' 오픈(연합뉴스, '20.5.14.)

□ 추진 계획

<위생점검>

- 온라인 마켓, 즉석밥, 간편조리세트(밀키트)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집중 점검(연2회)
 - * 주요 점검 사항: 원료 구비요건, 냉장·냉동 등 온도관리 기준 적합 여부 등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에 대한 상시점검(연중)
 - 신규 배달음식점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지자체 합동점검을 통한 집중 점검(연2회)
 - * 주요 점검 사항: 비위생적 식품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원료) 보관·사용 여부 등
- 무인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자동판매기 등 식품취급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점검 실시(연중)
 - * 주요 점검 사항: 자판기 등 무인 시설의 내부 청결상태, 사용하는 원료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
 - 로봇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식품용 기계·기구류의 경우 종류별 점검 사항 등을 마련하여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추가 반영(연중)

<수거·검사>

- aT, 통계청 등 소비·유통 환경 분석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온라인 인기제품 집중 수거·검사(분기별)

<기타 추진사항>

- 배달앱 업체를 대상으로 조리식품 전문 배달업자를 위한 위생·안전 가이드라인 지속적인 홍보('20~)
- 무인 카페·편의점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자 대상 맞춤형 위생 가이드라인 마련('20) 및 지속적 홍보('21~)
- 현장점검 중 일상적인 사항*은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점검하도록 '원격 위생점검 시스템' 도입 추진('21)

* 건강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수질검사성적서 등 기본안전수칙 점검항목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선제적 안전관리	소비 급증 및 신유형 식품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관리 ▪ 기획점검 ▪ 수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배달업자 위생가이드 라인 제작 ▪ 무인점포 위생 가이드 라인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무인점포 위생 점검 강화 ▪ 원격 위생점검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로봇 카페 등 신유형 식품 취급업소 점검 강화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식품업체 지도 점검 및 수거 검사)	직접수행	1,353	1,335	1,489	1,563	1,570	1,575
	보조(50%)	1,150	1,134	1,134	1,134	1,134	1,134

- * 국고지원액만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구분'란에는 직접수행, 보조(보조율 표시), 용자, 출연 등 재원지원 성격을 표시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선제적 안전관리(회)	10	11	12	13	14	15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최근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인터넷 판매식품 및 새로운 영업 형태의 무인 편의점·카페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가정간편식, 배달 음식, 온라인 시장 등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지도·단속 + 수거·검사 횟수의 합

과제번호	2-4-2-②	과제명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김현정 사무관(T. 043-719-2452)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권용관 연구관(T. 043-719-2456)		

□ 배경 및 필요성

- 소비 트렌드 변화로 개인건강 관심 증대, 기술발전에 따른 검사방법 다양화로 소비자-산업 모두 맞춤형 건강관리 제도 도입 요구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면역증진 기능성 제품의 올바른 섭취 유도, 위생관리자·건강상담사 등 취업기회 제공 필요
-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별법 인지 여부 등 대국민 인식도 및 기능성 신뢰도 조사 필요
 -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구매하는지, 기능성 신뢰도 측정을 통해 홍보 및 안전관리 강화 효과 확인

□ 추진 계획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제도 마련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속 운영 및 규제특례 허용조건 이행여부 중점관리('21~'23)
 - * 17개사 172개 매장(20.7~, 사업개시 후 2년간)
 - 규제샌드박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이 법제화 추진('21~)
 - *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22)
-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인식도 설문조사 실시
 - 건강기능식품 이용실태, 신뢰도 등을 확인하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매년)
 - *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여명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 강화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유통 기반 마련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생산관리	▪ 백수오사건 이후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관리 종합 대책 마련 및 시행	▪ 건강기능식품 제도 전반 규제 합리화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	▪ 효율적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건강기능식품관리	직접수행	843	715	713	713	713	713
	국고보조(50%)	420	420	420	420	420	42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신뢰도(%)	54.0	57.0	60.0	63.0	66.0	69.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일반 국민 대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일반 식품과 차별화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및 원료, 제조, 유통 등 생산에서 소비자 섭취까지 전 과정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설문

과제번호	2-4-2-③	과제명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평가 기반 구축 및 기술지원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윤태형 연구관(T. 043-719-440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권광일 연구관(T. 043-719-4421)		

□ 배경 및 필요성

- 기능성 원료의 심사 단계부터 신청원료에 대한 독성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로 최신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및 심사 활용 필요
 - * 이상사례 신고·접수 건수: 874건('17) → 964건('18) → 1,132건('19)
- 건강기능식품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해 원료 개발단계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및 민·관 소통 확대 필요

□ 추진 계획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및 활용
 - 국내·외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평가 DB 구축('21년~)
 - * 국내·외 기능성 원료 후보 천연물 DB 확보 및 독성작용 DB 구축
 -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예측 모델 개발('22년~)
 - * 독성작용 DB를 활용한 독성 예측 프로그램 개발
 - 기능성 원료 독성 예측 프로그램 실용성 검증 및 심사 활용('23년~)
 - * 기인성 원료의 독성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 및 사용 가이드 마련
-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요자 소통 확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신속 제품화* 및 수출 활성화** 지원('20년~)
 - * 안전성, 기능성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권역별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 ** 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성 정보의 상시 제공 및 정부 공인인증서 발급 활성화 등
 -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21년~)
 - * 소비자들이 관심 있는 기능성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가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및 활용	가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예측 프로그램 마련 및 심사 활용	▪ 제출 자료 위 주의 안전성 심사	▪ 안전성 DB 관련 정보 검색 강화	▪ 딥러닝 등 최신 기술 활용을 위한 연구 방안 마련	▪ 가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예측 프로그램 및 가이드 마련	▪ 시 기반 가능성 원료 안전성 심사 체계 도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요자 소통 확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신속 제품화 지원 및 소비자 정보 제공	▪ 건강기능식품 기술 지원 연구	▪ 건강기능식품 기술 지원 착수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기술 지원 확대	▪ 건강기능식품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 기능성 원료 신속 제품화 및 수출 활성화 지원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인공지능 기반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용역	-	500	500	500	-	-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신속 제품화 기술지원 (21년 예산 한도의 요구 중)	직접수행	-	500	500	500	500	5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가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예측 프로그램(가이드 포함) 개발·활용 건수*	-	-	1 (프로그램 개발)	1 (가이드 개발)	10 (심사활용)	10 (심사활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기술지원 건수	35	40	45	50	50	5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21년부터 '23년까지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예측 모델 관련 기술을 1건 이상 개발하고 '24년부터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평가한 기능성 원료를 10건 이상으로 설정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해당없음

과제번호	2-4-2-④	과제명	주류 제조·유통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심연 사무관(T. 043-719-2054)		

□ 배경 및 필요성

- 주류업체는 생산규모 편차가 크고,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로 위생·안전관리 인식 수준이 미흡하여 차별화된 관리 필요
 - * 주류제조업체 90% 이상이 종업원 10인 미만,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업체 70%(‘18년)
- 생산규모, 업체 점검이력, 행정처분 내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생취약 업체 중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추진
- 주류 제조·유통 환경 변화, 음주 형태 및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수요를 발굴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주류 위탁 제조 허용, 온라인 주문 확대 및 수제맥주 등 다양한 뉴트로 제품 출시 등에 따른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 추진 계획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
 - 소규모 양조장, 신규 및 행정처분 이력 등이 있는 업체는 집중관리 하고, 업체별 맞춤형 전문 교육 및 현장 컨설팅 등 기술 지원 실시
 - * 위생취약업체 위생관리 준수율 : (‘21) 92.9 → (‘23) 93.1% → (‘25) 93.4%
 - **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팬데믹 상태가 지속될 경우 언택트(비대면) 점검 전환
 - 계절별·테마별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다소비 제품* 및 위반사항 분석 등을 통한 위해우려 제품 중심의 수거·검사 실시**
 - * 저도수, 저용량 주류,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수제맥주, 과실주, 와인 등
 - ** 유통 주류에 대해 연간 1,100건 이상 수거·검사 실시(‘21~‘25)
 - 부적합 지하수 식품용수 사용 등 고의적인 위반업체 특별 관리 및 지하수 부적합 정보 신속 전달 체계 마련 등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

○ 주류 제조·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 정책 추진

- 음주형태, 섭취빈도 등 실태조사를 통한 주류 소비 경향을 파악하여 건전한 음주 문화 정책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정보 제공
 - 권역별로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애로사항 해결 상시 전문가 콜백 서비스, 위생·안전관리 지도 및 교육·분석 등 지원
- * 매년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 지정·운영하여 약 160 주류업체 지원('21~'25)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주류제조·유통 안전관리 강화	위생관리 준수율 제고	표시제도 및 시설기준 개정	전체 주류업체 위생	소규모 제조 주류 안전관리	위생 취약업체 안전관리	주류제조업체 자율 안전관리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직접	369	369	369	369	369	369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취약 주류업체 중심의 위생 준수율(%)	92.6	92.9	93.0	93.1	93.2	93.4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기존 위생취약 주류업체를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위생준수율이 92.6%('18년도 92.2%, '19년도 91.7%)로 취약 주류업체 위생 준수율을 점차 상향하여 93.4%까지 위생준수율을 높이고자 함

** 취약 주류업체: 전년도 신규업체, 행정처분 이력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미흡업체 등

과제번호	2-4-2-⑤	과제명	건강 민감계층 이용 위생 취약시설 점검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심연 사무관(T. 043-719-2054)		

□ 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및 키즈카페** 등 위생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 * 시설 현황('19) : 양로시설·노인복지관(4,012곳), 장애인거주시설(624곳), 아동양육시설(241곳), 산후조리원(538곳), 키즈카페(999곳), 애견·동물카페(188곳)
 - ** 5년간 키즈카페 사고 1,411건, 식품위생법 위반 81건(베이비뉴스, '19.10.16.)
- 영·유아용도 표시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 건강 민감계층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 특수용도식품 등 제조업소 점검('19) : 350개소 점검, 8개소 적발(건강검진 미실시 등)
 - ** 특수용도식품 등 수거·검사('19) : 66건 검사, 2건 부적합(세균수 기준 초과)

□ 추진 계획

<위생점검>

- 아동양육시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건강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내 식품취급시설 대상으로 위생점검(연1회 이상)
 -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집중 점검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자율점검 매뉴얼' 제작 배포('21)
 - * 주요 위반 사례 중심으로 맞춤형 위생관리 강화방안 수록
-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PC방, 만화카페 등 위생취약 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체 점검(연1회)
 - *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재료 보관·관리 상태 등 점검
- 영·유아용도 표시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 건강 민감계층이 소비하는 식품 등 제조업체 집중점검 및 수거·검사(연1회)
 - * 위생적 취급관리 등 점검 및 영양성분 함량, 식중독균 등 위해우려 항목 검사

<기타 추진사항>

- 불법 야생동물을 원료로 조리한 식품을 판매하는 건강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 단속 실시(매년)

* 주요 점검 사항: 야생동물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및 자가품질 검사 실시(9개월마다 1회) 여부 등 집중 점검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민감계층 및 위생취약분야 점검 강화로 위생 사각지대 해소	민감계층 및 위생취약분야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관리 ▪ 기획점검 ▪ 수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불법야생동물 판매업체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원격 위생 점검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시기반 위생 점검 시스템 도입으로 자율 위생 관리 강화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직접수행	3,007	2,659	4,917	5,309	4,796	5,347
	보조(50%)	1,150	1,134	1,134	1,134	1,134	1,134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위생취약시설 점검 및 수거·검사(회)	4	4	4	4	4	4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어린이·어르신 등 위생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 취급시설과 특수용도식품 등 건강 민감계층이 소비하는 식품 등 제조업체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위생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업소와 건강 민감계층이 소비하는 식품 등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 및 수거·검사 횟수

과제번호	2-4-2-⑥	과제명	유통 축산물 선제적 관리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변성근 사무관(T. 043-719-3242)		

□ 배경 및 필요성

- 우유, 달걀 등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안심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신종코로나가 만든 ‘방콕’ 장보기...우유·계란 주문폭주(중앙일보, '20.2.4)

- 온라인 축산물 판매 증가*, 삼계탕·육개장 등 간편 식품 소비 급증** 등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

*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동향(백억원, 통계청): ('19.8) 30 → ('20.8) 52(73% ↑)

** 간편식 온라인 판매 안주용 촉발(404%), 곱창·막창(67%) 증가(한국경제, '20.9.21)

□ 추진 계획

- 우유, 달걀 등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집중 점검
 -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하절기에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대상 보존·유통온도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 점검(연 1회)
 - 분쇄가공육제품 등 위해우려 축산물 제조업체 위생점검 및 생산제품 수거검사 추진(연 1회)
- 소비트렌드 반영 유통 축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온라인 유통 달걀, 식육 제조·판매업체 상시점검(연중)
 - 삼계탕·닭발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집중점검 및 수거·검사(연중)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예방적 감시효과의 극대화
 - 부적합·위반사례를 분석, 업종별 중점관리사항을 도출하여 지자체,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정보 공유·전파(연중)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유통 축산물 안전관리	다소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 다소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 다소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 소비패턴 등 반영 축산물 안전관리	▪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 다소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 소비패턴 등 반영 축산물 안전관리 ▪ 데이터기반 축산물 안전 관리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축수산물안전관리	직접수행						
	국고보조(50%)	611	611	611	611	611	611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다소비 축산물 집중점검 횟수	5	5	5	5	5	5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우유, 달걀 등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우유, 달걀 등 다소비 축산물 가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 및 수거검사 횟수

과제번호	2-4-3-①	과제명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내실화 및 스마트 HACCP 확산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이제명 사무관(T. 043-719-2854)		

□ 배경 및 필요성

- HACCP 의무적용 지속 확대로 안전한 식품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자 운영 미흡 시 HACCP 제도 불신 확산 우려
 - HACCP 인증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대형 식중독 사고 발생 시 HACCP 제품이 원인으로 확인되는 사례 발생
 - * ('18) 부산 등 12개 지역 학교 2,207명[원인 : 초코케익(살모넬라, 난백액)]
- HACCP의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은 식품안전 확보에 핵심적 과정이나, 수기(手記)방식 관리로 인해 식품사고의 원인으로 작용
 - * '18년 케익 식중독 발생 원인업체의 경우 CCP 모니터링을 허위로 기록
 - 모니터링 미숙, 허위기록 등 휴먼에러(Human Error, 사람실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HACCP)' 도입 필요

✓ 스마트 HACCP : 안전관리 중요공정(가열, 금속검출 등)의 관리상황(온도, 시간 등)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하여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등 관리의 내실화·효율성 제고

□ 추진 계획

- 식품안전인증 적용업체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 확립
 - 정기 조사평가 시 업체가 HACCP 기준을 철저히 상시 운영하도록 평가 일자 사전 통보 없이 전면 불시평가 실시(지속)
 -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19)
 - 업체의 자율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자체평가(Self audit)를 활성화 하고, 식품안전 관련 법령 위반업체 등에 대해 불시평가 실시(지속)
-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HACCP' 도입 및 확산
 - 업체에서 쉽게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공통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보급(~'25)
 - * 보급 계획 : ('21) 알가공업 → ('22~'23) 의무업종 → ('24~'25) 비의무업종

< 스마트 HACCP '공통 표준 소프트웨어' >

- ① HACCP 기준서 입력: 주요공정(CCP), 한계기준, 데이터 수집주기 등 입력 관리
- ② 모니터링 기록: 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기록·저장 관리
- ③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통계 추출하여 분석

- 스마트 HACCP 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인정절차 및 관리 방법 등 근거 명확화('21)
- 중소벤처기업부와 상호 협력하여 재정지원 등 참여 활성화 유도(~'25)
 - * 식약처-중기부 간 업무협약 체결('19.5.12),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준비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 희망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 실시(지속)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식품 안전 관리 인증 제도 내실화	사전에방관리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제도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대 등 생활 밀착형 식품 HACCP 적용 ▪ 위해 예방 관리 계획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기호 식품HACCP 인증 완료 ▪ 위해예방관리 계획 적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인터넷 (IoT) 기술 기반 '스마트 HACCP'시스템 적용 확대 ▪ HACCP제도 공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7반 과학적 예방 관리 및 효율적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HACCP제도 활성화	직접수행	8,069	6,600	6,600	6,600	6,600	6,600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지원	보조(100%)	20,138	17,743	17,743	17,743	17,743	17,743

* 국고지원액만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구분'란에는 직접수행, 보조(보조율 표시), 용자, 출연 등 재원지원 성격을 표시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스마트 HACCP 등록 업체수(개소)	3	100	200	300	400	500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 중 중요공정에 스마트 HACCP을 적용하여 자동 기록·관리하는 업체수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스마트 HACCP 등록 신청하여 평가 결과 적합한 업체수(누적)

과제번호	2-4-3-②	과제명	건강기능식품 GMP 운영 내실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권용관 연구관(T. 043-719-2456)		

□ 배경 및 필요성

- 건강기능식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전면 의무화 완료('20)에 따라, **GMP운영의 내실화 및 우수업체에 대한 규제 합리화 필요**
 - * 조사·평가 방법 개선, 기술지원확대, 업체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

□ 추진 계획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운영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 시설기준, 품질관리, 조사·평가, 교육·훈련 등 운영규정 법적 근거 명확화('21)
 - * 법률에서 고시로 일괄 위임하고 있던 사항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 및 정비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지도·점검 강화('21)
 - * 위탁제조 품목이 많은 업체 집중 관리 등
 - GMP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인 교육·기술지원 확대('22)
 - * 품질관리인 교육시간 확대(6→16시간)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편 등
 - GMP운영 우수업체 조사·평가 횟수 차등화 등 인센티브 제공('23)
 - *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 강화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기반 마련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생산관리	▪ 백수오사건 이후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관리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	▪ 건강기능식품 제도 전반 규제 합리화 ▪ GMP의무화 완료	▪ GMP 운영 내실화	▪ 효율적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

□ 예산 사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관리지수(%)	85	85	85	85	85	85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의 GMP준수여부 정기평가 점수가 85%이상(170점이상/200점)일 경우 적합이며, '20년부터 전면 불시평가로 시행되고, '21년부터 GMP 전면 의무적용됨에 따라 GMP 평가점수(적합)를 제조기준 관리지수로 설정

과제번호	3-1-1-①	과 제 명	데이터 기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 확대
담 당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손성열 사무관(T. 043-719-3204)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김돈환 사무관(T. 043-719-3245)		

□ 배경 및 필요성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부처별 전산정보(영업자·검사·생산환경·단속 등)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연계('15.6월~) 하였으나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연계된 농축수산물 관련 정보 70종 중 단순 정보이거나 실시간 현행화 되지 않아 안전관리 시 분석·활용되는 정보는 21종에 불과
 - * 데이터베이스(DB)로 입력되지 아니하고 문서 형태로 기록(생산자 현황, 유통이력 정보(일부 전산화), 동물용의약품·농약 생산·판매 기록 등)
- 일부 누락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된 정보를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데이터 기반의 위해 가능성이 높은 농축수산물 선택·집중 검사 추진

□ 추진 계획

- 농축수산물 안전과 연관된 기타 간접 변수요인(환경변수 등) 도출('20)
 - 생산환경(기온, 수온, 강수량 등), 병해충 발생 및 농약 잔류위반 상관성, 계절별 전염병 발생 양상과 항생물질 잔류위반 상관성 등
- 농축수산물 관련 자료의 전산 데이터화 및 통합망 연계 확대(~'21)
 - 생산 환경(재배·양식) 검사 관련 전산자료, 동물약품·농약 관련 자료, 수산물 표준품종명 코드 정비, 기타 변수정보(가격, 기상 등) 연계
 - 농가·어가 자료 확보, 생산단계 검사 자료 중 누락 항목의 연계
 - 유관기관 협의 등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 농축수산물 안전정보 기반 부적합 예측 모델 개발('21, 부처협의)
 - (축산물) 위생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해 통계적으로 축산물 영업자 단속대상을 선별하는 예측 모델 개발
 - * 단속대상 선별 예측모형(PC 기반)으로 위생감시 필요성 점수 산출 (단속계획수립에 활용)
 - (농수산물) 주요 위해 변수*의 부적합 연관성 등을 분석하여 위해 및 부적합 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부적합 예측 모델 개발
 - * (농산물) 토양 오염, 잔류농약·중금속 부적합, 병충해 발생, 농약 사용 정보 등 (수산물) 양식장 인허가, 지역별·시기별 생선품목, 수온, 동물약품 사용 정보 등
- 농축수산물 부적합 예측 모델을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적용(부처협의)
 - 「데이터 기반 지능형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시스템(가칭)」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22)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내 시스템 구축('23~'24)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축수산물 관련 데이터 기반 부적합 우려가 높은 영업자·품목 집중 점검 검사	-	-	▪ 농축수산물 부적합 예측 모델 개발 연구사업	▪ 농축수산물 부적합 예측 모델 개발 및 통합식품안전 정보망에 적용	▪ 데이터 기반 과학적인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운영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small>* 기재부 협의 필요</small>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직접수행	-	-	350	2,000	2,000	1,0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데이터 기반 지능형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	-	구축	구축	운영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23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성과지표 설정

과제번호	3-1-1-②	과제명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김익상 사무관((T. 043-719-6172)		

□ 배경 및 필요성

-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민 식탁에서 '수입식품'이 증가함에 따라 국회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15.2)
 - ※ 우리나라는 곡물의 78%를 수입(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4)
- 정부는 식약처 내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을 신설('17.3)하고, 수입 전 단계를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 * (구축기간) '19년~'21년, (투입예산) 102억 규모

□ 추진 경과

-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 종합계획 수립('18.11)
-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1, 2단계 구축('19.5~'21.1)

□ 추진 계획

- **위해도 기반(통계적 부적합 가능성) 수입식품 검사 완성('20~'25)**
 - 식품, 수산물, 축산물에 대한 고유특성을 통계적 변수*로 발굴하고 **부적합 예측모형을 최적화함**으로써 **과학적 선별 검사체계 완성**
 - * ('19년) 생산국가·품목 부적합율 등 식품 17종, 수산물 14종, 축산물 20종 변수
- **전 세계 해외생산·제조업소 위치 관리체계 구축('20~'23)**
 - **180여 개국 7.6만* 개소** 수입식품 생산·제조 시설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GPS 상 위·경도) 관리기반을 구축해 **세계적 재난·질병·사고 시 신속한 현황 파악 및 대응 기반 마련**
 - * ('14.1~'20.5 수입) 제조업소 5.4만, 축산물작업장 0.1만, 수출업소 2.1만
- **인공지능 기반 식품 수입동향 자동 관리체계 구축('21~'25)**
 - 수입식품 빅데이터를 통계적 분석기법으로 분석해 ▲연도 및 계절별 증감, ▲유입지역 변화, ▲단기 공급중단(급감) 등 조기 탐지체계 구축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21까지	'21~'23	'24~'25	'26 이후
지능형 수입 식품 통합관리 완성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관리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도 분석모형 고도화(최적화) ▪ 국제표준 세계 지역코드 적용 ※ ISO 3166-2 위경도 ▪ 국민수입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도 분석모형 평가 조정 ▪ 해외시설 사고 관리 시각화 구축 ▪ 수입 공급중단 관리기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도 분석모형 평가 조정 - ▪ 가동 및 관리 기능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모형 완성 - -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지능형수입식품통합 시스템 구축	직접수행	1,403	1,048	908	500	-	-

□ 성과지표

(단위 : %)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수입식품 무작위검사 부적합율	0.40	0.42	0.46	0.50	0.50	0.5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수입식품 검사에 인공지능 분석기술 적용으로 “부적합 확률”이 높은 국가·품목을 선별·집중 검사함으로써 향후 2~3년 간 부적합율 증가 예상 (매년 10% 증가, '19년 부적합율 : 0.38%)

** 지표 측정방식 설명 : {(무작위 부적합 건수) / (무작위 표본검사 건수) × 100}

과제번호	3-1-1-③	과제명	생활 밀착형 식품안전정보 제공 확대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 정진목 사무관(T. 043-719-4052)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1인가구·맞벌이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온라인·배달문화 발달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맞춤형 정보제공 확산 필요
 -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배달앱 등)을 활용하여 식품 안전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식품안전 신뢰도 제고
- * 가정간편식 시장 : ('15) 1조6,823억 → ('17) 2조7,421억원 → ('18) 3조2천억(추정)(aT센터)

□ 추진 계획

- 민간 플랫폼 등 대국민 접점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제공 확대**
 - 음식점 위생상황(행정처분, 위생등급 등) 등 식품안전정보 확인 채널 확대
 - * (기존) 배달앱 위주 → (확대) 배달앱, 맛집정보 사이트, 건강앱, 민간포털, 다음 카카오톡 등
 - ** 민간플랫폼 연계(누계) : ('21) 19 → ('22) 22 → ('23) 25 → ('24) 28 → ('25) 31
 - 생애주기별·시기별 국민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식품안전정보 및 통합망 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매년 60건)
 - 소비자에게 필요한 식품안전정보 활용 확대 및 정보발굴
 - * 앱/웹 개발업체, IT 전문가가 참여하는 '먹거리 정보산업(Food tech) 협의체' 운영
-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20~'22)
 - 기후·오염·소비자트렌드 등 식품안전 위해요인 사전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연계를 확대하고, 기 구축된 데이터와 연결성 강화
 - 식품안전 위치정보를 지도에 표시·활용하는 '지도기반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20)
 - 정보분석 및 빅데이터 알고리즘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통한 지능형 안전관리 도입 기반 마련('21)

- 국민·산업체가 활용하기 쉽게 식품안전 공공데이터(Open-API) 제공 확대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 지원('20~)
 - 민간에서 필요한 정보는 원시데이터(raw data) 형태로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활용 집중지원을 위한 전담자 지정 및 우수사례 확산
- 식품안전정보 공유·연계를 위한 정부 내 협력체계 유지·강화('20~)
 - 타 부처 보유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자동 연계하고, 수집된 정보를 유관기관(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지자체 등)에 공유 확대
 -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전국오염원자료, 폐광산 위치정보, 폐기물, 골프장 농약사용정보, 해양환경, 지역축제정보 등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생활밀착형 식품안전정보 제공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식품안전 정보망 구축('15) ▪ 통합식품안전 정보망 시스템 고도화('1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통합망 구축 전략계획(ISP) 수립('18) ▪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제공 업무 협약('19) ▪ 식품안전나라 국민민심 데이터 시각화('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통합망 구축(~'22) ▪ 빅데이터 기반 통합망 시스템 고도화('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통합망 도입으로 대국민 정보제공 신뢰성 확보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위해예방관리운영 (식품안전 정보연계 및 활용)	직접수행	251	251	251	251	251	251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민간플랫폼 연계 건수	3	3	3	3	3	3

과제번호	3-1-2-①	과제명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 고도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류창희 사무관(T. 043-719-2852)		

□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로 인하여 식품안전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활성화 필요
 - 식품이력추적 의무화는 특수의료용도,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 등 위생 취약계층 섭취 식품의 확대 필요
 - * 이력추적 등록업체수(누계) : ('16) 5,901 → ('17) 6,493 → ('18) 7,341 → ('19) 7,966개소
- 원재료부터 생산·제조 및 유통까지 꼼꼼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관리 필요
 - 블록체인 기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원재료 이력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전주기 이력추적 관리 제품에 대한 수출 신뢰도 증진

□ 추진 계획

- 식품이력추적관리 활성화를 위한 이력추적 품목 확대 추진(~'25년)
 - 위해도 발생가능성, 사회적 파급성 및 다소비 식품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섭취 식품을 이력추적 의무적용 우선 추진(식품위생법 등 개정 추진)
 - * 과자류 중 과자 및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의무화 우선 추진 후 향후 단계적으로 HACCP의무적용 식품으로 확대
- 각 부처 이력관리 품목에 대한 원재료 정보연계 추진(~'25년)
 - 부처별로 이력관리하여 산재되어 있는 이력정보를 연계하여 원재료부터 제조·판매 단계까지 전주기 이력추적관리 실시
 - * (축산물) 쇠고기 → 돼지고기, 수입쇠고기, 수입돼지고기, 가금, 계란 추가 연계 추진
 - ** (수산물) 해수부 시범사업 품목인 조기, 생굴 및 수입유통 이력정보 등 연계 추진
 - *** (농산물) 수입유통이력 관리 품목에 대해 이력정보 연계 추진
- 블록체인 기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고도화('24년)
 - 식품이력추적관리 블록체인 도입 방안 연구 과제 실시('20년)
 -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24년)

- 원재료 및 유통단계 이력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26년~)

* 전주기 이력추적관리 수출제조(가공)식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과학적 체계적 유통·수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건강기능식품제조업 이력추적 의무화 완료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고도화('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의료용 도등 식품,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도 이력추적의무화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고도화('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기호 식품 이력추적의무 도입 추진 블록체인 기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각 부처 이력관리 품목 정보 연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체인 기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신뢰성 확보 부처별 이력정보 연계 지속 확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직접수행, 보조(100%)	415	415	1,820	1,820	1,820	82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①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체수(누계)	8,300	8,800	9,300	9,800	10,300	10,800
② 부처 이력정보 연계 확대(누계)	1	2	3	4	5	6

①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 후 적합한 업체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수'로 산출(누계)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tfood.go.kr)상 등록업체 현황

②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연계된 타부처 이력시스템 연계 건수(누계)로 산출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tfood.go.kr)과 타부처 이력시스템 간 연계 건수(누계)

과제번호	3-1-2-②	과제명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강화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홍찬호 사무관(T. 044-201-2276)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수입물품의 불법 용도변경,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
 - * 대상: 농식품 9품목(김치, 건고추, 냉동고추,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황기), 수산물(뱀장어 등 15품목), 공산품(H형강)
- '22년부터 원산지관리, 농산물 수급조절 등 업무 연계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품목을 지정하고 관리 예정
 - * (현행) 관세청 → (이관) 농식품부('22년), 해양수산부('21년), 관세청(공산품)

□ 추진 계획

- (제도이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수입유통이력관리의 신고 및 조사 근거를 마련('20)하고, 품목지정 및 조사요령 고시 제정('21)
- (시스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구현된 유통이력신고 기능 및 기존자료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관('21)
- (품목선정) 농산물 수입량, 부정유통의 가능성, 원산지 단속정보 등을 참고하여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품목 선정('22)
 - * 유통이력심의위원회 : 농식품부 내에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으로 구성, 부정유통 증가 우려가 큰 농식품 중 대상품목 선정 및 조정기능 부여 예정
- (교육·홍보) 업무이관에 따른 수입 신고, 시스템 사용, 업무 지침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 수입·유통관계자 대상 사전 교육·홍보 추진('21)
- (사후관리) 원산지조사 등과 연계한 수입유통이력 사후관리 실시('22)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수입유통이력 관리업무 이관 및 수행	제도시행 (관세청, '09.~)	유통변화에 따른 대상품목 조정, 적용분야 확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이관을 위한 원산지표시법 개정('20)	시스템 구축 및 자료 이관('22), 원산지표시 조사 등 관련업무 연계 ('23.~)	불법유통 우려품목에 대한 수요조사 및 대상품목 추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직접수행	165	733	1,123	1,174	1,228	1,284

* '22.부터는 공무원 인건비 31명(현재 관세청 담당인원)을 추가하여 산정(인건비+일반수용비)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 확대	9	9	11	11	13	15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부정유통 우려가 큰 품목, 사회적 관심 및 소비자 관심이 높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의 개수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고시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수

과제번호	3-1-2-③	과제명	축산물 유통이력관리 활성화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도재규 사무관(T. 044-201-234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이세환 사무관(T. 044-201-2322)		

□ 배경 및 필요성

- 가축의 출생부터 축산물의 생산·판매까지의 단계별 이력정보를 관리하여 축산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증진 필요
- 시장개방, 소비 트렌드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축산물 유통여건이 생산자·산지 중심에서 소비자·시장 중심으로 전환

□ 추진 계획

<축산물 이력관리>

- (제도운영) 소·돼지에서 닭·오리·계란까지 이력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축산물 이력제의 안정적 운영
 - * 소(국내산 '08, 수입산 '10)→돼지(국내산 '14, 수입산 '18)→닭·오리·계란('20.1)
 - '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의 업무 효율화 지원*
 - * 현장 업무시스템과 이력시스템 연계 및 이력번호 표시 장비 지원 등 추진
- (정보관리) 모바일 활용 등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이력정보의 품질향상 및 활용도 제고
 - 모바일 앱, SNS 반응형 신고방식* 등을 도입하여 신고 의무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면서 신속한 신고체계를 마련
 - * 신고 의무사항을 메일 등 SNS로 전송 → 사용자 확인 시 신고화면으로 이동
 - 가축의 출생·폐사·이동 및 사육현황 등 신고내용의 논리적 검증과 현장 확인을 통해 축산물 이력정보의 품질 제고
 - 이력추적 관계기관 등과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정보 공유로 축산물 이력정보 활용을 활성화
 - * 가공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축산물이력정보 제공 등으로 이력정보 공유

< 축산물 유통조사 >

○ 유통시장과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축산물 유통조사 품목 확대 및 맞춤형 정보 제공**

- 유통조사 대상 확대, 유통비용, 가격, 경로, 재고량 조사 추진
 - * 축산물 유통 현장의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 진행
 - * 축종 확대 추진: (기존)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 (확대) 벌꿀 추가('20하)
- 축종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정확성 검증 및 개선사항 도출
-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유통구조 개선 촉진 및 국민 편익 증진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축산물 이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로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돼지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이력제사육현황 정보 통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오리·계란 이력제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오리·계란 이력제 안정화 ▪ 축산물 이력정보 품질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이력정보 품질 관리 강화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축산물품질관리 (축산물이력제)	보조 (민간100%, 지자체50%)	27,357	29,076	29,325	30,082	31,095	31,095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이력정보 활용도(배)	21.6	23.6	25.3	27.0	28.6	30.3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유통업자 및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활용하는 횟수 측정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이력정보 활용(조회) 건수 ÷ 이력번호 발급건수

과제번호	3-1-2-④	과제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강화
담당자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엄익환 서기관(T. 044-200-5447)		

□ 배경 및 필요성

- 국정과제(84-4. 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로 선정, 단계적으로 수산물이력제 확대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대중성 품목(생굴, 굴비)을 선정하여 이력 추적관리 의무화 시범운영 추진('19~'21)

□ 추진 계획

-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지원 추진
 - 수협중앙회 정부비축 수산물(참조기)의 이력제 도입 컨설팅 및 등록 지원
 - 시범사업 품목 및 업체 대상의 이력표시 비용 집중 지원 및 대상 품목 소비촉진 유도를 위한 홍보 추진
-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생굴, 굴비 / '18~'21년) 종료에 따라 성과를 평가('22)하고, 수산물 유통구조에 부합하는 이력제 개선방안 마련*
 - * 품목별 유통구조,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22~'26)
- 시범사업 이해증진 및 참여의지 제고를 위한 유통업체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 등 협력체계 강화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수산물 이력제	수산물이력제 사업 확대	-	▪ 수산물이력제 대상품목 확대	▪ 의무화 시범 사업 추진	▪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 사업 결과 평가('21) ▪ 수산물유통 이력 관리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22)	▪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추진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산물이력제	위탁사업	2,220	2,220	2,220	2,220	2,220	2,220

* '19년 및 '20년 예산은 확정예산, '20년 이후 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름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수산물이력제 인지도(%)	43	43.7	44	44.6	44.7	44.8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수산물이력제 설문조사(리커트방식, 성인남여 1,000명 대상)

과제번호	3-1-2-⑤	과제명	원산지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강화
담당자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한지용 사무관(T. 044-200-5449)		

□ 배경 및 필요성

- (원산지 관리) 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소비자들의 수산물 원산지 관심은 증가하는데 반해 거짓표시, 미표시 등 위반이 지속되고, 방법이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음
 - * 원산지 거짓표시(건): ('16) 153 → ('17) 163 → ('18) 163 → ('19) 196 → ('20) 159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지정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후 소매단계까지 신고한 내역을 관리
 - '09년부터 관세청이 담당하였으나, 수산물 유통법('15.3) 및 관련 고시* 제정('20.9) 등 근거를 마련하여 해수부로 이관('20.10)
 -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해수부 제2020-159호, '20.9.25)

□ 추진 계획

- 중점품목*(10품목)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 단속 추진, 조직화·지능화되는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기동단속반 운영
 - * 선정기준: 수입량, 위반빈도, 소비자 민감도,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유전자, 이화학분석법 등 활용하여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13품종,~'25), 디지털 증거 활용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센터** 설치·확대
 - * 기술개발 현황 및 계획(누계) : ('19) 45 → ('20) 47 → ('22) 52 → ('25) 60품종
 - ** 디지털 포렌식센터 설치 계획(누계) : ('20) 1 → ('21) 2 → ('24) 3개소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내 유통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식품 안전 및 유통질서 확보
 - * 대상업체수: 수입 648개소, 유통 14,922개소, 소매 121,763개소 등 약 14만개소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원산지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수입유통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품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시('94)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실시('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15) 원산지표시 위반자 교육 이수 의무화('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점 표시 대상 확대 (12→15품목)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 관 (관세청 → 해수부,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 위반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고도화 등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적 기반 활용 효율적 원산지 표시제 관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 정착으로 유통질서 확립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산물품질관리 (수산물원산지단속 - 디지털 포렌식센터)	직접	6,676 (246)	6,708 (246)	6,313 (-)	6,152 (-)	6,073 (246)	6,073 (-)
차세대 수산물 품질관리 및 검역 시스템구축 (원산지 추적 및 판별기술 고도화)	출연	1,923	3,135	3,120	1,664	-	-
수산물품질관리 (수입유통이력제운영)	직접	1,022	1,139	779	779	779	779

* 국고지원액만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구분'란에는 직접수행, 보조(보조율 표시), 용자, 출연 등 재원지원 성격을 표시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디지털 포렌식센터 설치 확대 ¹⁾ (개소)	1	2	2	2	3	3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확대 ²⁾ (품종)	47	49	52	55	58	60

1)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디지털 포렌식센터 설치 확대

* 추진목표(누계) : ('20) 1 → ('21) 2 → ('24) 3개소

** 측정방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디지털 포렌식센터 설치 관련 내부 문서

2)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확대

* 기술 개발 현황 및 목표(누계) : ('19) 45 → ('20) 47 → ('22) 52 → ('25) 60품종

** 측정방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검정 업무계획 관련 성과보고

과제번호	3-1-2-⑥	과제명	유통이력신고 관리 강화 및 관리품목 조정
담당자	관세청 통관기획과 임동욱 사무관(T. 042-481-7851)		

1. 배경 및 필요성

□ 수입식품 유통이력신고 관리 강화 및 관리품목 조정

- 효율적인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농·수산물은 소관부처로 업무 이관
 - * 유통이력 신고건수 : 942만건('17) → 1,137만건('18) → 1,169만건('20)
- 원산지 부정유통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시기별로 집중 감시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점검 실시 등 관리 강화

2. 추진 계획

□ 취약 시기별 유통이력신고 실태 집중점검 실시

- 국산·식용 둔갑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취약 시기별*로 유통이력신고 실태 집중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여부 점검
 - * 설명절, 가정의 달, 여름철, 추석절, 김장철

□ 수입·유통업체의 유통이력신고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연중)

-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홍보 실시

□ 효과적인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농·수산물은 주무부처로 이관

- 수산물은 해양수산부로 이관('20.10.1)하고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22년)하기로 협의 완료, 이관 시까지 품목관리 철저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수입 후(後) 관리	거래내역 신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유통이력신고 시스템 개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이력신고 점검 강화 유통이력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 시기별 집중점검 실시 및 홍보 강화 농수산물에 대해 유통관리 소관 부처로 업무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물에 대해 유통관리 소관 부처 관리 체계로 전환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유통이력신고 집중점검 실적(%)	60	80	-	-	-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연간 유통이력신고 집중점검 이행률(%)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연간 취약시기별 집중점검(최대 5회) 이행실적, 다만, 21년 이후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이 완료될 예정으로 업무이관 완료 시까지 성과지표 운영

과제번호	3-1-2-⑦	과제명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담당자	관세청 기획심사팀 김승현 사무관(T. 042-481-7742)		

1. 배경 및 필요성

□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 산하세관에 단속인력을 증원하고 국민감시단을 활용한 정보수집으로 민간의 감시 역할 강화하여 표시위반 고위험 품목*에 대한 집중단속

* 일본산 수산물 활우렁쉥이 등 표시위반 적발(5개 업체, 133톤, 4.3억원 적발)(’20.1월)

2. 추진 계획

□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

- 식품류의 수입통관 실적*이 많은 지역세관에 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고위험품목 정보분석 강화 등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중점단속

* 수입증량기준 평택(전국2위), 전주·군산권(전국4위), 여수·광양권(전국6위)

-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간담회로 우범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원산지표시단속기관협의회 지자체와 협업단속 체계 마련

□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법규 준수 환경 및 민간 감시역할 강화

- 원산지 위반이 많은 품목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방법, 위반사례 등에 대한 사전안내 실시하여 경미한 위반 사전예방

- 지능화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및 민간전문가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민간의 원산지표시단속 참여 활성화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위생 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정부원산지 단속기관간 협의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물 단속 권한을 활용한 자체 기획단속 또는 범정부 합동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 법규 준수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요원 활용한 품목별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위반사례 등 표시제도 사전 안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생산자 단체와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생산자단체 등 국민감시단 활용 민간 감시 역할 강화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수입 식품류(농수산물) 검사비율 확대	6.8%	8.3%	9.4%	10.4%	11.5%	12.5%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전체 단속건수에서 수입식품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검사 비율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전산시스템 출력

과제번호	3-2-1-①	과제명	다소비 수입식품 HACCP 의무 적용 추진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권혁승 사무관(T. 043-719-2162)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황선순 사무관(T. 044-719-6210)		

□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식품 HACCP 의무 적용*과 동등하게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제조단계 HACCP 의무 적용 필요성 대두(現 제조업소 정보등록만으로 수입)
 - 특히, 김치 수입량 지속 증가**에 따라 국내와 동등수준 안전관리 요구
 - * 국내 의무품목 인증 업소(개소): ('09)320 → ('12) 1,130 → ('16) 2,885 → ('18) 3,719
 - ** 김치 수입량(만톤) : ('15) 22 → ('16) 25 → ('17) 28 → ('18) 29 → ('19) 31

√ '쓰레기장 같은 중국 식품공장..김치재료'('17.10 세계일보), '방부제 김치..불안한 중국식품'('17.9 JTBC)

□ 추진 계획

- 수입식품 HACCP 의무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공포(20.4월)
- 수입식품 HACCP 인증 및 조사·평가 등 위탁기관을 정한 「수입식품법 시행령」 개정(21.7월)
-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 시기 및 인증요건,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21.7월)

구분	적용 기준
1단계('22년)	'19년 수입량 10,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2단계('23년)	'19년 수입량 5,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3단계('24년)	'19년 수입량 1,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4단계('25년)	'19년 수입량 1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5단계('26년)	모든 해외제조업소

※ 의무화 품목 및 시기는 시행규칙에서 지정

- 수입김치 HACCP 의무 적용 관련 한·중 실무회의 개최 및 해외 제조업소 HACCP인증 및 조사·평가('21~'24)
- 수입식품 HACCP 의무화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고시 제정(21.7월)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수입 전단계 안전관리 강화	다소비 수입 식품 HACCP 적용	-	▪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제정·시행	▪ 다소비 수입 식품 HACCP 적용 법령 개정 ▪ 수입 김치 HACCP 표준 기준서(매뉴얼) 개발	▪ 수입 김치 HACCP 적용 기반 조성('21) ▪ 수입 김치 HACCP 적용 의무화	▪ 다소비 수입 식품 HACCP 의무적용 품목 확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직접수행	-	100	105	110	116	122

* '다소비 수입식품 HACCP 적용' 내역사업 기준 금액

□ 성과 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수입식품법령 개정	법 개정·공포	하위법령 개정·공포	-	-	-	-
수입식품 HACCP 적용 업소수(개소)	-	-	9	20	40	6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해외제조업소 중 수입식품 HACCP을 적용하는 업소수(누계)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매년 말 기준 HACCP 인증 업소수

과제번호	3-2-1-②	과제명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황선순 사무관(T. 043-719-6210)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강성필 사무관(T. 043-719-6202)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권혁승 사무관(T. 043-719-2162)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김익상 사무관(T. 043-719-6172)		

□ 배경 및 필요성

- 해외제조업소(작업장)의 위생·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수출국 현지 부터 점검·확인하여 안전한 식품 수입 유도
 - * 연도별 현지실사 : ('18) 407개소 → ('19) 458개소 → ('20) 460개소
- 다만,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 전염병 등 현지실사 수행이 불투명할 경우 비대면 심사로 전환하여 안전관리 실시
- 우리나라와 동등이상인 제품만 수입되도록 수출국 정부의 위생평가* 확대
 - * 축산물 및 어류머리·내장 등 특별위생관리 식품 수출국 사전 위생평가

□ 추진 계획

- 비대면 서류심사 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공포('21)
 -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상황 등의 경우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비대면)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수입현황·위해정보 등 분석, 부적합 업소 중심으로 현지 실사 강화
 - 부적합 이력 품목 제조업체, 국내외 위해정보 등 관련 제조업소 현지 출장 실사('17, 390개소 → '25, 540개소)
 -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입상위 제조업소 대상 서류검토 등 실시
 - * 식품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첨가물)제조업소 7,000여개소 대상
- 수입허용 요청 축산물 및 특별위생관리식품 수입위생평가(연중)
 - * ▲ 표준 설문서 및 위생증명서 마련('21) ▲ 평가기준 개발('22) ▲ 수입위생평가수입위험 분석 시스템 구축('23) ▲ 축산물 수입허용 국가(품목)에 대한 재평가 세부기준 마련('25)

○ 인터넷, 모바일 기술 활용 온라인 비대면 현지실사 시스템 구축
 (('20) 시범구축 → ('21) 본 구축)

- 해외제조업소에서 온라인 심사서류 제출 → 서류검토·평가

* ▲ 점검 제조업소 대상 선정 ▲ 자가 점검 결과 제출 ▲모바일 화상회의 ▲ 제출 자료 검토 관리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수입 전 단계 안전 관리 강화	현지 생산제조 단계 안전관리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합 발생 해외제조업소 위주의 현지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해우려업소 및 국민소비 식품 제조업소 대상 현지실사 현지실사 방해 기피 업체 수입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서류심사 법적근거 마련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기반 과학적 예방 관리 및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수출국의 위생 관리체계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 수입 위생평가 규정 제정 및 평가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위생관리 식품 수입위 생평가 규정 제정 및 평가 체계 구축 과학적 위생 평가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간 수입 위생(위험) 평가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 수입허용 국가 및 품목 대상 재평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직접수행	984	1,287	1,351	1,419	1,490	1,564
수입축산물 검사	직접수행	386	390	410	430	451	474
수입수산물 검사	직접수행	129	129	135	142	149	157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직접수행	342	342	342	342	342	342

□ 성과 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	5.30	5.56	5.83	6.11	6.40	6.72

* 지표 측정방식 : (사전 안전 관리 제품 수입건수 / 전체 수입식품 건수) × 100

과제번호	3-2-1-③	과제명	수입축산물 검역 관리 강화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이재명 사무관(T. 044-201-207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이민혜 사무관(T. 054-912-0420)		

□ 배경 및 필요성

-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FTA 체결 확대 및 시장 개방으로 인한 축산물의 수입 증가로 수출작업장에 대한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 감독 필요
- 위생·안전 문제가 지적된 사례가 있거나, 위해발생 사전 차단조치가 필요한 해외 수출작업장을 선정·관리하여 위해 축산물 수입 차단
- * '19년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결과: 미승인 2개국 3개소, 현지시정 6개국 10개소

□ 추진 계획

- (승인·점검) 중점관리 해외 수출작업장을 선정, 위해요소 집중 관리
 -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신규 제정 국가(품목), 전년도 불합격 상위 작업장 등을 점검대상에 우선 배정, 수출작업장 관리 강화 추진
- (승인취소) 수입실적 유무에 따라 승인작업장 현행화로 작업장 관리 강화
 - 국가별 3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수출작업장은 승인 취소 등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5~'17	'18~'20	'21~'25	'26 이후
해외작업장 관리	문제작업장, 신규작업장 중점관리(미국산 쇠고기) 작업장 등에 대한 현지점검	30개국 217개소 점검	18개국 124개소 점검 ('20년은 코로나19로 잠정연기)	매년 10개국, 60개소 점검	'21-'25 점검결과 분석에 따라 계획 수립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동축산물검역검사* (해외작업장 관리)	직접수행	13,538 (182)	13,683 (182)	14,093 (190)	14,375 (190)	14,519 (195)	15,000 (200)

*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 추진을 위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소관 사업임

※ '21.: 기재부 한도외 요구금액, '22.~'24. 중기재정 확정금액

□ 성과지표

○ 연도별 성과지표(평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연도별 현지점검 추진실적 (국가, 개소수)(%)	80	81	82	83	84	85

○ 연도별 성과지표(코로나19 상황 등 현지점검이 어려울 경우)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연도별 현지점검 추진실적 (국가, 개소수)(%)	30	32	34	36	38	4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연초에 수립된 연도별 현지점검계획(국가, 작업장)의 달성여부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연도별 현지점검목표 ○개국 ○○개소 대비 실제 달성
○개국 ○○개소 %

*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국외출장 제한 시 연간 현지점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과제번호	3-2-2-①	과제명	수입식품 통관 검사관리 효율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가정훈 사무관(T. 043-719-223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박진아 사무관(T. 044-719-221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장현철 사무관(T. 044-719-2220)		

□ 배경 및 필요성

- 문제 식품·영업자 중점관리 중이나, 부적합비율은 매년 약 0.2% 수준
 -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은 수입검사를 완화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은 검사를 강화하는 선택과 집종의 수입검사 제도 운영 필요
- 국내·외 위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또는 위해 우려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영업자 책임강화 필요
 - * 검사명령 : 훈제건조 어육 등 18개 품목 운영 중('20년 기준)

□ 추진 계획

- 장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우수수입업소의 제품에 대하여 신속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운영
 -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제품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부적합이력이 없는 제품에 대해 차년도 수입물량을 즉시 통관
 - * (의무사항)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 및 관리(매년 1회)
-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제품 및 위해 검사항목 위주 집중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연중)
 - 지능형 수입식품시스템을 통해 수입식품등의 위해등급을 판정하여 위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 강화
 - 국내·외 수입식품의 위해 정보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강화
- 국민 관심 제품* 및 특정일** 대비 수입량 증가하는 식품 검사강화
 - * (예시) 새싹보리 분말, 크릴오일 등 ** (특정일) 명절 제수용품, 김장철 원료 등

○ 국내·외 위해물질 검출, 수입단계 부적합률 등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규 검사명령제 대상·선정관리(연중)

* 검사명령제 품목 확대 관련 이해관계자(수입자, 대행자 등) 홍보 및 제외국 통보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통관단계 수입식품 검사 관리 효율화	위해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제정·시행	·신 고 수 리 보류제 도입 ·지능형 수입 식품 검사 시스템 도입	·품목별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검사 명령제 확대 운영	·국가간수출·입 식품 위생 관리 협력 체계 구축

□ 예산 사항 : 해당 없음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입식품 안전관리	직접수행	3,773	3,794	11,050	11,603	12,183	12,792
수입축산물 검사	직접수행	1,846	1,850	1,943	2,040	2,142	2,249
수입수산물 검사	직접수행	2,236	2,246	2,358	2,476	2,600	2,73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검사명령 대상 운영 품목	18	19	20	21	22	23
수입식품 검사 부적합률(%)	0.19	0.19	0.19	0.19	0.19	0.19

* (검사명령제) 운영품목의 누계로서 운영 후 해제된 품목도 포함한 지표임

* (검사 부적합률) 최근 3년간('17~'19년) 부적합률 평균치(0.19)로 '20년 목표치 설정
지표 측정 방식 : 수입식품 검사 부적합률(%) = (수입식품 검사 부적합 건수/수입식품 검사 전체 검사건수)×100

지능형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도입으로 부적합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영업자에게 사전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여 동일한 수준 유지 목표로 설정

과제번호	3-2-2-②	과 제 명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식품 안전관리 강화
담 당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최은주 사무관(T. 043-719-6256)		

□ 배경 및 필요성

- 해외직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 예방

* 해외직구식품 반입 : ('17) 779만건 → ('18) 997만건 → ('19) 1,375만건 → ('20) 1,769만건

- 무분별하게 국내 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위해우려성분 함유 여부 검사 실시 및 위해정보 제공 강화 필요

□ 추진 계획

-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매·검사 실시 및 부정물질 검출 제품 관세청 통관차단 요청 및 위해정보 제공(연중)
 - 국내 해외직구 인기·다소비 품목, 위해정보 관련 품목 등 구매·검사 대상 확대 및 검사 결과 알림
 -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홈페이지 공개 및 소비자 구매 시 주의사항 홍보
-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방안 협의 등 해외직구 사이트 운영 민간 업체(통신판매중개업체 등)와의 민·관 협업(연중)
- 해외직구식품과 구매대행식품의 금지성분 일원화를 위한 '통관금지 성분 선정기준 가이드라인' 마련(12월)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식품 안전관리 강화	· 안심하고 구매하는 해외직구 소비 환경 조성	-	-	해 외 직 구 식품 구매 검사 및 위해 정보 제공	구 매 검 사 확대 및 지속 정보 제공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수입식품 안전관리	직접수행	130	455	478	502	527	553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결과 통관 차단 요청 비율	7.2	7.1	7.0	6.9	6.8	6.7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관세청에 통관차단 요청하는 부정물질 함유 해외직구 식품의 비율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총 구매·검사건수 대비 검출제품의 비율 (예시: 1,000건 검사결과, 100건 통관차단 요청하는 경우 10%로 산정)

과제번호	3-2-2-③	과제명	해외직구 유해식품 차단 등 통관관리 강화
담당자	관세청 특수통관과 정수민 사무관(T. 042-481-7835)		

1. 배경 및 필요성

- 개인무역 활성화로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은 크게 증가* 중이며 자가사용 소액물품인 해외직구물품은 통관 시 수입요건확인을 생략
 - * 특송 전자상거래(천건) : ('17) 23,592 → ('18) 32,255 → ('19) 42,988 → ('20.8월) 36,867
- 이를 틈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품 등이 반입될 수 있어 해외직구 유해 식품류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필요

2. 추진 계획

□ 해외직구 유해 식품류 통관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입 차단 중인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정제·연계
 -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 해외직구 식품류 수입신고 시 위해식품의 선별 및 검사를 통한 통관보류 등 통관관리 강화

□ 해외직구물품 수하인 관리 강화

- 타인명의를 도용한 불법 식품 반입차단을 위해 해외직구물품 목록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로 반입자 실명관리 강화
- 반입자 실명정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식품류 반입자와 빈번 반입자를 분석·심사하여 불법 반입을 집중관리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소규모 반입 물품 관리	해외직구 불법식품 국내 반입을 차단을 위한 선진 통관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위해 식품 정보 식약처와 공유 및 활용 특송업체 배송 관리 등 통관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직구 위해 식품 정보 분석 등 통관관리 강화 특송물류 센터 구축으로 통관 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직구 위해 식품 정보 식약처와 전산 연계 해외직구 반입자 실명제 도입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해 식품 정보 연계 고도화 및 선별·검사 강화 실명정보 활용 통관 단계 및 사후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직구 불법 식품 Smart 통관 관리 체계 구축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해외직구 실명제 이행률(%)	76	80	84	88	92	96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식품류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반입자 실명관리가 주요하여 해외직구 실명제 이행률을 성과지표로 선정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건수 / 해외직구 목록 통관(개인통관) 건수] × 100

과제번호	3-2-2-④	과제명	유통 제품 수거·검사 및 수입업체 지도·점검 확대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최은주 사무관(T. 043-719-6256)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설찬구 사무관(T. 042-719-6257)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박주환 사무관(T. 042-719-6252)

□ 배경 및 필요성

- 부적합 이력품목 및 위해정보, 사회적 이슈제품 등에 대한 신속 수거·검사를 통한 위해우려 수입식품 유통 차단 필요
 - * ('19) 독일 맥주 글리포세이트 검출 보도에 따른 국내 여론 불안감 조성 → 국내·수입 맥주 41개 제품 검사 결과(불검출) 발표로 국민 불안감 해소
- 인터넷 불법 판매 및 무신고 수입행위 점검, 행정처분 이력업체 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및 소비자 불안감 해소
- 보따리상 등 개인휴대 반입 행위 관리강화를 통한 유해제품 차단
 - * (주요물품) 대두, 울무, 참깨, 건고추, 녹두, 팥, 메밀, 등 농산물 및 참기름

□ 추진 계획

- 다소비 식품, 제외국 이슈제품 등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연중)
 -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식품, 명절·계절별 성수식품 등 검사
 - 해외 위해정보, 사회적 이슈 제품 및 국민청원 제품 검사
- 선제적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업체 지도·점검 실시(연중)
 - 행정처분 이력업체나 점검 미실시 업체, 수입실적 상위 업체 점검
 - 위해정보·언론보도 등 이슈발생 관련 지도·점검, 계통조사 실시
- 보따리상 휴대반입 식품에 대한 항구별 구매검사(연중)¹⁾
 - 부적합 시 동일제품의 동일제조사 상표 3개월 간 반입차단(관세청)
 - * 연간 구매·검사(40건) : 인천항(10), 평택항(30)
 - * 구매·검사 대상 : 휴대반입 농산물, 가공식품 등(잔류농약 등 기준규격 검사)

1)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중국 등으로부터 휴대반입식품 반입 여행객이 전무한 상태임. 따라서 '21년도에도 동일 상황 지속 시 해당 물품 구매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이후
위해우려 수입식품 유통 차단	국내유통 수입 식품 사후관리 강화	-	-	위해도별 관리계획 수립	지속·확대

* 매년 이전연도 수거검사 추진실적 및 수입실적을 종합적 비교·분석을 통해 위해우려 대상 등 지정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 분	'20	'21	'22	'23	'24	'25
수입식품 안전관리	직접수행	500	500	550	600	650	700

□ 성과 지표

(단위 : 건)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6,000	6,400	6,800	7,200	7,600	8,000
수입업체 점검 업소수	1,000	전년도 대상업체 + 10 %				
휴대반입식품 구매검사*	35	40	100	300	500	5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중국여행객(일명 다이공)이 중국과 국내를 오가는 화객선에 탑승하여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품을 구매하여 검사 실시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구매검사 건수/목표건수 *100

과제번호	3-2-2-⑤	과제명	여행자 휴대반입 식품 관리강화
담당자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현주 사무관(T. 042-481-7831)		

1. 배경 및 필요성

- 위해 식품 및 가축질병 관련 식품 통관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 자가사용으로 가장한 상용 식품 심사 철저를 통한 식탁안전 구현
- 빈번출입국자(일명 보따리상)를 통해 반입되는 식품 통관관리 강화
 - * ASF 국내발병으로 가축질병 위기단계 “심각” 격상('19.9) 및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국내 불법유통 적발('20.6, 부산 경찰) 등

2. 추진 계획

- 항공 및 선박을 이용하는 여행자 휴대 반입 식품 통제
 - 불법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반입차단을 통한 오남용 방지
 - 자가사용기준 범위 준수 및 식약처 승인여부 확인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관련식품 국내유입 방지
 - 축산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 관계기관 검역인계 철저
 - 농림축수산물 등 식품 과다 반입 방지를 위한 통관 관리
 - 1인당 반입 가능 농림축수산물 총량, 품목별 반입 기준 엄격 적용
- 중국發 선박을 이용하는 빈번출입국자의 위해 식품 반입 가능성 차단
 - 위해식품 반입 고위험 지역發(중국 위해, 연태 등) 선박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기타 수하물 등)에 대한 전량 X-Ray 검사 실시
 - 휴대 반입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식품안전성 검사 합격 여부 확인 및 부적합 물품반입 금지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소규모 반입 물품 관리	여행자 휴대 품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농축 수산물 총량 (40KG) 초과 반입 방지를 위한 통관 관리 강화 우범 반입자에 대한 집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X-Ray 검사 등을 통한 여행자 휴대 반입 식품 통제 항만 빈번 출입국자에 대한 검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 위해 식품 반입 우려 여행자 사전 선별 고도화 및 과학검색 장비(CCTV, X-Ray 등) 지속 활용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국민안전 위해 물품 반입차단 일제 검사	2,500	2,750	3,000	3,250	3,500	3,75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불법 식품·의약품·축산가공품 등 국민안전 위해 물품 집중 일제검사(편수)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국민안전 위해 물품 관련 연중 일제검사 실시 횟수

과제번호	3-2-2-⑥	과제명	농산물 등 보세구역 실물관리 강화
담당자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이혜민 사무관(T. 042-481-7825)		

1. 배경 및 필요성

- 고위험 농산물 등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구역內 실물관리 강화 요구
 - 고세율 농산물 및 검사불합격 식품을 정상품과 바꿔치는 방법 등으로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무단반입하는 위험 지속
 - * 3개 보세창고에서 식품검사를 받지 않은 냉동고추 260톤 밀수입 적발(평택세관, '19년)
 -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對중국 LCL화물 및 농산물 등 고위험 화물에 대한 집중관리 및 실물관리 필요

2. 추진계획

- 보세구역 위험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위험도 기반 화물관리
 - 세관화물부서는 ‘보세구역 위험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정보, 순찰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위험분석 기반 확충,
 -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 동향을 토대로 순찰대상 보세구역을 선별하고, 위험정보를 생산하는 등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
 - 보세구역 법규수행능력평가, 화물특성, 위험동향 등을 종합·분석하여 對중국 LCL화물 및 농산물 등 고위험 화물에 대해 집중관리
- 세관별·보세구역별 현장중심 실물관리 강화
 - 세관별로 보세구역에 대한 위험지표 발굴하고 위험지표별 가중치를 직접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위험관리 체계 확립
 - 농산물 보세창고 등 고위험 보세구역에 대한 지속적 단속 전개하고, 수입식품 등을 보관하는 보세구역에 대한 특허관리도 강화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통관 단계 관리	보세구역 등 재고조사 강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도 기반 화물관리를 위한 보세구역 위험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 확충으로 화물 관리 기반 강화 위험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순찰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세화물 위험 관리 고도화 및 CS 개편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보세구역 현장점검 실적(%)	100	100	100	100	100	1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해당년도에 보세화물관리직원이 관할 보세구역에 출무하여 보관화물의 이상여부 및 보세구역 운영상황을 점검한 실적을 보세구역 수에 대한 비율로 산정(보세구역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비율)

(위험모니터링시스템[순찰일지]에 화물 및 보세구역 확인내용을 입력하여 전산관리)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년간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확인건 수 / 년간 보세구역 수) × 100

과제번호	3-3-1-①	과제명	위·변조식품 판별 감시기법 고도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중유해물질팀 김형수 연구관(T. 043-719-4452)		

□ 배경 및 필요성

- 수입국의 다변화, 제조·가공방법 다양화 등으로 새로운 위해요소 증가
 -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저가의 원료를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정물질을 첨가하는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사례 지속 보고

- 식약처 전수조사... 시중 백수오 제품 5%만 진짜(세계일보, '15.5.21)
- 왁스원료 '식용 금지' 기름치, 메로로 둔갑 전국 유통(MBC, '16.9.7)
- '민어'샀는데 '점성어'가? 못 믿을 수산시장(MBC, '17.8.2)
- 오징어빨판 '문어'로 둔갑 판매한 업체 적발(뉴스1, '18.4.13)
- 미국산 돼지를 스페인산 이베리코로 속여 판매한 업체 적발(조선일보, '19.5.1)
-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한 '매스틱' 포함된 제품 수입·판매 적발(쿠키뉴스, '19.10.14)

□ 추진 계획

-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및 재검증
 - 종특이 판별법, 현장신속 검출 키트 등을 이용한 다소비 농·수산물 진위판별법 개발(연중)
 - DNA 바코드법을 이용한 가정간편식, 영유아식, 미래식품(곤충, 대체육)등 유전자 바코드 정보 확보 및 유통실태 조사(~'21)
 - 기 개발된 식품원료 진위판별법에 대한 재검증 및 최근 과학적 기술 기반의 판별법 개선('21~'23)
- 위·변조 식품 및 소비자 기망 식품 판별법 개발
 - 휴대용 센싱 기법을 활용한 히스타민 등 정량 리더기 개발('21)
 - 불량 고춧가루 진위판별 및 품질평가 기법 개발('21)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감시기법의 과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직한 식품 유통을 위한 과학적 감시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특이 프 라이 머 를 이용한 가짜 식품 판별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분석법 개발 연구 건강기능식품 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연구 DNA분석에 기반한 농 수산물 등의 유사종 판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량식품 근절 과학적 감시 및 판별법 개발 연구 유전정보를 이용한 수산물 품종 판별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연구 유전자 기반 식품 원료 판별법 확립 및 비교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자 기반 식품 원료 진위 판별 기술 재검증 및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 판별법 개발 현장 시속 감시 및 점검을 위한 키트 개발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식품 등 안전관리(R&D)	국고 (직접수행)	2,100	2,100	300	300	300	3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위·변조식품 판별법 개발 건수	70	75	80	85	90	95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유전자, 이화학적 방법의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표준 유전자 바코드 정보 포함) 및 불량식품 판별법

과제번호	3-3-1-②	과제명	혼입예상 부정물질 차단 첨단분석법 개발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 김진호 연구관(T. 043-719-5324)		

□ 배경 및 필요성

- 의약품 성분을 식품에 혼입하고 의약적 효능을 광고·판매하는 불법 제품이 해외 직구 등 인터넷 유통망을 통해 꾸준히 거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증대
 - 최근에는 위해사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이미 알려진 의약품의 화학구조를 일부 변형시킨 신종 부정물질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 기 알려진 부정물질 외에 새로이 혼입이 예상되는 신규 부정물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분석법 개발 및 표준품 확보 필요

□ 추진 계획

- 시험법 개발·개선을 통한 부정물질 분석 영역 확대
 - * 분석가능 성분수: ('17) 467 → ('18) 481 → ('19) 501 → ('20) 530
- 불법 식품 선제적 차단을 위한 부정물질 신규 분석법 개발
 - 근육강화 효능 광고 식품 중 불법 혼입될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SARMs(선택적 안드로젠 수용체 조절물질) 동시분석법 개발('21)
 - 뇌기능 및 호흡기질환 개선·치료 효능 광고 식품 중 불법 혼입 의약품 성분 동시분석법 개발('22~'23)
- 새롭게 규명되거나 단종 또는 고가로 인해 구입하기 어려운 부정 불법 식·의약성분의 표준품 합성('21~'23)
 - 부정물질 유사구조 예측, 합성법 개발 및 표준품 합성
- 부정불법 식의약품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기술지원(연중)
 - 인천세관, 대검찰청, 국과수 등에 분석정보 및 표준품 제공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혼입 예상 부정물질 차단 첨단 분석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중 불법 혼입 부정물질 분석법 개발 및 표준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중 비만 치료제 성분 및 그 유사 물질에 대한 분석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중 고혈압치료제 및 그 유사 물질에 대한 첨단분석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중 골다공증·통풍 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성분에 대한 첨단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 스테로이드류 합성법 개발 및 표준품 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혼입 부정물질 (SARMs 등)에 대한 첨단 분석 시스템 개발 연구 부정 불법 식의약품의 표준품 합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혼입 부정물질 선제적 차단을 위한 분석 영역 확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안전성평가기술개발 (R&D)	국고 (직접수행)	600	600	600	600	600	6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분석가능 부정물질 성분수(증가율)	530 (5.8%)	557 (5.1%)	585 (5.0%)	610 (4.3%)	640 (5.0%)	670 (5.0%)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증가율 = (전년대비 증가 성분 수 ÷ 분석가능 성분 수) × 100

과제번호	3-3-2-①	과제명	부정식품 사범 단속 강화
담당자	법무부 형사기획과 이갑호 주무관(T. 02-2110-3271)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엄단 및 선제적 대응 필요

□ 추진 계획

- 부정·불량식품사범 엄단 및 선제적 대응('21~'25)
 - 악의적인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사건 엄단 처리 지시
 - 적극적인 수사지휘를 통한 유기적·지속적 단속활동 전개
 - 식약처 및 지자체 특사경과의 특별단속반 편성을 통한 부정식품사범 집중 단속 실시
- 철저한 범죄수의 환수를 통한 범죄유인 차단('21~'25)
 - 범죄수의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탈루수의 국세청 통보, 압수된 불량식품·원재료·제조도구 몰수, 폐기 등 경제적 이익 박탈을 위한 부수처분 철저
- 유관기관 협업 강화, 지능적·신종 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21~'25)
 - 전문수사관 확충 등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의 수사 전문성 강화
 - 대검 및 각 검찰청별 특사경 협의체 회의 및 간담회 개최
 - 대검 과학수사부의 특사경 디지털포렌식 교육 실시
 - 법무연수원의 특사경 수사 일반 교육 및 식품 특사경에 대한 타겟형 수사 교육 실시
 - 각 검찰청 별 실정에 맞는 특사경 전문수사 교육 실시

□ 예산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부정식품 관련 회의 개최 실적, 교육실적 등 점수(점)	130	130	130	130	130	130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부정식품 관련 회의 개최실적, 부정식품 사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적을 점수화로 목표치(130점) 설정 【회의 개최 횟수(×3점) + 식품전담검사·검찰수사관 교육(×2점) + 법무연수원 특사경 교육(×2점) + 검찰청 특사경 교육(×2점)】

과제번호	3-3-2-②	과제명	식품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담당자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규철 서기관(T. 02-2110-3256)		

□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식품 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도모하고 평상시 식품안전 기준 준수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식품 분야에도 도입

*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현재 증권분야에 한정하여 도입)

- (필요성) 위해식품으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수행 부담 등으로 개별 피해 구제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피해에 상응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 수익이 계속 보유됨에 따라 위법행위가 억제되지 않는 한계 존재

□ 추진 계획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위한 법안 마련 및 추진('20. 연내 국회 제출)
 - '20. 9. 28. 식품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안」(정부안) 입법예고, '20. 12. 1. 공청회 실시
 - '21. 국회 제출 및 연내 국회 통과 노력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법령 개정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위한 법안 마련 및 통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대 개원에 따른 집단소송제 도입법안 마련('20) 입법예고 및 공청회('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제출('21~) 국회 통과 노력('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시행

□ 예산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도입 법안 마련 및 국회 통과	· 법안마련 · 입법예고 및 공청회 · 홍보 등 입법지원	· 국회제출 · 국회설명· 홍보 등 국회통과 노력 · 국회통과	· 국회상정 · 국회설명· 홍보 등 국회통과 노력 · 국회통과	· 국회상정 · 국회설명· 홍보 등 국회통과 노력 · 국회통과	· 국회상정 · 국회설명· 홍보 등 국회통과 노력 · 국회통과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입법과제로서 입법과정 단계별 지표 설정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법안마련, 국회 제출, 국회 법안소위 상정, 국회 설명 및
언론 홍보 등 입법노력 등을 지표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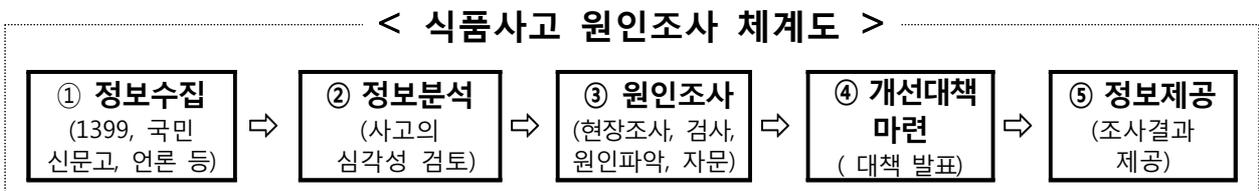
과제번호	3-3-2-③	과제명	식품안전사고 및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원인규명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박현정 사무관 (T. 043-719-2055)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권용관 연구관 (T. 043-719-2456)		

□ 배경 및 필요성

-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이 피해를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나서서 체계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피해구제 등 지원 필요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조사·분석·공표의 법제화('20) 이후, 보고 건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상사례 원인규명 강화
 - * 이상사례 신고 건수 : ('18) 696 → ('17) 874 → ('18) 964 → ('19) 1,132 → ('20) 1,196

□ 추진 계획

- 「식품사고 원인조사반」 운영 계획
 - 일상적인 사고는 지자체에서 조사하고, 인체 피해가 큰 사고*의 경우 식약처·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원인조사반 구성·운영('20.3월~)
 - * 신체부위의 손실·장애 발생, 사망, 다수 지역(2개 이상)에서 동시 발생하는 경우 등
 - 세부운영 절차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원인규명 강화
 - 이상사례 조사·분석 전문가 풀 구성('21)
 - * 중대한 이상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주요 증상별 전문가풀 구성
 - 다빈도 이상사례 유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 변경 등 행정조치 강화('21)

- 이상사례 영업자 보고 의무화('20.6)에 따른 보고시스템 개선('22)

* 식품안전나라(영업자 보고창구)와 이상사례보고시스템(한국식품정보원)과의 연동 개선 등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식품 안전 사고 피해 구제 지원 강화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 예방 대책 마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사고 원인조사반 운영 이상 사례 보고 등 법 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 사례 원인 규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상시 지원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건강기능식품관리 (이상사례 관리강화)	국고 (직접수행)	43	43	43	43	43	43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원인규명 강화	·이상사례 보고 및 공표 법제화	·이상사례 원인규명 강화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이상사례 원인 규명 강화 내용을 지표로 설정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이상사례 원인규명 매뉴얼, 보고시스템 개선 등 노력 등을 지표로 설정

과제번호	4-1-1-①	과제명	식품안전·영양 교육 확대 및 식품위생교육 운영 내실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계선 사무관(T. 043-719-227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류창희 사무관(T. 043-719-2852)		

□ 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청소년의 부적절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을 지속 증가 등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교육 강화 필요
 - * 초·중·고등학생 비만균율(%) : ('16) 22.9 → ('17) 23.9 → ('18) 25.0 (교육부)
 - * 아침결식비율(%) : ('16) 28.2 → ('17) 31.5 → ('18) 33.6 (교육부)
- 영양교육 중요성은 강조되는 반면, 청소년 2명 중 1명은 교육 받은 경험이 없는 등 교육 수혜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
 - * 청소년 영양교육 경험률(%) : ('15) 41.5 → ('17) 46.2 → ('18) 47.2 (교육부)
-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식품위생교육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 * 교육기관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단체 등에서 제도 개선 요구

□ 추진 계획

- 초·중·고등학교 식품안전·영양 교육* 지원 및 실천학교 확산('21~)
 - 실천학교 운영 체험활동 콘텐츠, 온라인 수업용 e-book 보급 등**을 통한 전국적인 확산 운영
 - * 나트륨·당류 적정 섭취하기, 식중독 예방, 영양표시 바로 알기 등
 - ** 초·중·고등학교 교재(e-book 포함) 및 지도서, 미각키트, 핸드플레이트 등
- 식품안전·영양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21~)
 - 학생대상 우수 교육사례 선정 및 우수학교 등 시상을 통한 식품안전·영양 교육 활성화
 - *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 활용법, 우수 사례 공유

- 식품 영업자·종사자 위생교육 강화 및 교육기관 운영규정 합리적 개선
 - 신규 영업자 집합교육 실시 및 영업자 외에 종사자 등으로 대상 확대
 - 교육기관 지정취소 규정 마련 및 갱신제 도입 등으로 교육 내실화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관련 고시 개정(~'23.1월 시행 목표)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건강한 식생활 환경구축	식품안전 영양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영양 교육: 26만 여명 ▪ 초 등 학 교 교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영양 교육: 56만 여명 ▪ 초 등 학 교 교재 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영양 교육: 64만 여명 ▪ 청소년 교육 교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영양 교육: 111만 여명 ▪ 청소년 교육 교재 제작·배포 ▪ 식품 영업자 종사자 위생교육 개선(~'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영양 교육 현장 활용 증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직접수행	205	205	205	205	205	205
국민영양안전관리	직접수행	60	60	60	60	60	6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식품안전·영양교육 수혜율(%)	7.94	7.95	7.96	7.97	7.98	7.99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전국 초등학교 수 대비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 대상 초등학교 수

과제번호	4-1-1-②	과제명	학생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강화
담당자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T. 044-203-6543)		

□ 배경 및 필요성

- 성장기 학생들의 편식 교정 등 바람직한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식생활 교육 확대 필요

□ 추진 계획

- 학교에서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확대(계속)
 - 단위학교에서 「학교 교육활동 운영계획」에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계획'을 반영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 마련·안내
 -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여 교육 실시(월 2회 이상)**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건강교육(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 교육 등) 포함
-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교육자료 보급·홍보('21)
 - 영양교육 교육자료('20년 개발)의 현장적합성 검토를 위해 시범(참여)학교 및 교사연구회 등 운영('20.하)
 - * 개발된 교육자료를 수업 및 연구를 통해 현장적합성 검토
 - 실효성 있는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및 콘텐츠 보급 및 홍보*(계속)
 - * 학생건강정보센터 : www.schoolhealth.kr, 학교급식 정보마당 : www.sfic.go.kr
-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계속)
 - 비만·당뇨·고혈압·식품알레르기 등 식사조절이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영양상담 실시(계속)
 - * 학교 급식관리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양상담실' 개설하여 운영
 - 학생 건강 문제 분석을 통한 학교 영양상담 교육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21~)

○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양교사 배치 확대(계속)

-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여 단계적 배치 확대

* 공립 영양교사 정원 증가 현황 : ('15) 52명 → ('16) 58명 → ('17) 54명 → ('18) 585명 → ('19) 259명 → ('20) 198명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학교 식품 안전 및 영양 교육	학교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교사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에 안전·건강 교육 포함(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 보급 학교 영양상담 가이드라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 디지털 및 원격 콘텐츠 개발

예산 사항 : 해당 없음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학교 영양상담실 설치 및 운영율(%)	75	80	85	90	95	95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개정>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학생 맞춤형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을 위해 영양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영양상담실을 설치(급식관리실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 및 운영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학교 영양상담실 설치 및 운영 학교수 / 전체 급식 학교수 X 100

과제번호	4-1-1-③	과제명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확대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이성준 사무관(T. 044-201-2272)		

□ 배경 및 필요성

- 식생활·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로 건강 관련 지표의 개선이 미흡하고, 농업·환경이 갖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약화
 - 비만·당뇨병·음식물 쓰레기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으로 작용
- *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11.5조원, '18), 음식물쓰레기의 사회·경제적 비용(20조원, '18)

□ 추진 계획

-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확대를 통해 현재·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지원
 - (영유아)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계절별 텃밭·농촌체험과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환경 인식 제고 및 영양 개선
 - (취약계층) 학교밖 청소년, 미혼모, 장애어린이 등 식생활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레시피, 영양 정보, 식품 안전 교육 등 추진
 - (전문인력) 사범대, 유아교육과 등 식생활교육 관련 교과 수강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식생활 교육 방식 발굴
 - * 원격 수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향후 실제 식생활 교육에도 적용 검토
 - (고령자) 지역 내 협업에 기반을 둔 '고령자 식생활·건강 개선 교실' 운영으로 고령자들의 예방적 식생활교육 지원(질병별 식품 안전, 영양 교육)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보조	5,084	4,884	5,487	5,597	5,653	6,048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수(천명)	509	545	550	550	550	550

* 지표 및 측정방식 설명 :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치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 단, 예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22년 이후 목표 재검토 필요

과제번호	4-1-1-④	과제명	임산부·영유아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및 영양플러스사업 확대 운영
담당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김준범 사무관(T. 044-202-282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김수민 주무관(T. 044-202-2835)		

□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태아 및 영유아, 임산부 영양관리 지원 요구됨
 - 특히, 영양교육 및 상담은 대상자의 영양문제 해소 및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해 중요한 서비스 과정임
- 최근 감염병(코로나19) 유행 등의 환경변화와 출산 및 맞벌이 가정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 및 요구도가 높아짐
 -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교육 접근성을 증대하고, 임산부·영유아 등의 건강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화 필요

□ 추진 계획

-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대상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21~)
 - 임산부·영유아 보호자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시스템 점검·고도화
 - 임산부·영유아 식생활 관리 강의 등 온라인 교육과정 신규 개발
 -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매체 제작·배포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6까지	'17~'18	'19~'20	'21~'25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영양교육 과정 콘텐츠개발 및 운영	온라인 영양교육 시스템 안정화 및 콘텐츠 다양화	▪ 단체교육 및 개인상담, 가정 방문 위주 대면 교육 실시	▪ 온라인 영양교육 시스템 개발 및 시범적용 ▪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시스템 오픈	▪ 비만과정 등 신규과정 개발 및 운영 ▪ 다문화가족 대상 콘텐츠 강화	▪ 온라인 교육 시스템 고도화 및 교육 과정 확대 운영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보조	52	57	63	69	76	84

* 비만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 내 세부 추진사업으로 수행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교육 활용률(%)	78	80	83	86	89	92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보건소 중 대상자 영양교육 시 온라인 영양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는 비율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온라인교육 활용 보건소 수/영양플러스 운영보건소 수)*100, 설문조사 실시

과제번호	4-1-2-①	과 제 명	나트륨·당류 줄이기 건강 식생활 개선 실천 홍보 확산
담 당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계선 사무관(T. 043-719-2275)		

□ 배경 및 필요성

- 나트륨·당류 줄이기 등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국민의 자율적 참여 확대 필요
 - * 나트륨 섭취량(mg) : ('15) 3,890 → ('16) 3,669 → ('17) 3,478 → ('18) 3,274
 - * 당류 섭취량(g) : ('15) 76.9 → ('16) 73.6 → ('17) 64.7 → ('18) 58.9
- 외식·급식 증가 등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 등) 확산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춘 온라인 홍보 강화 필요

□ 추진 계획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식생활 행동변화 및 식습관 개선을 유도를 위한 다양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저당·저염 실천본부 중심의 생활 속 실천 캠페인 확산 전개
 - * 삼삼·당당한 요리경연대회, 나트륨·당류 줄이기 콘텐츠 공모전, 푸드 토크콘서트 등 대상별·테마별 행사 개최 등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시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온라인 뉴미디어 활용 집중 홍보
 - 생활밀착형 대중매체 및 SNS 활용 시의성 있는 정보 지속 제공
 -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실천 방법 콘텐츠(UCC 등) 제작·보급 등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건강한 식생활 환경 구축	건강 식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국민 참여 행사 * 5천여 명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국민 참여 행사 * 2만여 명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당저염 실천 본부 발족 ▪ 범국민 참여 행사 * 4만5천여 명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당저염 실천 본부 활성화 ▪ 국민 체험형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체험형 행사를 통한 실천의식 향상 (지속)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국민영양안전관리	직접수행	250	239	239	239	239	239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국민 체험형 행사	개최	개최	개최	개최	개최	개최

과제번호	4-1-2-②	과제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을 통한 외식 위생관리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철희 사무관(T. 043-719-2102)		

□ 배경 및 필요성

- 음식점 위생수준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및 식중독 사전 차단으로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 증가('12년 25% → '15년 33.4%)하고 있으나,
 - 음식점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체 발생건수(343건) 대비 61.2%(210건)로 가장 높고(최근 5년 평균),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 안전 체감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 최근 5년('15~'19)평균 식중독 환자 발생(6,874명) 중 27%(1,870명)가 음식점에서 발생

□ 추진 계획

☞ 지정 목표(누계) : ('20) 12,000개 → ('22) 27,000개 → ('25) 37,000개

- * 현실적으로 등급 지정이 가능(이용객이 많고 위생수준 유지)한 음식점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산정하고, 평가능력 등을 고려
- * 사회제도의 변화와 소비트렌드변화(회식문화 감소, 워라밸추구, 혼밥확대)를 반영

- 음식점 위생등급 '우선구역' 지정 확대 추진('21~)
 -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우선구역 지정(지자체) 및 컨설팅을 통한 참여 확대
- 음식점 위생등급 현장평가 전문가 양성을 통한 평가인력 확대(지속)
 - *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 추진(연 4회)
- 음식점 위생등급 희망하는 영업자 대상 현장 맞춤형 컨설팅(지속)
 - * 세부 평가기준 및 주의사항, 현장진단 및 개선방향 등 컨설팅(약 1,500개소)
- 영업자-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협의체 운영으로 등급제 참여 독려(지속)
- 음식점 위생등급제 브랜드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지속)
 - * 음식점 위생등급 교육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동영상 송출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을 통한 외식관리 강화	위생등급제 확산으로 음식점 위생수준 강화	▪ 해당없음	▪ 음식점 위생 등급제 도입	▪ 신청대상 업종확대 ▪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 ▪ 제도연계를 통한 인지도 확산	▪ 지정권한의 지자체 이관 ▪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지정 확대	▪ 효율적 위생 등급 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로 전환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식중독예방 및 관리	직접수행	1,289	1,835	2,450	2,820	3,090	3,36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수(누계)	12,000	22,000	27,000	31,000	34,000	37,0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수(누계)를 성과지표로 설정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위생등급 평가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의 누계

과제번호	4-1-2-③	과제명	식품알레르기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교육
담당자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김은영 연구사(T. 043-719-7432)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5년간 우유, 계란, 땅콩 등 식품알레르기 환자 수와 진료비는 점차 증가
 - 학교나 가정, 사회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식품알레르기 예방 교육은 부족
 - * 식품알레르기 환자 수는 2015년 5,669명 → 2019년 9,503명으로 최근 5년간 67%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 원인 중 약 25%*가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것이고, 이로 인해 사망**까지 연결될 수 있음
 - 사전 예방 및 적절한 응급상황 대처 교육이 필수
 - * 국내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쇼크)의 현황 조사 및 조사체계 기반 연구(이수영, 2015년)
 - ** '14년 인천에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초등학생이 우유가 포함된 카레를 먹고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로 사망

□ 추진 계획

- 식품알레르기 예방 및 관리 교육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수행 보건소 및 광역 교육정보센터 설치* 확대를 통한 식품알레르기 교육 기반 구축('21년~)
 - * '20년 기준 보건소 170개, 교육정보센터 7개 설치·운영 중
 - 식품알레르기 환자 대상 교육의 질 관리와 수용성 향상을 위해 근거기반의 대상자별(학년별, 교사용 등)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21년~)
 -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유관 협회 등을 통해 표준화된 식품알레르기 예방 및 관리 교육('21년~)
-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 대처방안 교육
 - 생활터(학교, 가정, 직장 등)에서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정 대처를 위한 교육* 실시('21년~)
 - * 대면 또는 비대면(실시간 영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실습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식품알레르기 예방 및 응급 상황 대처 교육	식품알레르기 예방 및 응급 상황 대처 교육 확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알레르기 예방 및 관리 교육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응급상황 대처방안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알레르기 및 응급상황 대처방안 교육 확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만성질환예방관리	직접수행	-	-	-	-	-	-
	지자체(50%)	1,370	1,770	1,800	1,800	2,000	2,000
	민보(100%)	50	50	70	100	100	1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식품알레르기 및 응급상황 대처방안 교육 대상 인원(명수)	-	1,800	3,000	3,300	3,600	4,0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관련 협회 등 교육제공자에서 식품알레르기 및 응급상황 대처방안 교육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식품알레르기 및 응급상황 대처방안 교육 대상 인원수

과제번호	4-1-2-④	과제명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 교육
담당자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윤성희 사무관(T. 043-719-7101)		

□ 배경 및 필요성

- 사스('03), 신종플루('09), 메르스('15), 코로나 19('20) 등 감염병 대유행과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의 중요성 증대
 - ※ 손 씻지 않으면 설사 질환 발생 상대위험도 1.88배*, 손씻기로 소화기 질환의 31%, 호흡기 질환의 21% 감소 가능**
 - * Curtis V et al. Effect of washing hands with soap on diarrhoea risk in the community: a systematic review. Lancet Infect Dis. 2003
 - ** Aiello AE et al. Effect of Hand Hygiene on Infectious Disease Risk in the Community Setting: A Meta-Analysis. Am J Public Health. 2008
- 성인의 올바른 손씻기 인지율은 88.3%로 높은 반면, 직접 관찰시 손씻기 실천율은 37.1%에 불과* 하여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 ※ 용변 후 비누로 손씻기 실천율(전화조사): 87.6%('13년) → 92.8%('20년)
 - ※ 용변 후 비누로 손씻기 실천율(관찰조사): 23.5%('13년) → 37.1%('20년)
 - * 2020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실태를 조사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손씻기 실천 문화 정착 추진

□ 추진 계획

-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 (실태조사) 전화면접조사 및 관찰조사를 통해 손씻기 인지율 및 실천율 조사
 - (지자체 예방행태 사업평가) 지자체 사업의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개선안 도출
-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 (손씻기 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시도 교육청과 사업 협력체계(보건교사회, 권역사업단 등) 활용

- (손씻기 홍보) 서포터즈 활동, 배너, 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대국민 캠페인 등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건강한 식생활 환경 구축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조사	▪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 조사 도입	▪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 조사 ▪ 손씻기 교육· 홍보	▪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 조사 ▪ 손씻기 교육· 홍보	▪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 조사 ▪ 손씻기 대국민 캠페인	▪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 조사 ▪ 손씻기 대국민 캠페인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지역사회 예방행태 실태조사	민간경상 보조(100%)	200	180	200	200	200	200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직접수행	600	600	600	600	600	6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용변후 비누로 손씻기 실천율(%)*	40.0	43.0	46.0	49.0	52.0	55.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사람 중 비누로 손씻기를 실천한 사람의 비율

과제번호	4-2-1-①	과제명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문재은 연구관(T. 043-719-2188)		

□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 또는 섭취 여부 판단 어려움 등 혼란 초래
 - * 크림빵 2일, 생면 9일, 맥상커피 30일, 치즈 70일(한국소비자원, '12년)
- 국제적으로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추세이며, 포장기술 발달, 냉장유통 시스템 확충 등으로 국내 유통환경도 개선*
 - 국제조화, 국내 식품 제조·유통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표시하도록 정책 개선 필요
 - * 국내 음식물 폐기 저감을 위해 소비기한 도입 필요(이명수의원, '19년 국감)

□ 추진 계획

-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각 계 의견수렴 및 제도 보완
 - 소비자단체·학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도입 시 준비·필요사항 및 제도 보완 사항 등 지속 논의
 - * ('21~'23) 제도 도입에 따른 업체 준비사항 등 논의 → ('24~)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사항 등 의견청취
- 현행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에 따른 법령·고시 개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고시 개정 및 타 법 사항 정비
 - * ('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 ('21~22)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23)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 소비기한 표시에 따른 안전성 담보, 식품 보관방법 등 교육·홍보

- (소비자)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변경에 따른 혼동이 없도록 식품 구매 후 보관방법 준수 등 소비기한 개념 교육·홍보

* ('21~'25) 소비기한 표시제 개념 등 대국민 홍보

- (산업체)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 조성 등 산업체 대상 교육·홍보

* ('21~'25) 산업체 간담회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 강화	직접수행	484	484	484	484	484	484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입법예고	법률개정	하위법령 고시개정	하위법령 고시개정	-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소비기한 표시제는 의원발의('20.7.2) 중으로 향후 법률 개정예 따라 하위 법령·고시 등 순차적 개정 추진('24~'25년 성과지표는 제도 도입 완료 후 재설정 예정)

과제번호	4-2-1-②	과제명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 운영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문재은 연구관(T. 043-719-2188)		

□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의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영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실증(實證)**”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운영 필요

- 객관적·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거래를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18.3.) 및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19.7.)

** 실증자료 준비방법 문의 등 관련 민원(국민신문고, ’19.1.~’20.5.) : 157건

□ 추진 계획

○ 식품의 효능·효과 등 표시·광고의 실증자료를 영업자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안내하는 **표준 실증 가이드라인 마련**(’21~’23)

* 추진계획 : 기구·용기 항균(’21) → 할랄 등 인증·보증(’22) → 저분자, 중쇄지방 등 흡수율 증진(’23)

* 주요내용 : 정의, 시험요건, 시험방법(효능·효과 지표), 결과보고, 입증서류 등

○ 부당한 것으로 우려되는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영업자에게 실증자료 요구** → **실증하지 못한 표시·광고 사용금지** 등 조치(연중)



* 크릴오일, 콜라겐, 보리새싹분말 등 광고 및 소비량 증가 트렌드 파악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8~'19	'20~'21	'22~'23	'24~'25	'26 이후
식품 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식품 표시· 광고 실증제도 운영	▪ 식품 표시· 광고 실증 제도 근거 규정 마련	식품등 효 능·효과에 대한 실증 가이드라인 마련 ▪ 적극적 모니 터링을 통해 선제적 실증	▪ 식품등 효 능·효과에 대한 실증 가이드라인 마련 ▪ 적극적 모니 터링을 통해 선제적 실증	▪ 적극적 모니 터링을 통해 선제적 실증 ▪ 실 증 자 료 검토를 위 한 표준 규 정 마련	▪ 실증 사례별 자료 준비 및 검토 표준 규정 마련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실증위원회 자문단 운영	직접수행	45	47	50	53	55	6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표시·광고 실증 건수	5	7	10	13	15	2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소비트랜드 등 분석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 우려 내용에 대해 영업자에게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검증을 실시한 건수

과제번호	4-2-1-③	과제명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관리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심진봉 사무관(T. 043-719-1910)		

□ 배경 및 필요성

- 언택트(Untact) 산업화에 따른 온라인 시장 급성장 및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지속 증가*

* 연도별 적발 건수(건) : '16(18,609) → '17(33,593) → '18(31,577) → '19(45,150)

- 코로나19의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 등으로 비대면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 온라인 광고·판매 플랫폼 변화*에 따른 온라인 감시체계 적극적 대응 및 관리 필요

* TV, PC, 텍스트 광고 → 모바일, SNS, 동영상 중심 광고

- 온라인 광고·판매 플랫폼 변화로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지능적·조직적 부당한 광고행위 선제적 대응 필요

□ 추진 계획

- 트렌드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 증대 제품 기획 모니터링 강화

- 국민관심 제품, 반복 위반제품, 사회적 이슈 제품 등에 대한 기획 모니터링 강화

- 유튜브 등 SNS 활용 부당한 광고행위 적극 대응

- 인플루언서 운영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대상 기획 모니터링 강화 (필요시, 현장 조사 병행 실시)

-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제작·배포

- 부당한 광고 판단 기준 및 범위·사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판단 안내서 제작·배포

* 제작·배포 대상 : 온라인 협회·단체 및 판매업체 등

* 판단 안내서의 매년 수정·보완 등을 통해 내용 업데이트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온라인 식약약 안전관리 운영	직접수행	1,303	1,339	2,101	2,335	2,405	2,646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온라인 불법제품 중점 기획조사 언론 노출 빈도(건)	신규	5	6	7	8	9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21년 목표를 '18년 실적 및 '19년 추진상황 등을 고려
'19년 대비 10% 상향 설정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기획조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 시 50개 이상 언론사가 보도한
건수

과제번호	4-2-2-①	과제명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운영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조혜영 사무관(043-719-218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김종수 연구관(T. 043-719-440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윤태형 연구관(T. 043-719-4402)		

□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식품에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 달라는 업계 요구 지속
 - 일반식품에 건강보조적 기능이 있음에도, 외국에 비해 ‘기능성’ 표현에 제약이 커 산업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주장 제기
 - * 외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현을 허용
 -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에도 문헌 등을 참고로 무분별하게 유용성을 표시하는 사례가 있어, 표시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
- 기능성 표시의 올바른 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추진 계획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20)
- 영업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환경 지원을 위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21, 장·위건강)
-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신고제 도입(‘25)
- 신규제도 이해 및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영업자 설명회,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 홍보(‘21~‘25)
 - *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5월), 식품표시광고실무교육과정 (2회/년)
- 기능성 표시식품 활성화를 위한 기능(지표)성분 시험법 개발 지원(‘21~‘25)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운영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 정착 및 확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 법적 근거 마련 -시행령('19) 및 고시('20)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험법 개발지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품목 확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운영	직접수행	-	150	710	720	740	8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험법 개발 지원(건수)	-	3	3	3	3	3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험법 개발 지원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과제번호	4-2-2-②	과 제 명	기능성 원료 등록 확대 및 기능성 원료 은행 구축
담 당 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남현중 사무관(T. 044-201-1760)		

□ 배경 및 필요성

-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속 성장
-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가 가능해 질 예정('20)으로 신규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시장 확대가 기대 됨
 - 기능성표시식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능식품의 산업범위 확대 및 육성 필요

□ 추진 계획

- 일반 식품기업의 기능성식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기능성 원료 발굴·등록·보급 등 전반적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제도 신규 도입('20~)
 - 체계적 문헌조사(SR)를 통해 국산 농산물에 함유된 기능성을 발굴·규명 하고 기능성 원료등록 확대('20~)
 - 국산 기능성 원료를 생산·보관·분양하는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20~'23)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기능성 식품 산업 육성	기능성 원료 발굴·등록·보급 등 전반적인 지원	▪ 식품기능성 평가지원	▪ 식품기능성 평가지원	▪ 농식품자원 실태 조사 실시('18) ▪ 통합DB구축 ('18) ▪ 국 산 소 재 기능성규명 ('20) ▪ 기능성표시제 시행('20)	▪ 기능성원료 은행 구축('23)	▪ 기능성식품의 체계적 산업 육성 지원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기능성식품산업육성	보조 (50~70%)	2,948	6,051	8,400	8,400	3,500	3,5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기능성식품 특허등록·식약처 개별인정 등록(건수)	8	8	8	8	8	8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인체적용실험 연구 지원을 통한 기능성 원료등록 지원(R&D 성격의 사업으로 성과목표 도출에 5년 이상의 기간 소요)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기능성 식품 특허 등록, 식약처 개별인정 등록, 논문게재 건수(특허청, 식약처 등록자료)

과제번호	4-2-3-①	과제명	식품의 영양표시 확대 및 기준개선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유유순 사무관(T. 043-719-2181)		

□ 배경 및 필요성

- 국민 소득 증가로 식품안전 뿐 아니라 영양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영양정보 제공 필요
 - * 비만률(%) : ('10) 30.9 → ('15) 33.2 → ('18) 34.6 ('19 국민건강영양조사)
- 1인 가구, 여성 경제활동 증가 및 혼밥 트렌드 등으로 양념육, 삼계탕 등 가정간편식 소비 증가 및 소비자의 영양표시 확대 요청
 - * 간편식 매출액 : ('14)4,033억 → ('16)5,898억 → ('18)9,026억 (aT식품산업통계)
 - ** 김치 및 삼계탕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권고(한국소비자원, '19.7.)

□ 추진 계획

-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영양성분 표시 대상 확대
 -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25)
 - * 성분변화가 적은 식품, 영양학적 가치가 낮은 식품 등 일부 품목('20, 115 → '25, 224개 품목 예상)
 - ** 소비패턴, 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단계적 추진
- 합리적인 영양표시 적용을 위한 영양성분 표시기준 개선
 - 미량 영양성분 허용오차 기준, 영양 강조 표시(비교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수시)
- 영양표시 활용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영양표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영양표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소비자 설문조사 실시
 - 영양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가 교육 실시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식품의 영양 정보 제공 확대	모든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화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등 9개 식품유형 확대	즉석섭취식품, 사면류 등 18개 식품유형 확대	떡류, 김치류 등 61개 식품 유형 확대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영양표시 사후 관리 및 지원 등 관리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영양표시 확대 및 기준개선	직접수행	787	787	787	787	787	787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영양표시 활용도	73.5	73.7	73.9	74.1	74.3	74.5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대국민 대상으로 영양표시 인지 여부, 영양표시 읽는 정도 및 영향정도를 조사하여 측정한 '영양표시 활용도'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안전관리의 대표적인 성과지표임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2,000명)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영양표시를 인지하고 있다’ 응답자 비율] × [‘영양표시 내용이 식품을 고르는데 영향을 미친다(보통 이상)’ 응답자 비율] × [‘영양표시를 읽는다’ (가끔 읽는다 이상) 응답자 비율]} × 100

과제번호	4-2-3-②	과제명	식품영양정보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수현 사무관(T. 043-719-2262)		

□ 배경 및 필요성

-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비만 및 영양불균형 등 식생활 문제해결을 위해 식품영양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 디지털 기반 통합 영양정보DB를 구축해 식품구매, 학교급식, 온라인 배달음식 주문 등 쏠 영역에 걸쳐 영양정보 확대 제공으로 만성질환 감소 효과 기대
-
-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약 11조원) 절감(식약처('15))
 - 뇌졸중,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이 영양표시 이용률이 유의하게 낮음
(한국의 만성질환자에서 영양표시 이용실태와 유용성, '14 인제대)
 - 영양정보 인지율 1% 증가 → 연 920억 원 의료비 절감(출처: 보건복지부('11))
 - 영양정보 확인시, 만성질환 발병률(16%)이 미확인 시(47%)보다 3배 낮음
(복지부, '11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

□ 추진 계획

- 식품영양정보 추가 확충 및 데이터 수록('21~)
 - * 가정간편식, 어린이 기호식품 등 가공식품, 외식 등 영양정보 추가 조사·확보
 - ** 식품건수: ('20) 30,000건 → ('21) 50,000건 → ('23) 70,000건 → ('25) 100,000건
- 식품영양성분 DB 표준화 및 부처간 통합 추진('21~)
 - 행안부 '공공데이터 포털' 및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제공기반구축
 - 통합 DB 표준화코드 결정, 음식 및 가공식품 등 DB 정보 표준화
 - 식품영양정보 개선관련 산·학·연·관 협의체('21~)
 - * 부처 중점협업과제(행안부, '20.9.11) 확정

- 식품영양통합 DB 확대 및 활용 강화('21~)
 - 학교급식시스템(NEIS, 나이스) 식품영양DB 정보 연계를 통한 학생 급식의 영양정보 제공('22)
 - 사용자(영양사, 대학생 등) 대상 영양정보DB 홍보 및 교육(년중)
 - * 기고, 온라인 활용유도 이벤트, 학술세미나 발표, 활용가이드 제작·배포 등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건강한 식생활 환경 구축	식품 영양정보 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영양성분 DB 운영 * 데이터 수: 3,69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영양성분 DB 운영 * 데이터 수: 16,05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나라 식품영양성분 DB 전편 개편 및 운영 * 데이터 수: 29,86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통합 식품영양정보 DB 구축 * 데이터 수: 10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기반한 AI 활용으로 영양정보 분석 및 영양정보 제공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국민영양안전관리	직접수행	198	198	198	198	198	198

* 국고지원액만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구분'란에는 직접수행, 보조(보조율 표시), 용자, 출연 등 재원지원 성격을 표시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① 영양정보 DB 구축건수	30,000	50,000	60,000	70,000	80,000	100,0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① 영양정보 제공 식품건수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① 외식, 가공식품, 식품원재료 등 각 식품에서 제공하는 영양성분 정보를 1건으로 산정

과제번호	4-2-3-③	과제명	영양 위해평가 체계 및 플랫폼 구축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김종수 연구관(T. 043-719-440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권광일 연구관(T. 043-719-4421)		

□ 배경 및 필요성

-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로 우리나라 국민이 실제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성분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도 증가
 -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분석 등을 통한 시의성, 대표성 있는 음식 선정
-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음식 섭취 증가 등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약해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 필요**
 - 또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 증가** 등으로 **비타민, 무기질의 영양불균형 우려 가중**
 - * 당류/나트륨 섭취량('18, 국건영) : ('16) 73.6 g/일 → ('18) 58.9 g/일 / 한국인 30~49세 80% 이상이 나트륨 2,000 mg 이상 섭취

□ 추진 계획

- 소비자 중심의 **국가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생산
 - 조리된 식품으로부터 실제 섭취하는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분석 품질관리를 시행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생산
 - * 식품 1,000품목의 영양성분(108종) 분석 및 DB 제공('21~'25)
- 안전한 식생활·영양관리를 위한 상시 **영양 위해평가 시스템** 구축
 - 소비자의 식품섭취 패턴을 고려한 **당, 나트륨 섭취량 심층분석**
 - * 당·나트륨 섭취 저감 타킷 선정(저감 시뮬레이션) 및 소비자 전달 메시지 개발
 -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섭취하는 **비타민·무기질의 위해평가 확대**
 - * 위해평가 영양성분 확대(누적) : ('21) 4건 → ('22) 5건 → ('23) 6건 → ('24) 7건 → ('25) 8건
 - 신속·정확하게 영양섭취 수준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영양 위해평가 플랫폼 내부서비스'** 개시('21년~)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건강한 식생활 환경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 제공	국가식품 영양성분 DB 구축	▪ 국 가 식 품 영 양 성 분 DB 기반 마련	▪ 국 가 식 품 영 양 성 분 DB 구축	▪ 국 가 식 품 영 양 성 분 DB 확충	▪ 국 가 식 품 영 양 성 분 DB 확충 및 영 양 평 가 기반마련	▪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 제도 연구
	식품(건강 기능식품 포함 등) 영양위해 평가	▪ 건 강 기 능 식품 중 영 양 성 분 함량 분석 연구	▪ 영 양 성 분 위 해 평 가 체계(플랫폼) 구축	▪ 영 양 성 분 위 해 평 가 플랫폼 개선	▪ 영 양 성 분 위 해 평 가 실시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1	'22	'23	'24	'25
식품 등 안전관리	용역	1,300	1,300	1,300	1,300	1,300
	직접수행	200	200	200	200	200

□ 성과지표

지표명	'21	'22	'23	'24	'25
식품 영양성분 DB 생산 품목(건수)	200	200	200	200	200
영양성분 위해평가 항목(수, 누적)	6	7	8	9	10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험법 개발 지원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과제번호	4-2-3-④	과제명	국가표준식품성분 DB 고도화 및 실용성 강화
담당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생활영양과 최용민 연구사(T. 063-238-3561)		

□ 배경 및 필요성

- (해외) 질병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식품안전을 위한 개인 맞춤형 산업 기술 시장 확대
 - 메디푸드를 중심으로 소비자 맞춤형 식품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맞춤형 식품 개발을 위한 식품정보 수요가 급증
 - * 의료용식품 세계시장 : ('15) \$123억 → ('22) \$210.7억 (출처 : Grand view research)
- 미국은 국가기관 주도 식품 빅데이터를 수집·서비스하고 산업계에서 활용
 - USDA는 식품성분, 식품소비, 농업정보 메타데이터를 수집 연계한 'FoodData Central'를 오픈하고 관련정보를 서비스 하여 관련 정책과 산업화 지원하고 식품안전관리에 활용
 - * 식품 8,789점의 영양성분, 카페인, 불소 등 식품성분 150종에 대해 빅데이터 구축
- 인구고령화, 1인 가구증가, 외식산업의 성장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외식 비중이 증가하고 가공식품 소비 확대 추세
 - 안전 식생활 관리 및 자기주도형 식생활 관리를 위해 식품성분 정보 확충 필요

□ 추진 계획

- 국가표준식품성분 빅데이터 생산 및 통합 DB 개발
 - 식품영양성분 분석 및 빅데이터 구축(매년) : 한국인 다소비 식품
 - * 국민건강통계 활용 다소비, 다빈도 식품 및 주요 영양소 기여 식품 분석 및 식품유통 데이터 이용 대표시료 선정
 - * 연 식품 350점, 단백질, 당류, 비타민, 무기질, 지방산 등 영양성분 130종
 - 식품 크기 및 이용형태별 시각정보 DB 구축 연구('22년)
 - 영양-기능성 식품성분 DB 구조 설계 및 통합('25)
 - * (현재) 개별 성분 DB 서비스 → ('25) 영양-기능성 성분 데이터 통합 DB
- ※ '20년 부처 중점협업과제(행안부, 2021.11) '식품영양성분정보 원스톱 서비스 실시와 표준화 등 추진과제와 연계

○ 특수목적식품정보 DB 구축을 통한 환자식 및 기능성 식품산업 지원

-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사포닌 DB 구축('21)
- 질환자를 위한 갈락토스 DB 구축 및 안전 식이지침 개발('22)
-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 DB 구축('24)
- 파이토스테롤, 황화합물, 알칼로이드 DB 개발('25)

* (현재)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2종 서비스 → ('25) 사포닌, 파이토스테롤 등 10종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식품 안전 빅데이터 활용 제고	안전 식 생활 관리를 위한 식품정보 확충 및 제공 확대	▪ 건강 관련 영양 성분 43종 위주의 영양 성분 DB 구축	▪ 당류, 트랜스 지방산 등 위해 기능 영양 성분 DB 구축 확대	▪ 다분야 영양 정보 활용 제고를 위해 DB 매년 공개	▪ 데이터 최신화 및 SI기반 맞춤형 식품 서비스 기술 적용을 위한 통합 DB 개발	▪ DB 활용 SI 기반 맞춤형 식품 서비스 기술 개발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축산물 수확 후 융복합 실용화 기술개발	직접수행	2,100	2,100	5,400	6,300	6,300	6,3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공공데이터 제공(건)	2,350	2,585	2,844	3,128	3,441	3,785
데이터 최신화('10년 이전 데이터 비율. %)	44	30	27	24	21	20
DB 종류 확대(누적 종)	2	3	4	5	5	6

* 공공데이터 제공 수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농식품올바로(koreanfood.rda.go.kr)를 통한 '국가표준식품성분 DB 제공 건수를 의미하며 최근 3년(17년 160건, 18년 2,713건, 19년 4,182건)의 평균 기준 전년 대비 매년 10% 증가

* 데이터 최신화 : '10년 이전 노후 데이터 비율(%)

* DB 종류 확대 : 당해연도 공개되는 DB 누적 종 수

과제번호	4-3-1-①	과제명	식품안전보호구역 집중 관리 및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확대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현정 사무관(T. 043-719-2255)		

□ 배경 및 필요성

- 외식 증가 등 식생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필요

* 18세 미만 외식률: ('08) 22.1% → ('18) 41.8%

□ 추진 계획

①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강화

-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학원가 또는 놀이공원 주변까지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해당구역 조리판매업소 상시 안전관리 추진

⇒ 시범운영 확대 추진('21~)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7,133곳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학원가 및 놀이공원 주변 141곳을 시범구역으로 지정('20년 기준)

- (학교주변 안전관리 지속)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관리 실시

* 문방구·분식점 등은 위생취약업소 상시 지도·점검(전담관리원 월1회), 신학기·어린이날 등 특정시기에는 학교주변업소 집중 지도·점검 실시(연 3~5회)

② 어린이 식생활 영양관리 개선

- (식생활 정보 제공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가맹점포 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 의무 확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시행('22~)

- (품질인증 제품 활성화 추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유효기간 연장 등 절차 개선 등 추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21~)

- (식생활 개선수준 평가) 지자체별로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등을 평가하고 어린이 관련 정책 인지도 등을 조사하여 향후 어린이 식생활 정책에 활용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및 결과 공표('21)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강화	영양성분 표시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 차이즈 확대 추진	▪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 차이즈 영양 성분 의무 표시 개정·시행	▪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 차이즈 알레르기 의무 표시 개정·시행	▪ 가맹점 50개 이상 프랜 차이즈 영양 성분 등 표시 의무 확대 관련 간담회 등 의견 조취	▪ 가맹점 50개 이상 프랜 차이즈 영양 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확대 법령 개정·시행	▪ 영양 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의무 대상 프랜 차이즈 사후 관리 등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자자체 보조(50%)	1,040	1,040	1,895	1,989	2,088	2,192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식품안전보호구역 특정시기 집중 지도·점검 횟수	3	3	3	3	3	3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험법 개발 지원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과제번호	4-3-1-②	과제명	어린이·노인 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고대웅 사무관(T. 043-719-2257)		

□ 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노인 등 대상 위생·영양관리, 식습관 개선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의 미래 동력 확보 및 사회적 비용 감소
 -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확대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효과적 지원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추진 계획

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 (지원을 확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설 및 사업규모 확대로 '25년까지 지원을 100% 달성
 -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확충 및 어린이 급식소 현장지원 확대 등 센터 지원 강화
- (지원내용 내실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정·지원기능 강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운영, 직원 역량강화, 중장기 전략 개발 등
 - 중앙센터 조직·인력 확대를 통한 급식안전관리 지원 컨트롤타워 수행
 - 지역센터 직원(영양사 등) 대상 역량강화 교육 확대
 - 공공기관용 회계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등 구축·운영
 - 급식관리 관련 정책연구, 식생활안전정보 DB 구축 등

② 노인 등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 (사업 확대) 시범사업 진행 중인 노인 등 급식관리 지원 사업 지속 확대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신설·확대 등 사업수요 지속 발굴
 -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목표 : ('21) 7개 지자체 → ('25) 50개 지자체

- (인프라 확보) 지원사업의 기반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회복지급식센터 업무 통합 운영·관리
 - 센터 인적자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및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사회복지급식센터의 통합관리를 위한 중앙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관리

3. 예산사항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자체보조	50,403	54,867	76,598	89,367	94,043	98,744
	(서울 30%, 그 외 50%) * 평택 70%	368	738	2,401	6,614	9,237	11,869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급식관리 지원율(%)	91	93	95	97	1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율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text{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급식관리 지원율(\%)} = \frac{\text{센터 지원을 받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수}}{\text{급식관리 지원대상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수}} \times 100$$

과제번호	4-3-2-①	과제명	학교·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강화
담당자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T. 044-203-6543)		

□ 배경 및 필요성

-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학생들은 특히 식중독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급식위생·안전관리 강화 필요
-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급식 관리 기반 마련 필요

* 유아3법 신속처리대상 법안지정('18.12.27.), 국회 본회의 통과('20.1.13)

□ 추진 계획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연중)
 -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청별 관할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 현대화 사업 계획 수립·추진
 - ※ 학교별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 노후도, 작업 공간 구획 여부, 조리실 적정 온도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 후 개선 조치
 - ※ 가급적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시설 개·보수를 하여 학교급식 제공 중단 최소화
- 유치원 급식 관리 체계 구축
 - 유치원급식 관련 위생·안전관리 등 기준 마련·시행('21.1월) 및 식재료 관리, 위생적 조리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보급('21.상반기)
 -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21.1.30.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
- 학교·유치원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 강화(연중)
 - 모든 학교·유치원 대상 연2회(학기별 1회) 위생·안전점검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점검사항에 따른 자발적 개선 유도
 - ※ 교육(지원)청 주관 점검시 점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근거 마련('21)

○ IT 기술을 활용한 학교급식 식재료(축산물) 검수서비스 효율적 운영

- 축산물 관련 거래정보통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단계적* 확대

* 통합증명서서비스 시범사업 대상 확대(업체, 지역, 학교 등) → 전국적 확대

- 축산물 관련 거래정보통합증명서 발급 축종* 확대

* ('20년) 소 → ('21년~)돼지, 닭, 계란, 오리 등으로 확대 추진

<참고> 축산물 검수앱

▶ 축산물 납품 시 검수기로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하면 식품정보(납품부위, 중량, 원산지 등) 제공과 함께 관리자 컴퓨터에 식재료 정보*가 자동적으로 기록(축산물품질평가원 협업)

* 생산정보(생산지역, 친환경 여부), 위생정보(원산지, 위해 축산물 여부 등), 유통 정보(부위, 유통기한, 냉장·냉동, HACCP 인증 등)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급식 위생·안전관리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계속) 학교 급식 시설에 대한 점검(연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식위생 관리지침서 개발·보급(4차개정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 예방진단컨설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IT기술 적용 위생관리 및 검수 시스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물 분야 까지 식재료 검수 시스템 도입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국립부설학교 급식지원	국고	750	-	-	-	-	-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급식점검 지적사항 개선율(%)	(산규지표)	100	100	100	100	1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교육청 주관 학교급식점검 시 식재료 관리, 작업위생 및 세척·소독 관련으로 지적받은 학교의 개선율(매년 상반기 점검 기준)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지적사항 개선 학교수 / 점검결과 지적사항 발생 학교수×100

과제번호	4-3-2-②	과제명	학교 등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생 점검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철희 사무관(T. 043-719-2102)		

□ 배경 및 필요성

- 학교(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집단급식소의 효과적인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관계부처(교육부·식약처·지자체) 협업을 통한 합동점검과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 추진 계획

① 점검대상 및 시기

- (학교·유치원) 봄·가을 신학기 식중독 예방 관계부처 합동 점검(3, 8월)
 - 식중독 발생율이 높은 개학초기 학교(유치원) 등 급식소 집중점검으로 식중독 사전 예방(50인 이상 1.6만 개소)
 - *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등 급식시설 특별점검(6, 11월) 및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실시(연중), 법령 반복 위반업체(최근 3년간, 2회 이상) 특별점검(11월)
- (어린이집) 특정기간 집중 점검으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4~5, 9~10월)
 - 건강취약 계층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관련 급식소를 특정시기점검을 통한 상시점검 대비 집중관리로 식중독 예방 효과 제고(50인 이상 1.2만개소)
- (청소년 수련시설) 행락철 청소년수련시설 등 지도·점검(5월)
- (식재료 납품업체) 봄·가을신학기 합동점검 시 점검 병행(3, 8월)
 -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과 연계하여 계약업체 현황을 확보하여 점검 시 자료로 활용

② 주요점검 사항

- ①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② 보존식 보관 등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③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 ④ 지하수 사용업체 식품용수 적법관리 여부 확인
- ⑤ 반복 또는 상습적 위반 여부 확인
- ⑥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 영업 등 확인

③ 점검조 편성

-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교육지원청 담당자 및 점검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④ 수거검사

- 수거대상 : 다빈도 제공 식품(과자류, 빵류 등), 비가열 섭취식품, 조리식품, 식품용수,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
- 검사항목 : 식중독균 5종(조리식품, 완제품 등) / 총대장균군, 질산성 질소(식품용수)

⑤ 위반시설에 대한 조치

- 관할기관에 위반사실 조치(과태료 등 처분) 통보 및 특별점검 시 점검 대상 시설로 선정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5	'26 이후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강화	학교급식소 및 급식재료 납품업체 위생감시 강화	▪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체계 개선대책 수립	▪ 학교급식소 및 급식재료 납품업체 청소년 수련시설 등 합동점검	▪ 위생취약시설 특별점검 ▪ 조리식품, 식재료, 학교급식 다빈도 제품 수거검사	▪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 수립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국고 (직접수행)	325	865	865	865	865	862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전국단위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횟수	3	3	3	3	3	3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집단급식소 등 합동 점검 횟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전국단위 점검 결과보고서(3회 이상)

과제번호	4-4-1-①	과제명	나트륨, 당류 섭취 저감화 지속 추진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수현 사무관(T. 044-201-7550)		

□ 배경 및 필요성

○ 전국민 대상 나트륨, 당류 제품 저감화 및 적정 섭취 추진

- 나트륨 1일 섭취량*은 여전히 WHO 권고량 초과, 당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비율**이 일부 연령층에서 WHO 권고량 초과

* '18년 1일 섭취량: 나트륨 3,274mg

※ WHO 권고량: 2,000mg

** 12-18세 가공식품 중 열량대비 당류 섭취율 ('15)11.3% → ('16)11.3% → ('17)10.8% ※ WHO 권고율: 10%

□ 추진 계획

○ 나트륨 및 당류 저감 종합계획* 수립('21~'25)

- (나트륨) '10년 섭취량(4,831mg) 대비 약 30% 이상 저감완료, 우리 국민 1일 섭취량을 현 수준('18, 3,274mg)의 약 8% 이하로 저감하여 안정적 관리 추진

*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1~'25)에서 나트륨 목표 섭취량(2,000mg) 삭제 예정

- (당류) 가공식품을 통한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 지속관리 및 어린이·청소년층(12-18세, 10% 초과) 집중 저감화 추진

* 1일 가공식품 중 열량대비 당류 섭취율(국민평균): ('15) 9.0% → ('16) 9.3% → ('17) 8.2%

○ 소비트랜드 반영 나트륨·당류 등 함량 조사·공개('21~'23, 3회)

- 어린이기호식품 등 영양성분 함량 전수조사 결과발표('21)

* 영양성분 표시, 제조원, 판매원, 조리방법 등

** '21년 이후는 식품소비트랜드, 유통현황, 이슈 등 토대로 추후 선정

○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등 확대('21~'23)

- 1인가구, 다소비 식품 등 소비트랜드 반영한 제조·판매·기술지원 등
- 음료류 등 당류 주요 급원식품 대상 당 저감화 기술지원 사업 수행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5까지	'16~'20	'21~'25	'26 이후
나트륨·당류저감화	우리국민 나트륨·당류 적정섭취	▪ 제1차 나트륨 저감화 종합계획	▪ 제2차 나트륨 저감 종합계획 및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	▪ 제3차 나트륨·제2차 당류 저감화 종합계획	▪ 나트륨·당류 섭취 수준 WHO 권고 수준 유지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국민영양안전관리	직접수행	855	855	855	855	855	855

* 국고지원액만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구분'란에는 직접수행, 보조(보조율 표시), 용자, 출연 등 재원지원 성격을 표시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① 나트륨 1일 섭취량(mg)	3,274	3,219	3,164	3,109	3,054	3,000
② 가공식품 중 당류 섭취비율(%)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① 우리 국민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섭취량(mg) 평균함량, ② 우리 국민 1일 평균 열량대비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당류 섭취 비율(%)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① 국민건강통계 조사 발표 자료 활용(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공개), ② 국민건강통계 조사 발표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 기준 대비 비율 산출

과제번호	4-4-1-②	과제명	아동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김준범 사무관(T. 044-202-282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김수민 주무관(T. 044-202-2835)		

□ 배경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을 부족 및 부적절한 식습관 행태 증가
 - 특히,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행태가 악화되는 경향 나타남
 - * '18년 주3일 이상 격력한 신체활동율(교육부): (초등) 59.25% → (중등) 35.08% → (고등) 23.60%
 - * '18년 아침식사 결식률(교육부): (초등) 6.07% → (중등) 16.23% → (고등) 19.69%
 - * '18년 주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교육부): (초등) 65.98% → (중등) 77.66% → (고등) 80.54%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조성을 통해 비만예방을 실현하고 건강 습관실천 생활화 유도

□ 추진 계획

- 아동 비만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21~)
 -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비대면 교육 영상자료, 가정 학습지 등) 추가 개발
 - 영양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한 사업 효율화
 - 사업 실적 수기 취합·분석 및 지자체별 성과 환류
 -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국민적 관심 제고
 - 교육부 협의를 통한 아동 비만예방 프로그램 참여 확대 추진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6까지	'17~'18	'19~'20	'21~'25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 영양 개선 지원	아동 비만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유형별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 운영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대상 및 운영기간 등 확대 운영 ▪ 운영기간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 추가개발 ▪ 사업 운영 체계 효율화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아동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보조	351	251	276	304	334	367

* 비만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 내 세부 추진사업으로 수행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비만을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 지표 설명: 프로그램 사전대비 사후 비만군 아동 비율 유지(사후 비만아동 비율-사전 비만아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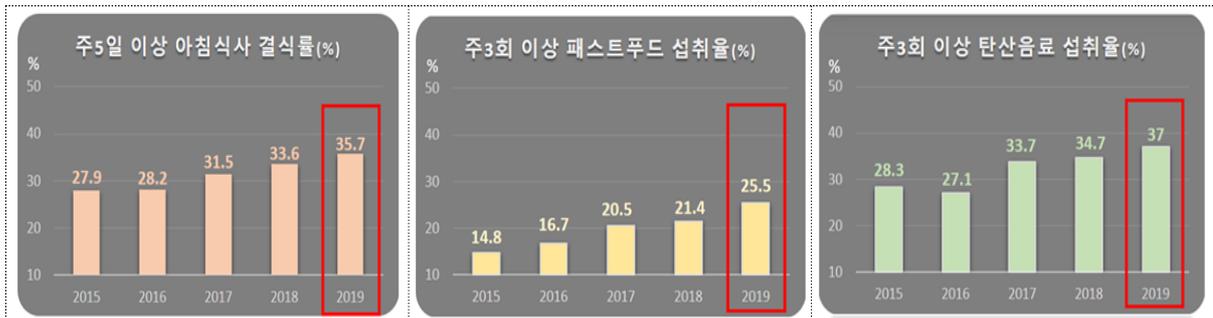
* 지표 및 목표치 설정근거: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아동·청소년 비만유병율 지표 활용

* 지표 측정 방식: 프로그램 전·후 체중 및 신장 실측하여 비만도 판정

과제번호	4-4-1-③	과제명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 강화 및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실천 추진
담당자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T. 044-203-6543)		

□ 배경 및 필요성

- 학생들의 불균형적인 영양섭취 등으로 학생 건강문제가 지속 제기 되므로, 학교급식에서의 영양관리 강화 필요



통계 : '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추진 계획

- 학생 맞춤형 영양관리기준 개정('21년 개정, '22.3월 시행)
 - 학생 성장발달 단계 및 영양소 섭취 실태 등을 고려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개정
 - * 보건복지부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20.12)' 내용 반영
- 학교급식에서 영양관리를 강화토록 지침 마련·안내(계속)
 - 학교급식에서 개정된 영양관리 기준 준수 및 곡류·채소류·어육류·콩류 등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한 식단 제공
 - 가급적 자연식품 및 제철식품을 적극 활용하고 튀김류 사용제한 등을 통해 건강한 식사 제공(교육청에서 운영평가 시 확인)
- 학교급식에 나트륨 저감화 실천 및 교육자료 개발(계속)
 - 단위학교별 나트륨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 저감화 실천(국 옆도 게시, 주1회 국 없는 날, 교육 등) 및 교육청 운영평가 시 확인
 - 나트륨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홍보자료 개발('21년)

- 나이스(NEIS) 시스템을 통한 학교 식단 영양량 표시 및 최신 영양정보 제공(계속)
 -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제공 식단에 대한 영양량(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칼슘 등)을 표시하여 학생에게 공지(계속)
 -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식품 영양정보*를 나이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식단 작성 시 최신 영양정보 제공('21~)
 - * 농촌진흥청(국가표준 식품성분표), 식약처(가공식품 DB) 등
- 학교급식 현장 소통 및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 운영(계속)
 - 국가 차원의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운영*, 학교 홈페이지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급식게시판' 운영 및 실제 식단 사진 공개
 - * 학부모로 구성하여 급식 정책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실시
 - 영양 정보 및 건강 식단 등을 공유하는 급식 전용 사이트* 운영
 - * 학교급식 정보마당 : www.sfic.go.kr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학교급식 영양관리	학교급식 영양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 제정 ▪ 학교 급식 식단 영양량 표시제 시행 ▪ 학교급식의 나트륨 저감화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지침서 개정 ▪ 학교급식 식단 및 사진 홈페이지에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급식 나이스시스템 개선 ▪ 건강 식 단 자료 개발 ▪ 학교 급식 전용 사이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 관리 기준 개정 ▪ 나트륨 저감화 실천 교육자료 개발 ▪ 학교 급식 나이스 시스템 식품 영양 정보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정보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 예산 사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개정	-	완료	-	-	-	-
나트륨 저감화 시행 학교 비율(%)	97	98	98	99	98	100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개정>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 개정 추진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정 여부

<나트륨 저감화 시행 학교수(%)>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연초에 수립하는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나트륨 저감화’ 계획을 포함하고, 식단작성 및 조리단계부터 나트륨 사용량 줄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감화 실천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나트륨 저감화 시행 학교수/전체 급식 학교수 X 100

과제번호	4-4-2-①	과제명	초등학교 어린이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김혜울 사무관(T. 044-201-2252)		

□ 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청소년의 비만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과 국산과일의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

□ 추진 경과 및 계획

- 초등 1~2학년 돌봄교실 학생대상 시범운영('18~) 후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추진(기존 인스턴트간식을 과일로 대체, 급식과 분리)
 - * 예비타당성조사('19.5.~) 결과 도출 이후 세부계획 수립
 - 학교 과일간식 프로그램 시행방안(기본계획) 수립('17.12월)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시범 운영('18.3월~)
 - * 지원기준 및 단가 : 연 30회(주 1회) 공급, 2,000원/150g(국비50%, 지방비 50%)

<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구분	총계획	'17까지	'18~'20	'21~'23	'24 이후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과일간식 지원으로 식생활개선 및 국산 과일 소비기반 확대	과일간식 프로그램 시행방안 마련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대상 과일간식 제공	제공 대상 확대 추진(초등학교 정규학년 등)	과일간식 지속 제공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7,200	7,200	24,300	51,300	126,900	126,900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과일간식 지원학생 국산과일 선호도	86.0	86.0	본사업 추진시 재검토 필요			

-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국산과일을 과일간식으로 제공하여 국산과일의 친밀도 제고를 통한 미래수요 창출 가능성 판단
-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사업 종료 후 과일간식을 제공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리커트 5점 척도 등으로 측정 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과제번호	4-4-2-②	과제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진수 사무관(T. 044-201-2432)		

□ 배경 및 필요성

- (국민참여예산 제안)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
 -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정기적으로 지원(연간 48만원 상당)
-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국민의 바람 확인
-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에 기반한 고투입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농업으로의 전환 필요
 -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정체 및 판로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확대에 한계

⇒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단계적 확대 추진 필요

□ 추진계획

- ('21년)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효과·검증을 위해 광역단위 사업(광역 11곳*, 8만명) 추진
 - *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전국적 규모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 예타 신청('21.2) → 예타 심사대응(~'21.6) → 예산 반영('21.8) → 국회심의('21.12)
- ('22년~) 전국적인 본 사업으로 확대(광역 17곳*, 30만명) 추진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총계획	'20까지	'21	'22~'25	'26 이후
임산부 친 환경 농산물 지원	임산부(임신부 +산모)에게 친 환경농 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연간 48 만원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추진 (1차년도) ▪ 통합 온라인 쇼핑몰구축 (온라인 신청, 주문, 배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추진 (2차년도) ▪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쇼핑몰 고도화 추진 (서버 구축, 주문,배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본사업 30만명 ▪ 온라인 신청 및 수혜자 중목 지원 신청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업 및 효율적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보조(40%)	13,540	15,780	57,613	57,608	57,608	57,608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시범사업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65.0	65.0	70.0	70.0	70.0	70.0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품목 선호도, 품질, 신선도, 배송 신속성, 사업프로세스의 합리성 등을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 측정대상 기간 : 매년 1. 1.~10.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11월말 예정

- 측정 수행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측정대상 및 표본수 선정방법 : 사업 신청대상자 중 일부(매년 8월말 기준)

* 본사업('22년) 진행 후 성과지표 조정 필요

과제번호	4-4-2-③	과제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유급식 지원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홍석구 사무관(T. 044-201-2340)		

□ 배경 및 필요성

-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신체 발달 및 건강 증진 도모

□ 추진 계획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학교우유급식 지원
 - (농식품부) 시·도별 사업 수요조사 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인원 및 사업비 가내시 통보(전년 12월)
 - (지자체·교육청) 지원대상자 자격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농식품부에 보고(6~7월)
 - (농식품부) 시·도별 지원대상 인원 및 사업비 확정 통보(7월)
- * 급식일 및 지원단가 : 연간 250일 내외, 430원/200ml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학교우유급식	추방기금 60% 자랑비 40%	61,693	75,478	75,238	75,238	75,238	75,238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지원대상 학생 수(천명)	577	700	701	702	703	704

*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 :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 학생 수

* 지표 측정 방식 설명 : 지자체에서 학교우유급식 지원실적 보고

과제번호	4-4-2-④	과제명	경제적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제도 도입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인소영 사무관(T. 044-201-2274)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소득 불평등도 심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취약계층 확대와 영양 섭취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 심화
 - 취약계층의 영양 실태 및 섭취수준, '식품 안정성'(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의 능력 수준)이 크게 낮은 수준
 - * 기초생활수급자 영양실조 환자(10만명당) : ('11) 36.9명 → ('15) 48.3명/ 국민 전체평균 4.8배
 - * 중위소득 30%이하의 권장량 대비 영양섭취수준 : 칼슘 55.6%, 비타민A 80.9, 리보플라빈 69.5
 - * 식품 안정성 : 중위소득 50%이상은 94.6%인 반면 중위소득 30%이하는 74.9%
- **(필요성)**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은 식품소비 불평등도 감소와 의료비용 절감 및 고용 유발 등 연관산업 파급 효과 기대
 - * '17 정책연구(월 6만원) :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소비의 불평등도(지니계수) 감소 (0.293→0.287), 의료비 절감(1,052~2,045억원), 취업유발 효과(912~2,095명)
- **(경과)** 사업타당성 연구 및 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협의('18) → 품목제어 전자방식 검증 완료('19) → 시범예산 35억원 확보('20)
 - * 취약계층의 영양실태 분석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대상·금액·전달체계 등 사업 설계안 검토 연구('17.9~'18.2)

□ 추진 계획

- **(사업체계 구축)** 경제적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 공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본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체계구축 단계적 추진
 - 지원품목 제어, 판매·정산 등 사업 운영·관리 전산시스템 구축('20)
 - 사업 운영·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20년 시범사업 효과분석('20)
 - * 시범적용 지자체 공모·선정 및 농식품바우처 공급지원('20하반기 3개월)

- (사업확대) 시범사업의 효과분석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전국적 확대 적용을 위한 본사업 사업체계 구축('21~)
 - '21년 시범사업은 예산 확보시 본사업에 준하는 연중(12개월) 지급
 - 시범사업 결과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및 본사업 시스템 구축('21. 하)
- (입법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일부 개정하는 의원 발의안에 대한 국회 심의 대응('20.10.16,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조항 신설 (제23조의2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총계획	'14까지	'15~'17	'18~'20	'21~'25	'26 이후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	지원 품목을 지정해서 공급할 수 있는 전자카드·빙식 바우처 시스템 도입 및 전국 확대적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품목 제어 전자카드 방식 검증 ▪ 농식품바우처 구체적 사업설계 ▪ 사업 운영관리 전담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공급기간 시범적용 확대 (3개월 → 12) ▪ 본사업 검증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바우처 사업기반 농산물 현물지원 사업의 통합운영

□ 예산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	'21	'22	'23	'24	'25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시범) 보조 50%	3,500	8,900	-	-	-	-

* 시범사업('20~'21)을 통해 사업효과 도출 후 예비타당성을 거쳐 본사업 추진('22~)

□ 성과지표

지표명	'20	'21	'22	'23	'24	'25
농식품바우처 수혜자(천가구)	15	26	28	30	32	34

- * 지표에 대한 설명 : 농식품바우처 수혜 가구수
- * 지표 측정방식 설명 : 전담기관의 사업결과 보고
- * '20년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결과 및 본사업('22년 추진) 여부에 따라 성과지표 조정 필요

과제명	추진부처	법령(규정)명	주요 개정 내용	추진 일정
전략 1. [위해 예방]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1-1.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1-1-4. 항생제 내성균 통합관리체계 구축				
①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관리	농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생제 전성분을 처방대상으로 지정 	~'24
④ 수산분야 항생제 내성균 감시 및 내성균 검사역량 강화	해수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방전 대상 항생제 확대 지정 	'25
1-2.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1-2-2.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				
④ 학교·유치원 급식 식중독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는 유치원의 규모 등 	'21
1-3. 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1-3-2. 신기술, 신소재 적용 식품안전관리 기반 구축				
① 바이오 식품소재 안전관리 기반 구축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단백질 식품 제조에 필요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마련 	'21

과제명	추진 부처	법령(규정)명	주요 개정 내용	추진 일정
전략 2. [생산·제조]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2-2. 축산물 생산환경 개선				
2-2-2. 축산물 위해요인 안전관리 강화				
③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농식품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 친환경(유기) 축산 지속 직불제 도입	'22
④ 달걀 유통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음식점 집단급식소용 달걀의 선별포장 의무 확대	'21
2-2-3. 축산물 취약요인 개선				
②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의무 적용 확대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 HACCP 의무 대상 식육포장처리업 포함	'2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법 시행 세부사항 마련	'22
2-3. 수산물 생산환경 개선				
2-3-2. 수산물 위해요인 안전관리 강화				
④ 생산단계 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관리방안 마련	식약처 해수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 양식업자에게 동물용 의약품 입고·출고·사용 서류 작성관리 의무 부과	'22
2-3-3. 수산물 취약요인 개선				
③ 수산물 인증제 확대 지원시스템 구축	해수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21

과제명	추진 부처	법령(규정)명	주요 개정 내용	추진 일정
2-4. 제조·가공 생산환경 개선				
2-4-1. 수질 안전관리 강화				
① 상수관망 진단·관리 강화 및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체계 도입	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 상수관망 기술진단 평가제도 도입, 노후관로 중점관리지역 제도 근거 마련 등	'20
②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관리운영사 제도 신설 등	'21
2-4-2. 소비트렌드 변화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③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제도 도입	'21
2-4-3.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내실화				
② 건강기능식품 GMP 운영 내실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GMP 운영 법적 근거 명확화	'21
전략 3. [유통·수입]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				
3-1. 유통·수입 정보활용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3-1-2. 식품 공급망 이력 관리 강화				
②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농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수입유통이력관리 업무 신설	'2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수입유통이력관리 업무 신설	'22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고시	• 수입유통이력관리 절차 등 세부운영사항	'22

과제명	추진부처	법령(규정)명	주요 개정 내용	추진 일정
⑤ 원산지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해수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안)	•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대상품목 확대	~'25

3-2. 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3-2-1. 현지실사 및 위생평가 강화

① 다소비 수입식품 HACCP 의무 적용 추진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인증 위탁기관, 의무 품목 및 절차 등 규정	'21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고시(안)	• 수입식품 HACCP관련 세부절차 규정	'21
②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비대면 서류심사 도입 및 대체 실시근거 마련	'21

3-3. 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

3-3-2. 부정식품 사범 예방 및 식품사고 피해구제 기반 강화

② 식품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법무부	집단소송법	• 식품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21
-----------------	-----	-------	-----------------	-----

전략 4 [소비·생활]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4-1.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지원

4-1-1. 식품안전·영양교육 확대

① 식품안전·영양 교육 확대 및 식품위생교육 운영 내실화	식약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	•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취소 규정 마련 및 갱신제 도입	~'22(개정) '23.1(시행)
---------------------------------	-----	------------------------------	--------------------------------	-----------------------

과제명	추진 부처	법령(규정)명	주요 개정 내용	추진 일정
4-2. 식품 정보 제공 확대				
4-2-1. 식품표시제도개선				
①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현행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21
4-2-2. 기능성 표시제도 확대				
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운영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 신고제 도입	'25
4-2-3. 영양표시 및 정보 활용 확대				
① 식품의 영양표시 확대 및 기준개선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25
4-3.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제공				
4-3-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및 급식 지원 확대				
① 식품안전보호구역 집중 관리 및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확대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법	• 품질인증 지원 및 유효기간연장 근거 마련 등	'20~'21
		어린이 식생활법 시행령	• 영양표시 및 알레르기 성분표시 의무 대상 확대 (점포수 100→50개 이상 규모)	'20(개정) '21(시행)
		어린이 식생활법 시행규칙	• 품질인증제품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20)에 따른 세부 절차 마련	'21(개정)

과제명	추진 부처	법령(규정)명	주요 개정 내용	추진 일정
4-4. 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				
4-4-1.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 개선 영양관리 지원				
③ 학생 맞춤형 영양관리 강화 및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실천 추진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성장발달 단계 등 고려한 학교급식 영양 관리 기준 	'21

※ 세부 일정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별도 협의 필요